

분단 이후 제기된
통일담론에 대한 정리와 성찰

정부 및 여야 정치권
시민사회
학계
여성 및 생태

분단 이후 제기된
통일담론에 대한 정리와 성찰

책머리에

•

차문석

통일교육원 평화·통일교육연구센터 소장

1.

한반도 분단은 20세기와 21세기에 걸쳐 지속되고 있으며 75년의 시간이 이 두 세기를 고스란히 연결하고 있다. 이 세상에 시간의 경과 속에서 변화하지 않는 것은 없다. 75년의 시간은 매우 긴 시간이다. 한반도 분단의 ‘형식과 내용’도 해방 직후의 분단, 한국전쟁, 정전협정, 남북조절위원회,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유엔 동시가입, 남북 정상회담, 남북 경협, 북핵 문제 등을 거치는 75년 동안 부단히 변화하였다.

그렇다면 ‘통일담론’은 지난 75년 동안의 시간 경과 속에서 어떤 변화를 겪었을까. 한국 사회에서 통일담론은 역사적으로 적지 않은 부침을 겪긴 했으나 시간의 경과를 놓고 볼 때 이와 무관하다 할 정도로 변화가 적었거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반공^{反共} 프레임이 이러한 시간의 진공상태를 주도했던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반공은 통일담론의 가장 강력한 부동의 프레임으로 지금까지 작동해 왔다. 민주사

회로의 급격한 이행과 국제환경의 전방위적 구조변화가 이루어져 온 21세기에 들어와서도 반공 프레임을 넘어서는 통일담론이 거의 부재하다는 것은 아이러니다. 그것의 당연한 결과인지는 알 수 없으나 현재 한국에서 통일에 대한 새로운 내레이션들 또한 정치권,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 내부에서도 발화發話되지 않는 상황에 있다. 오히려 현 시기 통일담론들은 한편으로는 ‘통일은 무조건 해야 한다’는 당위와 필연의 세계에 포박당해 있고 또 다른 극단에서 ‘통일 이야기는 구태의연하다’는 피로감과 무관심의 세계에 갇혀 있다.

2.

통일담론이란 한 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포괄적이고 넓은 범위를 아우른다. 통일담론은 통일과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내레이션들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통일담론은 무엇보다도 통일방안의 형태로 혹은 통일정책이나 통일 방식의 형태로 발화되기도 했다. 통일담론은 통일의 철학을 의미하기도 하며 통일 국가의 이미지로 표상되기도 했다. 그리고 통일담론은 통일 국가의 정치형태와 권력 구조를 담아서 제시되기도 했으며, 나아가 통일의 과정과 통일의 지향 가치, 통일의 목표, 통일 편익, 통일 이유 등과 같은 다양한 항목들도 포함되어 표현되기도 했다.

통일담론은 그 담론이 생산되고 유통되는 공간에 따라 상이한 형식과 의미로 표현되는 경향이 있었다. 정치권과 정부 영역에서는 통일담론에 국시國是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권위와 정치적 상징을 부여하

기도 했다. 학계의 경우 통일담론은 학술적 이론과 학술적 담론의 형태를 취하면서 생산되어 다른 공간으로 확산 유통되었다.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공간들(노동계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공간들) 속에서 통일담론은 당대의 제반 사회적 요구들을 사회적 이슈들과 어젠다, 그리고 다양한 슬로건 등의 형태를 통해서 표출되기도 하였다.

통일담론은 또한 다양한 공간에서 다양한 방식의 매체를 통해서 표출되어 왔다. 특정하기로는 정부(대통령 포함), 정당(여야), 재야를 망라한 다양한 정치인들의 발언, 정책 공약, 연설과 연설문(기념일 경축사 등), 학자들의 인터뷰, 논문이나 책들, 그리고 특정 개인 혹은 집단들 간의 논쟁과 논평들, 특정 조직이나 집단이 제출한 성명서와 팸플릿이나 전단지들, 나아가 특정인 혹은 집단에 대한 사법부의 재판 기록과 (진술서나 항소이유소 등의) 연술 등 다양한 자료들이 통일담론을 특정한 방식으로 표출해 온 것이다.

3.

통일담론은 당대 상황과 일반적으로 조응하며 그 속에는 당대의 시대 정신이 반영되어 있다. 분단 이후 지금까지 한국 사회는 매우 극적이고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였다. 한국전쟁, 압축적 산업화, 군사독재, 급속한 계층 분화, 민주화의 진전, 세계화, 탈냉전,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등을 경험하면서 통일담론 또한 결코 작지 않은 부침을 겪어 왔다. 당대의 통일담론은 해당 시기의 정치적, 사회·경제적 여건과 환경을 직간접적으로 반영해 왔다. 특히 국민들이 생존해 왔던 사회적 여

건들, 여망들, 삶의 지향 등을 반영해 왔으며, 분단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정세라는 환경도 반영해 왔다. 한국 사회에서 통일과 통일담론은 공식 영역과 비공식 영역 모두에서 영향력을 발휘해 왔으며, 국민의 일상적인 삶에도 특정하게 영향을 미쳐왔다. 통일담론들 안에는 이러한 영향과 변화의 모습들이 고스란히 흔적으로 아로새겨져 있다.

4.

21세기에 들어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통일 그 자체는 새로운 의미로 해석되고 새로운 방식으로 전유되는 상황과 마주하고 있다. 21세기에 통일담론도 또한 사회적인 마찰과 갈등, 불변과 변화 양방향의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 20세기 통일담론의 핵심적 요소이자 부동의 역할을 해 왔던 '민족'과 '민족 정체성' 외에도 대한민국에 국한된 '국민 정체성' 등 다양한 정체성들도 등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도대체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포함해 통일에 대한 반대 표명도 비중 있는 규모로 존재하고 있다. 어떤 면에서는 통일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담론이 부재한 시대라고 일컬어지기도 한다. 이제 우리는 통일담론에 대한 새롭고 근본적인 성찰이 요구되는 시점과 지점에 다다른 것이다.

21세기에 이르기까지 한국사회의 부단한 변화와 분단 한반도를 둘러싼 제반 여건과 환경들의 대단히 역동적인 변화 속에서 과거의 통일담론에 의거해 통일을 사유하고 통일 미래를 기획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게 되었다. 이것은 기존의 통일담론에

대한 깊은 성찰과 분석, 나아가 새로운 고민을 요구한다.

5.

통일담론 연구와 분석이 반드시 과거 통일담론을 분석하는 것을 필연적인 작업으로 삼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과거의 통일담론 안에는 시대를 앞서갔던 상상력도 있고, 그 시대에 맞추어 에둘러 제안된 담론도 있고, 시대를 거스르고 저항하는 담론도 있다. 그리고 시대와 상관 없이 제출된 담론도 있으며, 밖으로 표출할 힘이 없어 묻힌 담론도 있고, 정세와 여건 속에서 숨겨야만 했던 통일 내레이션들도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현재의 통일담론에 영향을 미쳤음에 틀림없다. 이들을 발굴하여 다시 들여다보고 새롭게 해석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도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미래에 우리 사회가 지향해 나가야 할 통일담론에 훌륭한 자양분이 될 것이다.

분단 이후에 다양한 공간에서 다양하게 표출된 통일담론을 어떻게 추적하고 성찰하고 정리할 것인가? 시대별로 통일담론을 정리하는 것은 가장 상식적인 방법이었고 그 결과는 상대적인 의미에서 많이 누적되었다. 오히려 사회의 다양한 영역과 공간들에서 다양하게 표출되어 온 통일 이야기와 담론, 통일을 위한 그리고 통일에 관한 다양한 담론들을 성찰하고 정리하는 것이 이제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또한 해방과 분단 이후에 표출되었던 통일담론들 중 ‘좋고 훌륭한 것들을 골라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표출되거나 흔적이 남아있는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것이 이제는 좀 더

필요한 작업이 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6.

그 첫 번째 장으로서 분단 이후 현재까지의 통일담론을 성찰하였다. △정부 및 여야 정치권 △시민사회 △학계 △여성계(생태 환경 분야 포함) 등에서 지금까지 표출해 왔던 다양한 통일담론들을 정리하는 것을 고민의 첫 번째 순서로 삼았다. 분단 이후 현재의 시간을 먼저 성찰하는 이러한 순서 선택은 필연적인 것은 아니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진 다소 자연스러운 시간 감각에 조응하는 논리적 체계를 따르는 것이다. 그리고 상기의 네 가지 분야로 분류한 것 또한 가장 일반적이고 익숙한 분류법을 따랐다.

이러한 성찰적 정리를 통해서 현재의 통일담론의 과거로부터 현재로 연결되는 역사와 의미를 이해하고, 우리 사회가 분단 이래로 지혜와 의지를 투하해 왔었던 과거의 각이한 형태의 통일담론들로부터 의미 있는 성찰을 얻어내고, 21세기에 한국 사회가 지향하고 실천해야 할 통일담론들을 구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Contents

책머리에

차문석(통일교육원 평화·통일교육연구센터 소장) 02

1 통일담론의 전개: 정부 및 여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강원택(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10

토론 이정철(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111

이상신(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 115

2 한국 시민사회 통일담론의 궤적, 의미 그리고 재구성

이광일(성공회대학교 강사) 121

토론 김정한(서강대학교 트랜스내셔널인문학연구소 HK연구교수) 192

손우정(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196

3

학계의 통일담론 : 분단문제 해결, 통일, 평화의 관계설정을 중심으로

홍석률(성신여자대학교 사학과 교수)	207
토론 허 은(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교수)	265
김동택(서강대학교 국제한국학과 교수)	276

4

여성 및 생태 분야의 통일담론 회고와 성찰

이나미(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연구위원)	280
토론 (여성 분야) 김귀옥(한성대학교 소양핵심교양학부 교수)	378
(생태 분야) 주요섭(모심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391

분단 이후 제기된
통일담론에 대한 정리와 성찰

01

통일담론의 전개

정부 및 여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강원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토론

이정철 송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상신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

1. 서론

담론은 발화(發話)되거나 문자로 쓰인 서류나 진술문(statement)에서 중요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특정한 시각이나 입장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정의된다. 담론은 일상적이거나 사적인 수준의 대화로부터 정부가 발행한 문서, 포고령, 법정의 판결문, 각종 미디어에 실리는 사실, 평론, 기고문, 정치인이나 기업인의 발언이나 연설문, 그리고 때로는 의사나 엔지니어 등 전문가의 진단서나 소견서도 포함될 수 있다. 이처럼 담론은 언어, 이야기, 문화의 요소를 담고 있으며 사물이나 현실에 대한 일정한 인식이나 재현, 주장을 담고 있다. 이러한 담론은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생성되고 매개될 수도 있지만, 사회 제도적인 층위에서 주도적으로 발생하고 교환되고 수용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담론은 복잡하게 얽힌 의미망을 형성할 수 있다(이기형 2006: 109-111). 그런 점에서 담론의 효과는 단지 언어적, 문화적 수준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며 여러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환경을 포함하는 사회적 총체의 한 계기로서 이해되어야 한다(신진욱 2011: 11).

1945년 해방과 함께 실질적으로 한반도가 분단되면서 통일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정치적 이슈가 되어 왔다. 더욱이 1948년 대한민국 정부와 북한 정권 수립으로 분단되고 전쟁까지 겪으면서 현실적인 분단의 고착 상황과 이런 상황의 극복이라는 당위적 조건으로서의 통일에 대한 요구는 더욱 높아졌다. 통일담론은 이런 이유로 인해 언제나 중요한 정치적,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그런데 통일담론은 두 가지 상이한 의미를 동시에 담아야 했다. 첫째는 당위로서의 통일에 대한 강조였다. 오랜 시간 동안 통일 국가로 살아온 한민족에게 분단은 ‘비정상적’이고 ‘일탈적’인 상황을 의미한다. 따라서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온 한민족은 다시 하나의 국가로 결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족주의적 요소가 강조되는 것으로서의 통일담론이다. 두 번째는 현실적 여건이 감안된 형태로서의 통일이다.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매우 적대적인 공산주의 국가와 군사적으로, 이념적으로 맞서고 있다는 현실적 요인이 통일담론에 영향을 미쳐 왔다. 즉, 정치 체제의 특성이 강조되는 것으로서의 통일담론이다. 이러한 두 가지 특성은 시기와 무관하게 한국 사회에서의 통일담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쳐 왔다. 각 시기마다 통일담론의 내용이 달라져 온 것은 이러한 두 가지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시대적 상황, 정치적 조건, 국제정치적 환경(냉전, 탈냉전 등)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었다. 최근 들어서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약화되는 새로운 특성도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의 통일담론은 정치권, 특히 정부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 통일담론이 정부에 의해 주도되어 온 것은 무엇보다 북한과의 적대적 관계, 정부의 대북 접촉 독점, 국가보안법 등 냉전 체제 아래에서 반공주의 체제의 지속 등으로 인해 민간 영역에서의 통일과 관련된 자유로운 논의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의 통일담론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정부가 대항적인 담론 형성을 주도해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각 정부 시기마다 통일담론은 다른 특성을 보인다. 그것은 통일담론이 그 당시의 국내, 국외의 정치 상황을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권위주의 시대와 민주화 이후의 통일담론은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더욱이 민주화 이후 대북정책이 정파적, 이념적 입장에 따라 크게 달라진 상황에서 어떤 정치 세력이 권력을 잡느냐에 따라서도 통일담론의 내용은 달라져 왔다.

이 글에서는 정부와 여야 정치권에서의 통일담론의 역사적 전개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그것이 갖는 특성을 분석하고 보다 바람직한 새로운 담론 형성을 위한 시사점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제1공화국

1) 유엔 감시하 북한에서의 선거

남북 분단을 바라보는 이승만 정부의 기본 인식은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데서 출발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남한의 경우 유엔 감시하에서 선거를 실시하여 정부를 구성했고 1948년 12월 12일 제3차 유엔총회에서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¹라는 승인이 담긴 결의안 제195호를 통과시켰다는

1 이에 대한 원문은 다음과 같다. 2. Declares that there has been established a lawful governmen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ving effective control and jurisdiction over that part of Korea where the Temporary Commission

사실에 기인하고 있다. 예기치 못한 분단의 상황에서 남북한은 서로 경쟁적으로 정통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 북한은 남북한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가 참석한 연석회의와 지도자협의회의 결의에 따라 한반도 전역에서 선거를 실시했기 때문에 자신들이야말로 전체 인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합법적 통일 정부라고 주장했다(심지연 2001: 28).

따라서 이승만 정부의 초기 통일정책은 유엔 감시하에 북한에서 선거를 실시하고, 대한민국 국회에 합류하는 방식의 구상이었다. 이미 남한 지역에서는 유엔 감시하에 합법적인 정부가 수립되었기 때문에 북한이 그 방식대로 자유 총선거를 실시해서 합류하면 통일이 이뤄진다는 것이었다. 이는 제헌국회의 결의안 속에서 처음 나타난다. 1948년 6월 11일 제헌국회 1회 8차 본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북한 동포에게 고함

우리의 기미 이래 독립운동은 순국열사들의 피와 애국지사들의 힘으로 인하여 카이로 국제공약과 포츠담 선언을 보게 되었다. 모스크 협약으로 미소공위가 성립되었으나 그 업무가 우리 삼천만 민중의 의사에 배치되어서 결국 파열되었다.

was able to observe and consult and in which the great majority of the people of all Korea reside; that this Government is based on elections which were a valid expression of the free will of the electorate of that part of Korea and which were observed by the Temporary Commission; and that 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7706.pdf?v=8aab33a23f8ac6bd14f58f3f67849c5c>

그러나 국제 정의는 드디어 1947년 11월 10일 유엔 총회의 결의로 표현되어서 임시조선위원단이 내조하였고 또 1948년 2월 7일 유엔 소총회의 결의로 우선 가능한 지역에서 자유 분위기 가운데 지난 5월 10일 총선거를 시행하였다.

그리고 인민의 자유의사로 선출된 우리 의원들은 국회를 조직하고 완전 자주독립의 건국 대업을 진행하고 있다. 불행히도 유엔 총회 결의를 소련이 거부하였고, 따라서 북한 동포들은 우리와 같은 시기에 총선거를 실시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그리고 소위 남북협상은 법적 근거가 없을뿐더러 그 결정하였다는 송전의 부정지가 정지되고 연백 수도의 급수가 불급수되어서 완전 실패를 확인케 되었다. 그래서 북한 동포들이 우리와 같이 인구의 비율로 대표를 선출하여 우리와 더불어 일당에 모여서 건국 대업에 참여 못하게 된 것은 지극히 유감이다. 이제 우리는 좌의 결의로써 북한 동포에게 고한다.

1. 결의

북한 동포도 우리와 같이 유엔 결의에 의하여 자유 분위기 속에서 총선거를 실시함으로써 진정한 인민의 대표를 선출하여 국회로 보내주기를 열망함.

우 제안자 국회 교섭위원 일동

이승만 대통령이 행한 1948년 12월 19일의 답화문에도 이런 인식이 잘 나타난다.

첫째로 남북통일문제인데, 불일내로 UN위원단이 내도來到하여 우리를 원조할 것을 믿으나, 우리의 과업을 하루 빨리 이복에도 자유 선거를 실시하여 백 여명의 국회의원을 보충할 것이다. 거기에는 다

소 난관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합심협력으로써 목적을 달성 것이
다. 그리고 정부는 이북의 각 도지사를 임명하려고 계획을 꾸렸는
데, 38선 관계로 자유를 불허할 점도 있으나, 이 계획은 달성될 것
으로 확신하는 바이다.²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정부는 통일에 대한 기본 입장
을 천명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대한민국 정부는 헌
법의 규정에 따라 전 한반도에 대한 주권을 가진 유일한 합법정부이
다. ②선거가 보류된 북한에서 조속히 민주적 선거를 실시하여 북한
동포를 위하여 국회에 공석으로 남겨둔 100석의 의석을 채워야 한
다. ③북한수복은 북한 동포들의 자발적 의사가 계속적으로 봉쇄되
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은 무력에 의해서라도 북한에 대한 주권을 회복
할 권한이 있다(통일부 1999: 30). 이처럼 이승만 정부의 통일정책은
'소련과 공산주의자들이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이북 지역을 대한
민국으로 편입시키는 실지회복론(失地回復論)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남
광규 2012: 136-137). 이를 위한 방법으로 이승만 정부 초기에는 유
엔 감시하에 북한 지역에서의 자유 총선거를 강조했다. 그러나 위에
서 알 수 있듯이 '북한 동포들의 자발적 의사가 계속적으로 봉쇄되는
경우에는' 무력에 의해서라도 통일을 이뤄야 한다는 방안도 함께 고
려되고 있었다.

2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https://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 "통일에 협력 요망"(1948. 12. 19.)

북한 지역 만에서의 선거를 통한 통일이라는 입장은 6·25전쟁 이후인 1954년 4월 26일 개최되어 6월 15일까지 진행된 제네바회담에서 우리 측 제안은 남북한 지역 모두에서의 선거로 다소 달라졌지만, 기본적으로 유엔 감시하의 인구 비례에 의한 선거라는 점에서는 동일한 것이었다. 더욱이 이 제안의 무게중심은 역시 북한에서의 자유 선거였다. 제네바 회담에서 변영태 외무부 장관이 제시한 통일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통일 독립 민주주의 한국을 확립할 목적으로 이에 관한 종전의 유엔 결의에 의거하여 유엔 감시하에 자유선거를 실시한다.
- 자유선거는 이러한 선거가 종래 가능하지 못했던 북한과 남한에서 대한민국의 헌법 절차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 선거는 이 제안이 채택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선거는 비밀투표와 일반적인 선거권의 기초에 입각하여 실시한다.
- 전한국의회의 대표 수는 전국인구의 정비례에 의한다.
- 선거지역의 인구에 대한 정확한 비율에 의한 대표 수를 배정하기 위하여 유엔 감시하에 인구조사를 실시한다.
- 전한국의회는 선거 직후 서울에서 개최한다.(통일부 1999: 35-36)

2) 북진통일론

유엔 감시하의 북한 지역에서의 자유선거를 통한 통일정책은 무력에 의한 통일방안, 곧 북진통일론으로 변모한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군 철수와 관련하여 미국으로부터의 무기 원조와 안보 공약을 강화하기

위해 북진통일론을 강하게 주장했다. 1948년 9월 15일부터 시작된 주한미군 철수는 1949년 1월 15일, 그동안 주한미군사령부 역할을 했던 미 24군단이 정식으로 해체되고 1개 연대전투단(7천 5백 명)과 임시군사고문단이 잔류하게 되는 상황으로 변모했다. 이승만은 미군 철수를 늦추거나, 철군에 따른 충분한 보상과 방위 보장을 받아낼 필요가 있었는데, 그것을 위한 카드가 바로 한반도에서 위협을 고조시키는 ‘무력 북진통일론’이었던 것이다(백학순 2013: 14).

이승만은 1949년 2월 8일 한국을 방문한 로열 Kenneth C. Royall 미 육군성장관에게 ‘자신은 장비와 규모 면에서 한국군을 증강’시키기를 원하며, 일단 한국군의 증강이 이뤄지면 “곧 북진하겠다”고 말했다(백학순 2013:15). 이승만은 당장 북진해서 파괴분자를 벌하고 질서와 평화를 확립할 수 있으며 최소한의 유혈과 사상으로 신속하게 이러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가장 현대적이고 효과적인 무기를 공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남광규 2012: 151-153).

사실 이승만 대통령에게 통일방안은 원래부터 유엔을 통한 자유선거 방식만이 고려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1949년 4월 28일의 담화문에서 ‘남한 국군의 북벌을 통한 통일’이라는 옵션이 고려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통일을 위해서 나는 이북 자체의 애국적 요소에 기대하는 것이다. 이북 공산군도 대부분이 강제적으로 끌려나가고 있으므로 그들이 이북 동포들과 함께 통일을 위해서 일어날 것을 믿는 바이며, 그것

을 위해서는 남한의 안정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나는 남한 국군이 북벌해서 통일하게 된다는 것 같은 남북충돌 사태는 없으리라고 생각하며, 현재 고려되고 있는 국군 강화는 남북통일 후 만주滿洲의 중공군에 대하기 위한 것이다.³

자유 총선거를 통한 통일을 기대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북진통일을 통해 북한 동포를 해방시켜야 한다는 것이 이승만 정부의 통일정책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북진통일론은 이후 더욱 분명해진다. 이 대통령은 공산 정권 타도는 북한 주민도 바라는 것이며, 사흘 이내에 평양을 점령할 자신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가고 있는 것은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미국이 경고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공산주의자와는 평화롭게 같이 지낼 수 없기 때문에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심지연 2001: 29).

이러한 통일정책은 6·25전쟁을 겪으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는 단독 북진을 감행할 수도 있음을 천명했다. 예컨대 1952년 3월 이승만은 3·1절 기념사에서 “우리의 모든 친구들과 원수들이 다 같이 알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통일독립 민주국가로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역량을 다하여 싸우는 것은 우리가 면할 수 없는 일이니, 이것은 우리가 단독으로라도 계속하여 나가려는 결심입니다.”라고 말했다. 사실 이승만이 반

3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https://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 “북벌 아닌 통일 달성, 중국 사태에 우려 무용”(1949. 4. 28.)

대한다고 해도 휴전협정 체결은 피하기 어려운 것이었고, 휴전협정에 대한 반대는 북진통일을 더욱 강조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러나 북진통일론은 원래부터 그 한계가 분명했다. 군사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반대하는 북진통일은 애당초부터 불가능한 것이었다. 휴전 이후인 1953년 8월 미국은 한국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었고, 1954년 11월 17일에는 ‘경제 및 군사문제에 관한 한미합의의사록’을 마련했다. 합의의사록에서는 ‘유엔군 사령부가 대한민국의 방위를 책임지는 한 그 군대를 유엔군 사령부의 작전 지휘권 하에 둔다’고 규정했다. 이로써 미국은 이승만의 북진정책을 근본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장을 확보하게 되었다. 미국은 ‘조약’을 통해 북한의 남진을, 그리고 ‘의사록’으로는 이승만의 북진을 억누르면서 한반도의 현상 유지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김일영, 1999: 255-256).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제1조에 무력통일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고 뜻을 밝혔다. 한국 정부는 유엔의 결의에 의하여 탄생하였고, 정통성도 유엔의 권위와 직결되어 있었는데, 유엔은 1947년 11월 14일의 결의 이래 항상 한국에 평화적 통일을 권고하였다. 무력통일론은 유엔의 결의와 배치될 뿐만 아니라, 자유 우방이 모두 반대하였다(서중석 1999: 162-16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정부가 이 정책을 거듭 주장한 것은 국내정치적 목적과 대미외교용이라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김일영 1999: 248). 북진정책은 이승만의 부족한 정당성을 메워주면서 동시에 북한과의 정통성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정치적 선전의 도

구였다. 북진정책은 당시 한독당과 중도파 그리고 소장파 의원들이 주장하던 남북협상과 그 방식에 의한 평화통일, 그리고 통일에 관한 북한의 선전 공세에 맞설 수 있는 대국민 선전 및 동원 논리로 사용되었다. 또한 미군 철수가 강행되는 시점에서 그것을 늦추거나 철군에 따른 충분한 보상과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긴장을 높일 필요가 있고 그 수단으로 하나로 제기된 것이 북진정책이었다.

북진통일론은 이승만 정부 기간 내내 이어졌다. 이승만 대통령의 1957년 1월 신년사에서도 북진통일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작년 이맘때 우리는 사랑하는 이북형제 자매들에게 오는 해에는 우리나라의 통일을 성취하자고 했던 것인데 아직도 남북이 통일 못하고 분열된 채 또다시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우리로는 통분한 생각뿐이요 경축할 말은 적은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의 인심이 많이 돌아서서 일조일석^{一朝一夕}에 작년 1년 내에 공산주의에 대한 세계 민심이 많이 깨었었으며 구라파의 파탄과 헝가리는 다 위성국가로서 다시는 자유를 찾을 생각도 못하게 된 줄 알았던 것인데 지금은 이 사람들이 일시에 일어나서 애국남녀 여러 만명이 저의 국권과 자유권을 위해서 목숨을 영광스러이 희생하며 또 따라서 죽기를 결심하고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니 이렇게 새 기운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깨우쳐서 움직이고 있으며 이 풍조를 따라서 미국 안에서도 공론이 비등하고 있는 중이니 이와 같이 점차로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단독으로라도 일어나서 북진통일을 기회하기를 또한 희망할 수 있을 것이므로 작년 이맘때에 비교하면 우리는 비로소 서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헝가리 사람들이 대혁명운동을 시작해서 세계의 민심을 다 움 직이게 만든 것은 우리 전 국민들도 다 흥분해서 각 시와 도와 군의 애국남녀들이 소리치며 일어나서 이 기회를 타서 우리가 다 북으로 밀고 올라가자는 뜻으로 전국적 시위운동을 행하며 따라서 이북동 포들이 일시에 일어나서 공산당과 싸워서 우리나라를 통일하자는 격문이 많이 전파되고 있는데 나로서는 이북동포들이 일어나서 싸 우다가 죽으라는 말을 낼 수가 없는 것이니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 라 우리가 다 결심하고 뚫고 올라가서 이북동포들을 도와주어 싸울 기회를 만들지 못하고 우리만 뒤에 앉아서 사지에 빠진 이북동포들 이 일어나서 싸우다가 죽으라는 것은 차마 할 수 없는 말임으로 침 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군과 국민 전체가 합동해서 밀고 올라갈 날이 있을 것을 믿고 진전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형 편에 앉아서 서로 치하하며 장려해야 될 것입니다.⁴

이런 점은 최근 공개된 미국 외교문서에서도 확인된다. 4·19혁명 6개월 전인 1959년 10월 이승만 대통령이 북진통일론을 미국 측에 설파했고, 이로 인해 미국의 강한 경계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 문서에 서 이 대통령은 “한국인들은 통일의 더딘 진전에 인내심을 잃어버리 고 있다고 강조했다”며 “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무력뿐이라는 신념을 표현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⁵

4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https://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 “이북동포에게 보내는 신년사”(1957. 1. 1.)

5 “이승만, 북진통일 주장” 미 국무부 기밀문건 발견” 주간조선(2020. 7. 19.)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17/2020071703528.html

북진통일론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대안이기보다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되어 국민을 이승만 체제 속에서 하나로 묶어서 반공 태세를 강화하고, 이승만의 권력에 복종하게 만들었다. 동유럽의 공산화와 6·25전쟁을 체험한 상황에서 이승만 정부의 북진통일 구호는 실현 가능성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 국민들의 정서에 호소력이 높았다(남광규 2012: 154-155).

북진통일 운동은 반공의 최고 영도자 이승만을 중심으로 전 국민이 결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대규모 궤기대회의 한가운데에는 유일 영도자로 이승만이 떠받쳐지게 되고 대중의 거대한 동원 속에서 나타나는 군중 심리는 위기의식과 결합되는 바, 이러한 군중심리와 위기의식은 반공정신의 강화, 반공이데올로기의 확립을 지향하며, 그것은 반공의 권화權化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지지로 반향反響 되었다(서중석 1999: 164).

그러나 북진통일론은 북한과의 협상 자체를 근원적으로 부정하는 것이었다. 북한 지역의 불인정과 북진통일을 통한 수복정책이 아닌 대화와 협상을 통한 통일정책은 일종의 통일 포기선언과 같았던 것이다(남광규 2012: 155). 북한과 통일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북한을 승인하는 것이므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처럼 북한과의 협상 여지를 없애 버림으로써 통일 문제에 대해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북진통일론 이외에는 어떤 통일방안이나 통일 운동도 제기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다(심지연 2001: 31-32).

북진통일론은 북진통일을 할 현실적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서 실제로는 분단국가를 강화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으며, 통합을 위한 담론 이라기보다는 반공을 앞세운 분리주의 담론이었다. 북진통일론의 핵심은 ‘통일’이 아니라 ‘북진’에 있었다. 북진통일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구호에 불과했고, 이런 점에서 이승만 정부의 통일정책은 사실상 “통일정책의 부재”(김학노 2018: 220)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북진통일론은 분단을 타파하려는 현상타파 운동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분단을 고착화시키고(서중석 1999: 163), 반공이데올로기에 기초한 이승만의 권위주의 체제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3) 조봉암의 평화통일론

제1공화국의 통일담론은 무력에 의한 북진통일론 이외에는 사실상 허용되지 않았다. 야당인 민주당 역시 본질적으로 보수적이었고 통일 정책에 대해서 이승만 정권과 본질적으로 다른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다. 냉전 논리에 입각한 북진통일론에 대해 비판적인 대안적 접근은 조봉암에 의해 제기되었다.

1954년 3월 조봉암은 ‘대공산당투쟁의 승리를 위하여’라는 부제가 붙은 「우리의 당면과업」을 발표하며 이승만의 북진통일론에 대비되는 통일론을 제시하였다. 이 글은 1954년 4월로 예정된 제네바 회의를 염두에 두고 집필한 것이었다. 그는 이 글에서 제네바 회의와 같은 상황의 변화에 맞춰 거기에 맞는 통일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했다(서중석 1999: 167). 통일에는 무력통일 곧 북진통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방법도 있으며, 오히려 후자가 더 중요하다고 피력하며 정치적 통일 곧 평화통일의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명백히 이승만의 무력에 의한 북진통일론에 대한 비판이었다. 조봉암은 중국 장개석의 사례를 들며, 무력통일을 하고자 해도 정치적으로 통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결국 통일 문제에서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으니 통일 문제에 있어 진정한 승리는 정치적인 승리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이승만 정권하에서 유일무이한 통일론으로 주창되어온 북진통일론을 비판하고, 국내에서 금기시되었던 다른 방식의 통일방안을 제시한 것이었다(정진아 2009: 75).

「우리의 당면과업」에서 조봉암은 제네바에서 한국의 평화를 위한 정치회담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은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공산당과 대결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대공 승리를 거두기 위해 민주세력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를 논의의 초점으로 제시하였다. 제네바회담 자체가 한반도 문제에 대한 대처에서 무력대결이 아닌 다른 방안을 찾으려는 시도라는 것이 조봉암의 기본 관점이었다. 이처럼 변화된 상황에 따라 그에 맞는 통일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한데 이제 더 이상 무력통일만을 내세울 수는 없다는 것이다. 민주진영과 공산진영의 대결은 절대로 군사적 측면만을 의미하지 않고, 오히려 정치적 대결이 중요하며, 그 대결에서 승리할 때 비로소 명실상부한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네바회담에서 예기되었듯이 통일 선거가 통일방안으로 제시될 경우, 정치적 능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또한 조봉암은 통일 논의 또는 정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계층이나 정파, 정치 세력의 폭을 넓히자고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점을 지적했다. 첫째, 민중운동이나 개인의 합법적 활동에 대하여 반국가적 행동처럼 취급하고, 정부 관리나 자유당 간부 이외의 모든 사람들의 언동에 대하여 반정부 분자로 취급하는 행태를 청산하여야 한다. 둘째 김구, 김규식으로 대표되는 중간파 또는 협상파를 사갈시하는 경향이 없어야 한다. 셋째로 살아남은 보도연맹 관계자들을 더 이상 전전긍긍하게 해서는 안되며, 족청계를 반국가적이고 반당적인 분자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였다(서중석 1995: 270-272).

그러나 조봉암은 「우리의 당면과업」에서 평화통일이라는 말을 쓰지 못했다. 1955년 12월 22일 발표된 진보당 발기취지문에도 ‘민주세력 승리의 통일’이라고만 했을 뿐 평화통일이라는 표현은 없었다. 진보당에서 평화통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956년 3월 31일에 진보당 정부통령 후보를 결정했을 때였다. 조봉암은 선거유세에서 평화통일론을 부각시켰다(서중석 1999: 167-168). 4월 하순 진보당 후보의 선거공약이 자세히 발표되었을 때, 통일정책도 훨씬 적극적이고 확고한 모습으로 나타났다(서중석 1995: 275).

우리는 민족의 비원인 남북통일을 평화적으로 단시일 내에 성취시키겠다. 전 세계 인류의 시대적 요구가 전쟁 반대일 뿐만 아니라, 우리 동포들도 이 이상 피흘리기를 절대로 원치 않는다. 제네바에서

평화를 제안했던 정부나 민주당은 시종 무력통일을 운위(云謂)하지만, 이것은 현실에서 고립되는 주장일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통일을 단념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왜냐하면 무력통일론은 불가능한 옛 이야기에 속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민주역량을 공고히 하여 그 토대와 주동 밑에 민주 승리의 평화통일을 쟁취하기 위하여 국가적 총력을 여기에 경주할 것이다.

1956년 정부통령 선거 막판에 진보당이 신문에 낸 광고 공약 10개 가운데 통일정책은 첫 번째로 제시되어 있었다. 이런 사실은 그만큼 조봉암과 진보당이 통일정책을 매우 중시한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동시에, 전쟁의 참담한 기억이 생생한 유권자들에게 그 주장이 상당한 호소력이 있었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그런데 1956년 대선에서 진보당이 제시한 통일정책 공약을 두고 서중석은 이를 ‘대답’(1999: 167), ‘이전보다 과격’(1995: 275)하다고 평가했다.

남북한에 걸쳐 조국의 통일을 저지하고 동족상잔의 유혈극을 피하는 극좌극우의 불순세력을 억제하고 진보세력이 주도권을 장악함으로써 국련 보장 하의 민주 방식에 의한 평화적 통일을 성취한다.

그만큼 당시 북진통일론 이외의 통일방안 제시는 정치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것이었다. 더욱이 평화통일은 당시 북한에서 제시한 통일방안이기도 했다. 1956년 북한은 조선노동당 제3차 대회를 통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다

(심지연 2001: 47). 이런 이유로 인해 조봉암은 “평화통일의 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저자들은 모스크바의 지령에 의해서, 저희들의 필요에 의해서 평화통일을 떠드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 민족의 절박한 요구와 국제적 정치정세의 당연한 귀추로서의 정치적 주장인 평화통일론을 어찌서 꼭 같이 보려고 하며 같지 않은 것을 같다고 고집하고 싶은가 말이다. 공산괴뢰가 먹는 ‘밥’을 ‘밥’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먹는 ‘밥’을 ‘밥’이라고 아니해야 한단 말인가. 공산괴뢰가 통일하기를 원한다고 떠들면 우리는 통일을 원치 않는다고 해야겠단 말인가(서중석 1999b: 271-272에서 재인용).

1957년의 “평화통일론”에서는 원자탄의 파괴적 성능으로 세계전쟁은 불가능하게 되었고, 또한 북진통일도 불가능하게 되었고, 또한 미국과 소련, 중국이 남북한에 각각 미치는 영향 때문으로도 전쟁은 어려워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즉 무력에 의한 통일 방법은 실패로 끝이 났고, 무력 사용은 세계전쟁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며, 이 때문에 평화적 방법에 의해 통일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심지연 2001: 46-47).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8년 이른바 진보당 사건으로 진보당은 해산되고 조봉암은 간첩죄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결국 대법원에서 간첩 및 국가변란의 죄로 사형이 확정되었고 이듬해 1959년 7월 대법원이 재심 청구를 기각하면서 곧바로 사형이 집행되었다.

그렇지만 당시에 조봉암의 평화통일론은 낮은 형량을 선고해 논란을 빚은 1심 판결뿐만 아니라, 사형을 확정된 대법원에서도 북한과의 야합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은 지적할 만하다. 즉 “진보당의 평화통일론이 국시를 위반했거나 북한과 야합해 국가변란을 기도했다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고, 진보당의 정강 정책도 국가변란이나 북한에 호응한 행위로 볼 수 없으며, 진보당이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함으로써 국헌을 위배했다는 공소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은 진보당의 정강 정책은 헌법에 위배 된다고 할 수 없고 평화통일에 관한 주장 역시 언론자유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한승헌 2014).

3. 제2공화국

1) 민주당 정부의 통일방안

4월 혁명 이후 이승만 정권이 붕괴된 이후 북진통일론은 폐기되었다. 애당초 북진통일론은 현실성이 없었다. 5월 3일 과도 내각 출범 당시 허정 내각 수반은 ‘당면 5대 시정 방침’을 발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엄상윤 2008: 105).

현 정부는 과거보다도 일층 더 견실하고도 확고하게 반공산주의 정책을 전진시킬 것이다. 허장성세하는 반공의 물질적, 정신적 낭비를

없애고 이것을 유효하고 구체적인 대공방위태세를 확립하는 데 돌려야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허장성세하는 반공의 물질적 정신적 낭비’는 바로 북진통일론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북진통일론은 이승만 정권의 몰락과 함께 곧바로 사라졌다. 이후 민주당 정부가 수립되면서 통일방안은 북한 지역에서의 자유선거에서 남북한 총선거로 그 기조가 다소 변화되었다. 1960년 7·29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다음과 같은 통일방안을 제시했다(통일부 1999: 40).

- ① 유엔 감시하에 남북한을 통한 완전한 자유선거로써 평화통일을 도모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선거감시위원단의 구성원은 유엔 결의로써 선임하되, 각자 진정한 자유선거를 실시하는 회원국가로 할 것이다.
- ③ 선거 이전에 남북연합위원회 등을 구성하는 안은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라고 한 유엔결의와 배치되므로 이를 반대한다.
- ④ 통일 전 남북교류문제는 공산파괴공작이 진정하게 정지되리라는 보장이 없으므로 이를 거부한다.
- ⑤ 통일된 한국은 민주주의와 민권자유를 보유하는 국가가 되어야 하며, 적색독재나 백색독재국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처럼 민주당의 통일정책은 유엔 감시하의 남북한 총선거였다. 장면 국무총리는 국회에서의 시정연설을 통해 북진통일론을 폐기하고 유엔의 노선과 일치하도록 통일 노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엔 감시 아래 남북한의 자유선거를 통한 통일이라는 정책을 제시한 것이다.

8월 24일 정일형 외무부장관은 민주당의 외교 정책을 밝히면서 제 1항에서 “북진통일 같은 무모하고 무계획적인 슬로건을 버리고 국제연합의 결의를 존중하여 국제연합 감시하에 남북한을 통한 자유선거에 의한 통한정책을 수행한다.”고 밝혔다(통일부 1999: 40). 정일형 외무장관은 개인적 의견이라는 전제를 달아, 유엔의 회원국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전처럼 유엔 결의를 무조건 받아들일 수는 없으며, 공산국가나 중립국이 유엔한국위원단 구성의 다수를 점할 경우 이를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실제로 아프리카, 중남미의 다수 신생국들이 유엔에 가입하면서 1960년에 접어들어 유엔 내 상황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유엔 감시하의 남북한 총선거라고 해도 감시의 성격이 달라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영어로 표현하면 유엔이 남한의 경우는 단지 ‘옵서브observe’라는데 그쳐야 하고, 북한의 경우는 ‘슈퍼바이즈supervise’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유엔 감시하의 남북한 총선거는 인구 비례에 따르고 민주통일과 반공통일을 보장하는 조건인 경우에만 유엔의 감시를 수용한다는 것이었다(심지연 2001: 49-50).

이러한 민주당 정부의 인식은 일종의 ‘선건설 후통일’론으로 볼 수 있다. 1955년 민주당이 창당될 때 정강 5항은 “국력의 신장과 보수우방과의 제휴로써 국토 통일과 국제정치의 확립을 기한다”고 ‘국력 신장’이 제시되어 있으며, 1956년 정부통령 선거에서는 공약 8항 외교 항목에서 ‘우호 외교로 민주발전과 남북 통일의 기초를 닦는다’고

표명했다(서중석 1999a: 172-173). 이러한 ‘선건설 후통일론’은 기본적으로 한국 보수의 반공통일론,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의 통일론을 대변하는 것이었다. 당시 보수세력들은 무력 북진통일론은 폐기했지만 북의 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공산주의자들과는 협상도 타협도 할 수 없고 나아가 교류도 할 수 없으며 통일은 공산주의자들의 존재를 용인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었다. 보수 세력은 무력으로 통일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으니 이제 남은 방법은 남측이 부강해져서 북의 주민이 스스로 남쪽 체제를 동경하고 “귀순”해 오는 것밖에는 없다고 생각했다. 즉 일종의 흡수통일론적 방식이었다. 그런데 당시 남쪽은 경제적으로 부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경제 건설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 선건설 후통일론의 요체였다. 이처럼 제2공화국의 민주당 정부에서는 유엔 감시하의 남북한 자유 총선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선건설 후통일’이라는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홍석률 2005: 105).

2) 중립화 통일론

중립화 통일론은 민주당 정부와는 무관한 통일 노선이었지만 정치권에서의 논의에 영향을 미쳤던 방안이었다. 당시 미 상원의 민주당 원내부총무이며 극동 문제와 미국외교정책을 다뤘은 마이크 맨스필드 Mike Mansfield 상원의원은 1960년 10월 21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한 ‘극동 보고서’에서 오스트리아 방식의 중립화 통일방안을 제안하였다.

우리는 (한국과 일본) 양측이 모두 수락할 수 있는 한일 문제의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가능한 최대한도의 조정 역할good offices을 담당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오스트리아 식 중립화에 의거하여 통한統韓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장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4대국 점령하에 분할되어 있던 오스트리아가 1955년 비동맹, 중립화를 전제로 관련 강대국의 동의를 얻어 통일정부 수립에 성공한 것처럼, 남북한의 좌우합작과 주변 미국, 소련, 중국 3대 강국의 합의에 기초하여 중립적 통일독립정부를 수립시키고 한반도를 완충지대화해 보자는 것이었다(엄상윤 2003: 105-106). 이러한 중립화 통일론은 한국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구체적 실천 운동으로까지 발전하여, 보수세력과 혁신세력 간에는 물론 혁신세력 내부에서도 커다란 갈등 요인으로 작용했다(엄상윤 2003: 98-99).

이처럼 중립화 통일론은 한반도 주변 열강이 한반도의 영세중립화 협정을 맺어 한국이 강대국의 군사적 대치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통일이 가능하다는 주장이었다. 중립화 통일론자들은 점진적이고 타협적인 통일을 추구했다. 이들은 한반도 내부적으로는 북이 소련의 영향력을 벗어나 유고슬라비아 같은 보다 독자적인 사회주의 방향으로 가고, 남은 서구 유럽 복지국가형의 민주사회주의로 가면 점진적이고 타협적인 체제 통합의 길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혁신계 우파였던 통일사회당 등은 영세중립화를 주장하고 남북협상론을 배격하는 논리를 피력했지만 같은 중립화 통일론을 피력한 사회대중당과 혁

신당은 강대국의 타협을 위한 영세중립화와 대내적인 남북협상을 병행할 것을 주장했다. 이 당시 중립화 통일론은 영세중립화를 주장했지만 내부의 논리나 그 기조로 볼 때 제3세계 국가들이 자주적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제시한 중립주의의 흐름과 접목되어 있었다(홍석률 2005: 106).

중립화 통일론과 함께 혁신계를 비롯한 정당 정치에 영향을 미친 것은 남북협상론이었다. 남북협상론은 외세의 간섭 없이 남북이 직접 협상을 통해 모든 것을 결정하자는 주장이었다. 남북협상론자들은 한 반도의 분단이 외세의 간섭과 개입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보았고, 이러한 개입과 간섭을 배제하는 것이 곧 통일의 길이라고 보았다. 이들의 주장은 당시 통일담론에서 가장 과격한 것이었으며, 이들의 논리는 ‘선통일 후건설론’으로 이해되었고 통일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통일지상주의적 경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었다(홍석률 2005: 106-107).

한편, 7·29 총선에 임한 혁신정당들 역시 각자 상이한 통일방안을 제시했다. 물론 민주당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한 반면 이들 정당들은 사회민주주의 혹은 민주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었고, 대외 인식에서도 민주당이 친미, 반소 노선인데 이들은 비미, 비소 노선을 추구했다. 하지만 혁신정당들 모두 무력통일을 배제하고 평화통일을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반공통일을 주장한 반면, 대부분의 혁신정당들은 상이한 이념의 정치 세력들이 공존할 수 있는 민주통일을 우선시했고 혁신동지총연맹은 자주통일을 주장했다. 또한 모든 정당이 김일

성 정권을 협상의 상대가 아니라 배제, 타도의 대상으로 상정했다. 특히 사회대중당과 사회혁신당은 김일성 정권의 퇴진을 통일의 전제 조건으로 명시했다. 단, 민주당과 달리 혁신정당들은 북한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북한을 남한 체제의 흡수 대상으로 간주하지도 않았다. 즉 북한에 또 하나의 권력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용인하고, 남북한 양 체제 모두의 해체를 추구하는 입장이었다. 주목할 점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모든 혁신정당이 유엔에 의존하고 선거를 통해 통일정부를 구성하는 통일 방법을 제시했다. 다만 선거 감시 기구, 선거 대상 지역, 선거 규정의 적용 등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였다(엄상윤 2008: 111-116).

그러나 선거 이후 중립화 통일론뿐만 아니라 남북협상론 등 다양한 통일방안이 터져 나오면서 이들 정당들 간의 입장의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당시 중립화 통일론과 남북협상론은 당시 민간 통일 논의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었다. 예컨대, 1960년 9월 15일 결성된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는 자주, 평화, 민주라는 통일 3대 원칙을 제시하고 남북협상론에 기반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통일부 1999: 41-42).

- ① 즉각적인 남북정치협상을 실현한다.
- ② 남북 민족대표들에 의한 민족통일건국최고위원회를 구성한다.
- ③ 외세를 배격한다.
- ④ 남북한 대표회담에서 통일을 협의한다.

- ⑤ 오스트리아 식 중립 또는 영세중립을 택할 것이냐 또는 다른 형태를 택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통일 후에 결정하여야 한다.

가장 온건했고 혁신정당 중 가장 우파에 가까웠던 통일사회당은 중립화 통일론을 주장했고, 중도 혁신정당이었던 사회혁신당과 사회대중당도 중립화 통일론을 주장했다. 혁신정당 중 가장 급진적이었던 한국사회당은 남북협상론을 주장했다(홍석률 2005: 102-103). 통일사회당에서는 남북협상에 의하여 선거를 치르고 통일이 이룩된다면 그 통일 한국의 형태가 공산정권이 되어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 개재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통일사회당은 서방 체제를 전제로 한 중립화 통일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회당은 통일은 남북협상을 통해 자주적으로 성취되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고, 남북협상에 의하여 마련된 방안을 유엔이나 국제회의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고, 선거 감시 문제 등도 남북협상에서 결정될 문제라고 주장하였다(서중석 1999: 171). 그러나 이들은 국회와 같은 제도권 정치 내에서 영향력을 갖고 있지 못했고 결국 외부의 통일 운동 단체들과 연대하며 통일담론을 이끌었다.

1961년 초에 들어서서 주로 혁신계, 학생층 및 일부 정치인들 사이에 중립화 통일론 및 남북교류론은 더욱 확대되었으나, 민주당은 중립화통일, 남북협상론, 남북인사교류론, 남북서신왕래론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구파가 이탈하여 구성한 신민당 의원총회도 1월 14일 남북교류, 중립화통일을 배격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국회는

3월 13일 유엔 감시하의 총선거에 의한 통일방안을 재확인하였다(통일부 1999: 41).

그러나 제2공화국에서의 통일담론은 정치권이 주도했기보다는 학생과 시민사회에서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만큼 다양한 주장들이 터져 나왔다. 이처럼 시민사회나 비제도권 정치에서 백화제방처럼 이뤄지던 통일담론에 비해, 당시 제도권 정치에서는 유엔 감시하의 남북 총선거라는 방안 이외에 다른 방안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4. 박정희 정권

1) '선건설 후통일'론

4월 혁명 이후 제2공화국 기간 동안 통일 논의가 대단히 활발히 진행되었던 것과 달리 1961년 5·16쿠데타 이후에는 반공주의에 입각한 통일정책으로 회귀되었고, 대안적 통일담론 역시 매우 제한되었다. 박정희 정권의 대북정책은 5·16쿠데타 후 '군사혁명위원회'에서 발표한 이른바 '혁명공약'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혁명공약'의 제1항은 '반공을 국시의 제일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체제를 재정비 강화한다'고 밝히고 있고, 제5항은 '민족의 숙원인 국토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배양에 전력을 집중시킨다'고 천명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박정희 정권은 반

공체제의 재정비, 강화와 국토통일을 위한 실력 배양을 통일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통일 논의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제1공화국 초기의 통일 논의로의 회귀라는 것이다. 물론 북진통일은 여기서 배제된다. 북한 동포의 해방과 실지회복을 목표로 설정했던 1950년대의 냉전 논리가 박정희 정권에 와서 다시 부활했으며 ‘이로써 통일 논의는 10년 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고 말았다’(심지연 1999: 170). 제3공화국의 첫 대통령 선거였던 1963년 선거에서 승리한 후 가진 첫 연두교서인 1964년 1월 연두교서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통일정책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했다.

외교정책에 있어서는 국제연합을 통하여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통일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아직도 북한에서는 공산화정 밑에서 가난과 부자유로 신음하는 우리 동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북의 실지를 회복함으로써 국토의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민족의 숙원과 노력을 더욱 줄기차게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변천하는 국제정세에 대처하고 통일을 위한 제반문제에 대비하는 연구와 태세도 갖추어 나갈 것입니다.⁶

즉, 유엔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의한 통일, 실지회복에 의한 통일, 통일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연구와 태세의 정비 등을 내세웠는

6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https://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 “1964년 대통령 연두교서”(1964. 1. 10.)

데 이는 사실 종래의 주장을 되풀이 한 것에 불과했다(심지연 1999: 169-170). 국회도 1964년 11월 29일 통일방안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였는데 이 역시 이전의 통일방안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이었다.

- ① 공정한 선거 관리와 유엔 감시하에 토착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자유 총선거를 실시하여 국토를 통일한다.
- ② 선거감시단은 자유선거를 실시하는 유엔 회원국가 중에서 선임되어야 한다.
- ③ 통일된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통일방안은 일체 배제한다(통일부 1999: 46).

문제는 중립국 회원국의 증가로 유엔에서 남한의 입지가 예전에 비해 약화되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스스로 유엔에서의 기득권을 포기할 수도 없었다. 유엔 감시하 총선거안을 폐기할 경우 남한이 강조한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정통성은 상실되고,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북한과 동등한 위치로 규정되어 버리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대내외적으로 박정희 정권은 공식적인 통일방안으로 유엔 감시하 총선거안을 지속적으로 선전했지만 보다 실질적인 통일론은 승공의 방법으로 경제성장을 설정하고 실력배양 후 통일을 하겠다는 것이었다(이주봉 2013: 217).

이처럼 박정희 정권의 통일담론의 보다 중요한 것은 ‘선건설 후통일’론이다.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제건설, 즉 근대화를 먼저 이

룩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통일방안에 대한 논의보다는 통일에 대비하여 국력을 증대하는 데 더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남한이 북한 체제를 능가할 국력을 이룰 때에 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북한보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우위에 있어야 하며, 북한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치적 결속과 경제개발 분야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현실적으로 당시 남한에 비해 북한의 국력이 우위에 있었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북한은 6·25전쟁 이후 주민을 동원하여 경제건설에 적극 나섬으로써 60년대 1인당 국민소득에서 남한을 훨씬 앞지르고 있었다. 북한에 비해 경제적으로 열세에 있었던 남한으로서는 통일 문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기에 '선건설 후통일' 정책과 반공, 안보 논리에 근거하여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등 경제성장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던 것이다(심지연 1999: 170-171). 아래에서 보듯이, 1966년 대통령 연두교서에서는 박정희 정권이 생각하는 통일의 논리가 제시되어 있다.

우리의 지상명제는 바로 조국의 통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지혜와 노력을 한데 모아 조국 근대화 작업을 서두르고, 자립경제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거니와, 이는 곧 통일을 위한 진취적인 계획이며, 통일을 향한 전진적인 노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조국 근대화야말로, 한편 남북통일을 위한 대전제요, 중간목표인 것입니다. 통일의 길이 조국 근대화에 있고, 근대화의 길이 경제자립에 있

는 것이라면, 자립은 통일의 첫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⁷

또 한편으로 보면, 당시 박정희는 적극적인 의미에서 통일을 앞세우기 어려운 입장이기도 했다. 1963년 대통령 선거 운동 과정에서 폭로된 것처럼 박정희는 과거 여수, 순천 사건 때 남로당 당원인 것이 드러나, 1949년 1심에서 국방경비법 제18조, 제33조 위반으로 사형구형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종필은 그의 회고록에서 5·16쿠데타를 앞두고 ‘펼기취지문’을 작성하면서 ‘혁명 공약 제1조에 반공을 국시의 제1의로 삼고..’로 했던 까닭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결정적인 이유는 숨겨져 있었다. 거사의 중심,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일이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공산주의자라는 의심을 받았다. 49년 그가 소령 시절 남로당에 휘말려 들어간 사건 때문이었다. 그러나 좌익의 혐의는 부당했다. 그는 잠시 길을 잃었는지는 몰라도 결국 대한민국의 군에 복귀해 공산주의 북한과 맞서 싸웠다. 누구보다 나는 그 점을 잘 알았다. 그럼에도 적지 않은 사람이 그를 의심했다. 이들은 공공연히 “박정희는 빨갱이다”고 떠들 정도였다. 미국도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았다. 한국에 주둔 중인 미 8군 사령관 매그루더는 박 소장을 예편시키라고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 따라서 나는 펼기군 지도자인 박 소장에게 걸린 그런 혐의를 불식하기 위해서도 반공을 공약 1호로 내세워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뒤에 벌어진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격이지만 펼기문을 인쇄하러 가

7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https://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 “1966년 대통령 연두교서”(1966. 1. 18.)

기 전 박 소장이 이 반공 국시 조항을 읽으면서 나를 보고 빙그레 웃었다. 그러면서 혼잣말 비슷하게 ‘이거 나 때문에 썼겠구먼...’이라고 말했다. 거사를 앞둔 박 소장의 마음이 매듭처럼 뭉쳐져 있던 대목이었다(김종필 20116: 25-26).

이런 상황에서 박정희와 쿠데타 주역들은 철저한 반공을 강조하고 북한과의 접촉이나 교류 등이 전제될 수도 있는 통일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아래의 연설문은 1966년 6·25 16주년 기념사인데 ‘혁신을 가장한 용공사상, 민족애로 분장한 회색통일론, 또는 분별 없는 남북교류론’ 등 어떠한 형태의 통일 논의도 거부하며, 그러한 논의는 ‘경제자립의 반석을 공고히 하고, 우리의 민주적 역량을 충분히 축적하여 모든 면에서 주도권을 우리가 완전 장악할 수 있다고 내다보는 1970년대 후반기’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선 건설 이외에 통일 논의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을 맞이하여 국토통일への 결의를 더욱 굳게 가다듬어야 하겠습니다. 통일은 우리 민족의 비원이요, 지상과제입니다. 그러나 통일의 과업은 결코 기원이나 소망만으로 이룩될 수 없는 것이며, 또 「통일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소리 높여 외친다고 해서 저절로 성취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특히 혁신을 가장한 용공사상, 민족애로 분장한 회색통일론, 또는 분별 없는 남북교류론 등은 국민을 현혹하고, 통일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혼란만을 가져올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나는 강조해 두는 바입니다. 나는 금년도 연두교서에서 우리의 모든 지혜와 노력을 한데 모아 서

두르고 있는 조국 근대화 작업과 자립경제 건설이야말로 통일을 위한 진취적인 계획이며 통일을 향한 전진적인 노력임을 강조한 바 있거니와, 국토통일은 자립과 근대화의 중간목표가 달성된 연후에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해 두고자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과학 등 여러 부문에서 공산주의를 능가할 수 있는 주체적 역량의 배양 없이 국토의 복반을 도로 찾을 길은 요원한 것입니다. 지금은 통일을 말할 때가 아니요, 오직 통일의 전단계인 경제건설과 근대화 작업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때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통일을 위한 적극적인 접근을 시도할 시기는 통일의 민족적 기지인 경제자립의 반석을 공고히 하고, 우리의 민주적 역량을 충분히 축적하여 모든 면에서 주도권을 우리가 완전 장악할 수 있다고 내다보는 1970년대 후반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위해 오직 근면, 검소, 저축으로 증산, 수출, 건설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곧 승공의 길이며, 통일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 다시 “6·25”를 맞이하여, 승공통일이 우리의 지상과제임을 재확인하고 자립경제 건설과 근대화 작업에 총 매진할 것을 국민 여러분과 더불어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⁸

1961년 7월 3일 반공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반공주의 체제는 더욱 강화되었다. 또한 민족일보 폐간과 사장 조용수의 사형, 잡지 ‘세대’의 황용주 필화사건, 남정현의 분지 필화사건 등은 1960년대 박정희 정부가 반공이라는 이름 아래 통일운동과 담론을 얼마나 억압했는지

8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https://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 “6·25 제16주년에 즈음한 담화문”(1966. 6. 25.)

잘 보여준다(김학노 2018: 228).

2) '선평화 후통일'론

1970년대 초 미국과 소련의 데탕트가 진행되고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그 여파가 한반도에 파급되어 정부로서도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했다. 여기서 나온 것이 '선평화 후통일'론으로 이는 1960년대에 배양한 국력을 바탕으로 하여 남북대화의 추진과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경제개발에 주력한 결과, 남북한 관계에서 어느 정도 힘의 균형이 이루어졌다고 나름대로 판단했기 때문이었다(심지연 1999: 171). 이와 같은 변화는 1970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평화통일구상 선언으로 나타났다.

나는 광복 4반세기에 즈음한 뜻 깊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평화통일의 기반 조성을 위한 접근 방법에 관하여 나의 구상을 밝히려 합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선행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긴장 상태의 완화 없이는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에의 접근은 불가능한 것이므로 북괴는 무장 공비 남파 등의 모든 전쟁 도발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소위 『무력에 의한 적화 통일이나 폭력 혁명에 의한 대한민국의 전복을 기도해 온 종전의 태도를 완전히 포기하겠다』 하는 점을 명백하게 내외에 선언하고, 또한 이를 행동으로 실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요구를 북괴가 수락,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유우엔』에 의해서도 명백하게 확인될 경우에는, 나는 인도적 견지와 통일 기반 조성에 기

여할 수 있으며, 남북한에 가로 놓인 인위적 장벽을 단계적으로 제거해 나갈 수 있는 획기적이고도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또한, 북괴가 한국의 민주, 통일, 독립과 평화를 위한 『유우엔』의 노력을 인정하고 『유우엔』의 권위와 권능을 수락한다면, 『유우엔』에서의 한국 문제 토의에 북괴가 참석하는 것도 굳이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나의 구상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것은, 북괴에 대하여 『더 이상 무고한 북한 동포들의 민생을 희생시키면서 전쟁 준비에 광분하는 죄악을 번하지 말고, 보다 선의의 경쟁, 즉 다시 말하자면 민주주의와 공산독재의 그 어느 체제가 국민을 더 잘 살게 할 수 있으며, 더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사회인가를 입증하는 개발과 건설과 창조와 경쟁에 나설 용의는 없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⁹

박정희 대통령은 이 선언에서 과거 ‘선건설’만을 강조하던 입장에서 벗어나 통일을 위한 ‘선평화’를 강조했다. ‘북괴’가 『무력에 의한 적화 통일이나 폭력 혁명에 의한 대한민국의 전복을 기도해 온 종전의 태도를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면, 민주주의와 공산독재의 그 어느 체제가 국민을 더 잘 살게 할 수 있는지 ‘개발과 건설과 창조와 경쟁’을 하자는 것이다. 이 선언에는 이전과 달리 북한에 대한 자신감이 느껴진다.

이미 1970년 신년기자 회견에서 ‘70년대는 우리가 통일 문제에 대

9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https://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 “제25주년 광복절 경축사”(1970. 8. 15.)

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접근을 시도해야 할 연대'라고 박정희 대통령은 말한 바 있다. 즉, '통일에 대한 준비를 완료해야 한다 하는 것이 70년대 통일에 대한 나의 생각이고 전망'이라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70년대를 통일의 연대로 지정한다는 것은 조금 성급한 표현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로서는 통일 그 자체가 70년대의 문제라기보다는 70년대는 통일을 위한 우리의 준비를 완료하는 연대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70년대는 우리가 통일 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접근을 시도해야 할 연대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접근을 시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 기간 중에 우리가 국력을 급속히 성장시켜서 통일에 대비할 여건과 기반 조성을 서둘러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외교,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북괴보다도 압도적으로 우월한 힘을 배양해서, 통일에 대비한 여러 가지 고지를 선수를 써서 점령해 버리자 하는 것입니다.

70년대 말에 가면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소위 조국 근대화 작업은 일단 매듭을 짓게 됩니다. 근대화 작업이 일단 매듭을 짓고 우리의 경제가 어느 정도 자립을 하게 되고, 국방에 있어서도 우리의 자주적인 능력을 갖추게 되고, 기타 모든 분야에 있어서 통일에 대한 고지를 우리가 먼저 전부 점령을 해 버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통일 문제는 완전히 우리가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국제 정세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흐름을 우리가 예민하게 판단해서 기회를 어떻게 포착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이 다가오는 70년대라는 것은 우리가 통일에 대비하는 면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연대라고 하겠습니다. 언제인

가 나는 조국 근대화 작업이라는 것은 조국 통일의 하나의 중간 목표라고 이야기한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70년대에 있어서 우리는 이 중간 목표를 완전히 점령하고 통일에 대한 준비를 완료해야 한다 하는 것이 70년대 통일에 대한 나의 생각이고 전망입니다.¹⁰

1970년 “8·15 평화통일 구상 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대한적십자사는 1971년 8월 12일 1천만 남북이산가족찾기 운동을 제의하였고, 북한적십자사가 8월 14일 이에 동의함에 따라 분단 26년 만에 남북대화가 열리게 되었다. 이러한 ‘평화’에 대한 강조는 1971년 8·15 경축사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평화를 갈구하고 있고, 모든 문제를 무력이 아닌 평화로운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새 물결이 국제 사회에 도도히 흐르고 있는 오늘 이 마당에, 만약에, 북괴가 오늘이라도 대오각성하여 종전의 호전적 정책과 교조주의적 작풍을 깨끗이 버리고, 이 국제적인 새 물결 속에 혼연히 뛰어들어 올 수만 있다면, 이는 세계 평화를 구축하는 일대 전기가 될 것은 물론이요,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한 일대 서광이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오늘 다시 이 자리를 빌어, 북괴에 대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우리의 평화 통일 제의를 하루 속히 수락하고, 무력과 폭력을 포기할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평화 통일만이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의 길임을 다시 한번 중외에 천명하는 바입니다. 나는 그들이 진정

10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https://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 “연초 기자회견”(1970. 1. 9.)

으로 무력과 폭력을 포기하고 진지한 새 자세로 나온다면, 평화 통일을 위한 대화의 광장은 언제든지 마련될 수 있을 것임을 확인해 둡니다.¹¹

이런 ‘평화 통일’의 강조 속에 남북한은 비밀리에 고위급 접촉을 하였고 그 결과 1972년 7월 4일 서울과 평양에서 남북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한 간의 공식문서라 할 수 있는 남북공동성명이 동시에 발표되었다. 「7·4 남북공동성명」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이 합의되었다.

1.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2.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3.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평화 통일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1972년 10월 17일 비상조치를 통해 ‘10월 유신’이 선포되었다. 남북대화를 뒷받침하며 국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라지만, 결국 이 조치는 박 대통령의 영구집권과 통치권 강화를 위한 기만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판명

11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https://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 “제26주년 광복절 경축사”(1971. 8. 15.)

되고 말았다. 당시 통치권 강화를 목적으로 한 권력구조의 변화는 남과 북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는데 '10월 유신'의 선포는 통일에 대한 민족적 열망을 영구집권을 위한 구실로 이용했다는 데서 국민들은 커다란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심지연 1999: 173).

유신체제가 수립된 이후에도 박정희 정권은 '평화 통일'이라는 통일담론을 계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지 약 1년 뒤인 1973년 6월 23일 박정희 대통령은 특별 성명으로 '평화 통일 외교 정책'을 선언했다.

나는 오늘 우리가 그동안 추진해 온 남북 대화의 경험과 국제 정세의 추이에 비추어, 민족의 숙원인 조국 통일의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우리의 평화 통일 외교 정책을 내외에 천명하고자 합니다....우리는 조국 통일을 국내외의 현실 속에서 실현하는 현명하고도 확고한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강인하게 추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곧 현실을 직시하고 평화를 이 땅에 정착시킴으로써 그 바탕 위에서 우리의 자주 역량으로 통일을 기필코 이룩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에 다음과 같은 정책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1.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우리 민족의 지상 과업이다. 우리는 이를 성취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계속 경주한다.
2. 한반도의 평화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며, 남북한은 서로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침략을 하지 않아야 한다.
3. 우리는 남북 공동 성명의 정신에 입각한 남북 대화의 구체적 성과를 위하여 성실과 인내로써 계속 노력한다.
4. 우리는 긴장 완화와 국제 협조에 도움이 된다면 북한이 우리와 같이 국제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5. 국제 연합의 다수 회원국의 뜻이라면 통일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우리는 북한과 함께 국제 연합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우리는 국제 연합 가입 전이라도 대한민국 대표가 참석하는 국력 총회에서 한국 문제 토의에 북한측이 같이 초청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6. 대한민국은 호혜 평등의 원칙하에 모든 국가에게 문호를 개방할 것이며, 우리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들도 우리에게 문호를 개방할 것을 촉진한다.
7. 대한민국의 대외 정책은 평화 선린에 그 기본을 두고 있으며, 우방들과의 기존 유대 관계는 이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임을 재천명한다.¹²

그리고 1974년 1월 연두 기자회견을 통해서 박정희는 남북 불가침 협정 체결을 제의하였다.

만약에 앞으로 남북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 새로운 협정이 꼭 필요하다면, 또 북한측에서 말하는 것이 진심이라면 평화 협정 운운할 것이 아니라, 나는 이 기회에 『남북간의 <상호 불가침 협정>을 체결하자』하는 것을 제의하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이 <불가침 협정>은 그 골자를 서너 가지로 들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남북이 서로 절대로 무책 침범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만천하에 약속을 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상호 내정 간섭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하한 경우에도 현행 휴전 협

¹²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https://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 “평화·통일 외교 정책에 관한 특별 성명”(1973. 6. 23.)

정은 그 효력이 존속되어야 한다하는 이 세 가지 골자만 포함된 불가침 협정이 체결된다면, 그리고 이것을 서로 성실히 준수만 한다면 나는 한반도에 있어서의 전쟁은 예방이 된다고 봅니다. 평화는 유지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¹³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 대통령 기념사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을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선평화 후통일의 정책 기조'가 직접 언급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이 뜻 깊은 자리를 빌어 조국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성실하게 추구해 온 평화 통일의 기본 원칙을 명백히 천명하고자 합니다. 평화 통일을 위한 우리의 기본 원칙은, 첫째,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이를 위하여 남북은 상호 불가침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둘째, 남북간에 상호 문호를 개방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남북 대화를 성실히 진행시켜야 하며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이 바탕 위에서 공정한 선거 관리와 감시하에 토착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자유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을 이룩한다.

나는 이와 같은 우리의 평화 통일 기본 원칙이야말로 오늘의 국제 환경 속에서 무력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분단된 조국을 통일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실현성 있는 길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13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https://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 "1974년 연두 기자회견"(1974. 1. 18.)

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평화를 정착시키고 그 평화의 바탕 위에서 통일을 이룩하려는 선평화 후통일의 정책 기조를 지금까지 확고하게 유지해 왔고, 또 앞으로도 이를 변함없이 일관성 있게 계속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¹⁴

이처럼 박정희 정권기의 통일담론은 초기에 강력한 반공주의와 ‘유엔 감시하의 공정한 선거 관리와 감시하에 토착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자유 총선거 실시’라는 것으로부터, ‘선건설 후통일’의 담론으로 변화되어 갔고, 1970년대가 되면서 ‘선평화 후통일’로 정책의 방향이 전환되었다. 그의 대북정책을 시기별로 볼 때 1960년대는 ‘선건설 후통일’ 노선을 견지하여 국력배양에 치중하였던 ‘대화 없는 대결 시대’였으며, 1970년대는 국제적 데탕트 분위기와 경제개발의 자신감을 반영하여 ‘선평화 후통일’ 노선에 입각하여 남북협상을 통하여 7·4 남북공동성명을 이끌어 낸 ‘대화 있는 대결 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974년 북한에 의한 대통령부처 저격과 영부인의 피살사건, 1975년 베트남의 공산화와 북한이 건설한 땅굴의 발견 등으로 1970년대 중반 이후 대북정책은 상당히 강경한 성격을 띠게 되었다(변창구 2011: 25).

이승만 정권 시기와 비교할 때, 박정희 시기의 통일담론에서는 무엇보다 통일은 ‘시급히 당면한 과제’가 아니었다. 북진통일론은 당장

14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https://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 “제29주년 광복절 경축사”(1974. 8. 15.)

이라도 여건이 된다면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통일을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면, 박정희 시대의 통일은 ‘선개발 후통일’이거나 ‘선평화 후통일’처럼 당장이 아니라 미래에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었다. 즉, 이 시기의 통일담론은 ‘통일 논의의 유보’였던 것이다. 1972년 유신헌법에서는 부칙 10조에 “이 헌법에 의한 지방의회는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했다. 이것 역시 당시 박정희 정권이 통일을 바라보는 시각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의 김대중 후보

박정희 시기에 들어서는 이전 제2공화국 때와는 달리 통일담론이 국가에 의해 사실상 독점되었다. 강력한 반공주의 하에서 통일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기는 어려웠다. 더욱이 통일이 오늘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내일의 과제로 설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통일에 대한 주장은 박정희 체제에 대한 도전이거나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 박정희 정권과 다른 통일담론은 대통령 선거와 같은 매우 예외적인 정치적 공간을 통해서만 제기될 수 있었다.

1971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신민당의 김대중 후보는 유세 중에 ‘통일 논의의 유보’라는 당시의 담론을 깨고 ‘남북 교류’를 주장했다.

나는 조국의 통일 없이는 우리의 자유와 평화와 번영이 있을 수 없

다는 사실에 유의해서 우리의 통일 역량을 배양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통일 문제는 국제, 국내의 여건이 성숙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국가운명을 좌우하는 이 통일 문제를 가지고 여야 간에 정략으로 이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가 정권을 잡으면 김일성에 대해서 남북 간에 서로 어떤 일이 있든지 무력을 가지고 통일하는 것은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포기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또한 김일성에 대해서 서로 간첩이나 테러 본자를 보내 가지고 상대방의 내부를 교란시키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김일성이 들으면 다행이겠지만, 듣지 않을 때는 김일성이 지금까지 말한 민족이요, 평화요 하던 말이 모두 거짓이라는 사실이 여실히 폭로되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을 감안하여 김일성이 평화에 복종한다는 전제 아래 나는 남북 간의 기자교류, 서신교환 등 비정치적인 교류를 시도해 보겠습니다.¹⁵

이처럼 김대중은 당시의 지배적 통일담론과 달리 ‘비정치적인 교류’를 강조했다. 김대중은 “폐쇄적 전쟁 지향에서 적극 평화 지향의 통일정책”을 표방하면서 ‘긴장완화와 남북교류’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남북 간의 전쟁에 의한 문제 해결의 포기 및 파괴 활동의 지양으로 긴장 완화의 실현, 둘째, 기자 교류, 서신

¹⁵ https://www.unamwiki.org/w/%EA%B9%80%EB%8C%80%EC%A4%91%EC%9D%98_1971%EB%85%84_%EB%8C%80%ED%86%B5%EB%A0%B9%EC%84%A0%EA%B1%B0_%EC%97%B0%EC%84%A4

교환, 체육 교환 등 비정치적 교류의 실시, 셋째, 미, 소, 일, 중공에 의한 한반도에서의 전쟁 억제에 대한 보장 확보'(심지연 2001: 60).

전쟁에 의한 문제 해결 포기는 이후 박정희의 통일담론에서도 제기되는 것이지만, 비정치적인 분야라고 해도 북한과의 직접 남북교류의 실시와 '소련과 중공'을 포함한 4대 강국에 의한 한반도 평화 보장은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그러나 대통령 후보라고 해도 당시 야당 후보의 통일담론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5. 전두환 정권

전두환 정권은 출범 후 통일 문제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제5공화국이 출범하기도 전인 1981년 1월 22일 국정연설을 통해 전두환은 '남북한 당국의 최고 책임자의 상호 방문'을 제안했다.

본인은 오늘 지난날의 일들을 굳이 시비함이 없이 남북한 간의 민족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고 동족 간의 전쟁재발을 방지하며 중단된 남북대화를 무조건 재개하여 평화통일의 길을 열어 가는 데 역사적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남북한 당국의 최고책임자가 번갈아 상호 방문할 것을 엄숙히 제의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아무런 부담과 조건 없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초청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그가 서울에 체재하는 동안 일체의 신변

안전을 보장할 것이며, 서울과 다른 도시 및 농촌의 실정을 알아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가 원하는 그 어느 장소라도 방문하는 데 모든 협조를 제공할 것입니다. 본인은 또한 같은 조건으로 본인이 북한을 방문하도록 그가 초청하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북한을 방문할 용의가 있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쌍방 당국의 최고책임자가 상호간의 신뢰를 쌓아 동족간의 전쟁재발을 방지하고 남북대화를 재개하여 평화통일을 이룩할 목적으로 역사적인 방문을 교환한 후에 서로간의 이견을 좁히기 위하여 끈기 있게 노력한다면 남북간의 여하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본인은 확신하는 바입니다.¹⁶

이에 대해 북한은 1주일 후인 1981년 1월 19일 부주석 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김일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이 제안을 거부했다. 그러나 전두환은 제5공화국 출범 이후인 1981년 6월 5일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제1기 제1차 회의에서 남북한 당국최고책임자 상호방문 제의를 구체화한 남북한 당국최고책임자간의 직접 회담을 제의했다.

본인은 바로 이와 같은 확신에서 지난 1월 12일 남북한 당국최고책임자의 상호방문을 제의한 바 있습니다. 이 제의야 말로 조국통일의 길을 여는 돌파구라고 나는 굳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그러나 북한당국이 아직도 이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인은 이 자리에서 북한 김일성 주석에게 아무런 부담과 조건없이 서로를 방문하

16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https://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 "새해 국정연설"(1981. 1. 12.)

도록 초청한 지난 1월 12일자 제의의 수락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두는 바입니다. 북쪽에서 먼저 서울에 와도 좋고 본인이 먼저 평양에 가도 좋으며, 그 선후의 선택은 북한당국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본인의 생각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제의의 취지를 발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본인은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새로운 제의를 덧붙이고자 합니다. 만약 북한측이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본인의 초청을 받아들일 수 없고, 또 본인을 북한으로 초청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 그 대신 남북한 당국의 최고책임자가 다른 어떤 장소에서든지 직접 만나 기탄없이 의견을 교환하는 것입니다. 판문점이나 제3국을 포함하여 만나는 장소의 선택은 북한당국에 일임합니다. 만일 이같은 최고책임자 회담이 실현된다면 그 자리에서 이미 본인이 제의한 상호방문 문제와 그동안 남북한이 제의했던 통일방안을 포함하여 쌍방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의논하기를 본인은 희망하는 바입니다.¹⁷

이 두 차례의 대북 제안에서는 통일담론과 관련된 특별한 내용보다는 만남 그 자체가 강조되고 있다. 다만 1981년 6월 5일의 제안에서는 그 이전의 대북 제안에서 볼 수 없었던 남북 교류와 상호 개방이 제시되어 있다.

이와 같은 근거에서 본인은 통일문제의 결정권자인 겨레의 시야 앞에 남북한 당국이 서로 그 사회를 겹쳐하게 개방하여야 한다는 것을

17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https://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 “자문회의 문회사”(1981. 6. 5.)

제창하는 바입니다. 만일 북한 측이 사회의 완전개방을 당장에 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한다면 우선 체육, 문화, 학문, 우편, 경제교류 부더라도 시작해서 차차 완전교류, 완전개방으로 접근해 갈 수 있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1981년 6월 10일 로동신문과 방송논설을 통해 6·5 제의는 “통일문제를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불순한 목적을 노리고 있다.”고 비난하는 한편, 김일성은 1981년 7월 1일 재북평화통일 촉진협의회 결성 25주년 기념식에 보낸 축하문에서 “현 남조선 정부와는 어떤 형태의 대화나 접촉도 할 수 없다”면서 6·5제의를 거부했다(통일부 1999: 57).

이처럼 제5공화국 정권이 통일 문제에 임기 초부터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데에는 광주민주화운동의 유혈 진압에 대한 정치적, 심리적 돌파구를 남북대화의 복원과 남북관계의 정상화에서 찾으려 한 때문이기도 했다. 12·12 하극상 사태를 일으켰고 민주화와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는 광주의 학생과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정권을 장악했던 신군부 세력은 정통성 문제에 콤플렉스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남북대화의 실현에 정권의 운명을 걸다시피 했고 이를 통해 정통성 문제를 극복하려 했던 것이다(심지연 1999: 175). 즉, 남한의 신군부는 부족한 정통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남북대화에서 찾고자 하였다. 북한은 남북대화를 통해서 정통성이 취약한 남한의 군부정권의 기반을 뒤흔드는 한편, 남북관계 진전의 성과를 김정일

승계체제의 공고화에 활용하고자 하였던 것이다(박종철 2015: 115).

제5공화국 하에서의 통일담론에서 흥미로운 것은 ‘통일헌법’에 대한 제안이다. 그동안 유엔 감시하 북한 지역에서의 선거 혹은 남북한에서의 선거 등의 방안은 제시된 바 있지만, 법적, 제도적 차원에서 통일을 논한 것은 전두환 정권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평화통일을 성취하는 가장 합리적인 길은 남북 간에 민족적 화합을 이룩하여 민족전체의 통일 의지를 한데 모아 통일헌법을 채택하고 그 헌법에 따라 통일국가를 완성시키는 것이라고 본인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통일헌법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쌍방 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남북대표로 가칭 「민족통일협의회의」를 구성하고 그 기구에서 민족, 민주, 자유, 복지의 이상을 추구하는 통일민주공화국을 실현하기 위한 통일헌법을 기초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통일헌법 초안이 마련되면 쌍방은 남북한 전역에 걸쳐 민주방식에 의한 자유로운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통일헌법을 확정, 공포하고 그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선거를 실시, 통일국회와 통일정부를 구성함으로써 대망의 통일국가를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일조국의 정치이념과 국호, 대내외 정책의 기본방향, 정부형태와 국회 구성을 위한 총선거의 방법과 시기 및 절차 등은 민족통일협의회의가 구성되어 쌍방이 통일헌법을 기초하는 과정에서 상호 합의할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구상하는 통일헌법 초안은 민족통일협의회의에서 제시될 것입니다.¹⁸

18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https://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 “1982년도 국정연설”(1982. 1. 22.)

이러한 통일헌법이라는 담론을 제시하면서 같은 연설에서 통일을 이룰 때까지 ‘남북한 기본 관계에 관한 잠정 협정’을 제안했다. ‘남북한 기본관계’는 이후 노태우 정부 시기에 남한에서 법제화되지만 이런 표현이 제시된 것도 이 때가 처음이다.

이상과 같은 견지에서 본인은 남북 쌍방이 무엇보다도 상호관계를 정상화하고 이 기초 위에서 민족화합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기를 희망하면서 통일을 이룩할 때까지의 실천조치로서 다음의 합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의합니다.

첫째, 쌍방은 장차 통일국가가 수립될 때까지는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관계를 유지해 나간다.

둘째, 쌍방은 쌍방간 분쟁문제 해결에 있어서 모든 형태의 무력 및 폭력의 사용 또는 위협을 완전히 지양하고 모든 문제를 상호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한다.

셋째, 쌍방은 상호관계에 있어서 현존하는 상이한 정치질서와 사회제도를 상호 인정하며 서로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일절 간섭하지 아니한다.

넷째, 쌍방은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와 전쟁방지를 위하여 현존 휴전체제를 유지하면서 군비경쟁의 지양과 군사적 대치상태의 해소 조치를 협의한다.

다섯째, 쌍방은 분단으로 인한 민족의 고통과 불편을 해소하며 민족적 신뢰와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사회적 개방을 추진해 나가기로 한다.

쌍방은 이산가족의 인도적 재회문제를 포함해서 남북간의 자유로

은 인적 왕래와 다각적인 교류를 촉진할 수 있도록 교역, 교통, 우편, 통신, 체육, 학술, 교육, 문화, 보도, 보건, 기술, 환경보존 등 제반분야에서 협력하며 이를 통하여 민족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구체적인 노력을 경주하기로 한다.

여섯째, 쌍방은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상, 이념, 제도의 차이에 구애됨이 없이 전세계 모든 나라들과 각기 체결한 모든 쌍무적 및 다자간 국제조약과 협정을 존중하며 민족의 이익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협의한다.

일곱째, 쌍방은 각료급 전권대표를 임명하여 각기 서울과 평양에 상주 연결대표부를 설치한다. 쌍방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연결대표부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정하며 자기측 관할영역에 주재하는 상대방 연결대표부의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편의와 협조를 제공한다.

본인은 북한측이 하루속히 남북한 당국최고책임자의 회담에 호응하여 이 자리에서 이상의 모든 문제들에 관하여 허심탄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본인은 조속한 시일안에 각료급을 수도대표로 하는 남북 쌍방의 고위대표단간에 예비회담을 개최하여 남북한 당국최고책임자간의 회담을 실현시키는데 필요한 절차를 마련할 것을 북한 측에 제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5공화국에서는 정권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일담론은 사실상 별 큰 중요성을 갖지 못했다. 정통성이 없는 전두환 정권의 대북 제안을 진정성 있는 노력으로 다수 국민이 생각하지 않았고, 북한의 반응 역시 냉담했다. 더욱이 1983년 10월 미얀마의 아웅산 묘역에서의 테러로 인해 남북 관계는 극도로 악화되기도 했

다. 5공화국에서의 통일 관련 논의는 별 진전이 없었고 남북 관계는 수해 물자 지원을 계기로 일시적으로 활발해졌다.

1984년 8월 31일부터 4일간 서울, 경기, 충청 일원에 내린 집중호우로 서울 지역이 커다란 홍수 피해를 입었다. 전국적으로는 사망 및 실종 189명, 이재민 35만 1000명, 부상 153명에 피해액은 1333억 원에 달했다. 남한의 수해에 대해 북한은 9월 8일 방송을 통해 수해 지역 이재민들에게 쌀 5만석, 옷감 50만m, 시멘트 10만t, 의약품 등을 보내겠다고 제의했다(경향신문 2009. 9. 28.).¹⁹ 북한이 남한의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수해복구물자를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 것이다. 북한의 이 제의에 대해 예상과 달리 남한은 이 제의를 수락했다.

북측은 처음에 자동차와 배편으로 서울, 속초, 부산에 구호물자를 수송하고 북한 기자들이 수해 지역을 직접 방문하겠다는 제안을 내놓았지만 결국 판문점과 인천, 동해항으로 최종 타결됐다. 이에 따라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육, 해로를 통해 북한적십자의 수해 물자가 전달됐고, 남측은 담요, 카세트 라디오, 손목시계, 양복지 등 18개 품목이 든 선물 가방 848개를 북한 대표들에게 답례품으로 증정했다. 북한 쌀은 수해 지역 주민들에게 33kg에서 66kg까지 분배됐다. 북한적십자사의 수해물자 지원은 6·25전쟁 이후 최초의 남북 간 물자교류로 기록됐고, 얼어붙은 남북관계에 물꼬를 트는 구실을 했다

¹⁹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0909281752145

(경향신문 2009. 9. 28.).

수해 물자의 인도, 인수를 계기로 남북 간에 대화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다. 이를 보다 폭넓은 교류 협력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겠다고 생각한 전두환 정권은 남북적십자회담과 남북경제회담을 제의했고, 이 제의가 받아들여져 1984년 11월 15일에는 남북경제회담이, 11월 20일에는 적십자회담 예비접촉이 이루어졌으며, 다음 해인 1985년 5월 28일에는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한편 북한은 1985년 4월 9일 남북한 사이에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남북국회회담을 열 것을 제의했다. 이에 따라 1985년 7월 23일에는 판문점에서 남북국회회담 개최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1차 예비접촉이 열리게 되었다. 이처럼 1985년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남북 간에는 다섯 차례의 경제회담, 세 차례의 적십자회담, 그리고 국회회담을 위한 두 차례의 예비접촉이 이루어졌다. 또한 88 서울올림픽대회에 북한의 참가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주재로 스위스 로잔에서 네 차례의 남북체육회담이 개최되기도 했다. 그러나 남북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어느 회담에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심지연 1999: 176-177). 하지만 7·4 남북공동성명 이후 처음으로 남북 간에 활발한 접촉이 이뤄졌다.

제5공화국에서는 정권 차원에서 통일헌법 등 새로운 담론이 제시되었지만 널리 논의되지는 못했다. 오히려 전두환 정권은 임기 후반 1986년 북한의 금강산발전소 착공을 북한의 수공^{水攻}으로 선전했고, 북한에 금강산발전소가 건립되면 서울 시내 3분의 1이상이 침수된다

는 이른바 ‘서울 물바다론’을 내세웠다. 통일담론보다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담론이 여전히 보다 큰 영향력을 가졌다.

6. 노태우 정부 - 북방정책과 한민족공동체

노태우 시기는 대내외적으로 전환기였다. 국내적으로는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화로 이행하는 시기였으며, 대외적으로는 냉전에서 탈냉전으로 전환해 가던 시기였다. 소련에서는 개혁, 개방 정책이 채택되었고, 미소 대결로부터 협력 노선으로 전환되었다. 소련과 동유럽의 사회주의 체제 역시 붕괴되어 가고 있었다. 북한 역시 이런 상황 속에서 위기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던 시기였다. 노태우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북방정책’을 강하게 내세웠다. 북방정책은 그의 임기 5년 동안 꾸준히 추진되면서 외교정책뿐만 아니라 대북정책을 이끌어 가는 기초가 되었고, 그 시기 통일담론을 이끌었다.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의 물줄기를 타고, 12년 만에 처음으로 동과 서, 남과 북의 세계 모든 나라가 참가하는 이 화합의 거대한 합창은 한반도에 마침내 통일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렁찬 합창소리에 화답하여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모든 나라와 국제평화와 협력의 외교적 노력을 더욱 더 쏟고자 합니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서방과의 유대를 더 한층 강화하는 한편 제3세계와의 우의를 더욱 굳게 하겠습니다. 이념과 체제가 다른 이

들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은 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 공동의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북방에의 이 외교적 통로는 또한 통일로 가는 길을 열어 줄 것입니다....저로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재결합을 위한 길이 보인다면 세계 어느 곳이든 개의하지 않고 방문해 어느 누구와도 진지하게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밝힙니다.... 한반도 문제는 기본적으로 남북한 당사자들이 민주적 방식을 통해 평화적으로 풀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평화와 통일의 전령사가 그 어느 곳으로부터든 서울을 방문한다면 기꺼이 받아들일 것입니다.²⁰

노태우 정부는 북방정책으로 구 사회주의권 국가와의 외교 관계 수립에 노력하는 한편, 북한에 대해서도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취했다. 1988년 7월 7일 발표된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을 발표하면서,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6가지 정책을 제시했다.

나는 오늘 자주, 평화, 민주, 복지의 원칙에 입각하여 민족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사회, 문화, 경제, 정치공동체를 이룩함으로써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갈 것임을 약속하면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내외에 선언합니다.

첫째,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 종교인, 문화·예술인, 체육인, 학자 및 학생 등 남북동포간의 상호교류를 적극 추진하며 해외동포들이 자유로이 남북을 왕래하도록 문호를 개방한다. 둘째, 남북적십사회

20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https://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 “제13대 대통령 취임사”(1988. 2. 25.)

답이 타결되기 이전이라도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이산가족들 간에 생사, 주소확인, 서신왕래, 상호방문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주선, 지원한다. 셋째, 남북간 교역의 문호를 개방하고 남북간 교역을 민족내부 교역으로 간주한다. 넷째, 남북 모든 동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비군사적 물자에 대해 우리 우방들이 북한과 교역을 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 다섯째, 남북간의 소모적인 경쟁, 대결 외교를 종결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발전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하며, 또한 남북대표가 국제무대에서 자유롭게 만나 민족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서로 협력할 것을 희망한다. 여섯째,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북한이 미국, 일본 등 우리 우방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협조할 용의가 있으며 또한 우리는 소련,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한다. 나는 이상과 같은 우리의 조치에 대해 북한 측도 적극 호응 해줄 것을 기대합니다.²¹

이 선언 속에 “민족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사회, 문화, 경제, 정치 공동체”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이 선언문 속에서는 ‘공동체’라는 표현이 자주 발견된다.

우리가 아직 비극적인 분단현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남과 북이 민족공동체라는 의식을 등진 채 서로를 대결의 상

21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https://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1988. 7. 7.)

대로 여겨 적대관계를 격화시켜 온 데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의 공동체로서 그 속에서 삶을 영위하며 겨레의 힘과 슬기를 모아 시련과 도전을 극복하면서 빛나는 역사와 문화전통을 창조해 왔습니다. 따라서 남과 북이 함께 번영을 이룩하는 민족공동체로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야말로 번영된 통일 조국을 실현하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이 길이 곧 민족자존의 길이며 민족통합의 길입니다. 이제 남과 북은 분단의 벽을 헐고 모든 부분에 걸쳐 교류를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민족적 유대를 강화해 나갈 적극적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대외적으로도 하나의 공동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대결의 관계를 지양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동체에 대한 강조는 1989년 9월 11일 제147회 정기국회에서의 특별연설을 통해 통일의 원칙과 방향을 담은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으로 이어진다.

우리는 분단이 있기까지 5천 년의 긴 역사를 통해 한 핏줄, 같은 언어, 같은 문화 전통 그리고 같은 삶의 터전 위에서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왔습니다. 이 민족공동체가야말로 현재도 남북으로 갈라진 민족을 하나로 묶고 있는 바탕이며 우리 민족의 통합을 이루어야 하는 당위이자 이를 보장하는 근본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국토분단은 좌우익간의 유혈투쟁과 6·25남침으로 인한 동족간의 처절한 전쟁을 겪으면서 민족의 분열로 심화되었습니다. 적대하는 두 체제로 나뉘어 반세기 가까이 서로 다른 삶을 살아 온 남북의 겨레는 생활양식과 가치관마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라지고 이질화된 민족사회를 그대로 두고 하나의 국가를 만들 수는 없습니

다. 민족공동체를 올바로 회복, 발전시키는 일이야말로 통일을 앞당기는 길입니다.

통일로 가는 중간단계로서 먼저 남과 북은 서로 다른 두 체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현실을 바탕으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공존공영하면서 민족사회의 동질화와 통합을 촉진해 나가야 합니다. 남북 간의 개방과 교류, 협력을 넓혀 신뢰를 심어 민족국가로 통합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여 사회, 문화,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면서 남북 간에 존재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해 간다면 정치적 통합의 여건은 성숙될 것입니다. 통일을 촉진할 이 과정을 제도화하기 위해 쌍방이 합의하는 헌정에 따라 남북이 연합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연합체제 아래에서 남과 북은 민족공동 생활권을 형성하여 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고, 민족동질성을 회복토록 하여 민족공동체의 발전을 보다 가속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²²

노태우 정부 시기의 중요한 통일담론은 ‘민족공동체’의 회복, 발전으로서의 통일이었다. ‘공동체의 회복을 통한 번영’ 역시 중요한 담론을 형성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국가 중심으로부터 공동체 중심으로 통일방안의 중심을 이동시켰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기능주의 이론에 입각하여 점진적 통일과 공동체 형성에 의한 통일을 지향하였다(박종철 2015: 118).

22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https://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 “1989년도 정기국회 연설”(민족통일과 관련한 노태우 대통령 특별연설)(1989. 9. 11.)

저는 남북정상회담이 가능한 한 빨리 열려 본격적인 남북협력과 통일 시대를 열 현장에 합의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이 현장에서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본방안, 상호불가침에 관한 사항, 통일의 중간단계로서 남북이 연합하는 기구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포괄적인 합의가 담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하루 속히 이 같은 민족공동체 현장이 마련되어 온 겨레 앞에 공포되기를 기대합니다.....두 차례 세계대전에서 치열한 전쟁을 치렀던 유럽의 여러 민족과 국가들은 지금 하나의 공동체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함께 번영을 일구는 시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를 포함한 유럽공동체 국가들은 지난날의 적대와 대결을 동반자의 관계로 바꾸어 1992년 완전한 경제통합체를 이루며 정치적 통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민족의 지배 아래서도 하나의 민족 공동체를 지켜 왔던 우리가 분단의 벽을 넘어 수천 년 이어온 공동체의 삶을 회복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노태우 정부에서 강조한 공동체는 이전과 달리 서로 다른 두 정부를 현실로 인정하고 평화공존의 바탕 위에서 통일방안을 도출하겠다는 것으로, 이전 정권에서 적대적으로 접근하던 대북정책이나 통일담론과는 기본적으로 다른 차원에서 대북정책이 이뤄졌다. 이처럼 노태우 정부에선 ‘북방정책’이라는 기조 위에서 ‘한민족공동체’라는 통일담론이 이어져 왔다. 88서울올림픽 이후인 1989년 연두 기자회견에서는 이러한 정책으로 인한 성과에 대한 자신감을 느낄 수 있다.

한국은 냉전체제 속의 대결이 아니라 세계의 화해를 이끄는 나라로서 국제사회에 새로운 위상을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미국,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과 유럽의 전통적인 우방과 더없이 공고한 관계를 이룬 바탕 위에서 이제 본 궤도에 오른 북방정책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해 갈 것입니다. 헝가리, 폴란드, 유고슬라비아와 새로이 열린 외교관계를 심화시킬 것이며 다른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수교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한해 2만 명 이상이 중국과 왕래하고 우리 항공기가 소련 상공을 날아 유럽을 오가는 일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생각할 수 없던 일입니다. 중국과 최근 영사관계를 수립한 소련, 그리고 여러 사회주의 국가들과 경제협력 등 실질적인 관계발전을 추구할 것입니다.

자유와 번영을 향해 혁명적인 변혁을 몰아온 동유럽의 물결은 머지 않아 북한에도 미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변화가 북한에서 질서 있고 평화적으로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는 북한이 다함께 번영을 누려야 할 같은 민족공동체로서 세계사의 흐름에 동참하여 개방으로 나오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북한이 우리의 경쟁대상인 때는 지났습니다. 분단 반세기를 앞둔 이제 남북한은 상호신뢰의 바탕 위에서 대화, 교류, 협력을 통해 통일의 시대를 함께 열어가야 합니다. 나는 대통령 취임사와 88년 10월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우리가 분단의 장벽을 허물어 남북동포 간의 자유 왕래를 실현하며 남북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를 전면 개방하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나의 7·7선언과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도 남북이 개방과 교류를 바탕으로 모든 분야에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자는 것입니다.²³

23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https://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 “1990년 연두 기자회견”(1990. 1. 10.)

이러한 성과 위에서 노태우 정부는 7·7선언과 한민족공동체통일 방안에 기초하여 남북고위급회담을 비롯하여 남북대화를 추진하였으며,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또한 8차례에 걸쳐 진행된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분단 이후 첫 남북 당국 간 공식 합의 문서인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채택했다.

7. 김영삼 정부

1993년 2월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1961년 이후 첫 민간인 출신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민주화 초기 의미하는 바가 컸다. 이런 이유로 김영삼 대통령은 자신의 정부를 ‘문민정부’라고 불렀다. 군사정권과 군인 출신 대통령의 시대를 벗어난 첫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과거와 다른 통일담론이나 대북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높았다. ‘신한국의 창조’가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내세운 비전이었는데, 통일담론과 관련해서는 ‘민족’을 강조했다.

저는 역사와 민족이 저에게 맡겨준 책무를 다하여 민족의 화해와 통일에 전심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상적인 통일 지상주의가 아닙니다.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입니다. 김일성 주석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서로 협력

할 자세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계는 대결이 아니라 평화와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민족과 국가 사이에도 다양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더 나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념이나 어떤 사상도 민족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합니다.

김 주석이 참으로 민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리고 남북한 동포의 진정한 화해와 통일을 원한다면, 이를 논의하기 위해 우리는 언제 어디서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봄날 한라산 기슭에서도 좋고, 여름날 백두산 천지 못가에서도 좋습니다. 거기서 가슴을 터놓고 민족의 장래를 의논해 봅시다. 그때 우리는 같은 민족이라는 원점에서 서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언급한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더 나을 수는 없습니다’는 국내정치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되었다. 이 발언은 동맹국인 미국보다 같은 민족인 북한과의 화해, 협력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는 것이었다. 1993년 3월 9일 발표된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 노인의 송환 역시 대북 유화정책으로 간주되었다. 1995년에는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남북한이 북경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에 쌀 15만 톤을 지원하기로 결정했고 6월부터 10월 사이에 한국 항구에서 청진, 나진, 흥남, 원산항으로 쌀이 수송되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는 임기 초부터 북한 핵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북핵 문제는 1993년 3월 북한이 핵확산방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시작되었고, 이로 인해 남북한은 1993년 10월부터 핵 문

제 해결을 위한 남북대화를 했으나, 1994년 3월 북한의 ‘서울 불바다’ 발언으로 중단되었다. 1994년 6월에는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를 탈퇴했고, 7월에는 김일성 사망과 조문 파동으로 인한 남북관계의 경색을 맞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관된 대북정책을 추진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취임사에서 민족이 강조되었지만, 북한 핵문제가 터져 나온 뒤에 김영삼 대통령은 ‘핵무기를 갖고 있는 상대와 악수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기회를 빌려 우리는 북한을 흡수할 의사도, 그럴 필요도 없음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북한의 핵문제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이제 세계적인 문제로 되었습니다. 우리는 핵무기를 갖고 있는 상대와는 결코 악수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실한 국제적인 협력과 남북한 당국자간의 진지한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²⁴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도 김영삼 정부에서는 이전 노태우 정부에서 마련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연장선상에서 이 방안을 보완하고 발전시킨 방식으로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을 1994년 8월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제시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크게 변화되어 온 정부의 통일정책이 일정한 연속성을 갖게 된 것이다.

24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https://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 “취임 100일 기자회견문”(신한국을 향한 제2의 건국)(1993. 6. 3.)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 아래서 반목과 불신을 쌓아온 남과 북이 하루아침에 통일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통일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정부는 이미 하나의 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해 ‘화해, 협력 단계’와 ‘남북연합단계’를 거쳐, ‘1민족 1국가의 통일국가를 완성’하는 3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우선, 남과 북은 적대와 대립의 남북 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예멘이 정치적 통일을 이루고도 내전을 치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화해와 협력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성급하게 외형만의 통일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남과 북은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공존공영하면서 평화를 정착시키는 남북연합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남북연합단계에서는 남과 북이 경제, 사회 공동체를 형성해 발전시킴으로써 정치적 통합을 위한 여건을 성숙시켜 나가야 합니다. 정부의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은 통일의 중간 과정을 거쳐, 궁극적으로는 1민족 1국가로 통일을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1995년 광복절 연설에서도 이전 정부에서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같은 합의 사항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는 반드시 남북 당사자간에 협의, 해결되어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지킬 책임은 궁극적으로 남북한 당사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관련 국가들의 협조와 뒷받침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비롯한 모든 남북 간의 합의사항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평화의 첫 걸음은 신뢰구축이며, 신뢰는 서로 약속한 것들을 지키고 실천에 옮기는 데서 생기기 때문입니다.²⁵

그러나 동시에 김영삼 정부에서는 사회주의권 붕괴와 독일통일을 목격하면서 한반도에서의 통일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당시 ‘고난의 행군’으로 고통을 받던 북한 붕괴론에 대한 인식도 발견된다. 사실 문민정부가 정책적인 일관성을 가지지 못한 이유 중 하나도 북한 붕괴의 가능성이었다. 이미 다른 사회주의권은 붕괴된 상황이고, 북한은 심각한 기아를 겪고 있었다. 게다가 김일성이 사망하는 상황까지 발생하면서 북한을 충분히 체제 위기 수준의 상태로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붕괴의 가능성도 있지만 동시에 핵으로 인한 위협의 대상자로도 인식되었다. 이런 상황은 북한에 대해 일관된 태도를 갖는데 어려움을 주었다(이화준, 노미진 2019: 36).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갑자기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점검하고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25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https://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 “제50주년 광복절 경축사”(한민족의 위대한 21세기를 향해)(1995. 8. 15.)

통일이 언제, 어떻게 오더라도 통일은 결국 남과 북의 이질화된 민족사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회복, 발전시키는 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우리 사회부터 모범적인 민주공동체로 키워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통일에의 영광과 환희뿐만 아니라, 그에 수반되는 고통과 희생도 함께 나눌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북한 주민이 겪고 있는 생활상의 어려움을 생각해야 합니다. 북한의 문제는 곧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²⁶

전체적으로 볼 때 김영삼 정부는 이전 노태우 정부에서 마련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기초 위에서 민족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화해 협력 → 남북연합 → 1민족 1국가로의 통일’을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뤄야 한다는 통일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 방안은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한국 정부의 통일방안의 기초가 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향후의 통일담론 형성에도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으나, 김영삼 정부 시기에는 북핵 문제로 인한 어려움, 북한 쌀 지원이나 이인모 노인 송환 등을 둘러싼 우리 사회 내부의 이념 갈등, 그리고 의욕적으로 추진한 남북정상회담이 김일성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수포로 돌아간 것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고 그런 만큼 통일담론 역시 강력하고 일관성 있게 제시되기 어려웠다.

26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https://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 “제40주년 광복절 경축사”(위대한 한민족의 시대를 위한 매진)(1994. 8. 15.)

8. 김대중 정부 - 햇볕정책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 정치 역사에서 처음으로 여야 간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뤄냈다. 이런 점에서 새로운 정책적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그런 자신감 속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햇볕정책’을 제시하여 임기 초부터 매우 적극적인 대북 유화정책을 추진해 나갔다. 햇볕정책이라는 표현은 1994년 9월 미국 워싱턴 DC의 헤리티지 재단에서 김대중이 연설할 때, 이습우화에 나오는 바람과 햇볕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북한과 같이 고립되고 폐쇄적인 국가를 다루기 위해서는 바람보다는 햇볕이 더 효과적이라고 이야기한 데서 비롯되었다(신진 2003: 308).

남북관계는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정착에 토대를 두고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남북문제 해결의 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1991년 12월 13일에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의 실천이 바로 그것입니다. 남북 간의 화해와 교류협력과 불가침,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한 완전한 합의가 이미 남북한 당국 간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실천만 하면 남북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통일에의 대로를 열어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북한에 대해 당면한 3원칙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어떠한 무력도발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우리는 북한을 해치거나 흡수할 생각이 없습니다. 셋째,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을 가능한 분야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저는 남북기본합의서에 의한 남북간의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위한 특사의 교환을 제

의합니다. 북한이 원한다면 정상회담에도 응할 용의가 있습니다.²⁷

이처럼 취임사에서부터 흡수통일 배제와 화해협력의 적극 추진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남북정상회담의 가능성도 처음부터 열어 두었다. 특사 교환과 남북정상회담 필요성은 1998년 4월 영국 런던대학교 초청 강연에서도 반복되었으며, 대통령 당선 이후 처음으로 ‘햇볕 정책’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나는 남북 간의 화해와 교류협력의 확대를 통해 북한을 평화와 개혁과 개방의 길로 이끄는 ‘햇볕정책’을 줄곧 주창해왔습니다. 이제 대통령으로서 이런 나의 구상을 하나 하나 실천에 옮겨나갈 것입니다....나는 화해, 교류와 협력 그리고 불가침의 3가지를 합의한 남북 기본합의서를 이행할 방안을 서로 협의하기 위해 남북이 특사를 교환할 것을 제의해놓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북한 측과 남북정상회담도 가질 용의가 있음을 밝혔습니다.²⁸

이는 2000년 3월의 베를린자유대학 연설, 이른바 베를린 선언에도 나타난다.

²⁷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https://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 “제15대 대통령 취임사”(국난극복과 재도약의 새시대를 열시다)(1998. 2. 25.)

²⁸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https://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 “런던 대학교 SOAS 초청강연회 연설”(남북간 화해와 교류·협력 추진)(1998. 4. 4.)

이러한 모든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남북한 당국간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나는 이미 2년 전 대통령 취임사에서 19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위해 특사를 교환할 것을 제의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의 특사 교환 제의를 수락할 것을 촉구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매우 지속적으로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해 온 것이다.

한편, 이숙 우화에 나오는 ‘햇볕과 바람’의 내기에 대한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대로, 햇볕정책은 도구적, 수단적 의미를 갖는다. 실제로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대북정책은 강조되었지만, 통일과 관련된 논의는 제한적이었다. 1998년 2월 취임사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평화, 화해, 협력의 실현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대북정책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는 현 단계에서는 당장 통일을 이룩하는 데 주력하기보다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 간 공존공영 관계를 실현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는 것을 의미했다(통일부 1999: 82-83). 즉, 통일을 이루기 위해 중요한 것은 통일방안 그 자체가 아니라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이라 판단하고 ‘햇볕정책’을 추진하였는데, 과거 정부들의 형식적 통일 논의에 머물기보다 남북 직접 대화를 통한 실질적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통일정책을 추진하고자 했다(김영재 2014: 36-37). 1999년 4월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동북아 평화회의’에 대한 축하 메시지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통일보다 대북정책으로서의 햇볕정책을 강조했다.

‘국민의 정부’는 당장의 통일보다는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우선적 과제로 인식하고 일찍부터 세 가지 원칙에 입각하여 대북정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바대로 북한의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반대, 그리고 교류, 협력의 적극적 추진이며, 이를 토대로 한 대북 포용정책을 통해 공존공영을 실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포용정책과 이에 기반을 둔 대북문제의 포괄적 해결만이 50년 동안 계속된 한반도의 냉전을 실질적으로 종식시키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안정을 이룩하는 길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²⁹

베를린 선언에서도 이러한 의미를 다시 강조했다.

이러한 서독의 대동독 정책은 우리 한국의 햇볕정책 추진에 매우 귀중한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나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의 단계적 통일을 주장해 왔습니다....따라서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은 당장 통일을 추구하기보다는 한반도에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상호위협을 해소하고 남북한이 화해·협력하면서 공존·공영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통일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햇볕정책은 ‘안보와 협력의 병행추진’을 강조함으로써 과거 ‘힘의 우위’에 입각한 안보·평화정책으로부터의 전환을 가져왔으며,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경제적,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인적·물적 교류정책

29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https://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 “한반도 평화를 위한 동북아 평화회의 축하 메시지”(당장의 통일보다 평화정착이 우선적 과제)(1999. 4. 19.)

을 추진하였다(김영재 2014: 37). 햇볕정책의 추진으로 서해에서의 군사적 충돌에도 불구하고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과 같은 대북 교류협력은 활발해졌다. 또한 역사상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6·15 공동선언'이 이뤄졌다. 군 당국자 간 접촉과 협력도 이뤄졌고 2000년 9월에는 남북한 국방장관회담도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부정적인 의미의 통일담론도 동시에 유포되었다. 이른바 '퍼주기'나 '남남 갈등'에 대한 논란이 그것이었다.

9. 노무현 정부 - 평화번영정책, 동북아 시대, 평화체제

노무현 대통령은 김대중 정부의 여당이었던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었다. 당선 이후 열린우리당을 창당하여 새천년민주당과는 거리를 두었지만, 대북정책에서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을 계승, 발전시킨다는 입장을 가졌다. 노무현 정부에서의 대북정책은 평화번영정책으로 제시되었다. 평화번영정책은 보다 넓은 범위의 '동북아 시대'를 이뤄낸다는 보다 포괄적 전략 하에서 추진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2월 취임사에서 동북아 시대를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그의 취임사에서 보다 많이 언급된 것은 평화번영정책보다 '동북아 시대'였다. 그런 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비전은 '동북아 시대'이며 그것에 도달하기 위한 방안이 평화번영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우리의 미래는 한반도에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앞에는 동북아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근대 이후 세계의 변방에 머물던 동북아가, 이제 세계 경제의 새로운 활력으로 떠올랐습니다. 21세기에는 동북아 시대가 될 것이라는 세계 석학들의 예측이 착착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북아의 경제규모는 세계의 5분의 1을 차지합니다. 한, 중, 일 3국에만 유럽연합의 네 배가 넘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는 동북아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중국과 일본,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이런 지정학적 위치가 지난날에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오히려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21세기 동북아 시대의 중심적 역할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급 두뇌와 창의력, 세계일류의 정보화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부산항, 광양항과 고속철도 등 하늘과 바다와 땅의 물류기반도 구비해 가고 있습니다. 21세기 동북아 시대를 주도적으로 열어 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동북아의 물류와 금융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동북아 시대는 경제에서 출발합니다. 동북아에 '번영의 공동체'를 이룩하고 이를 통해 세계의 번영에 기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평화의 공동체'로 발전해야 합니다. 지금의 유럽연합과 같은 평화와 공생의 질서가 동북아에도 구축되게 하는 것이 저의 오랜 꿈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동북아 시대는 완성됩니다. 그런 날이 가까워지도록 저는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진정한 동북아 시대를 열자면 먼저 한반도에 평화가 제도적으로 정착되어야 합니다. 한반도가 지구상의 마지막 냉전지대로 남은 것은 20세기의 불행한 유산입니다. 그런 한반도가 21세기에는 세계를 향해 평화를 발신하는 평화지대로 바뀌어야 합니다.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잇는 동북아의 평화로운 관문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부산에서 파리행 기차표를 사서 평양, 신의주, 중국, 몽골, 러시아를 거쳐 유럽의 한복판에 도착하는 날을 앞당겨야 합니다.³⁰

‘동북아 시대’의 도래를 위해서는 그 중심에 놓인 ‘한반도에 평화가 제도적으로 정착’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인식 하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그의 대북정책을 평화변영정책으로 불렀으며, 이전 정부에서 추진된 정책을 ‘계승’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제까지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성과는 괄목할 만합니다. 남북한 사이에 사람과 물자의 교류가 일상적인 일처럼 빈번해졌습니다. 하늘과 바다와 땅의 길이 모두 열렸습니다. 그러나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는 더욱 광범위한 국민적 합의를 얻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성과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면서, 정책의 추진방식은 개선해 나가자 합니다. 저는 한반도 평화증진과 공동변영을 목표로 하는 ‘평화변영정책’을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모든 현안은 대화를 통해 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상호신뢰를 우선하고 호혜주의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남북 당사자 원칙에 기초해 원활한 국제협력을 추구하겠습니다. 넷째, 대내외적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참여를 확대하며 초당적 협력을 얻겠습니다. 국민과

30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https://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 “제16대 대통령 취임사”(2003. 2. 25.)

함께하는 ‘평화번영정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북아 시대’나 ‘평화번영정책’은 한국 사회의 발전과 이전 정부의 성과를 토대로 이를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즉, 한국의 경제성장과 민주화, 국제화와 정보화 등 국가 역량의 확대, 김대중 정부에서 이뤄놓은 대북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었고, 북핵 문제에서 보듯이 대북정책을 남북관계 차원을 넘어 동북아지역의 안정과 발전을 함께 고려하면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통일부 2004: 26). 평화번영정책은 추진과제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 경제 중심 추진 등이 제시되었는데, 통일담론과 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자주 언급한 것은 특히 ‘평화체제’였다.

안보를 튼튼히 하고 남북 화해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평화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남북관계를 착실히 진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여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새 틀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³¹

북핵 문제의 해결을 계기로 한반도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되고 북미관계가 정상화된다면, 한반도 평화정착은 물론 동북아가 새

31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https://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 “2004년 신년사”(2004. 1. 1.)

로운 질서로 나아가는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입니다.³²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관련국들과의 협상도 진지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³³

참여정부가 추진한 대외정책, 안보정책은 대부분 실현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야 합니다....6자회담의 진전은 남북대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대화는 6자회담의 성공을 촉진할 것입니다. 6자회담이 더욱 성공적으로 진전되면, 그 다음은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되고, 남북이 함께 공존하는 한반도 경제시대가 열리면 한반도는 명실공히 동북아시아의 경제 중심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유라시아 대륙으로 힘차게 뻗어나가면서 동북아시아의 물류, 금융, 비즈니스 허브로 확고히 자리 잡고, 북한은 획기적인 경제발전의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³⁴

이제 북핵 문제가 풀리면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야 한다, 이것이 우리 정부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런데 평화체제로 가려면 종전협정 또는 평화협정이 순서대로 또는 동시에 함께 가야 되는 절차가 남아

32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https://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 “[유엔총회 참석]코리아소사이어티 초청 만찬 연설”(2005. 9. 15.)

33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https://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 “신년 기자회견 모두 연설 및 질문 답변”(2006. 1. 25.)

34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https://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 “제62주년 광복절 기념사”(2007. 8. 15.)

있습니다.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원칙에 있어서 남북이 주도해서 직접 관련 당사국간의 평화체제에 관한 협의를 해 나가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북 당사자 간에 바로 협의를 시작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자고 각국에 이렇게 제안하도록 그렇게 기본적으로 합의를 하고, 이 과정의 일환으로서 부시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바 있는 종전선언 방안을 김 위원장에게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 위원장은 종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을 밝히고, 이전에 한미 간에 논의한 바 있는 종전선언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사시키도록 남측이 한번 노력을 해 보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께 추진해 나가자는 취지로 선언문에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앞으로 여러 당사국 간에 대화가 잘 이루어지면 이 문제도 북측으로서는, 그렇게 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앞으로 북핵 문제 해결과 함께 북미관계가 개선되고 평화체제 논의가 본격화되면, 이제 우리는 분단 반세기 만에 냉전체제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기대를 가질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하고 돌아왔습니다.³⁵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지난 50년간 한반도 질서를 규정해 온 불안정한 정전상태가 평화상태로 전환되고, 이에 대한 남북 당사자 간에 평화협정이 체결될 뿐 아니라 주변 국가들에 의한 제도적 보장이 이루어진 상태를 의미한다는 점에서(통일부 2005: 21-22), 노무현

35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https://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국민보고”(2007. 10. 4.)

대통령이 말한 평화번영정책과 동북아 시대 실현이라는 정책의 최종적 도달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동북아 시대는 전통적인 대미 중심 외교로부터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도 불렀다. 이런 점은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다. 다음은 2003년 광복절 경축사의 일부이다.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가 풀리면 남북간에 평화와 협력의 물꼬가 트일 것이고, 이어서 동북아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동북아 시대가 열리면 중국의 발전은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6·25전쟁에서 미군은 수많은 젊은이들의 목숨을 바쳐 우리의 자유를 지켜주었고, 오늘날까지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평화의 토대 위에서 오늘의 성공을 이루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안보를 언제까지나 주한미군에 의존하려는 생각도 옳지 않습니다. 자주독립국가는 스스로의 국방력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동북아시아에도 협력과 통합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어디에 기댈 것인가를 놓고 편을 갈라 싸우다 치욕을 당하는 역사를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저의 '동북아 시대' 구상의 핵심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북아 시대는 우리에게 그 이상의 기회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유럽 인구의

4배에 이르는 거대한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럽과 같은 협력과 통합의 질서가 자리잡게 되면 동북아시아는 그야말로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떠오를 것입니다. 한국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새로운 질서 속에서 동북아시아가 더 이상 세계의 변방이 아니듯이, 한국도 더 이상 변방이 아닐 것입니다. 수백 년 동안 우리를 움츠리게 했던 변방의 운명을 벗어 던지고, 주변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당당하게 세계질서를 함께 이끌어 가는 자랑스러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로 가는 길목에 북한 핵 문제와 남북관계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지 않고는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도 없습니다. 잘못하면 한반도 문제가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갈등의 빌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를 불행에 빠뜨리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³⁶

노무현 정부 시기에도 부정적인 의미의 대항적 통일담론이 적지 않게 제기되었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북정책의 수립 추진을 위해서는 대북정책과 국내정치 간 관계를 잘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김대중, 노무현 시기의 경험이 잘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정파적 업적에 급급한 대북정책 성과의 독점보다 공론화 과정을 통한 정파 간의 공유 노력과 합의 도출이 중요하다’는 것이 었다(신종대 2013: 31-32).

36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https://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 “제58주년 광복절 경축사”(2003. 8. 15.)

10. 이명박 정부 - 비핵·개방·3000, 통일 준비

이명박 정부는 10년 만의 보수 정권의 출범으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임기 동안 이어진 대북유화 정책과는 다른 대북정책을 추진했다.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10년 동안 추진되었던 공존형 통일 패러다임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다. 이명박 정부는 과거 두 정부의 통일정책이 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으며 북한의 변화가 미흡하고 남북관계의 비정상화가 초래되었다고 보았다(박종철 2015: 124). 그 대신 이명박 정부는 ‘비핵·개방·3000’을 새로운 통일담론으로 제시하였다. ‘비핵·개방·3000’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북한의 개방을 지원하여 국민소득 3,000 달러를 달성하도록 협력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전 정부 시기의 대북정책을 ‘이념의 잣대’로 간주하고 ‘비핵·개방·3000’이 ‘실용의 잣대’에 의한 대북정책임을 강조했다. ‘북한 주민 소득이 3천 달러’가 되도록 이끄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북핵 문제 해결의 방안이라는 것이다. 아래는 2008년 취임사에서 밝힌 대북정책의 방향이다.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새로운 60년을 시작하는 첫해인 2008년을 대한민국 선진화의 원년으로 선포합니다.우리는 ‘이념의 시대’를 넘어 ‘실용의 시대’로 나가야 합니다. 실용정신은 동서양의 역사를 관통하는 합리적 원리이자 세계화 물결을 헤쳐 나가는 데 유효한 실천적 지혜입니다.남북통일은 7천만 국민의 염원입니다. 남북관계는 이제까지보다 더 생산적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이념의

잣대가 아니라 실용의 잣대로 풀어가겠습니다. 남북한 주민이 행복하게 살고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비핵·개방·3000 구상’에서 밝힌 것처럼,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의 길을 택하면 남북협력에 새 지평이 열릴 것입니다.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10년 안에 북한 주민 소득이 3천 달러에 이르도록 돕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동족을 위하는 길이고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³⁷

이러한 ‘실용적’ 접근은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2009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북핵 해결의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 자리를 빌려 저는 북한 당국에 간곡히 촉구합니다. 핵무기는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의 장래를 더욱 어렵게 할 뿐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지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북한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고 남북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길을 찾았으면 합니다. 북한이 그런 결심을 보여 준다면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 구상을 추진할 것입니다. 북한경제를 발전시키고 북한 주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국제 협력 프로그램을 적극 실행할 것입니다.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고위급회의를 설치하고 관련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경제·교육·재정·인프라·생활 향상 분

³⁷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https://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 “제17대 대통령 취임사”(2008. 2. 25.)

야에 걸친 대북 5대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입니다.³⁸

이러한 정책 전환으로 인해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초반부터 북한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 금강산관광이 중단되었고,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비핵·개방·3000’에 대해 북한의 반응은 냉담했고,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의 통일담론은 ‘통일 준비’로 변화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 구상을 발표하였다. ‘3대 공동체 통일구상’은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통일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2년 반 정도가 지난 후에야 통일 구상이 제시된 셈인데, 사실상 무게중심은 통일세 등 통일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금 남북관계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결이 아닌 공존, 정체가 아닌 발전을 지향해야 합니다. 주어진 분단 상황의 관리를 넘어서 평화통일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우선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는 ‘평화공동체’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한반도의 비핵화가 이뤄져야 합니다. 나아가 남북 간의 포괄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남북한의 경제통합을 준비하는 ‘경제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궁극적으로는 제도의 장벽을 허물고 한민족 모두의 존엄과

38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https://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 “제64주년 광복절 경축사”(2009. 8. 15.)

자유, 삶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민족공동체’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한민족의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통일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을 대비해 이제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 사회 각계에서 폭넓게 논의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³⁹

지난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사태로 불안한 정세가 조성되었지만, 우리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진정성과 책임성을 갖고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남북이 함께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이를 기반으로 평화통일의 길을 열어 나가야 합니다.

통일의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며, 남북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 그 시간은 앞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통일을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강한 통일의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통일이 가져올 밝은 미래를 보아야 합니다. 통일이 가까이 있던 멀리 있던 통일을 위한 염원을 모아 나가야 합니다.⁴⁰

우리는 한편으로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에 유의하면서 대화의 문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광복의 궁극적 완성은 평화 통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 한국이야말로 ‘더 큰 대한민국’의 도약대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상생공영의 길을 여는 노력에 더해 통일 준비도 착실히

39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https://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 “제65주년 광복절 경축사”(2010. 8. 15.)

40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https://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 “제15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식 축사”(2011. 7. 1.)

해 나갈 것입니다. 그간 정부는 동북아의 안정과 공동번영을 위하여, 나아가서 평화 통일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는 물론 EU와 ASEAN 국가들과도 긴밀히 협력해 왔습니다. 한반도 통일은 우리 민족은 물론 이웃 국가들과 국제사회 전체에도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⁴¹

통일 준비론이 강조되는 가운데 류우익 통일부장관은 통일 준비를 상징하는 행사로 통일 대비 자금 모금을 위한 ‘통일항아리’ 사업을 벌이기도 했다.

이렇게 이명박 정부에서의 통일담론은 초기의 ‘비핵·개방·3000’에서 ‘통일 준비’로 변화되어 왔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과거의 권위주의 시대처럼 북한을 압박하거나 고립시키는 정책은 아니었다. 그러나 엄격한 상호주의와 대북유화 정책에 대한 거부감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의 부정적 태도를 불러올 수 있는 것이었다. 또 한편으로는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애당초부터 이명박 정부에서 대북정책의 우선순위는 낮은 것이었으며, 중도 실용이나 녹색성장, 선진화 등의 담론에 비해서 통일담론은 크게 주목 받지 못했다.

41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https://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 “제67주년 광복절 경축사”(2012. 8. 15.)

11. 박근혜 정부

통일담론과 관련해서 가장 흥미로운 경우가 박근혜 대통령이다. 박근혜 정부의 공식 대북정책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다음과 같이 ‘신뢰’를 강조했다.

최근 북한의 핵실험은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도전이며, 그 최대 피해자는 바로 북한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은 하루빨리 핵을 내려놓고, 평화와 공동발전의 길로 나오기 바랍니다. 더 이상 핵과 미사일 개발에 아까운 자원을 소모하면서 전 세계에 등을 돌리며 고립을 자초하지 말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함께 발전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우리가 처한 안보 상황이 너무도 엄중하지만 여기에만 머물 수는 없습니다. 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로 한민족 모두가 보다 풍요롭고 자유롭게 생활하며,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을 만들고자 합니다. 확실한 역지력을 바탕으로 남북 간에 신뢰를 쌓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서로 대화하고 약속을 지킬 때 신뢰는 쌓일 수 있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규범을 준수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진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꿈꾸는 국민행복시대는 동시에 한반도 행복시대를 열고, 지구촌 행복시대를 여는데 기여하는 시대입니다. 앞으로 아시아에서 긴장과 갈등을 완화하고 평화와 협력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및 아시아, 대양주 국가 등 역내 국가들과 더욱

돈독히 신뢰를 쌓을 것입니다.⁴²

이러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그 해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강조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 방안도 제시된다.

앞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한의 공동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남북한 이산가족들의 고통부터 덜어드렸으면 합니다. 이번 추석을 전후로 남북한의 이산가족들이 상봉할 수 있도록 북한에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길 바랍니다. 저는 분단과 대결의 유산인 비무장지대(DMZ)에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기를 북한에 제안합니다. 비무장지대를 평화의 지대로 만듦으로써 우리의 의식 속에 남아 있던 전쟁의 기억과 도발의 위협을 제거하고, 한반도를 신뢰와 화합, 협력의 공간으로 만드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억지력이 필요하지만, 평화를 만드는 것은 상호 신뢰가 쌓여야 가능합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식과 국제적 규범이 통하는 남북관계를 정립하여 진정한 평화와 신뢰를 구축해 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추진해 가겠습니다.⁴³

이러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실천 방안들은 취임 이듬해 3

⁴²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https://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 “제18대 대통령 취임식”(2013. 2. 24.)

⁴³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https://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 “제68주년 광복절 경축사”(2014. 8. 14.)

월 독일 드레스덴에서 행한 ‘드레스덴 선언’을 통해 구체화된다. 여기서는 앞서 본 이산가족 상봉이나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협력 방안이 제시되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저는 이 자리에서 평화통일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북한 당국에게 세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부터 해결해 가야 합니다. 먼저 분단으로 상처받은 이산가족들의 아픔부터 덜어야 합니다. 당연히 함께 살아야 할 가족 간의 만남조차 외면하면서 민족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남북한도 이제는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등으로 가족들의 한을 풀고 동시에 남북간에 신뢰를 쌓는 길에 나서야 합니다.... 앞으로 한국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UN과 함께 임신부터 2세까지 북한의 산모와 유아에게 영양과 보건을 지원하는 ‘모자패키지(1,000days) 사업’을 펼칠 것입니다. 나아가 북한의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해 한반도의 통일 미래를 함께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둘째,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를 함께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농업생산의 부진과 산림의 황폐화로 고통 받는 북한 지역에 농업, 축산, 그리고 산림을 함께 개발하는 ‘복합농촌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남북한이 힘을 합해야 합니다.현재 추진 중인 나진·하산 물류사업 등 남북러 협력사업과 함께, 신의주 등을 중심으로 남·북·중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의 공동발전을 이뤄갈 것입니다. 대북 개발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에 나서야 합니다. 분단의 세월이 길어지면서, 현재 남북한 간에는 언어와 문화, 생활양식마저 달라지고 있습니다. 남북한 간 진정한 소통과 통합을 위해서는 가치관과 사고방식의 차이를 줄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한 주민이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저는 이런 제안을 남북한이 함께 실현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를 북측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현재 분단된 한반도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남북한을 가로지르는 휴전선과 그 사이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된 비무장지대DMZ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바로 그곳에 남북한과 UN이 함께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했으면 합니다.... DMZ 세계평화공원은 DMZ 긴장을 평화로, 한반도의 분단을 통일로, 동아시아의 갈등을 화합으로 이끄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발전시켜 북한의 안보우려도 다룰 수 있는 동북아 다자안보 협의체를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주변국과 조화롭고, 국제사회로부터 환영받으며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통일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런 한반도 평화통일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가기 위해 저는 곧 대통령 직속의 “통일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킬 것입니다. 여기서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통일과정과 통합과정을 착실하게 준비하고자 합니다.⁴⁴

이 드레스덴 선언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서 출발하여 비무장지

44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https://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 “드레스덴 공대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 및 연설”(2014. 3. 28.)

대DMZ 세계평화공원,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남북 동질성 회복, 북한 산모 및 영아 지원 등 다양한 협력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있다. 이전 이명박 정부 때의 상호주의 접근에서 벗어나 대화와 교류 및 지원을 강조하면서도 ‘신뢰 구축’을 중시하겠다는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시기의 통일담론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통일대박’론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대박론은 2014년 1월 신년 구상 발표 및 기자회견 때 기자 질문에 대한 답의 형식으로 제기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통일이 한국경제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며 “통일은 대박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신년구상을 발표한 뒤 가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축을 비롯한 남북문제 관련 질문에 이 같이 대답했다. 박 대통령은 “통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겠느냐, 굳이 통일해야 하느냐 하는 생각을 가진 국민들도 있는데 한반도가 통일되면 투자가 크게 활성화돼 우리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국경제 2014. 1. 6.).

‘통일대박’ 발언은 매우 큰 반향을 얻었다. 이 기자회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했다. 박 대통령이 통일대박을 언급한 1월 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의 조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54.5%로 그 전 주보다 6% 포인트가 올랐다. 리얼미터 조사에

서는 또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인 63.7%가 박 대통령의 ‘통일대박’ 발언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갤럽이 1월 10일 밝힌 여론 조사에서는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2013년 말 49%에서 1월 8일 52%, 1월 9일 54%로 높아졌다. 한국 갤럽 조사에서 응답자의 28%가 1월 6일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가장 인상적인 말로 ‘통일대박’을 꼽았다(김보근 2014: 16). 대통령이 ‘대박’이라는 젊은 세대가 사용하는 유행어를 썼다는 것이 큰 화제가 된 이유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 발언은 진보 진영에서도 “통일대박론은 사그라져 가던 통일담론에 불을 지피고, 통일에 무관심하던 사람들에게 통일의 당위성을 일깨워주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임동원 전 장관),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무관심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일거에 씻어내고 또 통일이라는 것을 경제적인 현실과 연관시켜 생각하는 관점을 퍼뜨렸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본다”(백낙청 명예교수)는 평가를 받았다(김보근 2014: 16). 이처럼 통일대박론은 처음부터 매우 큰 여론의 주목을 받았고, 아래의 기사에서 보듯이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을 대표하는 담론이 되었다.

처음 통일대박론이라는 대통령의 ‘워드wording’이 나왔을 때만 해도 통일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언급한 정도로만 여겨졌을 뿐, 큰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해외 언론과의 인터뷰나 기고, 독일 방문과 드레스덴 선언 등을 통해 박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은 확대 재생산됐고, 이제 현 정부의 통일정책을 대표하는

슬로건이 됐다.⁴⁵

그러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나 통일대박론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 시기의 남북관계는 매우 좋지 않았다. 개성공단도 결국 문을 닫고 말았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북한이 전혀 호응하지 않은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신뢰’는 양자적이다. 북한이 보기에 한국 정부가 신뢰할 만한 대상이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 국민이 보기에 북한이 믿을 만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적지 않은 이들이 북한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적대감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대북정책이 될 뿐만 아니라 남남갈등도 해소해야 하는 정책이 되어야 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제안에 비해서 국내적으로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논의는 그다지 충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 점에서 주목할 기구가 ‘통일준비위원회’이다. 이러한 통일론의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지속적 추진을 상설적으로 담당할 정부기구로서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7월 15일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하였다. ‘통일준비위원회’는 대통령(위원장)을 포함 50명의 위원으로 구성했으며, 준비위원회는 위원장인 대통령 이외에 각계각층의 민간위원 30명, 국회의원 2명, 정부위원 11명, 국책연구기관장 6명으로 구성했다. 그러나 구성부터 국내적으로 공감대를 높이려는 것이기보다

⁴⁵ <https://www.mk.co.kr/news/culture/view/2014/11/1400413/>

관계 부처장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 기구적 성격이 강했다.

또 한 가지 지적할 점은 통일담론과 관련해서 본다면 신뢰프로세스와 통일대박론은 서로 잘 연계된 슬로건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상대방과의 '신뢰', 특히 오랜 기간 동안 적대적 관계였던 상대방과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 신뢰 구축은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 이뤄질 수 있는, 슬로건의 표현 그대로, '과정'을 필요로 한다. 이에 비해 '통일대박'은 결과에 대한 언급이다. 즉, 신뢰 구축을 통한 교류, 협력의 최종 종착지에 대한 표현이 '통일대박'이다. 물론 통일이 '대박'이기 때문에 북한과의 신뢰 관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충분히 사전에 둘 간의 개념적 관계가 잘 정리되어 있지 않았다. 과정과 결과를 나타내는 두 담론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존재한다. 더욱이 '통일대박'은 북한에게는 오히려 신뢰 구축에 대한 의구심을 줄 수도 있었다. '통일대박'은 민주화 이후 한국 정부의 통일담론 중 가장 대중적으로 성공한 것이지만 동시에 사전에 준비가 덜 된 즉흥적이라는 인상이 짙다.

12. 평가

지금까지 역대 정부의 통일담론에 대해 살펴보았다. 정권마다 새로운 통일담론이 제기되어 통일담론의 지속성이 약하다는 특성을 알 수 있다. 매번 정부 때마다 새로운 담론이 제시되는 것은 국내외적인 정치

적 환경의 차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박정희 정권 하에서도 임기 초반의 '선건설·후통일'에서 임기 후반 '선평화·후통일'로 바뀐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5년 단임 대통령제 하에서도 통일담론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 통일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고 그것이 구체적인 정책이나 결정의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소 표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민주화 이후의 통일담론은 사회적 공감대 구축에 영향을 미쳤다가 보다는 특정 대통령 시기의 정책 방향에 대한 유행어나 슬로건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그렇게 된 원인은 몇 가지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한국 대통령제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대통령제에서 대통령 간의 관계는 단절적이다. 이전 정부의 구호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대통령은 없다는 말이다. 전 정부에서 가장 공을 들인 핵심적 정책이라면 도리어 후임 정부에서는 폐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이 박근혜 정부에서 사실상 폐기된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정당이 정책의 중심, 통일담론의 중심이 된다면 대통령의 임기를 넘어서는 담론의 지속이 가능하지만, 인물 중심의 현 제도 하에서는 사실상 지속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더욱이 대통령 선거 운동이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 정당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자와 그의 개인적 캠프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통일담론이나 대북정책도 여기에서 준비되고 있다. 이 때문에 당선된 대통령의 통일담론은 그의 소속 정당에서도

처음에는 낯설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한 또 다른 문제점은 통일담론이 각 정부의 대북정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오늘날 한국 정치에서 이념적으로 가장 대립되는 모습을 보이는 영역이 대북정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여야의 정권교체가 일반화된 상황에서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관성, 필요성, 공감대의 약화로 이어지는 문제는 반복해서 일어난다.

둘째, 과거 정부의 통일정책이 통일의 실질적인 발판구축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대내외적 정치용으로 이용되었다. 민주화 이전 권위주의 시대에 각 정권은 특히 국내외적으로 각각 자신의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 과정에서 대내적인 정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로 통일정책을 이용하였다(성장환 2011: 252).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이런 특성이 더 두드러지기는 했지만, 민주화 이후에도 통일정책, 대북정책, 통일담론이 실현 가능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고민에 앞서 대통령 선거에서 득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측면이 있다.

셋째, 통일담론은 정치권 내에서 다양한 견해가 서로 경쟁하며 제기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권력을 장악한 대통령과 집권 세력에 의해 제기된다는 점이다. 야당은 통치의 대안 세력 [government-in-waiting](#) 이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북정책에서 야당이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대신할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정부 입장과 다른 야당의 '다른 목소리'가 대북 협상 과정에서 협상력을 약화시

키거나 나아가 ‘국론을 분열’시킨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더욱이 야당 내에서 다음번 대통령 후보가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함부로 야당의 독자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쉽지 않다.

넷째, ‘통일담론’이라고 부르기에는 그동안 각 정부 때 제시된 용어나 슬로건이 ‘너무 어렵거나’ ‘전문적이거나’ 일반인들과 무관한 것이 많았다. 따라서 전문가들이나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논의가 될 수 있지만, 일반인들의 관심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 점에서 대중적으로 가장 성공한 담론은 ‘통일대박’이라고 할 수 있고, ‘햇볕정책’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였다. 그러나 통일대박의 경우 잘 보여주는 대로, 구체성이 담보되지 않은 막연한 미래에 대한 기대감만으로는 그것이 지속되는 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선건설·후통일’과 같은 담론이 일반 국민에게 받아들여지는 데는 보다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성공적인 통일담론 형성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고려가 필요하다. 첫째, 너무 전문적인 언어보다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언어의 선택이 필요하며, 통일담론의 내용도 통일 이후의 삶에 대한 희망적 메시지가 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대박과 같은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구체적 삶의 모습이 개괄적으로라도 그려져야 한다. 즉, 일상적인 삶 속에서 다수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북한 주민이나 남한 주민 모두에게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기회로서의 통일, 단순한 민족주의적 열정의 실현이 아니라 나와 내가

족, 자식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계기로서의 통일에 대한 염원 등이 담겨질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은 특히 최근 들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통일을 기피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중요하다. 이승만 정권 때의 ‘북진통일’은 무력을 통해서라도 통일해야 한다는 것으로, 그 당시 통일은 거의 모든 국민에게 원상회복으로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분단이 장기화되면서 통일에 대한 필요성이 그만큼 약화되고 있다. 일부 정부의 담론은 통일담론이기보다 분단 관리의 의미가 더 크기도 했다.

둘째, 대북정책이 정파적, 이념적 갈등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 통일담론이 이념적, 정파적 속성에서 벗어나야 하고 그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하도록 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선언적인 성격의 통일담론보다는 우리 사회 내부에서 진지하게 통일의 필요성, 그리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하고 그것을 토대로 통일담론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과거 대북정책이 ‘정책 목표의 일관성’이 아닌 ‘정책 수단의 일관성’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지적은 귀 기울일 만하다. 이는 북한의 의도나 주변 환경의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에 장애를 초래했고 정책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었다(변창구 2015: 168).

셋째, 이와 관련하여 통일담론을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벗어나 이러한 논의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현실적으로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영향이 가장 강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통일담론에 정파적 속성이 개입되는 결과를 낳고, 또한 단기적이고 수단적인 측면에 통일담론이 얽매이게 된다. 따라서 각 정부의 통일정책이나 대북정책과 분리된 형태의 통일담론이 논의되고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완전한 분리가 어렵다면 최소한 통일담론과 대북정책이 깊이 연동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담론의 영향력은 사회적 합의나 공감대에서 비롯된다. 즉 통일담론의 영향력은 기본적으로 남한 사회에서의 합의가 중요하지만, 정부의 통일정책은 북한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고, 북한의 반응에 따라서 크게 영향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에서 통일정책이나 대북정책에 대해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남남갈등’ 때문이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북정책, 나아가 통일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정파적이고 이념적 속성에서 벗어난 통일담론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를 이루고자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참고문헌

- 김보근. 2014. “‘안 익은 수박’ 같은 ‘박근혜 통일대박론’” 『내일을 여는 역사』, 55, 14-23
- 김영재. 2014.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정치정보연구』, 17(2), 31-55
- 김용현. 2000. “노태우 정권 시기의 통일론” 『통일시론』, 5, 131-143
- 김일영. 2000. “이승만 정부에서의 외교정책과 국내정치” 『국제정치논총』, 39(3), 243-262
- 김종필. 2016. 『김종필 증언록 1』, 와이즈베리
- 김학노. 2018. 『남과 북의 서로주체적 통합』, 사회평론아카데미
- 김형빈, 김두남. 2016. “제4장 박근혜 정부 통일정책의 쟁점과 과제” 『통일전략』, 16(3), 125-155
- 남광규. 2012. “이승만 정부의 통일정책 내용과 평가” 『통일전략』, 12(2), 133-164
- 박종철. 2015. “분단 70년 남북한정부의 통일패러다임 비교: 공존과 통일을 향한 변주곡” 『현대사광장』 5, 106-127
- 박채용. 2000. “역대 정권의 통일정책 분석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17(1), 147-177
- 박태균. 2002. “실패한 통일의 신화들: 김구, 조봉암, 장준하 그리고 김대중” 『황해문화』, 37, 59-72
- 백학순. 2013. 『이승만 정부와 장면 정부의 통일정책 비교』, 세종연구소
- 변창구. 2015. “제5장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중간평가와 발전과제” 『통일전략』, 15(3), 147-178
- 변창구. 2011. “박정희 정부의 대북정책” 『통일전략』, 11(2), 9-38
- 서중석. 1999a. “1950년대와 4월 혁명기의 통일론” 『통일시론』, 2, 160-178

- 서중석. 1999b. 『조봉암과 1950년대 (상): 조봉암의 사회민주주의와 평화 통일론』, 역사비평사
- 서중석. 1995. “진보당 연구: 조봉암, 진보당의 평화통일론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66, 267-302
- 성장환. 2011.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 검토와 이명박 정부의 통일정책 변화 방향” 『국제정치연구』, 14(2), 247-265
- 신종대. 2013.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국내정치: 문제는 ‘밖’이 아니라 ‘안’이다.” 『한국과 국제정치』, 29(2), 1-35
- 신진. 2003.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구조적 한계” 『국제정치논총』, 43(1), 295-316
- 신진욱. 2011. “비판적 담론 분석과 비판적, 해방적 학문” 『경제와 사회』, 89, 10-45
- 심지연. 2001. 『남북한 통일방안의 전개와 수렴 1948-2001』, 돌베개
- 심지연. 1999. “박정희, 전두환 정권의 통일정책” 『통일시론』, 3, 167-179
- 엄상윤. 2008. “1960년 7·29 총선거 한국 정치사회의 통일논쟁” 『국제관계연구』, 13(2), 101-134
- 엄상윤. 2003. “제2공화국 시대의 중립화 통일론과 21세기의 한반도통일: 맨스필드, 김삼규, 김용중의 논리분석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43(2): 97-121
- 이기형. 2006. “담론 분석과 담론의 정치학: 푸코의 작업과 비판적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獯(3), 燿-145
- 이주봉. 2013. “1960년대 정치세력의 통일논의 전개와 성격” 『한국사학보』, 50, 213-247
- 이화준, 노미진 2019. “대북정책과 한국 정부의 인식” 『사회과학연구』, 35(1), 23-45
- 이홍중. 2015.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 『정치정보연구』, 18(1), 51-69

- 조경근. 2012. “김영삼 정부의 대북정책” 『통일전략』, 12(3), 151-188
- 정진아. 2009. “조봉암의 평화통일론 재검토” 『통일인문학』, 48, 63-86
- 통일부. 2005. 『통일백서』, 통일부
- 통일부. 2004. 『통일백서』, 통일부
- 통일부. 1999. 『통일부 30년사: 평화, 화해, 협력의 발자취, 1969-1999』
- 통일부. 1998. 『통일백서』, 통일부
- 한승현. 2014. “한승현의 재판으로 본 현대사 8: 진보당 사건과 조봉암 (중)”(2014. 11. 3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1302204025&code=210100&s_code=af152
- 홍석률. 2005. “4·19 시기 통일 논의: 평화통일론에서 남북학생회담 제안 까지” 『민족21』, 51, 100-107
- 홍용표. 2006. “북진통일 위협과 미국의 이승만 제거 작전” 『신동아』 (2006. 8. 14.)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05666/1>

토론

이정철

송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회자되어 온 통일담론을 역사적으로 검토한 자료로서 이를 통해 통일담론의 규범적 전망과 교훈을 제시한 글이다.

이 연구의 가장 큰 장점은 역사적 접근을 통해 일목요연하게 한국 사회의 통일담론을 요약 정리하고 그로부터 4가지 문제의 원인과 3가지 담론의 방향을 제시한 점이다. 특히 담론과 정책을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여 사용해 온 현실에 대한 따끔한 지적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담론이 담론으로 기능하기 위한 지속 가능성, 일관성 등의 조건에서 볼 때 현 정부가 던지는 다양한 정책 담화와 담론을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은 따끔하다.

저자의 분석을 종합, 추론해보면 한국 사회에서 제기되어온 통일담론을 역사적으로 볼 때, 보수 진영은 세가지 공통점을 갖고 통일담론을 제시해왔다. 하나는 북한과의 경쟁rivalry이다. 다른 하나는 무시negligence이며 마지막은 흡수통일이다. 정당성 경쟁 관계가 전제된

이 세가지 특징은 북한과의 대적성, 경쟁의식이 기본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북한 체제가 흔들릴 때면 여지없이 나타나는 북진통일론과 같은 맥락의 흡수통일 담론이다. 통일대박론의 내포가 변해가는 과정은 이를 잘 보여준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무시 담론이다. 선건설론, 선진화론, 선부론, 신한국론, 세계화론 등 북한 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와 남북 간 체제 역관계를 반영하는 전략이다. 즉 북한이 통일 정당성을 강조하거나 대남 외교 공세를 강화하는 경우 북한의 전략을 무시함으로써 힘의 열세를 극복하는 방식이다.

반면 진보 진영은 평화나 지역 등의 담론을 통해 통일 문제를 에둘러 접근하는 간접 담론에 익숙해온 것으로 보인다. 또 한 가지 진보 진영 통일담론의 특징은 기능주의 담론이다. 그러나 최근 한국 정부나 진보 진영이 탈기능주의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바, 그것의 향배는 두고 봐야 할 듯하다. 오랫동안 평화통일론에 담겨 온 기능주의 접근법이 진보의 아이콘처럼 되어 있는 바 이를 수정할 수 있는가, 수정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 관심의 대상이다.

다음으로 저자의 연구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보수 진영의 통일담론에 균열이 있다는 점이다.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통일담론의 차이가 그것이다. 전자가 매우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철학적 통일담론의 변화(세계화론과 흡수통일에 근거한)를 추구하였다면 후자는 전통적인 민족담론과 지역담론의 혼용을 통해 진보와 보수의 타협을 추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민족담론이 통일담론의 본질이라는 점에서 현대화, 세계화 담론과 통일담론을 결합시키는 담론은 한계가 분명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비핵·개방·3000이라는 논리를 통해 북한 근대화·선진화 담론을 끌어내 이를 극복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나름 스마트한 접근법이긴 하지만, 현실성(feasibility) 측면에서 볼 때 성공한 담론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떼기 어렵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 적절한 중도주의를 추구한 것은 사실이나 통일 대박의 경우 그 결과를 강조하는 것이지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처럼 방법과 수단을 강조한 담론과 일관성이 없다는 점에서 애초부터 진지하게 고민되고 기획된 정치담론이 아니라는 점은 통절한 평가이다.

한편 보수와 진보의 공통적 담론으로 성공한 유일한 담론은 저자에 따르면 “공동체” 담론이다. 노태우 정부 시기 공동체담론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보수 진보를 떠나 공동체담론에 대한 높은 지지가 있었고 실제 현실에서도 남북 모두가 이를 통해 상호 화해를 추구해왔던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등이 나온 것도 바로 이같은 담론의 성공 사례이기도 할 것이다. 최근 중국이 인류운명공동체, 동북아공동체 그리고 유럽에서 이미 제기되어온 안보공동체 등의 성공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공동체담론의 중요성에 대한 저자의 지적은 매우 소중한 성과라고 볼 수 있다.

끝으로 미래 전망이다.

향후 어떤 담론이 필요한가? 두 가지 문제 의식이 필요하다. 하나는 남북이 근본적인 군비통제 협상으로 들어가는 경우이다. 최근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선비핵화와 북한의 선행동을 통해 풀어갈 수 없다는 논의가 확산되면서, 동시행동론 그리고 단계론의 동시 접근이 강조되고 있다. 이 시기에 기능주의 담론의 한계는 분명하나 앞서 보았듯이 진보 진영의 오랜 어젠다는 기능주의를 넘어서는 방법에 대한 합의가 부재하다. 심지어 보수 진영은 이같은 군비통제론적 접근 자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통일담론이 현실과 괴리되는 양상이 지속될 수 있다. 돌연 핵개발론과 같은 극우 민족주의 통일담론이 괴력을 떨칠지도 모를 일이다. 이에 대한 대비가 보수 진보 모든 진영에서 아울러 필요한 이유이다.

한가지 더 부연한다면, 애초부터 정권 단위의 담론을 구상해야 한다는 강박이 지금까지 통일담론의 명멸을 만들어왔고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는 이 글의 가장 큰 성과이다. 그리고 담론과 정책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 번 성찰해야할 평가이다. 그리고 이 전체 과정을 살펴보는 점에서 저자의 역사적 접근법은 매우 유용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토론

이상신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

| 통일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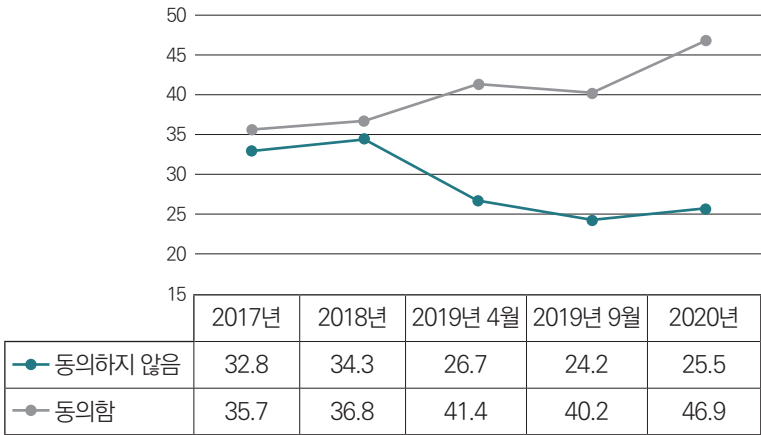
해방 이후 각 정부는 각자의 정치적 목표와 국제적 환경, 남북관계에 조용하여 통일담론을 개발해왔다. 이 통일담론들은 그러나 통일이라는 목적점end point에 대한 암묵적 동의를 전제로 한 채, 어떻게 통일을 성취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에 집중해왔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이승만의 “북진통일론”, 2공화국 민주당 정부의 “유엔 감시하의 자유 선거를 통한 통일론”, 박정희 정권의 “선건설 후통일” 및 “선평화 후통일”론 모두 통일의 방식과 과정에 대한 담론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과 “평화번영정책”,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정책”도 예외가 아니다.

노태우와 김영삼 정부의 “민족공동체”에 대한 강조는 통일의 주체를 국가에서 민족으로 바꾸었다는 의의와 함께, “민족의 동질성 회복”이라는 통일의 목적을 명확하게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

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박론” 역시 민족주의를 넘어 통일의 경제적 가치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앞의 통일담론들과 결을 달리한다.

〈그림 1〉 민족주의적 통일관의 변화

남북이 한민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의 국가를 이룰 필요는 없다 / 2017-2020



그러나 민족공동체의 회복이라는 통일 개념은 근본적으로 회고적이며, 이미 그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통일연구원의 KINU 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 “남북이 한민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의 국가를 이룰 필요는 없다”라는 문장에 동의하는 비율이 2020년 조사에서 절반 가까운 46.9%에 달했다. 한반도 분단의 역사가 75년을 넘어가는 지금, 분단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회고적

통일 개념은 그 설자리를 잃고 있는 것이다.

통일대박론은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은 표현이지만, 북한과 북한의 주민을 통일의 동등한 주체가 아닌 객체 혹은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국내에서는 통일에 대한 환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으나, 북한과 적극적으로 대화하려는 노력 없이 통일대박은 오히려 한반도에 신뢰를 형성하는데 역행하는 효과만을 지닐 뿐이다.

| 민족공동체에서 생명공동체로

문재인 정부는 최근 생명공동체란 용어를 매우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맥락상 생명공동체는 하노이 북미협상 결렬 이후 정체된 남북 관계를 코로나19 관련 방역협력으로 돌파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그러나 생명공동체란 개념은 잘 발전시킨다면, 설득력을 잃고 있는 민족공동체 개념을 대치하여 새로운 통일의 목적과 방식을 담는 그릇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생명공동체에 대한 논의는 그 뿌리가 깊다. 윤리철학과 정치이론에서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 논의는 아리스토텔레스까지 올라가는 역사를 갖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그 본성상 사회적 혹은 정치적 동물로 정의하면서, 인간의 삶은 공동체를 떠나서는 불가능하지도 않고 인간의 도덕적 이상은 공동체 안에서만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현대의 공동체주의 이론가 및 생태학자들은

공동체의 범위를 인간을 넘어 자연환경을 포괄할 수 있도록 넓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생태학자들은 biotic community 라는 용어를 사용해왔는데, 이 용어는 주로 “생물 군집”이라고 번역된다. 그러나 윤혜진은 이를 “인간공동체human community”와 짝을 이룰 수 있는 “생명공동체”로 번역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¹ 문재인 대통령의 “생명공동체”는 영어로 “community for life”로 번역되고 있으나, 생명공동체 개념을 더욱 풍성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치철학 및 생태학적 연구의 토대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명공동체 개념과 유사한 연구로, 미국의 산림공무원 출신으로 자신만의 생태철학을 구축한 알도 레오폴드의 “대지 윤리land ethics”를 들 수 있다. 레오폴드는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까지도 도덕적 배려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생태계에서는 어느 것도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못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한 존재가 다른 존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² 이 대지 윤리라는 용어에서 “대지 공동체land community”라는 용어 또한 파생되어 사용되고 있다. 윤혜진은 대지 윤리의 핵심을 인간의 역할을 “대지 공동체의 정복자라는 지

1 윤혜진. 2010. "생명 공동체에 대한 개념적 분석." 『철학탐구』 28, p.293

2 이도형. 2014. "생태윤리의 수용과 행정학적 함의: Aldo Leopold의 생애와 대지윤리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20 (2), p. 127

위로부터 대지 공동체의 일상적 구성원과 시민의 위치로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정리하고 있다.³

남북관계의 역사와 현재적 맥락에서 이해할 때, 생명공동체 개념은 민족공동체 *ethnic community* 개념의 확장으로 이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남한과 북한은 과거 통일을 민족의 재결합으로 이해하는데 합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통일은 민족공동체의 복원으로 정의되어 왔다. 즉, 통일의 주체는 한민족이며, 이렇게 이해할 때 통일의 목표는 한민족공동체 구성원들의 복리와 행복, 평화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민족주의에 기반한 이러한 통일 개념은 배제적·배타적이며 시대의 변화에 따르지 못하고 특히 남한의 국민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은 통일의 주체가 되어야 할 시민에게 더 이상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민족공동체가 생명공동체로 확장되면 통일의 주체 또한 한민족이라는 한정된 혈연집단이 아닌 한반도의 생태계 전체로 전환된다. 통일은 분단 이전의 민족공동체를 복원하는 복고적인 목표가 아니라, 한반도 생태계를 좀 더 조화롭고 행복한, 그리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목표로 다시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생명공동체 개념은 이미 코스모폴리탄적 사회로 변

3 윤혜진. 2010. "생명 공동체에 대한 개념적 분석." 『철학탐구』 28, p.293

모한 남한사회는 물론 남한에서 살아가고 있는 2백만명에 달하는 이 주민들을 넉넉히 포용할 수 있는 것이며, 남북연합 혹은 통일 구축 과정 및 그 이후에도 주변 국가들을 자극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북핵 문제에 끌려다니며 남북간 평화적 대화의 전망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러한 생명공동체 개념은 자칫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변화와 팬데믹 등의 거대한 위협은 인류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것이며, 지금까지의 현실주의 및 배타주의에 기반한 방안으로는 해결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확하다. 환경과 생명,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 윤리에 기반한 미래 한반도의 지평이라는 점에서 생명공동체는 단순히 이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우리가 직면한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이다.

02

한국 시민사회 통일담론의 궤적, 의미 그리고 재구성

이광일

성공회대학교 강사

토론

김정한 서강대학교 트랜스내셔널인문학연구소 HK연구교수

손우정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1. 들어가는 글

1950년의 전쟁으로 분단이 봉인된 이후 ‘남북한의 통일’은 하나의 당위가 되어 왔으며 그렇기에 그 내용과 방식에 관해서는 상이한 논의들이 존재하지만, ‘통일’ 그 자체를 공공연히 부정하는 논의들을 찾기란 쉽지 않다. 여전히 통일은 비대칭적이고 불균등한 사회관계들, 그것에 내재되어 작동하는 권력관계들의 안팎에 포진하고 있는 주체들이 그것의 재구성을 둘러싸고 벌이는 목적의식적인 쟁투, 즉 정치의 한 가운데서 지배적인 담론으로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회를 구성하는 상이한 사회, 정치 주체들이 ‘통일’이라는 기표에 저마다 다른 의미를 기입, 강조하며 차이를 만들려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것은 통일담론을 통제, 독점하고자 하는 국가의 시도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그런 현상은 근대자본주의가 국가와 사회의 형태분리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심지어 그 어떤 파시스트국가조차도 사회를 집어삼킬 수 없음을 반증해 주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 전후에 제기된 다기한 통일담론의 뿌리가 시민사회에 닿아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좀 더 긴 호흡에서 보면, 국가는 시민사회의 담론들과 긴장, 갈등 관계에 있지만, 결국 그 요구들을 재료로 하여 자신들의 담론들과 정책들을 구성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동안 시민사회의 주체들은 어떤 통일담론들을 구사해 왔는가. 먼저 이 글은 이데올로기로서의 통일담론의 존재근거를 살펴

보고자 한다. 그것을 통해 그 담론의 뿌리가 지배 세력, 권력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의 고통과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픈 희망, 기대에 닿아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통일담론을 부문별로 나누어 그 대강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각 운동 주체들이 어떤 역사적, 정치적 맥락에서 그 담론들을 제기했는지, 그것들이 지니고 있는 의미, 한계는 무엇인지 짚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자유주의 지구화에 규정된 포스트민주주의 시대에 그동안 민족, 국가라는 경계 안에서, 또 그것을 축으로 하여 제기되어 왔던 주류의 통일담론이 어떤 딜레마에 처해 있는지 살펴보고, 그것이 어떤 내용으로 재구성되어야 하는지 숙고해보자 한다. 이 글의 대상 시기는 1953년 휴전으로 분단이 봉인되어 두 개의 상이한 체제가 고착된 이후 현재까지이다.

2. 이데올로기로서의 통일담론과 정치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분단의 해소’를 의미하는 ‘통일’이라는 용어는 ‘성장’, ‘발전’, ‘안정’이라는 용어만큼이나 대중 통제와 동원을 위한 이데올로기 기제로 기능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그런 사실 자체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회가 상이한 계급/계층, 성, 그에 따른 상이한 이해, 이념, 문화 등을 지닌 이질적인 집단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통일담론’ 그 자체는 그런 기능을 수행할 내적 동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의 민족’이라는 전제, 즉 민족주의가 그 추동력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일담론을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다룰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물론 그 때 민족은 그 경계 밖의 타자들에 대하여 역사적으로 공통의 무언가를 공유하고 있는, 무엇보다 서로 동등하다고 믿고 있는 이들에 의해 상상된 집단이다.¹ 하지만 역설적인 것은 ‘하나의 민족’을 전제로 통일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상대, 즉 북한을 통일의 과정을 함께 해야 할 주체가 아니라 대상으로 보는, 심지어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는 발상이 재생산되고 있는 현실이다. 물론 그런 현실은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기도 하는데, 한편으로 ‘우리민족’ 또한 ‘상상된 공동체’라는 점을 반증해 준다는 점, 다른 한편 통일담론이 조합주의적인 이해를 포장하는 이데올로기로 기능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런 역설의 뿌리는 어디에 있으며 또한 어떤 장애를 낳고 있는가. 잘 알다시피 그 뿌리는 1950년의 전쟁을 바라보는 하나의 인식에 맞닿아 있다. 그 인식은 전쟁을 군사기술적인 시각으로 보려는 완고한 태도 위에 자리하고 있다. ‘북한의 전면적 남침’이라는 객관적 사실에만 주목한 채 그것을 야기한 구조와 조건들, 즉 1950년

1 베네딕트 앤더슨 지음, 서지원 옮김, 『상상된 공동체-민족주의의 기원과 보급에 관한 고찰』(길, 2018) 참고.

전후 국내외의 긴장과 갈등들을 배면으로 밀어내고 있는 것이다.²

모든 문제의 원인을 ‘6·25 남침’으로 돌리는 시각과 태도는 ‘발생론적 환원주의’라 명명할 수 있는 것으로 그것은 ‘전쟁이 정치의 연속’이라는 근대적 전쟁관 위에서 볼 때, ‘동어반복(tautology)’에 다름 아니다. 동어반복은 그 원인을 질문할 경우, 합리적 설명, 설득력의 빈곤, 부재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에 결국 그 주장의 관철은 ‘국가폭력’에 의해서만 가능할 수 있다.³ 지난 권위주의, 독재체제 시기에 시민사회에서 제기된 통일운동과 그 담론에 대해 국가가 물리적 대응으로 일관했던 이유도 이 지점에 있다.

하지만 ‘발생론적 환원주의’가 야기하는 더 심각한 문제는 그것이 새로이 구성된 관계들을 조망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것은 낡은 인식과 변화된 현실 사이의 거리감으로 나타나는데, 이른바 ‘태극기 부대’, 그에 친화성을 가지고 있는 정치세력들이 정치, 정당체계에서 하나의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은 그 상징이다. 그렇기에 ‘발생론적 환원주의’는 탈냉전, 지구화라는 변화된 조건 속에서 통일문제를 사유하여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 지구화가 강제하는 무한경쟁의 각축장에서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민족의 새로운 활로 개척’에 장애를 조성하는

2 이에 관해서는 B.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I/II*(Princeton Univ. Press, 1981/1990);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나남출판, 1996) 등을 참조.

3 카야노 도시히토 지음, 김은주 옮김, 『국가란 무엇인가-국가의 본질에 대한 역사적 고찰』(산눈, 2010), 제1장 참고.

역설을 드러낼 뿐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결국 통일은 남과 북이 '휴전상태'로 상징되는 정치 빈곤, 부재의 상황을 해소, 극복해 나가는 과정, 즉 1950년의 전쟁과 분단의 봉인을 가져왔던 국내외 모순, 갈등의 문제 등을 현재의 변화된 조건 위에서 관계국들과 함께 풀어나가야 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의 문제로 집약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가에 의해 주도된 그 과정은 효과적이었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분단을 구실로 사회구성원들의 사상, 정치적 행위 등을 억압하거나 대중의 정치적인 지지를 조직하고 동원하고자 이용해 온 측면이 없지 않았다. 최근에 흔히 접할 수 있는, '통일을 통한 경제도약'으로 모아질 수 있는 다기한 언술들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박근혜 정권의 '통일대박'은 그 전형인데, 그 이유는 '누구에 의한, 누구를 위한 도약'이고 '누구에게 대박이 되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 사실 그런 언술들은 계량할 수 없는 통일의 결과에 무게를 두고 그것을 더 증폭시키는 것에는 후한 반면, 통일을 위해 넘어야 할 장애들을 드러내 객관화시키는 것에는 매우 인색하다. 정치의 빈곤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런 류의 언술이 특정한 사회세력, 정치 집단의 이해를 포장하는 조합주의적 지배이데올로기라는 혐의로부터 벗어나기 힘든 이유도 거기에 있다.

그렇다면 그동안 '통일'이 지배이데올로기로 기능해 왔으며 그 과정 또한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 학습해 온 대중이 통일의 여건 성숙

등을 들어 그 시기 등을 문제 삼기는 하지만, 통일 그 자체를 부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단순히 지배 세력, 지배 권력이 내세우는 담론의 달콤함에 속고 있기 때문인가, 즉 ‘허위의식’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가. 이 질문은 새삼 지배이데올로기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볼 것을 요구한다.

“대부분의 ‘정당성’과 ‘해계모니’에 대한 사회학적 이론들은 그것은 지배자들 자신의 경험(그들의 가치, 생활양식, 세계관, 상징 자본 등)이라고 답변한다. 그러나 그것은 지배자들의 ‘체험된’ 경험이 아니라, 오히려 기존 ‘세계’에 대한 인정 또는 승인과, 저항 또는 반역을 동시에 함축하는 피지배대중들의 ‘체험된’ 경험이라고 대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최종심급에서 그와 같은 지배자들의 이데올로기 그 자체인 지배적 이데올로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어진 사회에서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는 항상 피지배자들의 가상의 특수한 보편화이다. 그것이 가공하는 통념들은 정의, 자유와 평등, 노동, 행복 등인데, 잠재적으로 그것들의 보편적인 의미는 바로 그것들이 개인들-그들의 존재 조건들이 대중들, 인민의 존재조건들이다-의 상상 속에 속한다는 점으로부터 유래한다.”⁴

물론 지배이데올로기는 ‘환상’ 등으로 존재하기도 한다. 그것은 그 이데올로기를 미래에 실현해야 할 가치와 목표로만 제시할 때 그렇

4 에티엔 발리바르 지음, 윤소영 옮김, 『알튀세르와 마르크스주의의 전화』(도서출판 이론, 1997), 186쪽.

다. 이미 언급한 ‘통일대박’처럼 말이다. 그렇기에 만일 특정한 지배 세력과 권력이 그 가치와 목표의 실현을 위해 함께 하지 않는 순간, 그 결과 대중이 그것의 구체화를 집단적으로, 그것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순간, 지배이데올로기는 환상으로서의 특징을, 즉 지배 계급과 권력의 이해를 위한 이데올로기라는 성격을 전면에 드러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런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순간, ‘정치적 위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원천적으로 지배이데올로기는 대중들 자신이 겪은 특수한 경험들, 무엇보다 삶의 고통들, 그로부터 벗어나고픈 희망, 기대들을 자양분으로 하여 구성된다. 즉 지배이데올로기는 ‘그 고통들이 지양된 상상의 관계, 세계’를 집약적으로 표현한 언술인 것이다. 위의 인용에서 언급한 자유, 정의, 평화처럼 말이다. 무엇보다 그것은 자유를 위협받고 박탈당한 이들, 불평등에 노출되고 평화롭지 못한 삶을 사는 이들의 희원을 담고 있다.

하나의 예로 자유가 지배이데올로기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근대 이후 모든 개인에게 주어졌다고 전제되는 그 자유가 실제로는 단 한번도 실현된 적이 없다는 사실에 기인한다.⁵ “아무도 빼앗지 못할 자유를 되찾자.”라는 노랫말이 있지만, 자유는 그 누군가와 관계 속에서 결정되는 것이기에, 즉 자유와 부자유는 동전의 양면으로 존재하기에 애초 그 흔한 자유를 누려보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바

5 지그문트 바우만 지음, 문성원 옮김, 『자유』(이후, 2001) 서문, 1장 참고.

로 그 지점에 자유가 효과적인 이데올로기로 작동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는 것이다. 자유는 홀로 존재할 수 없는, 결국 '자유-평등', '평등-자유'의 문제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데도, '자유를 되찾자'고만 외치게 되는 이유이다.

통일담론도 마찬가지이다. '탈냉전, 지구화시대의 도래'로 통일에 대한 당위적 결속력이 느슨해진 측면이 없지 않지만, 여전히 그 담론이 지배이데올로기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전쟁과 분단이 대중들 각자에게, 혹은 집단적으로 준 특수한 고통들, 그런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고픈 대중의 기대와 상상을 보편화된 언술로 담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전쟁, 분단체제에서 경험한 것들, 즉 혈연의 단절로 인한 고통, 남북한 사이의 긴장과 대결을 이유로 가해진 경제적 착취와 수탈, 정치적 권리의 임의적 제한, 인권 탄압 등이 통일이 되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쟁과 분단체제의 등장이 내적인 모순과 긴장들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 외부적인 힘, 즉 주변 강대국의 냉전에 의해 강제되었다고 인식하기에 통일이 되면, 그 강제된 힘의 작용을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존재하기에 그렇다. 그 연장에서 통일이 되면, 하나의 국가를 만들어 더 강한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국가가 제시하는 통일담론의 원천도 바로 시민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비대칭적이고 불균등한 사회, 권력 관계들에 거처한다. 그런데 그 관계들에 포섭되어 있는 대중들은 지배이데올로기로서의 통일담론에 따라 자신의 위상과 역할을 스스로 규율하기도 하지

만, 다른 한편 스스로 담론을 만들어 국가에 제시하고 그것의 실현을 요구하기도 한다. 즉 그런 행보, 혹은 운동을 통해 국가의 위상과 기능을 재구성하고자 시도한다. 왜냐하면 현존하는 국가는 그 자신을 넘어서고자 하는 모든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변형, 재구성하여 자신의 경계 안에 자신이 정한 이름표를 붙여 배열, 제시하면서 인정, 선택하라고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시민사회는 지배이데올로기가 구성되는 자리이자, 그것과 긴장, 경쟁하며 그것을 넘어서고자 하는 저항이데올로기가 생산되는 자리이기도 하다. 결국 그 지점은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치안’⁶police과 그것을 넘어서고자 하는 ‘정치’⁷politics의 접합지점, 즉 그 둘의 쟁투의 장으로서의 ‘정치적인 것the political’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⁶

3. 시민사회 통일담론의 궤적, 그 의미와 한계

1) 사회운동⁷

한국전쟁 이후 이승만정권기의 통일담론은 ‘북진통일론-때려잡자 공산당’으로 대표되면서 자유스러운 논의를 억압하였는데, 그것은 조봉

⁶ 자크 랑시에르 지음, 양창렬 옮김,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도서출판 길, 2008) 참고.

⁷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운동’은 이른바 ‘시민이 주체가 되는 시민운동’ 이외에 노동자, 농민 등을 그 주체로 호명하는 ‘진보운동’, ‘급진적인 운동’을 포괄하는 서술적 개념으로 사용한다.

암의 제거에 의해 극에 이르렀다. 이승만 정권의 초대 농림부장관, 국회의원, 국회의장을 지내고 대통령후보로 출마해 이승만과 경쟁한 조봉암이 ‘간첩죄’로 구형 18시간 만에 죽임을 당한 것은 시민사회에서 분단체제를 문제시하는 자율적 통일논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었다. 그 ‘사법살인’이 문제시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승만 정권뿐만 아니라 당시 보수 야당인 민주당도 그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⁸ 즉 조봉암의 사형은 법치와 민주주의, 그것도 최소민주주의에 대한 당시 제도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결속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주는 시금석이였다.

그렇기에 ‘4·19혁명’이라는 대중적 힘이 만들어낸 정치공간의 확장을 계기로 통일논의가 공론화된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였다. 그 가운데 먼저 주목을 끈 것은 ‘중립화 통일론’이였다. 이미 1950년대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어 용공적인 발상으로 간주되기도 했던 중립화 통일론은 하나의 단일한 목소리로 제출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남북한으로의 분단 및 전쟁이 미·소 냉전의 결과라는 점, 주변 관계국들이 한반도의 통일을 반대하는 이유가 북진통일론, 혹은 그 반대처럼 어느 일방에 의한 통일이 자신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점, 그렇기에 미·소 등의 타협과 세력균형을 통해 통일이 가능하다는

⁸ 당시 야당의 주요 리더들은 민주당의 창당과정에 함께 하고자 한 조봉암에게 ‘빨갱이’라는 딱지를 붙여 배제한 바 있으며, 1956년 대통령선거 와중에 민주당 후보 신익희가 서거하여 조봉암이 야당의 단일후보가 되자 그 대신 이승만에게 투표하라는 노골적인 ‘반공 캠페인’을 벌인 바 있다. 이에 관해서는 심지연, 『한국정당정치사』(백산서당, 2009); 서준석, 『이승만과 제1공화국』(역사비평사, 2007) 등을 참조.

점 등을 공통의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통일된 국가가 어느 일방의 정치적, 군사적 예측 하에 놓이지 않도록 주변 열강이 보장하는 ‘영세중립화 협정’이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상이한 결이 드러나는데,⁹ 미국에서 활동한 김용중은 남북한과의 협의를 전제로 미, 소, 영, 중 등이 한반도를 중립화시키기 위한 협정을 체결하고 유엔중립국 감시하의 총선으로 통일할 것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기존 군사정전위원회를 인도, 스위스 등처럼 어느 세력권에도 속하지 않는 국가로 구성되는 ‘중립국위원회’로 대체하고 그 감시 아래 남북의 군대를 감축, 해산시킬 것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일본으로 추방되어 활동한 김삼규는 김용중과 달리 남북한 두 정권을 배제하고 미, 소, 중에 더하여 일본이 참여하는 중립화협정을 체결한 후, 유엔 또는 중립국 감시하 총선으로 통일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한편, 진보당에 참여했던 세력이 중심이 된 사회대중당도 중립화 통일론을 제출했는데, 주변 강대국들의 협정, 그리고 진보당사건의 트라우마 때문인지 북한 김일성의 퇴진을 전제로 한 남북 간 협상을 통해 전한국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법을 개정한 후, 유엔에서 결정되는 중립국 감시하의 총선을 통해 통일할 것을 주장했다.

중립화 통일론은 냉전을 대체할 사회 이념으로 사회민주주의 또는

9 엄상윤, “제2공화국 시기의 중립화 통일론과 21세기의 한반도 통일- 맨스필드, 김삼규, 김용중의 논리분석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43집(2권)(2003) 참고.

민주사회주의를 채택하고 계획경제를 통해 통일국가의 물질 토대를 구축하고자 했다. 민주사회주의는 상이한 이념을 지닌 집단들이 공존하면서 다원주의적 정치질서를 추구할 수 있는 이념, 남북의 이념적 양극화를 조화, 지양할 수 있는 ‘제3의 이념’으로 간주되었다. 계획경제를 통해 중요 기간산업을 국유화하여 국가 통제 하에 운영하고 중소기업자의 자유로운 발전을 보장함으로써 경제적 후진성을 극복하고 자립적 경제성장을 달성하고자 했다.

그렇다면 당시 제기된 중립화 통일론의 의미와 한계는 무엇인가?¹⁰ 가장 큰 의미는 통일논의가 봉쇄된 반공규율사회에서 자율적인 통일논의의 명맥을 이어가며 그 성과 여부와 무관하게 남한과 북한의 소통을 매개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른 한편 근본적인 한계는 통일을 외부의 힘을 통해 이루고자 했다는 점이다. 물론 그 발상은 전후 한반도에 대한 미, 소 등의 영향력, 휴전 이후 가장 후진 국가로 전락한 국제적 위상 등에 규정된 바 크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 외인은 내부적인 사회, 정치 관계들을 매개로 해서만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것은 치명적 한계였다. 실제로 중립화에 관심을 보인 나라는 그나마 미국이 유일했지만, 미국의 공식 입장은 ‘유엔 감시하 남북한 총선거론’이었다. 또 다른 한계는 통일을 주로 제도, 이념의 차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바라보았다는 점이다. 물론 상이한 제도, 이념의 수렴은 중요

10 조배준, “한반도 중립화 통일방안에 대한 반성적 고찰”, 『통일인문학』제61집(2015) 참고.

한 문제이다. 하지만 실제로 그것들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 남북의 비대칭적이고 불균등한 사회, 권력 관계들이라는 점에서 그 관계들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제도의 변화, 이념의 수렴은 가시화될 수 없고, 설사 ‘탑-다운 방식’으로 일정한 합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합의의 구체화 여부는 매우 불투명하거나, 합의 자체가 사문화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중립화 통일론에는 자신들이 제시하는 방안, 민주사회주의, 계획경제 등이 남북한에서 어떤 성격, 의미로 수용, 구체화될 수 있는지에 관한 고민이 담겨 있지 않았다. 이는 4·19혁명의 산물이자, ‘개인의 자유의지’에 방점을 두고 있는 최인훈의 소설 <광장>에서 이명준이 남, 북한이 아니라 제3국을 선택한 이유, 아니 선택할 수밖에 없는 내적인 원인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¹¹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립화 통일론’ 자체가 폐기되지는 않았는데, 그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적(지구-지역 정치적) 장의 규정력’이 계속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예로 그것은 1971년 대통령선거에서 신민당 김대중 후보의 ‘4대국 보장에 의한 한반도 평화보장(통일)’이라는 구상 속에서 그 일단의 모습을 드러낸 바 있으며, 최근에도 학계의 일각에서 의미 있는 통일방안으로 계속 언급되고 있다.¹²

11 정병준, “최인훈 <광장>과 중립국행 76인의 포로”, 『역사비평』126호(2019) 참고.

12 이에 관해서는 유영철, “2000년 이후 중립화 통일론의 특징”, 『대한정치학회보』22집(1

그런데 ‘대중운동으로서의 4·19혁명’의 내적 힘은 외부의 힘에 의존한 중립화 통일론의 한계, 특히 혁신정당의 그것을 변화시켰다. 1960년 말부터 시작된 사회대중당, 사회당, 혁신당의 통합운동은 1961년 초 한미경제협정반대운동, 그리고 데모금지법과 국가보안법 등 ‘2대악법 반대투쟁’을 거치면서 진전되었고 그 과정에서 그들의 통일론도 수렴되기에 이르렀다. 즉 사회대중당과 혁신당이 그간 주장해 오던 민주사회주의와 영세중립을 지양하고 “조국 통일은 민족자주의 원칙하에 남북의 협의와 국제적 협조로써 미소 양대 세력에 예속되지 않는 평화통일로 한다.”는 방안에 합의하게 된 것이다. 기본적으로 미, 소의 세력 균형과 타협에 기반을 둔 중립화 통일론이 4·19라는 ‘대중혁명’의 파고 속에서 제3세계 민족해방운동의 흐름에 주목하는 ‘자주통일론’에게 자리를 내주었던 것이다

그런 변화의 흐름을 주도한 대표적인 조직이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아래 민자통이다. 자주, 민주, 평화라는 3대 통일원칙을 제시한 민자통은 1960년 9월 3일 준비위원회를 꾸리고 발기대회를 열어 조직 작업에 박차를 가하였다

“8·15광복의 감격과 환희는 일장춘몽같이 스쳐갔으며, 15년간이나 우리는 억압과 빈궁 속에서 허덕였고 동족상잔의 비극까지도 겪어왔다. 이는 실정의 누적과 민족자주역량의 결여 등에 기인된 바 크

호)(2014) 참고.

다. 그보다도 더 큰 근인(根因)은 국토가 양단되고 민족이 분열되었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의 지상명령이며 최대의 염원인 통일 성업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우리 앞에는 고난과 민족적 치욕만이 더한층 가중될 것이며, 또한 6·25전쟁과 같은 비극이 다시없으리라고 단언할 수도 없다. 여기에서 우리는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를 발의하는 바이니, 전체 정당, 각종 사회단체 및 애국동포들이여, 민족정기에 입각하여 3·1정신을 회상하면서 민족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가 결정함으로써 통일 성업을 전취하자.”

1961년 2월 25일, 사회당, 사회대중당, 민족건양회, 민주민족청년동맹, 통일민주청년동맹준비위원회, 사월학생혁신연맹, 피학살자유족회 등 21개 정당 및 사회단체와 4만 명이 넘는 회원이 참여한, 순수 민간단체로 출범한 민자통은 아래와 같은 강령을 내걸고 본격적으로 통일운동을 시작했다.

- 우리는 민족 자주적이며 평화적인 국토 통일을 기한다.
- 우리는 민족 자주 역량의 총집결을 기한다.
- 우리는 민족 자주의 처지에서 국제 우호의 돈독을 기한다.

민자통은 그 강령을 구체화하기 위해 첫째, 즉각적인 남북정치협상, 둘째, 남북 민족대표들에 의한 민족통일건국최고위원회 구성, 셋째, 외세 배격, 넷째, 남북대표회담에서 통일 협의, 다섯째, 통일 후에 오스트리아식 중립 또는 영세중립을 택할 것인지, 또는 다른 형태를

택할 것인지는 그때 가서 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를 채택했다.¹³

4·19혁명을 통해 대중의 정치적 저력에 자극받은 민자통은 중립화 통일론이 지닌 수동적, 소극적 한계를 넘고자 했다. 무엇보다 민족자주적 입장에서 평화로운 통일이란 남북협상을 통한 것으로 통일국가의 중립화 여부는 남북협상의 결과로 결정할 일이지, 선협적으로 미리 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 소 등 강대국 간의 협정에 의해 확정된 중립화는 그 자체로 외세에 의해 주체성이 훼손된 것으로 그 결과 오히려 남북협상에 지장을 주게 된다는 것, 통일 후의 성격을 미리 규정하면 그에 반대하는 세력의 이탈을 초래하여 통일운동 진영이 분열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이 그 이유였다. 민자통은 통일의 기본 원칙 이외의 나머지 일련의 과정은 남북협상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다.

그런데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민자통의 통일론이 남한의 사회변혁 운동과정 속에서 사유되었다는 점이다.

“이 땅에 있어서 올바른 혁신운동의 당면 투쟁과업은 사회주의인 것이 아니다. ... 이 같은 후진성 지역사회에 있어서 전진적 정치투쟁은 계급을 원리로 하는 사회주의혁명인 것이 아니고 민족론인 민주주의민족혁명인 것이다. 이 민주주의민족혁명을 다른 말로써 표현하면 민족해방투쟁이라는 말로 된다. 이 혁명은 반봉건, 반민족매판 자본세력 그리고 반외세투쟁이 주과업인 것이다. 이와 같은 투쟁을

¹³ 문한영, “60년대의 민족자주통일운동-민자통을 중심으로 한 증언”, 4월혁명연구소 편, 『한국사회변혁운동과 4월혁명』2(한길사, 1990), 150쪽.

단행하는 데 총집결할 수 있는 구성은 범민족세력이며 이 혁명은 민족통일과 더불어 달성되는 것이다.”¹⁴

이러한 발상은 한편으로 5·16쿠데타 이후 민자통이 ‘용공’이라는 혐의를 받고 해체 당하게 되었던 이유이지만, 다른 한편 4·19혁명 시기 여타 사회운동 이슈에 적극적으로 개입, 참여한 이유 또한 알 수 있게 해준다. 특히 1961년 2월 8일 장면 정권이 한국 경제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통제권을 담보하는 한미경제협정을 체결했는데, 민자통은 혁신정당들, 사회단체 등과 함께 ‘한미경제협정 반대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대응했다. 민자통이 한미경제협정에 대해 매판자본의 연명과 민족자주경제 건설의 기본적 방향이 되는 민족자주통일을 방해하기 위한 국제계획으로 규정한 것은 한미경제협정을 민족경제 형성의 장애물로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것은 6·25전쟁 이후 반미적 성격을 띤 최초의 운동으로 평가되곤 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통일문제가 경제문제, 대중의 삶의 문제와 분리될 수 없는, 그것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는 점이다. 대중의 삶의 제고가 핵심일 수밖에 없는 경제문제와 통일문제의 깊은 연관성에 주목하는 것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매우 중요한데, 그것은 조봉암의 평화통일론, 김대중의 ‘4대국 보장에 의한 한반도의 평화보장(통일론)’ 등이 왜 대중의 환호를 받게 되

14 김상찬, “사이비 통일론을 박함 -신상초 의원의 글을 읽고”, 『민족일보』(1961.03.19).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열쇠이기에 그렇다. 1956년 정부통령선거에서 조봉암이 내세웠던 평화통일론이 대중에게 어필할 수 있었던 것은 북진통일론만이 공식 통용되던 시대에 그 자체로 커다란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지만,¹⁵ 그것이 ‘못살겠다, 갈아보자’에 조용한 ‘수탈 없는 경제체제 실현’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대중에 제시되었기 때문이라는 점, 1971년 대통령선거에서 김대중이 제안한 ‘4대국 보장에 의한 한반도의 평화보장’이 대중의 호응을 받은 것 또한 대중경제론, 대중민주주의론과 함께 제출되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맥락에서 5·16쿠데타 이후 제3공화국 시기에 통일운동이 대중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은 1964년 6·3항쟁이 진압된 이후, 정치적 반동화의 강화, 북한의 좌편향적인 대남무력투쟁노선이 대중들에게 준 불안, 통일혁명당 등 전위정당 건설 시도의 실패에 규정된 대중운동의 위축 등에 기인한 바 크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급속한 자본주의 산업화 과정에서 착취, 수탈 받고 있던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대중의 삶과 통일문제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숙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와 반대로 제3공화국의 박정희정권이 5·16쿠데타 이후 ‘실질적인 반공’을 내세우며 ‘경제발전’을 추진한 것, 즉 ‘우리가 북한보다 잘 사는 것이 통일의 지름길이다.’를 기본 모토로 대중에게 어필한 것을

15 이에 관해서는 정진아, “조봉암의 평화통일론 재검토”, 『통일인문학』 48호(2009) 참고.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경제건설 없이는 빈곤의 추방이란 없을 뿐 아니라, 경제건설 없이는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는 실업과 무직을 추방할 수 없기 때문이며, 또 그것이 없이는 공산주의에 대한 승리, 즉 자유의 힘이 넘쳐 흘러 북한의 동포를 해방하고 통일을 이룩할 수 없는 것입니다.”¹⁶

하나의 예로 당시 문공부의 주도로 기획, 제작하여 1960년대 세 번째로 많은 관객을 동원했던 영화 <팔도강산>(배석인, 1967)의 말미에는 휴전선에서 장교로 군복무중인 아들이 면회를 간 노부모에게 “경제성장을 이룬다면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역설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은 제3공화정이 ‘선건설 후통일’이라는 담론을 대중 속에 내면화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¹⁷

민자통이 5·16쿠데타로 해산되고 6·3항쟁의 좌절로 4·19혁명에 내재된 민족민주혁명적인 성격의 정치적 효과가 실질적으로 소진되자¹⁸ 그와 같은 대중적 통일운동은 존재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기에

16 제6대 박정희 대통령 취임사(1967.07.01) 참고.

17 김한상, 『조국근대화를 유람하기-박정희정권 홍보 드라이브, <팔도강산> 10년』(한국영상자료원, 2008) 참고. 1967년 대통령선거와 총선거를 앞두고 개봉한 이 영화는 제3공화정을 홍보, 선전하는 내용으로 인해 야당으로부터 여당을 지지하는 영화라는 비판을 받고 상영중지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18 이에 관해서는 이광일, “한일회담반대운동의 전개와 성격”, 『한일협정을 다시 본다-30

그런 내용과 형식의 운동은 1987년 6월항쟁으로 정치적 자유화가 진전된 이후, 즉 대중의 정치적 힘이 다시 제고된 후 나타나게 되는데, 1990년 출범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아래 범민련이 대표적이다. 범민련은 11월 20일 독일 베를린에서 남북한 및 해외교포들이 모여 결성한 통일운동조직으로, 남측, 북측, 해외 본부와 공동사무국을 두고 있다.

범민련은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과 그에 기초하여 전개된 강령 및 방안, 민족공동의 모든 합의를 활동의 근본지침으로 삼았다. 그에 근거하여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기초 위에서 남과 북의 두 제도, 두 정부가 공존하는 연방국과 모든 민족성원들의 의사와 염원을 대표할 수 있는 범민족통일국가의 건설, 그 과정에서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확립하며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남과 북의 군축을 실현하여 한반도를 비핵-평화지대로 만들 것, 나아가 동족 사이의 대결과 반목을 조장하는 모든 정치적, 물리적 장치들을 제거하고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온 겨레의 자유로운 왕래와 통신의 자유 등을 보장하는 것 등을 포함, 남북 사이에 다방면의 협력을 실현할 것을 주장했다.

범민련은 그 주체가 남한, 북한, 해외 등을 포함하여 세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전개된 통일운동과 조직적인 차이를 보이고는 있지만, 통일담론은 4·19혁명 시기 민자통 등의 그것과 크게

주년을 맞이하여』(아세아문화사, 1995) 참고.

다르지 않다. 한 가지 특징이라면,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3대원칙에 더하여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의 합의를 부가한 것이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변화는 연방제 통일방안을 지지해왔던 것과 달리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연합제의 공통점’을 인정, 수용했다는 점으로 이는 그동안 남한의 ‘국가연합제’ 등에 대해 분단고착화 방안이라고 비판을 가했던 것을 감안할 때, 외견상 적잖은 변화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변화는 범민련 자신이 추동한 것이 아니라, 「6·15 남북공동선언」이라는 남북 당국의 합의를 추수한 것이라는 점에서 기존 행보로부터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이후에도 범민련이 ‘반미자주화, 민족공조’의 담론을 내걸고 남한의 소극적인 대북정책, 한미동맹 우선, 미국의 대북제재 및 압박을 비판하는 등의 활동을 이어간 것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런 범민련의 한계는 무엇일까. 그것은 범민련이 ‘6·15 공동선언’을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합의한 남북지도자의 결단의 산물로 보는 것에서 쉽게 간취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이 남한이 ‘제안했던’ 2000년 체제에 동의한 이유가, ‘민족’의 이름으로 집합적 정체성 형성을 정당화할 수 있는 외부국가인 남한으로부터의 지원을 통해 실패국가를 극복하고자 했기 때문일 수 있다.”는 지적은¹⁹ 매우 시사적이며 흥미할만하다. 정치지도자의 의지, 결단을 강조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강조가 변화

19 구갑우, “한반도 분단체제와 평화국가 만들기”, 『시민과 세계』10(2007), 32쪽.

된 객관적 관계를 외면하거나 덮어버리려 할 때,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이후 범민련의 활동이 남한 대중의 시야에서 점차 멀어지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 완고함은 1994년 7월 2일, 전국연합, 전농 등 40여 개 재야 단체들이 범민련의 통일운동방식을 비판하며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아래 민족회의를 출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민족회의는 범민련이 해마다 범민족대회를 추진하면서 정부당국과 대립하며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 대중들을 통일운동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라 인식했던 만큼, 일반 대중들이 참여하는 ‘대중참여형 통일운동’에 방점을 두었다.

“민족회의는 사회개혁을 이루는 모든 힘이 대중으로부터 나옴을 믿으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온갖 지혜가 대중으로부터 나옴을 믿는다. 따라서 민족회의는 통일운동이 대중의 일상 속에 뿌리박고… 대중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가 모일 때 비로소 힘 있는 운동력이 형성됨을 확신한다.”²⁰

그렇기에 민족회의는 운동의 추진 방식 뿐 아니라 노선에서도 범민련과 일정한 차이를 보였는데 그것은 ‘96 평화통일선언’에 잘 드러나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남과 북, 미국 3자의 평화협정 체결,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및 국가보안법 철폐, 합리적 연방제 통일, 주한미군기

20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창립선언문'(1994.7.2) 참고.

지의 반환 등이다. 즉 범민련이 평화협정 체결방식에서 당사자 원칙을 내세우고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이런 변화는 민간통일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더 광범위한 국민대중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인식하였기 때문에 일반국민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통일방식과 통일론을 제시하고자 한 고민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다.

민족회의가 정부 당국을 통일논의의 한 당사자로 인정한 가운데 정부의 잘못된 통일정책을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는 민간통일운동 역량 확대에 활동의 중심을 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사회운동사적으로 볼 때, 민족회의의 등장은 1991년 5월투쟁 이후 기존 민중운동의 영향력이 쇠퇴하고 시민운동의 대중에 대한 호소력이 제고되는 상황에서 대중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존 통일운동 내부의 자기비판과 성찰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아래 민화협과 7개 종단이 주도한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2001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가 그 행사를 조직하는 가운데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통일연대아래 통일연대’에 참여를 요청하면서 드러난 노동운동과 통일운동 간의 긴장이다.²¹ 기본적으로 그 긴장은 계급문제와 민족문제의 관계를 바라보는 상이한 시각이 김대중 정권과 「6·15 남북공동선언」의 성격 및 위상의 문

21 오진아, “노동계의 통일운동 유감”, 『월간 말』(2001.7.) 참고.

제를 매개로 해서 드러난 것이었다. 통일연대 안의 범민련, 전대협외의 후신인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 등이 ‘민족대단결’이라는 담론 위에서 「6·15 남북공동선언」에 동의하는 세력은 설사 그것이 우익이라도 함께 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아래 민주노총,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아래 자통협 등은 함께 할 수 없다고 반대한 것이다.

당시 통일연대 내부의 논의 과정에서 천영세 자통협 공동의장이 “민화협과 공동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통일연대 구성조직의 관계 유지보다 더 깊은 역사적 결정인가?”라고 질문한 것에 대해 주종환 민족화합운동연합 의장은 “통일연대 내의 통일보다는 민족대단결을 먼저 추구해야 한다.”고 대응했다. 또한 그 와중에 범민련 남측본부는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로부터 “통일연대가 민화협, 7개 종단과 공동행사가기구를 빠른 시일 안에 결성하고 북측에 남북공동행사를 제안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팩스가 전달됐다.”고 밝힌 바 있다.²² 이 두 에피소드는 진보를 자임하는 급진민족주의적 통일운동의 시대착오를 드러내 준 예라 할 수 있다.

당시 그런 갈등의 기저에는 ‘노동자들의 생존권 요구가 민족이라는 이름 아래 해결될 수 있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이 놓여 있었다. 다른 말로 하면, 노동자들의 기본권리, 생존권을 부정하는 사회정치

²² 김명숙, “통일연대, 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 구성하기로 결정”, 『통일뉴스』(2001.05.23.) 참고.

세력들도 「6·15 남북공동선언」에만 동의하면, 진보 진영에서 용인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던진 것이다. 이런 갈등은 민중운동 안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되풀이 되었고 결국 민주노총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자통협이 이후에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아래 평통사로 해소되는 근인이 되었다.

2) 학생운동

‘4·19혁명’은 그 이전에 ‘먹고 노는 대학생’으로 간주되던 대학생 중심의 학생운동이 급성장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²³ 4·19 당시 학생운동은 두 흐름으로 구분되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승만정권의 퇴진을 목표로 했던 초기의 흐름으로 7·29총선거를 계기로 나타난 계몽운동, 신생활운동 등 이었고, 다른 하나가 급진적 운동으로 간주된 통일운동이었다.

당시 학생통일운동은 혁신세력들과 공조하고 그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그 계기는 1960년 11월 1일 서울대 ‘민족통일연맹’의 발기였다. 이어 11월 18일 이후 성균관대, 항공대, 외국어대, 건국대, 경희대, 국학대, 단국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전남대, 조선대, 경북대, 대구대, 청구대, 부산대, 수산대, 그리고 경북고등학교 등 전국 18개 대학과 1개 고교에서 민족통일연맹 또는

23 4월혁명이 특히 대학생, 지식인들의 전유물처럼 되어버린 것에 대한 비판적 연구는 오재연 외, 『4월혁명의 주체들』(역사비평사, 2020) 참고.

민족통일연구회 등의 명칭으로 통일운동 조직이 결성되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61년 5월 5일,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아래 민통학련 준비대회가 개최되었다. 민통학련은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지고 있었고, 상대적으로 이념적 동질성이 높았기 때문에 4·19 이후 등장했던 여타의 학생조직보다 강한 결집력과 활동력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민족민주청년동맹, 통일민주청년동맹 등과의 긴밀한 관계구축으로 조직적 영향력을 제고시킬 수 있었다.

민통학련은 학생운동의 독자성을 유지하기 위해 민자통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실제 그 노선은 민자통의 노선과 다르지 않았다. 그것은 민통학련이 당시 한국사회의 성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²⁴ 민통학련은 한국 사회를 식민지적, 반식민지반봉건 사회로 파악하고 있으며, 그런 대립구조는 매관료세력과 대중 간의 모순으로, 그리고 그것은 현실 속에서 “반통일세력 대 통일세력 간의 모순”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파악했다. 분단의 책임은 “국제공산주의와 독점자본주의 및 그들의 추종자인 반민족적 사대주의자들의 냉전 청부행위”에 있기 때문에 이 사회를 변혁시키기 위해서는 “반봉건, 반외압세력, 반매관자본 위에 세워지는 민족혁명을 이룩하는 길뿐이며 그 앞길에는 깨어진 조국의 민족통일이라는 커다란 숙제가 놓여있다.”고 역설했다.

이러한 인식 위에 민통학련은 ‘4·19혁명’ 1주년 행사에서 ‘4·19

24 4월혁명연구소 편, 『한국사회변혁운동과 4월혁명』2(한길사, 1990), 제2부 자료 편 참고.

제2선언문'을 발표하고 각종 구호를 써 넣은 피켓을 들고 가두시위를 전개했다. 당시 내건 “외세는 물러가라”, “이 땅이 뉘 땅인데 오도기도 못 하느냐”, “실업자의 일터는 통일에 있다.”, “남북서신교환”, “북한 쌀, 남한 전기”, “한국 문제는 한국인의 손으로” 등의 구호는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²⁵ 일반 대중의 구체적 삶, 그들의 희망과 기대를 반영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5월 3일, 서울대 민족통일연맹 대의원대회가 학생회담과 학생기자 교류, 모든 예술·학문·창작의 교류, 학생친선체육회의 실현을 결의, 제의하자 북한 내무성은 남북 학생회담 및 협상과 관련, 북측지역에서의 신변보장을 선언하며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이에 민통학련은 북한 당국과 학생의 적극적인 호응을 환영한다며 5월 안에 판문점에서 남북학생회담 개최를 제의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5월 10일, 장면정권은 남북학생회담 및 교류를 불허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반대하며 5월 13일에는 민자통이 ‘남북학생회담 환영 및 통일촉진궐기대회’를 개최, 3만 여 명의 군중이 참여한 가운데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라는 슬로건을 제출하면서 남북학생회담 개최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 관심사로 부각되었다. 그 슬로건은 국가가 그어 놓은 억압적 반공질서를 넘어서는, 상식을 매개로 움직이는 대중의 정서를 가장 잘 대변하였다는 점에서

25 김선미, “4·19를 전후한 시기 통일운동의 흐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현장민주화운동종합보고서』(2007), 249-250쪽.

지배 권력에게는 매우 공세적이고 위협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민통학련의 남북학생회담 제의와 그것을 매개로 한 변혁, 통일운동진영의 결속, 발 빠르게 호응한 북한의 행보 등이 장면정권을 비롯한 보수 정치세력의 완고한 반공산주의를 더욱 자극한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결국 그런 대립은 사흘 뒤 5·16쿠데타로 표현되면서 남북학생회담은 무산되었다.

3공화국은 반공을 제일의 국시로 삼고 ‘실질적인 반공체제’의 정비와 강화를 내건 5·16쿠데타의 계승자였던 만큼 그 집권 시기에 통일운동이 위축되는 것은 자연스러웠다. 물론 ‘한일회담 반대투쟁’으로 명명되는 6·3항쟁은 스스로를 4·19의 계승, 회복운동으로 규정하면서 ‘반매판, 반외세, 반봉건 민족자주 민주주의’를 내세웠으나 통일운동의 추동력이 되지는 못했다. 무엇보다 한일회담이 냉전의 심화 속에 반공산주의 방벽을 구축하고자 하는 미국의 동북아 지역통합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²⁶ ‘미-일에 대한 반대’가 자연스러운 것이었지만, 4·19혁명 시기 통일운동 실패에 대한 학습과 트라우마로 ‘제국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 없는 반일, 반미 없는 반일’,²⁷ 즉 일본과의 관계정상화 반대에만 집중하였기에 당시 통일문제는 대중적 이슈로 부각될 수 없었다.

26 李鐘元, “아시아における米國の地域統合構想と韓日關係, 1945~1960”, 東京大學法學部助手論文, 1991 참고.

27 조희연, “전후 한국사회운동의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동향과 전망』(1989, 겨울), 259쪽.

제3공화국은 6·3항쟁을 좌절시킨 이후 정치적 억압의 심화, 특히 학원, 언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3선개헌을 강행했고 71년 대선을 통해 대중의 급격한 지지철회가 확인되자 그 해 12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공포하면서 결국 1972년 유신체제라는 공개적 독재체제로 재편되었다. 유신체제는 반공이데올로기, 각종 반공 관련 조직사건 등을 통해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숨구멍을 모두 막아버리고자 하였기에 대중적 통일논의는 거의 불가능했다.

이처럼 유신체제는 대내적으로는 네거티브한 탄압으로 일관했지만, 오히려 북한에 대해서는 공세적으로 나아갔다. 이미 제3공화국 말에 반공을 위해 경제성장을 최고의 모토로 내세운 바 있던 박정희 정권은 1976년 1월 15일, 연두기자회견에서 “이제 가장 큰 관심사는 통일이 아니라 평화정착이며 그럴 때 통일문제도 더 빨리 해결되고 실마리가 풀려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것은 ‘남북 간의 개발과 건설을 통한 선의의 경쟁(선건설, 후통일)’을 제안했던 1970년 ‘8·15 선언’, ‘유엔 동시가입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천명한 1973년 ‘6·23선언(선평화, 후통일)’, 그리고 그해 8월 15일 공포된 ‘할쉬타인 원칙의 포기’와 연관 지어 볼 때,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우위에 올라섰음을 선언한 것이었다.

박정희의 자신에 찬 연두기자회견 이후인 1976년 2월 29일, 지하혁명당 건설을 지향한 남조선민족해방전선의 민주구국학생연맹아래 **민국련**이 ‘조국통일에 관한 투쟁강령’을 발표했다. 민국련은 한반도 전민중의 절실한 요구를 조국통일에 의한 민족문제의 완전한 해결로 보

고 통일은 자주적, 평화적, 민족대단결의 원칙 위에 전민족적 요구에 맞추어 서서히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천명했다. 또한 민족련은 독재정권이 존재하는 한 평화통일은 불가능하며 따라서 반독재민주투쟁의 성공에 의한 민주문제의 해결이 조국통일이라는 민족문제 해결의 대전제라고 밝히면서 반파쇼 민주투쟁의 승리와 민족민주정권의 수립이야말로 조국통일의 첩경이라고 주장했다.²⁸

이러한 민족련의 인식은 공개적 독재체제에 대한 자연스러운 대응이었지만, ‘남북한의 개발과 건설을 통한 선의의 경쟁’, ‘평화 우선주의’ 등과 같은 언술로 북한, 남한의 급진민족주의적 통일운동을 압박한 유신체제의 공세에 대한 ‘수동적 대응’이기도 했다. 여기서 ‘수동적 대응’이 의미하는 것은 그런 언술을 낳게 한 물질 조건의 변화를 일정하게 고려한다는 의미에서 그렇다. 즉 반파쇼민주투쟁의 전면적 강조는 민자통, 통일혁명당 등이 걸었던 노선과는 차이를 드러낸 것으로 그것은 남한을 식민지반봉건사회로 주장하는 견해와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남북한은 자체의 발전경로가 있기 때문에 남한의 혁명은 남한 민중의 주체적 역량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판단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²⁹ 물론 그런 인식의 단초는 조직의 성격과 위상은 다르지만, 이미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민청학련**의 ‘민중, 민족, 민주선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²⁸ 노중선 엮음, 『연표: 남북한 통일정책과 통일운동 50년』(사계절, 1996), 193쪽.

²⁹ 안재구, “안재구의 남민전”, 『우리사상』(새벽별, 1991) 참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내걸고 시작한 남북대화의 결과를 보라 저들의 남북대화는 영구집권을 위한 장식물 이상의 아무 것도 아니었다.… 남북통일이 오로지 저들의 점유물인양 떠들면서 저들이 폭력정치와 민주수탈체제를 공고하게 할 때 통일의 길은 더욱 멀어진다.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진정한 민주주의 승리만이 통일의 지름길임을 모르는가.”

유신체제 시기에 빈곤했던 학생운동진영의 통일논의는 전두환정권 시기에 1980년 5·18학살에 대한 미국의 묵인, 지원과 관련하여 그 진상과 책임을 묻는 반미자주화운동을 매개로 다시 재생되기 시작했다. 1985년 반제반파쇼민주투쟁위원회 **민민투**가 주도한 ‘서울 미문화원 점거’, 86년 초 반미자주화반파쇼민주화투쟁위원회 **자민투**가 주도한 ‘전방입소교육반대’ 등이 대표적이었는데, 거기에서 외쳐진 “광주사태 책임지고 미국은 공개 사과하라”, “한반도 미제군사화 결사저지”, “양키의 용병교육, 전방입소 결사반대” 등은 한편으로 반공규율 사회의 대중들에게 적잖은 충격을 주었지만, 다른 한편 ‘혈맹 미국’이 당시 한반도의 분단, 군부독재를 재생산하는 핵심 동력임을 대중에게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반미 구호와 이슈들이 한국사회의 내적인 변화와 접맥되어 사유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하나의 예로 분단을 고착시키고 ‘식민지 지배’를 유지하기 위한 물리력으로 이해된 주한미군의 존재는 냉전으로 표현된 체제 간 긴장과 갈등, 지구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자본의 재배치 및 재생산(특히 군산복합체를 매개로 한 지

구적 수준에서의 독점자본의 재생산) 등과 연관시켜 생각할 때, 그 객관적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었고 그것은 통일문제를 단지 민족모순의 집약으로 인식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런 문제의식들은 민족해방계열아래 NL이 학생운동의 대중적 해계모니를 지니게 되면서 의미 있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문제는 그들의 통일론이 기본적으로 과거 4·19혁명 시기의 민자통, 민통학련, 그리고 이후 범민련 등의 인식, 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1960년대 말 이후 급속히 추진된 자본주의 산업화를 동력으로 하여 한국사회가 급속히 변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 결과 자본의 집적, 집중 심화(재벌의 지배력강화), 세계체제 안에서 한국자본주의의 지위 상승, 그에 따른 계급-계층의 분화(중간층의 증가) 및 북한에 대한 인식의 변화, 그리고 그런 사회관계들의 변화에 따른 남한국가의 성격변화, 국가 간 관계의 변화 등을 제대로 포착해낼 수 없었다. 그 결과 여전히 한국사회는 식민지반봉건사회로, 제국주의의 마름인 식민지권력이 제국주의와 매판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며 민족의 이해를 외면하고, 민중을 억압, 착취하는 사회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즉 멀게는 식민지시대, 가깝게는 1950-60년대식 인식틀로 변화된 현실을 재단하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 전국 대학생대표자협의회아래 전대협로 대표된 통일운동이 쇠락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존재한다.

그 결과 학생운동은 지배 세력과 권력 또한 '반통일세력'이 아니라 과거에 비해 '상대적 자율성'을 지닌 '부르주아적 통일세력'으로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현실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렇기에 그들은 1970년대 들어 유신체제가 공세적으로 취한 대북 통일정책의 물적 기초를 이해할 수 없었고 노태우정권이 제안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등에 대해 ‘분단을 고착시키는 방안’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에서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었다. 이런 맥락을 고려할 때, 1989년 6월 전대협에 의한 임수경의 방북-그 이전인 1989년 3월 문익환 목사의 방북-과 그것을 매개로 다시 도드라진 ‘조선은 하나다.’라는 언술은 그런 변화된 현실을 잡아내지 못하고 외면하여 딜레마에 빠져 있던 학생 통일운동의 딜레마를 표현한 ‘주의주의적 퍼포먼스’로 평가할 수 있다.

3) 기독교운동

보수적이었던 기독교가 분단, 통일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60년대 말 급속하게 전개된 자본주의 산업화와 맞물려 노동자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삼고 그들을 지원하면서 맞부딪친 문제 때문이었다. 노동기본권을 옹호하는 행위가 용공으로 매도되기 일쑤였고 그 중심에 도시산업선교회, 가톨릭노동청년회^{OC} 등이 있었다.³⁰ 또한 기독교가 반유신 재야민주화운동의 핵심 근거지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태생적으로 미국 보수기독교의 영향, 해방 후 북한

³⁰ 대표적인 극우반공논리는 홍지영, 『산업선교는 무엇을 노리는가』(금란출판사, 1977); 홍지영, “한국교회와 이념문제-KNCC의 반공법 시비의 저의를 캔다”, 『현대사조』 13(1978.12) 등을 참조.

에서 월남한 기독교인들이 중심을 이룬 까닭에 ‘반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동일시하는 발상’을 넘어서는 것은 쉽지 않았다.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었을 때, 가장 진보적인 교단으로 인식된 기독교장로회가 공산주의자들과 합의한 사상과 이념, 체제를 초월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강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 그 좋은 예이다. 하지만 그와 같은 인식은 1971년 결성된 재야민주화운동의 상설조직인 민주수호국민협의회가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는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기초로 하고 민족의 실제인 민중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³¹ 발표한 것을 감안할 때, 자연스러운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당시 기독교는 ‘반유신 민주화운동’에는 적극적이었지만, 통일문제는 공산주의자를 대화의 주체로 삼아야 하는 것인 만큼 소극적이었다.³²

그런 기독교가 분단, 통일문제에 적극적으로 다가가게 된 계기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좌절과 신군부의 집권이었다. 그 과정에서 미국이 한국의 민주화, 인권보다 자신들의 패권을 위해 분단체제를 재생산하고 신군부를 지원했다는 인식이 넓게 공유되면서 미국의 그런 태도와 행보가 분단체제의 해소, 극복 없이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

31 노중선 엮음, 앞의 책(사계절, 1996), 155쪽.

32 당시 기독교운동의 흐름은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1970년대 민주화운동과 기독교』(1982) 참고.

는 점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나아가 그동안 기독교가 전개해 온 인권, 사회정의 등을 위한 민주화운동이 분단체제에 터하고 있던 안보지상주의, 반공산주의 이데올로기라는 장벽에 막히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분단극복과 통일 문제를 선교의 과제로 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변화된 인식과 흐름을 모아 낸 것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아래 KNCC였다.

KNCC 활동의 성과는 1985년 3월27일-28일 열린 KNCC 제34차 총회에서 ‘한국교회 평화통일선언아래 평화통일선언’을 통해 공표되었다. 그 선언은 ‘민중주체, 평화통일’, ‘인도주의에 입각한 평화교류’, ‘통일의 목표가 민주화와 정의사회의 실현’에 있음을 강조하는 한편, 그동안 분단고착화를 정당화 내지 묵인했던 교회의 죄책을 하나님과 민족 앞에 고백하는 자기성찰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³³ 이후 교회가 통일운동에 더 밀착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이어 1985년 5월 24일에는 “정의, 평화, 교회”라는 주제로 제1차 KNCC 통일문제 협의회가 개최되었고 이후 일련의 논의를 거쳐 1988년 2월 29일 제37차 총회에서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선언’아래 ‘88선언’이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88선언’은 기독교 통일운동에서 강령, 지침과도 같은 것으로 「7·4 남북공동성명」에서 밝힌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원칙을 수용한 위에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원칙’과 ‘민족 구성원

33 이만열, “한국기독교 통일운동의 전개과정”, 『신학정론』14(1996), 55쪽.

전체의 민주적 참여보장의 원칙'을 더한 5원칙을 제시면서 '민족'이라는 협애성을 민주성으로 보완하고 있다. 그것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으로는 이산가족의 동거의 자유와 일정 기간 방문할 수 있는 자유 및 연좌제 폐기, 국민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남북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와 언론·통일 연구의 자유, 양측의 체제를 비판할 수 있는 자유 및 세계인권선언 등의 준수, 사상·이념·제도를 초월한 민족적 대단결을 위하여 민족동질성 회복을 전제로 한 상호 비방과 배타주의의 극복, 교류·방문·통신의 개방과 언어·전통·경제의 교류, 남북한 긴장 완화와 평화증진을 위한 평화협정과 불가침조약의 체결, 주한미군의 궁극적인 철수와 군축 및 비핵화, 민족 자주성의 실현을 위한 외세의 간섭 배제와 외교 관계의 재정비 등을 제시했다.³⁴

'88선언'은 연인원 350명이 넘는 교단의 리더들이 다섯 차례의 협의 과정을 통해 산출된 것인 만큼, 그 산출과정, 내용에 있어 당시 급진민족주의적인 사회운동, 학생운동의 통일담론과는 다른 특징을 보여주었다. 그 산출과정과 관련, 첫째, 이미 85년 '평화통일선언'에서 공표한 대로 전체 논의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했다는 점, 둘째, 비가맹 교단과도 협의를 시도하여 의견을 반영했다는 점, 셋째, 당시 여당과 야당 전문 인사들의 의견은 물론 사회과학자, 성서학자들의 자문도 받았다는 점, 그리고 준비 시기부터 분단국인 독일교회, 미국교회 등

34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선언」(1988.02.29) 참고.

과 긴밀히 협의하고 협조와 지원을 받았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런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마련되었기에 ‘88선언’은 내용적으로도 의미 있는 특징을 보여주었는데, 가장 큰 특징은 ‘평화’의 맥락에서 분단과 통일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마태, 5:9). 즉, 그와 같은 평화의 복음을 한반도에 적용할 경우, 남북한의 긴장을 완화하여 전쟁을 방지하고 분단을 극복하여 통일을 이루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귀결인 것이다. 다음으로 그동안 전개된 급진 민족주의적 통일담론이 주로 미국으로부터의 자주성 회복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한국사회 변혁프로그램 속에서 남한의 변화를 중심에 두고 발화되었다면, ‘88선언’은 남북한 모두를 주체이자 변화의 대상으로 삼아 구체적 실천의 수행을 제시,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분단 이후 시민사회에서 자율적인 논의를 거쳐 제출된 최초의 통일담론이라는 위상을 부여받게 된 ‘88선언’은 노태우정권의 「7·7특별선언」, 특히 1991년 12월 13일 남북한 사이에 채택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그해 12월 31일에 발표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등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단지 그런 통일원칙 제시에 머무르지 않고 해방 50주년이 되는 1995년을 ‘희년(jubilee)’으로 선포했다는 점이다. 즉 ‘88선언’은 희년을 “억압적이고 절대적인 내외 정치권력에 의

하여 이루어진 모든 사회적, 경제적 갈등을 극복하여 노예 된 자를 해방하고, 빛진 자의 빛을 탕감하며, 팔린 땅을 본래의 경작자에게 되돌려 주고, 빼앗긴 집을 본래 살던 자에게 돌려주어 하나님의 정의를 바탕으로 하는 '살롬'을 이루어 통일된 평화의 계약공동체를 회복하는 해(레, 25:11-25)이다.”라고 정의하고, ‘희년’ 선포는 “하나님의 역사적 주권을 철저히 신뢰하고, 그 계약을 지키는 행위”임을 강조하며 기독교인의 혁신을 촉구했다. 물론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희년’ 선포에 대해 “이스라엘 민족이 실시했던 희년을 수천 년의 시대적인 차이가 있는 오늘의 현실에 문자 그대로 실시한다면 그것은 ‘사회주의’를 실현시키겠다는 뜻으로, 만약 이 점이 시인된다면 공정해야 할 객관성을 외면하고 사회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비평을 면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보수적인 비판이 가해지기도 했다.³⁵

하지만 ‘희년’ 선포의 중요성은 특정한 이데올로기, 그것의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향후 ‘통일된 나라’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며 그것으로 다가가기 위해 어떤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지를 처음으로 일깨우고 촉구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난한 자기성찰과 실천의 결과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그것은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예수가 고향에서 배척당한 것과 같이 ‘희년’의 선포와 그 실천적

³⁵ 나학진, “교회협의 ‘통일선언문’을 읽고”, 『한국기독교공보』(1988.03.26): 이만열, “10주년을 맞는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선언’(1988)”,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소식』31(1998), 18쪽에서 재인용.

삶의 요구는 그것을 복음으로 수용할 수 없는 이들, 즉 기독교자들, 부자들, 대지주들, 권력자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로 다가가기 때문이다.³⁶ 특히 남한 사회에서 1995년이 무한경쟁을 통해 최대한의 이윤을 추구하고자 하는 신자유주의의 공세로 자본과 노동의 대립이 격화되고 구조조정을 당한 노동자 등 대중의 삶이 악화되던 시기였음을 뒤돌아볼 때, ‘희년’의 선포는 예언의 성격을 갖는 것이기도 했다.

‘88선언’을 둘러싼 기독교 안에서의 긴장과 갈등은 그 안에서 통일을 둘러싼 담론경쟁을 유발시키면서 전체적으로 통일에 대한 관심을 획기적으로 제고시킨 계기가 되었고 그 와중에 ‘88선언’에 반대한 보수적인 기독교세력도 1989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등으로 결집되면서 자신들의 통일담론을 표출하기 시작했다.

2013년 세계기독교협의회 부산총회가 ‘생명의 하느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라는 주제 아래 개최되어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선언’을 발표하였는데, 그것은 분단된 한반도가 생명, 정의, 평화의 문제가 가장 위협받고 있는 곳으로 향후 통일은 정의, 평화에 더하여 생명(삶) 등이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그것은 평화에 주목한 ‘88선언’의 확장판이었다. 다른 한편 보수적인 기독교 또한 ‘88선언’을 비판하면서 북한선교를 벗어나 남북나눔운동 등을 전개하며 KNCC로 상징되는 진보적인 기독교 세력과 경쟁구도를 만들어나갔다. 하지만 그들의 담론은 그 뿌리가

36 황성규, “예수의 희년”, 『기독교사상』39(8)(1995), 239쪽.

‘완고한 반공산주의’로부터 벗어난 것이 아니었기에 기존 통일담론, 무엇보다 ‘88선언’을 긍정적으로 지양(止揚, aufheben)할 수는 없었다.

4) 시민운동

1991년 5월투쟁의 좌절은 사회주의블록의 붕괴, 1987년 6월항쟁 이후 진전된 정치적 자유화에 직면한 기존 급진적 사회운동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딜레마에 빠져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³⁷ ‘사회주의’라는 비전의 상실 속에서 계급, 민중 주체의 거대담론에 대한 비판, 그 운동방식에 대한 회의가 ‘자기고백’의 형식으로 표현되는 가운데, 다른 한편에서는 그 실패의 책임을 민중운동에 돌리며 ‘작은 것이 아름답다.’를 모토로 내건 시민운동이 대중의 호응을 받기 시작했다. 그 흐름을 대표한 것이 경제정의실천연합(아래 경실련, 참여연대 등)이었다.

이 시기 남북한 관계의 변화는 시민운동이 통일운동에 참여하는데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특히 1991년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은 그동안 동시가입을 분단고착화 책동으로 규정해 반대해 오던 북한이 남한의 존재를 대외적으로 공식 인정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또한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은 북한이 ‘변혁의 대상인 남한’을 돌이킬 수 없는 대화의 상대로, 그것도 밀약이 아닌 대중적 공개방식으로 인정

³⁷ 91년5월투쟁청년모임, 『그러나 지난 밤 꿈속에서 이 친구들이 나에게 대하여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1991년 5월』(이후, 2002) 참고.

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데, 그것은 합법성을 중시하는 시민운동이 통일문제에 더 밀착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그 외중에 급진민족주의적 통일운동의 흐름 또한 변화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을 수 없었으며 가장 큰 이유는 대중의 관심 감소와 참여 빈곤 때문이었다. 1994년 출범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아래 평통사}은 그런 현실에 반응하며 등장한 대표적인 조직이다. 평통사는 “평화와 통일의 길에 놓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주한미군기지 반환과 미군의 궁극적 철수, 한미행정협정을 포함한 모든 불평등 조약 폐기, 국방비 삭감과 군사대국화 저지 등을 당면 과제로 설정,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한마음 한몸으로 전진할 것”임을 천명했다.

위의 운동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평통사는 한반도 통일의 주요 장애를 미국으로 보고 있기에 그로부터 자기결정권을 찾아오는 것, 즉 자주화를 핵심목표로 삼았다. 물론 그와 같은 인식과 목표는 기존의 급진민족주의적 통일운동들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한 가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평화와 통일’을 두 축으로 하여 “평화는 통일을 여는 길이요, 통일은 평화를 여는 길”이라는 담론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평화’를 단순한 수사로 사용하지 않고 ‘평화체제 실현’에 방점을 두면서 평화군축, 무기도입 반대, 군사대국화 반대 등을 내걸고 구체적이고도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했다는 점이다. 평화군축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이야말로 통일의 전제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평화 없이는 통일을 이룰 수 없고, 통일이 아니면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받을 수 없다.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데 있어서 경과해야 할 주요한 과제가 평화군축운동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이며, 이 과정은 미국이 한반도 평화의 주된 장애요인임을 전제로 한다. 반미자주 없이는 평화통일 없듯이, 평화군축 없이는 통일 없다는 차원에서 평화군축에 일단 중점을 뒀다가 그것이 결국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본다.”³⁸

평통사의 평화담론은 기본적으로 반미자주화 담론 위에 자리하고 있지만, 평화군축 ‘군축을 통한 평화’-을 통일의 전제로 본다는 점에서 ‘모든 통일은 좋다.’는 주류의 발상과는 객관적 거리를 두는 것이었다. 즉 그 인지,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평화라는 기표에 다가한 의미를 담아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그리하여 다시 질문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도대체 ‘평화체제’란 무엇인가.

이 시기 통일운동의 특징 중 하나는 시민운동의 급속한 성장과 맞물려 체제 내적인 내용과 방식으로 활동하는 단체들이 대중의 주목을 끌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경실련 통일협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특히 이 흐름은 김대중정권과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전개된 다양한 내용의 대북협력사업과 맞물려 더욱 활성화되었다.

이 흐름의 특징은 운동 이념의 차원에서 ‘반미자주화, 민족해방’으로 상징되는 급진민족주의적 통일운동의 담론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38 김치관, “〈인터뷰〉 박석분, 평화군축 없이 통일 없다.”, 『통일뉴스』(2003.05.06) 참고.

점이다. 물론 ‘우리민족끼리’, ‘민족공조’ 등에 호응하면서 연대하기도 하지만, 이들이 강조하는 것은 분단으로 심화된 민족의 이질성을 넘어 ‘동질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흐름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급진적 통일운동이 집중해온 정치군사적 이슈라기보다 다양한 부문에서 이루어지는 남북한의 교류, 화해와 협력 사업이다. 그런 활동의 확대, 심화를 통해 민족의 동질성이 회복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장 커다란 문제는 북한에 이들과 교류,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 즉 ‘자율적인 시민사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들의 활동은 결국 국가가 세우고 추진하는 정책의 범위 안에서, 또한 국가의 인적, 물적 지원을 받으며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들의 활동에 대해 기능주의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그런 비판이 함축하는 의미는 이들 단체들이 주도하는 통일운동이 이 시대의 구조적 장애와 변화, 그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을 천착하면서 국가를 넘어 나아가는 담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는 것이다. 물론 국가의 통일담론, 정책을 둘러싸고 이견, 갈등을 드러내 보이기도 했지만, 이들은 주로 그것을 보완하는 ‘하위파트너’, 긍정적으로 말하면, ‘협치’의 상대로 존재한다. 즉 그 형태상 국가와 분리되어 존재하는 시민사회의 한 행위주체로 국가를 견제하거나 혹은 협력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들의 활동을 자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적 시민운동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들 또한 시민운동 일반에 가해지고 있던 ‘시민 없는 시민운동’, ‘시

민 인륜을 내장하지 못한 시민운동'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없었다.³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역할이 국가 그 자체의 활동과 동일시 될 수는 없다. 이들은 특히 북핵 문제나 '보수 정권'의 등장 등으로 남북한 당국의 대화가 교착된 상황에서 국가가 처리할 수 없는 인도적 차원의 지원, 개발협력사업 등을 수행하면서 사회문화적 통합을 위한 동질감의 제고에 기여해 온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⁴⁰

4. 지구화-포스트민주주의 시대, 기존 통일담론의 시사점과 재구성

1) '대북해게모니 프로젝트'로서의 '햇볕론'의 딜레마

지금까지 4·19혁명 이후 시민사회에서 제기된 통일담론의 대강을 살펴해보았는데, 그것은 1990년대를 거치며 쇠락하면서 국가에 포섭되는 경향을 심화시켜 왔다. 그 시기는 사회주의권의 붕괴에 따른 냉전질서의 해체, 6월항쟁 이후 정치적 자유화의 진전 등에 직면하여 기존 통

³⁹ 당시 시민운동이 처한 상황에 관해서는 이광일, “현단계 시민운동의 딜레마와 과제”, 『황해문화』29(2000); 이광일, “민주주의 이행과 시민운동의 진로”, 『시민과 세계』1(2002) 등 참조.

⁴⁰ 이에 관해서는 김성한, 문경연, “한반도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비정부기구(NGO)의 역할-대북지원 NGO와 북한인권 NGO를 중심으로”, 『국제관계연구』19(1)(2014) 참고.

일운동의 담론이 변화를 요구받게 된 시기로, 특히 신자유주의 지구화의 흐름이 압도적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시기와 맞물려 있다.

그 이전 시민사회에서 통일운동을 주도한 급진민족주의적 흐름은 ‘반미자주화, 민족해방’을 핵심 담론으로 하여 남한국가의 변혁을 추구하였다는 점, 그 위에서 정치-군사전략적 이슈의 해소에 집중했다는 점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그런 담론이 통용될 수 있었던 요인들로는 대외적으로 북한이 미소냉전으로부터 거리를 두려는 제3세계 비동맹외교에서 남한을 앞서고 있었다는 점, 북한이 남한보다 경제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었으며 한국경제의 대미의존도가 적지 않았다는 점, 미국의 지지에 기반한 남한의 국가권력이 주권자인 그 구성원들로부터 지지를 얻지 못했다는 점(군부독재 등) 등을 꼽을 수 있다. 즉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남한이 ‘미국의 헤게모니 경계(American hegemonic boundary)’에 깊숙이 편입되어 있었던 현실 때문이었다. 그렇기에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에 의한 민족해방, 통일’이라는 담론은 그런 조건이 해소되면, 쇠락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맥락에서 3공화국이 ‘한일국교정상화’, ‘베트남전 파병’ 등을 통해 대외지향적인 산업화 프로젝트를 강하게 추진한 것, 그 위에서 유신체제가 ‘선경제 후통일’, ‘선평화 후통일’ 담론을 적극적으로 제기한 것은 선제적인 정치전략적 행보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한 행보는 급진적인 운동세력에게 ‘대미종속성’, ‘예속화’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는 혐의와 비판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북한의 공세적 통일정책에 대한 역공세로, 대내적으로는 박정희정권과 대립

해온 급진민족주의적 통일담론의 물질 기반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시도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1970년대 말에 이르면, 한국자본주의는 자본의 집적, 집중 강화로 독점자본(재벌체제)의 지배력이 강화되고 그 혜택을 받는 중간층들이 그 실체를 드러내는데, 그들은 공개적 독재체제를 비판하며 저항했지만, ‘반미자주화, 민족해방’ 등과 같은 급진적 통일담론과는 거리를 두었다. 상대적이지만, 중간층인 그들은 이데올로기적으로도 개인주의, 개혁주의 그리고 국가권력 물신주의에 대한 결속력이 강하였다.⁴¹ 1987년 7-8월 노동자투쟁 이후 널리 회자된 ‘노동해방’이라는 담론이 다수의 노동대중들에게 ‘자본주의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유혈적 테일러리즘’이 작동하는 작업장에서의 일상적인 억압, 열악한 근로조건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용되었던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급진민족주의적 통일운동은 분단체제 아래에서 한국자본주의는 고도화될 수 없으며, 나아가 세계체제에서의 지위상승 또한 상상할 수 없다는 ‘선형적 인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변화된 현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1980년대 중후반에 본격적으로 제출되었던 NL의 ‘식민지반봉건사회론’, ‘식민지반⁴자본주의론’ 등은 이른바 ‘진보 진영’에서 통용된 또 다른 ‘발생

41 N. Poulantzas, *Classes in Contemporary Capitalism*(NLB, 1975), pp.294-297.

론적 환원론'이라 평가할 수 있다.⁴² 즉 그 발상 자체가 전근대적 정제 사회에 터한 '분단환원론-민족모순환원론'을 전제로 제출된 것이라는 점에서 그것을 이정표로 하여 통일을 모색해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이다.

1990년대를 기점으로 본격화된 급진민족주의적 통일운동의 쇠락은 6·25전쟁 이후 통일운동을 지배해 왔던 발상, 즉 제3세계 민족해방운동 일반이 냉전체제 아래서 지향해 왔던 민족민주혁명NDR을 통한 '민족민주국가'의 건설이라는 프로젝트가 그것을 가능케 했던 구조의 변화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혁명적 민주주의론RD'의 제3세계적 표현이라 할 수 있는 NDR론은 노동자계급에게 정치적 주도권을 내주지 않고 급진적 뿌피부르주아지-그 물질적 토대로서의 '민족자본'-가 사회변혁, 통일을 주도하는 경로를 제시하는데,⁴³ 무엇보다 그 뿌피부르주아지가 독점자본(재벌), 혹은 글로벌 자본에 포섭됨으로써 그것이 불가능한 경로가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중소자본을 '민족자본'으로 볼 수 있는가를 둘러싼

42 NL의 입론에 관해서는 대동편집부, 『민족과 경제』(대동, 1988) 참고. 다른 한편 NL에 대응해 한국자본주의가 성장, 성숙할 수는 있으나 대외종속성(신식민지)의 지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인식, 즉 오히려 발전하면 할수록 종속이 심화될 것('독점의 강화, 종속의 심화 테제')이라고 본 민중민주그룹(PD)의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론' 또한 제국주의의 규정성을 절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환원론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43 K. 브루텐츠, "혁명적 민주주의에 관하여", 김석민 편저,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 논쟁(제1분책)-비자본주의적 발전의 길 논쟁을 중심으로』(새길, 1989) 참고. 이런 측면에서 노동자계급의 해게모니를 전제한 1980년대 제한의회그룹(CA),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등이 제시한 NDR과는 상이하다.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특히 1980년대 중반 이후 국가가 추
 동한 공간재구조화 과정에 올라탄 대자본은 한편으로 산업화의 수혜
 지역으로 평가되는 서울 및 수도권, 영남권은 물론, 차별받고 있는 지
 역으로 간주된 호남권 등에서 그 지역의 중소기업들을 분공장을 통
 해 하청, 계열화함으로써 지배의 밀도를 촘촘하게 엮어 나갔던 것이
 다.⁴⁴ 이와 관련,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에도 ‘민족우선주
 의적 통일담론을 주도해온 전통적 통일운동세력’이 북한과 공조하며
 그 분견대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는 이처럼 변화된 현실을 인정하
 지 않으려는 시대착오를 반증해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⁴⁵

그런데 지금 역설적인 것은 1990년대 이후 급진민족주의적 통일
 담론의 쇠락과 시민사회의 자유주의적 통일운동을 국가에 포섭시켰
 던 구조적 변화, 즉 한국자본주의의 성숙, 냉전체제의 붕괴와 정치적
 자유화를 핵심으로 하는 민주화의 진전 등을 바탕으로 한 세계체제에
 서의 지위상승 등이 현재 유력한 대중적 통일담론으로 작동하고 있는
 ‘햇볕론’에 장애를 조성하는 근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것
 은 북한에 대한 무차별적인 지원, 즉 ‘(경제적)퍼주기’라는 비판으로
 도 표출되고 있다.

‘햇볕론’은 정책이 아니라 대북정책의 포괄적 방향, 원칙을 담은

⁴⁴ 조명래, “산업구조조정과 지역구조의 개편: 후기 주변부포디즘의 지역공간구조 이해를
 위해”, 『현대사회』41호(1992) 참고.

⁴⁵ 이승환, “6월항쟁 20년, 새로운 통일담론을 위하여”, 『창작과 비평』35(3)(2007), 342쪽.

‘대북해계모니 프로젝트’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그것을 둘러싼 논란은 결국 대중의 동의, 지지를 얻기 위한 담론투쟁에 다름 아니다. ‘(경제적) 퍼주기’라는 비판 그 자체가 그 반증인데, 그 어떤 대상(피지배계급, 계층, 혹은 하위의 국가 등)으로부터 도덕적, 지적인 방식으로 자발적, 비자발적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해계모니의 실현은 ‘장기적(전략적) 이해’의 관철을 위해 그 대상이 요구하는 단기적인 경제적 이해를 보장해주는 것을 포함해야 하기 때문이다.⁴⁶

이에 근거할 때, 냉전의 해체와 자본주의의 ‘승리’, 체제경쟁에서 남한의 우위확보 등과 같은 구조적 변화와 그에 따른 남북한의 위상 차이에 터하여 적극적인 교류, 화해와 협력으로 북한을 ‘개방의 길’로 나오게 하겠다는 ‘햇볕론’에 대해 ‘퍼주기’라고 비판하는 것은 조합주의적 표현에 다름 아니다. 하나의 예로 개성공단을 ‘퍼주기’의 상징으로 인식 하는 것, 그에 근거하여 ‘대칭적 상호주의(*symmetric reciprocity*)’를 역설하는 것은 그 전형이라 하겠다.⁴⁷ 이런 맥락에서 ‘퍼주기’는 ‘햇볕론’에 대응하는 담론이 아니라 그것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돌출될 수 있는 남북한 관계의 특정한 긴장 국면에서 남한이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하위정책의 논리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그렇다면 그런 하위의 위상에도 불구하고 그 비판이 ‘햇볕론’에 대

⁴⁶ B. Jessop, *State Theory-Putting the Capitalist State in its Place*(Polity Press, 1990), p.208

⁴⁷ 이에 대해 개성공단을 ‘평화를 위한 경제프로젝트’로 바라보는 논의에 관해서는 김진향, “개성공단-날마다 평화와 통일이 만들어지던 기적의 공간”, 『황해문화』100호(2019) 참고.

하여 ‘적대적 갈등관계’에 있는 담론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데, 그에 대한 고민은 ‘신자유주의 지구화에 규정된 포스트민주주의 시대’를 경과하며 무기력한 상황에 빠진 시민사회의 통일담론을 재구성하는데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6·25전쟁 이후 ‘수구-보수(자유주의) 독점의 정당구조’ 안에서 그 두 세력이 제로섬의 집권경쟁을 해오고 있는 정치현실을 지적할 수 있다.⁴⁸ ‘퍼주기’가 그 논리적, 현실적인 근거 빈약에도 불구하고 대중적인 시야의 한 축에 자리하게 된 것은 그런 정치지형 안에서 조장되고 있는 ‘맹목적 반공캠페인’ 때문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과거와 비교해 그런 캠페인의 대중적 효과가 미약하다는 측면에서 볼 때, 기본적으로 그 캠페인의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그것은 김대중정권 이후 다양한 교류, 협력 정책들로 구체화된, ‘대북해계모니 프로젝트로서의 햇볕론’이 신자유주의 축적전략과 쌍을 이루어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1971년 대선 이후 김대중(정권)의 통일론이 변주, 업그레이드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지닐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민주주의적 대중경제론, 대중민주주의론과 세트로 제시되어 박정희체제가 제시한 ‘대북경쟁에

48 그런 정당구조의 문제점에 관해서는 이광일, “‘무의식의 담합’과 ‘의식적 갈등’의 정치-수구/보수 독점의 정치를 넘어서”, 『황해문화』106호(2020 봄호) 참고.

서의 우위를 통한 흡수통일론'에 대한 대항헤게모니 프로젝트로서의 지위와 성격을 획득했기 때문이다.⁴⁹ 그것은 단순한 통일방안의 제시를 넘어 '통일된 나라'로 가는 과정에서 어떤 내용을 채워가야 하는지를 대중적으로 제기하고 공유한 프로젝트였던 것이다. 즉, 그 나라는 최소한 '대중을 위한 경제, 대중이 주체인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나라'여야 하는 것이다. 실제 1971년 선거 당시 공약목록에는 독과점체제의 해체, 부유세신설 등 세제개혁을 통한 대중수탈요인 제거, 노동3권 보장, 노사공동위원회 설치 등이 담겨 있었고,⁵⁰ 심지어 전태일의 뜻을 구현하겠다는 다짐까지 곁들여져 있었다.

그런데 1997년 IMF관리에 직면하여 김대중정권은 그나마 집권 초기에 그 극복 방안으로 '법, 제도를 통한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보'에 방점을 두는 '질서자유주의적 길'(독일식 신자유주의)을 택하는 듯 했지만, 그 길은 집권 시기를 거치며 빠르게 영미형 신자유주의에 자리를 내주었고⁵¹ 그 결과 그 '대항헤게모니 프로젝트'는 심각한 내상을 입고 폐기되기에 이르렀다. 바로 이 지점에 '햇볕론'에 대한 '퍼주기' 비판을 유사담론의 수준으로까지 격상시키는 물적, 사회

49 대중민주주의와 그 담당주체에 관한 것은 대중경제연구소, 『김대중씨의 대중경제 100문 100답』(범우사, 1971) 4장 참고.

50 당시 김대중후보의 더 자세한 공약내용에 관해서는 김대중, 『행동하는 양심으로』(금문당, 1985) 참고.

51 질서자유주의에 대해서는 성태규, "독일 질서자유주의에서의 정치적 질서정책-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함축", 『국제정치논총』42집(2권)(2002); 황준성, "독일형 질서자유주의와 영미형 신자유주의의 비교", 『경상논총』제19권(제2호)(2001) 등을 참조.

적 기반이 존재한다. 즉 이 지점에 김대중정권을 거쳐 노무현정권 시기에 이르러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나!”라는 언술이 대중적으로 회자된 원인, 최근 ‘금수저/흙수저론’, ‘공정론’ 등이 청년세대들에게 강하게 어필되고 있는 원인이 자리하고 있다. ‘당위적 통일’에 관한 젊은 세대들의 결집 약화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남남갈등’으로 표현되는 내부의 모순, 긴장들이 해소, 극복되지 못할 때, 북한에 대한 인도적, 일상적 지원 또한 ‘퍼주기’가 될 수 있다. 헤게모니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특권화된 계급 혹은 분파(헤게모니 계급 혹은 분파)’의 장기적 이해를 보장하는 국가형태, 그것과 연결된 전략적 지향은 물론 적절한 축적전략 등이 요구된다.⁵² 이런 맥락에서 ‘대북헤게모니 프로젝트로서의 햇볕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에 대한 물질적 양보는 물론, 남한사회의 하위계급, 계층의 경제적-조합주의적 이해에 대한 물질적 양보를 가능하게 하는 축적전략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햇볕론’은 기본적으로 ‘두 국민 헤게모니 프로젝트(two nations hegemonic project)’에 근거하는 영미식 신자유주의 축적전략 위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포섭전략을 안정적으로 구사하기가 쉽지 않다. 남북관계 또한 남한의 내적인 관계들을 매개로 해서 자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 ‘두 개의 국민 프로젝트’는 ‘햇볕론’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근원이라 할 수 있다.

⁵² B. Jessop, *op.cit.*, p.209.

IMF관리체제의 등장이 신자유주의 지구화 시대에 직면한 발전국의 수출지향 산업화프로젝트가 한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준 증거라면, 아니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는 세계사적인 흐름에 비추어 이미 시대착오적인 것이 된 것으로 간주된 그 프로젝트가 IMF관리체제를 등장시킨 중요한 원인이었다고까지 말한다면, 그것에 대응하여 역시 같은 브레튼-우드체제 위에서 ‘국민국가의 자율성’을 전제로 제출했던 ‘민중주의적 대중경제론’이 역사적 의미를 잃게 된 것 또한 자연스러운 결과라 할 수 있다.⁵³ 그런 맥락에서 김대중 정권이 집권 초기에 제시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이라는 질서자유주의적 담론은 1971년 대선 이후 발전되어 왔던 민중지향적인 노선의 폐기가 대중에 미칠 충격, 역으로 대중으로부터 올 수 있는 정치적 저항을 잠시 완화시키는 진통제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정작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구조적 변화에 따른 대중의 고통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설 정치적 비전이 존재하지 않는 현실이다. 그것은 1987년 6월항쟁 이후 진전된 정치적 자유화가 민주주의의 심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결국 ‘포스트민주주의’로 귀결되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지구화시대의 민주주의는 ‘최소로 규정된 민주주의(선거민주주의)’에 의해 정부, 의회의 구성이 이루어지나 글로벌 자본-삼성, SK, 현대, LG는 물론 남한에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다

53 이광일, “신자유주의시대 한국의 포퓰리즘-김대중, 노무현정권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진태원 편, 『포퓰리즘과 민주주의』(소명출판, 2017) 참고.

수의 글로벌 자본 등이 그 기제를 실질적으로 장악함으로써 그들의 이해를 지배적으로 관철시키고 있는 ‘포스트민주주의’이다.⁵⁴ 그것은 노무현정권 시기에 대중적으로 회자된 ‘삼성공화국’, 이명박정권이 강조한 ‘비즈니스 프렌드리(business friendly)’라는 언술 속에서 재확인할 수 있다. 거기에서 이른바 주권, 시민권을 지닌 대중은 ‘팬덤화된 정치시장’의 소비자가 되는 한편⁵⁵, 더 나아가 ‘포퓰리즘’에 눈길을 주게 되는데, 바로 그 지점은 ‘퍼주기’라는 비판에 생명력을 공급해주는 곳이자, ‘햇볕론’의 딜레마가 거처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처럼 포스트민주주의는 무한경쟁을 통한 이윤확보라는 신자유주의의 기본원리 위에서 있기에, 그리고 무엇보다 그 신자유주의는 자신 외에 대안이 없다고 역설하기에 그 경쟁에서 탈락, 배제된 이들을 애써 구제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신자유주의가 유일한 삶의 양식인 곳에서 그 실패의 책임은 경쟁과 이윤이라는 유일준칙에 부합하는 합리적 자기관리와 경영을 수행하지 못한, 즉 ‘호모 에코노미쿠스(Homo Economicus)’가 되지 못한 당사자들에게 있기 때문이다.⁵⁶ 거기에 더하여 남한의 정치구조는 다른 서구의 선발국과 비교할 때, 자유주의, 수구 정치세력이 서로를 ‘진보’, ‘보수’라 호명하거나, 그렇게 자임

54 폴린 크라우치 지음, 이한 옮김, 『포스트 민주주의-민주주의시대의 종말』(이지북스, 2009) 참고.

55 폴린 크라우치, 위의 책, 제5장 참고.

56 이에 관해서는 사토 요시유키 지음, 김상운 옮김, 『신자유주의와 권력: 자기-경영적 주체의 탄생과 소수자-되기』(후마니타스, 2015), 제1장의 3절 참고.

하고 있는 우경화된 체제이기에 그 구제 가능성은 더 불투명하다.

1991년 5월투쟁의 좌절, 그리고 김대중정권의 등장 이후 시민사회에서 의미 있는 통일담론을 찾을 수 없는 것은 그 주체들이 한편으로 신자유주의 지구화가 낳고 있는 모순과 적대, 긴장과 갈등, 다른 한편 그것을 조장하는 포스트민주주의 하의 정치-정당체제와 구조를 문제시하지 않고 이미 주어진 것,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민족대단결, 민족공조’ 앞에 노동자들의 권리,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유보시키는 것쯤은 문제가 아니라고 여기는 인식과 태도에 자신들의 담론이 생명력을 잃게 된 원인이 자리하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그 운동의 주체들이 분단된 두 개의 국가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법, 제도, 물리적인 전제조건, 방식 등에만 집중해 왔지, ‘통일된 나라’가 어떤 내용과 형식의 삶들을 만들고 담보해야 하는가라는 질적인 문제에 대해 거의 관심을 쏟지 않은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금 글로벌자본을 물질, 이데올로기적 기반으로 하는 ‘부르주아 민족주의적 통일론’이 대세가 되어버린 현실은 매우 자연스럽다.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고 ‘글로벌 시티즌’을 양산하고 있는 글로벌 자본과 포스트민주주의국가는 이미 민족을 넘어선지 오래다. 그렇기에 그들이 호명하는 민족주의는 글로벌 자본의 가치실현을 위한 지구적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데 요구되는 대중동원의 이데올로기로 기능하고 있으며 통일 또한 남북한 사회구성원들의 질적인 삶의 제고를 위한 과정으로서가 아니라 신자유주의시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하나의 중요한 계기로 간주되고 있을 뿐이다.

2) '지구화-포스트 민주주의 시대', 통일담론의 재구성 :

'평화-통일-평화'⁵⁷

그렇다면 이런 현실 속에서 시민사회는 무엇을 매개로 대중의 자발적 동의를 끌어낼 담론들을 생산해 낼 수 있을까. 그것은 이 글의 모두에서 살펴본 것처럼 모든 이데올로기가 대중들 각각이 경험하는 특수한 삶의 일반화에 있음을 환기하는 것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는데, 앞서 살펴본 통일담론들이 주는 현재적 시사점을 고려할 때, 그것은 고통 받는 일반 대중들이 가장 원하는 것, 즉 '고통들이 해소된 상태로서의 평화'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평화'라는 기표는 6·25전쟁 이후 너무 빈번하게 들어 왔기에 진부한 것으로 다가오지만, 그것의 전유가 매력적인 이유는 급진민족주의적 통일운동 등을 포함한 국가 중심적 통일담론들이 제기해온 내용은 물론, 현재 지구-지역 수준의 모순, 긴장으로부터 생겨난 이슈들 또한 담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4·19혁명 이후 통일운동의 주류로 간주되어 왔던 급진민족주의적 통일담론 등을 포함하여 모든 통일운동이 주목하는 '전쟁 없는 한반도'라는 의미의 기대와 요구를 담아낼 수 있다. 이 때 평화는 지배담론인 '균비증강을 통한 세력균형'-이른바 '무장된 평화armed

57 아래에서의 '평화-통일'은 '평화-통일-평화'와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그것은 '평화-통일'에 대해 '통일-평화'를 대당으로 놓는 비생산적인 논의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peace’-이 아니라 ‘점진적인 군비축소를 통한 평화’이다. 물론 그 목표는 한반도의 분단, 전쟁 자체가 그랬듯이 지구-지역적인 이슈로 존재하기에 다자간 협의의 과정을 통해 구체화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그 과정에 목적의식적으로 개입하고자 하는 시민사회의 대응 또한 국경의 안팎을 가로지르는 ‘다자-다층적인 연대’가 될 수밖에 없다.

지금 시민사회에서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는 급진민족주의적 통일운동 계보에 있는 평통사, 그리고 동북아 평화구상, 군비감소와 군축, 시민평화주체 형성 등의 목표를 내걸고 활동하는 참여연대의 평화군축센터^{아래} 군축센터^를 들 수 있다. 특히 확장된 평화 개념에 주목하고 있는 군축센터의 평화체제구상은 2011년에 ‘시민이 제안하는 한반도 평화체제’로 제시되었는데, 거기에는 남한 정부와 시민사회가 추구해야 할 평화체제의 기본방향과 정책과제가 담겨 있다.⁵⁸ 즉,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 가는 과정에서 안보의 궁극적 목적을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삶의 보장”에 두고 남북한이 힘의 우위가 아닌 기존 합의의 준수와 이행, 화해협력의 제도화, 국제규범의 준수, 분쟁예방을 위한 선도적이고 능동적인 조치 등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무엇보다 평화체제로의 전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이자 원동력인 시민의 참여와 주도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시민사회의 통일운동이 국가의 하위

58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참여연대 보고서(제2011-22호)-시민이 제안하는 한반도 평화체제”(2011.11.23) 참고.

파트너가 되었다는 비판을 고려할 때, 적절한 방향 설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군축센터는 평화체제로의 전환이 지향하는 최종 목적을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삶의 보장”에 두고 있음에도 여전히 그 구체적인 과제들을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⁵⁹ 평화를 ‘전쟁이 없는 상태’, 즉 ‘소극적 평화’와 동일시하는 인식은 이미 오래 전에 ‘공포⁵⁹로부터의 자유’, ‘결핍⁶⁰으로부터의 자유’를 두 축으로 하는 ‘인간안보⁶⁰human security’ 개념을 통해 그 한계가 사유, 논의된 바 있다.⁶⁰ 하지만 그 논의 또한 현존하는 공포와 결핍의 원인, 그들의 내적 연관성 등을 규명하지 않은 채, 단지 7개 영역의 안보를 기계적,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자유는 ‘자유-평등’, ‘평등-자유’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도 말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미 살펴본 통일담론의 궤적들 가운데, 더 강한 시사점을 주는 것은 기독교 ‘88선언’의 평화에 터한 ‘희년’ 개념이다. 그때 평화의 핵심은 무엇보다 착취, 수탈당하는 가난한 이들, 배제되고 차별받는 이들의 삶을 위한 장애들의 제거, 그들의 새로운 삶의 조건을 창출하는 것에 있다. 그것의 지향은 ‘소극적인 평화’는 물론 구조

⁵⁹ 이대훈,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의 가능성과 걸림돌: ‘평화국가’ 만들기 의제를 중심으로”, 「대안적 동북아 평화구상과 ‘평화국가’ 만들기」 심포지움 자료집(2007.06.20);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앞의 글 등 참조.

⁶⁰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1994*(Oxford Univ. Press, 1994), pp.24-25.

적, 문화적 폭력이 해소된 ‘적극적 평화’의 구체화에 달아 있다.⁶¹ 그런 점에서 ‘희년’은 기존의 남북한 국가, ‘분단체제’를 지양해야 하는 것은 물론, 그 과정에서 ‘통일된 나라’에 담겨야 할 대안적 삶의 내용을 고민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지금의 ‘햇볕론’이 별거벗은 이들의 삶을 위한 최소한의 담론-‘대중경제론과 대중민주주의론’-과 분리되어 버렸기에 더 그렇다. 그 ‘희년’을 이 시대에 적용하면 결국 평화는 이 국가가 신자유주의 지구화시대가 산출하고 있는 계급/계층적 불평등의 문제, 자본운동의 결과로만 환원될 수 없는 자연 파괴와 성차별 문제, 그리고 지구화의 심화로 더욱 골이 깊어지고 있는 인종적/국가적/민족적 차별과 혐오의 문제 등이 해소, 극복된 나라로 나아가야 함을 의미한다.

그 과정에서 특히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신자유주의 지구화의 심화로 국민국가의 외부에 존재하는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내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국가는 그 어떤 동질성을 지닌 단일한 민족국가-그것마저도 ‘상상된 것’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지 오래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지역적 수준의 비대칭적이고 불균등한 관계들에 터하고 있는, 이종적인 모순과 긴장들이 접합되어 있는 ‘지구-지역의 축소판’이 되고 있다. 따라서 어떤 ‘통일된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어떤 지구-지역적인 관계와 질서를 만들어야

61 요한 갈통 지음, 강종일 외 옮김,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들녘, 2000), 제2부, 제4부 참고.

하는가라는 질문과 더욱 더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게 되었다. 하나의 예로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 문제는 통일문제와 연결되어 사유되지 않고, 단지 남한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그것은 ‘통일된 나라’로 가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지구-지역적 이정표를 세우는 것이기도 하다. 실질적으로 이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재생산에 기여하고 있는 적지 않은 이주자들에게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투표권을 부여하는 발상은 또 어떤가.

이러한 맥락에서 ‘평화 없이는 통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은 통일을 먼 미래의 과제로 남기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통일된 나라’는 역사의 끝에 나타나는 ‘목적의 왕국’이 아니라, ‘현재-미래의 나라’로만 존재한다. 평화가 ‘통일’이라는 무정형의 틀에 그 내용과 형식을 준비하고 채우는 일련의 과정이기에 그렇다. 이를 인식하지 못하기에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를 대당으로 놓으며 ‘적극적 평화’를 유토피아적인 상상된 공동체로 인식하거나, 더 나아가 ‘구조적 폭력’ 등의 개념이 기존의 국제평화연구-‘소극적 평화’ 연구-의 가치를 훼손시켰다는 주장이⁶² 가능한 것이다.

그럼에도 평화-통일담론이 ‘통일담론’의 대당으로 설정되면서 심지어 ‘통일담론 무용론’으로까지 해석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그것은 그 담론이 ‘남북관계의 발전’을 간과하고 있다는 진단

⁶² K. Boulding, “Future Directions in Conflict and Peace Studie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22(2)(1978), pp.345-346.

에 근거해 있다. 그동안 국가, 시민사회가 ‘통일=남북문제’로, ‘평화=북미문제’로 분리, 대응해 온 북한의 행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왔다는 측면에서 평화담론은 그 틀에 변화를 주는 의미 있는 행보 이기는 하지만, 북한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지 않으면서, 즉 ‘내재적 접근’에 근거해 이해하지 않고 북한의 변화만을 추구하기에 남북관계의 개선, 발전이라는 과제를 시야에서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⁶³ 그 결과 오히려 통일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비판은 정당한 것인가.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 정치적으로 ‘내재적immanent 접근’에 의해 북한을 설명, 이해하는 경우, 그 논리적 귀결은 무엇일까. ‘내재적 접근’은 북한 자신이 제시한 ‘이념’을 그의 경험적 성과에 비추어본다는 관점에서 있기⁶⁴ 북한이 그 앞에 어떤 수식을 붙이든 ‘사회주의’를 자임하고 있기에, ‘자본주의의 문제를 극복한 사회주의다운 사회주의’, 그 사회주의가 ‘자유로운 개인들의 발전이 공동체 전체의 발전의 기초가 되는 코뮌사회’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근거하여 그 실현을 비판적으로 촉구할 수밖에 없다. 또한 내재적 접근을 남한으로 확장할 때, 그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민주공화국다운 공화국’, 구성원들의 평등, 안전한 삶 등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비판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결국 그러한 비판적 요구

63 이승환, 앞의 글, 340-346쪽 참고.

64 송두율, “북한에서의 ‘내재적 방법’ 재론”, 『역사비평』(1995.2), 225쪽.

가 남북한 당국에 의해 ‘정전상황’과 ‘미국의 제재’, ‘분단상황’과 ‘국제 경쟁력 강화’ 등의 이유로 거부, 합리화되고 있다손 치더라도, 내재적 접근은 평화담론의 한계를 드러내주기보다 오히려 남북한에게 자신들이 내세운 이념, 지향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소극적, 적극적 평화’의 구체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적실하고 정당하다는 점을 재확인해 줄 뿐이다.

이와 관련, 생각해 보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언술이 ‘북한 민주화’이다. 그것의 근본적 문제는 남북의 민주주의를 비교의 차원에서 바라본다는 것이다. 근대 이후 정치의 핵심인 민주주의는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동일성’의 실현을 위해 비대칭적이고 불균등한 사회, 권력 관계들을 더 나은 관계들로 재구성해 나아가는 것, 즉 착취, 배제, 차별 받는 이들이 그런 관계들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집약한 개념이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지배세력, 권력의 언어가 아니라 고통 받는 이들의 몸짓, 외침을 집약한 언어이다. 그렇기에 그들에게 현실의 민주주의는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그들이 삶을 꾸리는 곳이 북한, 남한, 그 외의 어느 국가이든 시공간에 관계없이 항상 지체된, 발육부진의 상태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⁶⁵

바로 이 지점에 ‘북한 민주화’라는 언술의 자가당착이 존재한다. ‘북한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남한에서의 ‘더 많

⁶⁵ 이광일, “민주주의의 급진화를 위한 몇 가지 테제와 보충적 연대”, 『진보평론』41호 (2009/가을) 참고.

은 민주주의'의 실현을 반대하면서, 심지어 남한의 민주주의는 충분하다고 하면서 '북한 민주화'를 역설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그런 언술은 결국 민주주의를 필요로 하는 고통 받는 이들에게 그들 자신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라는 점을 공표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남북한 모두가 끊임없이 재구성되어야 할 민주화의 대상이라는 점을 자기화하지 못하고 있기에 나타나는 자기분열인 것이다.

이처럼 '평화-통일'을 둘러싼 담론이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 중심에 '어떤 국가'가 아니라,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가의 문제가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에 대한 사유와 실천은 기존 질서를 넘어서는 영역을 포괄하는 문제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기존의 국가는 그 질서 안에서 그것을 사유하도록 제한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강제력을 동원해 그 질서 안에 구겨 넣거나 아예 배제해버린다. '평화-통일'에 '운동'이라는 개념이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근본적 이유이다.

이런 맥락에서 '평화-통일담론'의 실현 정도는 정치와 함수관계에 있다. 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를 민주적으로 재구성해 나가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서의 민주주의는 법, 제도보다 비대칭적이고 불균등한 기존 관계들의 재구성에 주목하는 개념이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의미에서 법과 제도는 결국 '정의의 타자'로 존재하기에 그렇다.

“법은 정의가 아니다. 법은 계산의 요소이며, 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정당하지만, 정의는 계산 불가능한 것이며, 정의는 우리가 계산 불

가능한 것과 함께 계산할 것을 요구한다.”⁶⁶

이제 이 지점에 이르면, 시민사회의 ‘평화-통일운동’이 국가, 무엇보다 지금 남한에 존재하는 ‘신자유주의 포스트민주주의국가’를 넘어서야 하는 과제를 우회할 수 없음이 분명해진다. 그것은 지구화로 인해 과거에 비해 국가의 성격, 기능이 변화되었지만, 국가가 지니고 있는 다음과 같은 보편적 성격, 위상 때문이다.

“국가의 적극성과 편재성은… 그것이 구체적인 생산양식의 형태 속에서 정치-이데올로기적인 관계들을 응집, 응축, 물질화하고 구현하는 인자라는 것에 있다. 국가는 모든 곳에 존재한다.… 계급, 비계급 관계를 포함하는 모든 사회적 현실은 국가와 구성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서 인식되어야 한다.”⁶⁷

어떤 내용과 형식을 지닌 ‘통일된 나라’로 갈 것인가의 문제는 전적으로 그것을 둘러싼 상이한 의지들이 표출되며 마주치는 미시-거시적인 정치의 장이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달려 있다. 그것은 정치적-이데올로기적 관계가 기존의 모든 사회관계들에 현존한다는 점에서, 즉

⁶⁶ 자크 테리다 지음, 진태원 옮김, 『법의 힘』(문학과지성사, 2004), 37쪽.

⁶⁷ B. Jessop, *Nicos Poulantzas, Marxist Theory and Political Strategy*(Macmillan, 1985), p.118.

국가보다 더 편재적이라는 점에서 그렇다.⁶⁸ 결국 거기에서 핵심은 ‘평화-통일운동’이 신자유주의 지구화, 포스트민주주의, 그리고 분단 체제 아래에서 대중들이 직면하고 있는 고통, 그들의 기대, 희원 등을 얼마나 자기화하며 대중들과 어깨를 함께 할 수 있는가이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향후 시민사회의 ‘평화-통일운동’의 행보와 담론에, 따라서 그에 대응하거나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국가의 담론과 정책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5. 나가는 글

지금까지 지난 시기 시민사회에서 제기되어왔던 ‘통일담론’의 대강을 뒤돌아보고 신자유주의 지구화 시대에 들어 딜레마에 처해 있는 그 담론들이 어떤 내용으로 재구성되어야 하는지 고민해 보았다. 하나의 담론이 대중들에게 의미가 있으려면, 그들이 비대칭적으로 불균등하게 포섭되어 있는 사회, 권력 관계들 속에서 경험하는 상이한 고통들을 보편적인 언술로 재구성하여 제시하고 공감, 인정을 받을 때 가능하다.

그런 맥락에서 보았을 때, 4·19혁명 이후 시민사회에서 제기된 주

⁶⁸ N. Poulantzas, Translated by P. Camiller, *State, Power, Socialism*(Verso, 1980), pp.25-27 참고.

류의 통일담론들, 즉 급진민족주의적 운동의 흐름 속에서 발화한 ‘자주’, ‘민족단결’, ‘민족해방’, ‘민족공조’, ‘우리민족끼리’ 등은 지구화 시대의 급속하게 전개된 다층의 변화를 담아내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그 속에서 고통 받는 가난한 이들, 진정 구원이 필요한 이들의 실질적인 삶을 외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담론들은 유효기간이 다하여 지배세력, 권력의 이데올로기로 변형되거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효과를 낳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주체할 수 없는 돈과 권력을 지닌 1%와 그로부터 철저히 배제된 99%가 물과 기름처럼 갈라진 “99 대 1 사회”에서 제기되는 ‘자주’, ‘민족단결’ 등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애초 꿈꾸었을 ‘해방’의 문제의식은 사라지고 그 인지,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남-북 국가의 이데올로기적 기제로 되어 그 자장 안에서 움직이는 담론들이 대중에게 과연 무엇을 상상하게 만들 수 있겠는가. 이 시대에 진정 “누가 내 어머니이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마태, 12:48).”

참고 문헌

- 91년5월투쟁청년모임, 『그러나 지난 밤 꿈속에서 이 친구들이 나에게 대하여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1991년 5월』(이후, 2002)
- 구갑우, “한반도 분단체제와 평화국가 만들기”, 『시민과 세계』10(2007)
- 김대중, 『행동하는 양심으로』(금문당, 1985)
- 김명숙, “통일연대, 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 구성하기로 결정”, 『통일뉴스』(2001.05.23)
- 김상찬, “사이비 통일론을 박함 -신상초 의원의 글을 읽고”, 『민족일보』(1961.03.19)
- 김선미, “4·19를 전후한 시기 통일운동의 흐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현장민주화운동종합보고서』(2007)
- 김성한, 문경연, “한반도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비정부기구(NGO)의 역할-대북지원 NGO와 북한인권 NGO를 중심으로”, 『국제관계연구』19(1)(2014)
- 김진향, “개성공단-날마다 평화와 통일이 만들어지던 기적의 공간”, 『황해 문화』100호(2019)
- 김한상, 『조국근대화를 유람하기-박정희정권 홍보드라이브, <팔도강산> 10년』(한국영상자료원, 2008)
- 나학진, “교회협의 ‘통일선언문’을 읽고”, 『한국기독교공보』(1988.03.26)
- 노중선 엮음, 『연표 : 남북한 통일정책과 통일운동 50년』(사계절, 1996)
- 대동편집부, 『민족과 경제』(대동, 1988)
- 대중경제연구소, 『김대중씨의 대중경제 100문 100답』(범우사, 1971)
- 문한영, “60년대의 민족자주통일운동-민자통을 중심으로 한 증언”, 4월혁명연구소 편, 『한국사회변혁운동과 4월혁명』2(한길사, 1990)
-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I / II(나남출판, 1996)

- 사토 요시유키 지음, 김상운 옮김, 『신자유주의와 권력: 자기-경영적 주체의 탄생과 소수자-되기』(후마니타스, 2015)
- 서중석, 『이승만과 제1공화국』(역사비평사, 2007)
- 성태규, “독일 질서자유주의에서의 정치적 질서정책-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함축”, 『국제정치논총』42집(2권)(2002)
- 송두울, “북한에서의 ‘내재적 방법’ 재론”, 『역사비평』(1995.2)
- 심지연, 『한국정당정치사』(백산서당, 2009)
- 안재구, “안재구의 남민전”, 『우리사상』(새벽별, 1991)
- 엄상운, “제2공화국 시기의 중립화통일론과 21세기의 한반도 통일- 맨스필드, 김삼규, 김용중의 논리분석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43집(2권)(2003)
- 에티엔 발리바르 지음, 윤소영 옮김, 『알튀세르와 마르크스주의의 전화』(도서출판 이론, 1997)
- 오제연 외, 『4월혁명의 주체들』(역사비평사, 2020)
- 유영철, “2000년 이후 중립화통일론의 특징”, 『대한정치학회보』 22집(1호)(2014)
- 이광일, “‘무의식의 담합’과 ‘의식적 갈등’의 정치-수구/보수 독점의 정치를 넘어서”, 『황해문화』106호(2020 봄호)
- _____, “신자유주의시대 한국의 포퓰리즘-김대중, 노무현정권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진태원 편, 『포퓰리즘과 민주주의』(소명출판, 2017)
- _____, “민주주의의 급진화를 위한 몇 가지 테제와 보늬적 연대”, 『진보평론』41호(2009/가을)
- _____, “민주주의 이행과 시민운동의 진로”, 『시민과 세계』1(2002)
- _____, “현단계 시민운동의 딜레마와 과제”, 『황해문화』29(2000)
- _____, “한일회담반대운동의 전개와 성격”, 『한일협정을 다시 본다-30주년을 맞이하여』(아세아문화사, 1995)
- 이대훈,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의 가능성과 걸림돌-‘평화국가’ 만들기 의제

- 를 중심으로”, 「대안적 동북아 평화구상과 ‘평화국가’ 만들기」 심포지움
자료집(2007.06.20)
- 이만열, “10주년을 맞는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선언
(1988)”,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소식』31(1998)
- _____, “한국기독교 통일운동의 전개과정”, 『신학정론』14(1996)
- 이승환, “6월항쟁 20년, 새로운 통일담론을 위하여”, 『창작과 비평』35(3)
(2007)
- 자크 데리다 지음, 진태원 옮김, 『법의 힘』(문학과지성사, 2004)
- 정병준, “최인훈 <광장>과 중립국행 76인의 포로”, 『역사비평』126호
(2019)
- 정진아, “조봉암의 평화통일론 재검토”, 『통일인문학』48호(2009)
- 조명래, “산업구조조정과 지역구조의 개편: 후기 주변부포디즘의 지역공간
구조 이해를 위해”, 『현대사회』41호(1992)
- 조배준, “한반도 중립화 통일방안에 대한 반성적 고찰”, 『통일인문학』제61
집(2015)
- 조희연, “전후 한국사회운동의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동향과 전망』
(1989, 겨울)
- 지그문트 바우만 지음, 문성원 옮김, 『자유』(이후, 2001)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참여연대 보고서-시민이 제안하는 한반도 평화체
제”(2011.11.23)
- 카야노 도시히토 지음, 김은주 옮김, 『국가란 무엇인가-국가의 본질에 대한
역사적 고찰』(산논, 2010)
- 콜린 크라우치 지음, 이한 옮김, 『포스트 민주주의-민주주의 시대의 종말』
(이지북스, 2009)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1970년대 민주화운동과 기독교』(1982)
- 홍지영, 『산업선교는 무엇을 노리는가』(금란출판사, 1977)
- _____, “한국교회와 이념문제-KNCC의 반공법 시비의 저의를 캔다”, 『현

- 대사조』13(1978.12)
- 황성규, “예수의 회년”, 『기독교사상』39(8)(1995)
- 황준성, “독일형 질서자유주의와 영미형 신자유주의의 비교”, 『경상논총』 제19권(제2호)(2001)
- K. 브루텐츠, “혁명적 민주주의에 관하여”, 김석민 편저,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논쟁(제1분책)-비자본주의적 발전의 길 논쟁을 중심으로』(새길, 1989)
- B.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I/II*(Princeton Univ. Press, 1981/1990)
- B. Jessop, *State Theory-Putting the Capitalist State in its Place*(Polity Press, 1990)
- _____, *Nicos Poulantzas, Marxist Theory and Political Strategy*(Macmillan, 1985)
- K. Boulding, “Future Directions in Conflict and Peace Studie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22(2)(1978)
- N. Poulantzas, Translated by P. Camiller, *State, Power, Socialism*(Verso, 1980)
- _____, *Classes in Contemporary Capitalism*(NLB, 1975)
-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1994*(Oxford Univ. Press, 1994)
- 李鐘元, “아시아における米國の地域統合構想と韓日關係, 1945-1960”(東京大學 法學部助手論文, 1991)

토론

김정한

서강대학교 트랜스내셔널인문학연구소 HK연구교수

이광일 선생님의 발표문은 한국전쟁 이후부터 최근까지 시민사회의 통일담론을 역사적으로 분석한다. 복잡하고 다양한 역사적 통일담론들을 매우 일관된 문제의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돈해서 제시하고 있고, 그 자체로 향후 대안적 통일을 사유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이 발표문의 일관된 문제의식은 두 가지 이론적 차원을 갖고 있다. 하나는 ‘통일담론은 지배이데올로기이다’라고 전제할 때 지배이데올로기에 대한 새로운 개념화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전적 맑스주의처럼 지배이데올로기를 허위의식으로 본다면 ‘통일담론은 현실의 모순을 은폐하기 위한 허위의식이다’라는 주장이 되겠지만, ‘지배이데올로기는 피지배자들의 체험된 경험들의 특수한 보편화이다’라는 현대 정치철학의 급진적 개념을 채택하여 통일에 관한 역사적 담론들 속에 전쟁과 학살, 분단체제의 인권 유린, 경제적 착취 등을 체험

한 대중들의 고통과 그로부터 벗어나려는 염원이 담겨 있다고 적합하게 파악한다. 다른 하나는 통일담론에 대한 분석을 정치경제학 비판의 관점과 결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대표적으로 김대중(정부)의 통일론이 대중경제론과 결합했을 경우(‘4대국 보장에 의한 한반도의 평화 보장’)와 신자유주의와 결합했을 경우(‘햇볕론’)에 대중적 지지의 차이가 있었음을 지적할 때 분명히 드러난다. 또한 1980년대 학생운동이나 NL의 통일운동과 관련해서 한국 자본주의에 대한 정치경제적 분석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민족주의에만 호소하는 통일담론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평가하는 지점에서도 정치경제학 비판의 관점은 잘 드러난다.

이와 같이 이 발표문은 이데올로기 비판과 정치경제학 비판을 혼합하여 역사적 통일담론들을 재정돈하고 있으며, 이를 비판하고 평가할 수 있는 탄탄한 이론적 기반을 구성하고 있다. 이를 더 넓은 맥락에서는 민족 문제와 계급 문제 가운데 계급 문제를 우위에 두려는 시도라고 거칠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통일 문제가 대중의 삶의 문제와 결합할 때 대중적 지지를 획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통일담론이 단순히 정책의 차원에 머물지 않고 ‘통일된 나라’의 구체적인 내용을 채워가는 대중적 프로젝트로 나아갈 수 있다는 중요한 쟁점을 제시하고 있다. 1980-90년대 NL의 ‘선통일 후혁명’과 PD의 ‘선혁명 후통일’로 조금 단순화해서 요약할 수 있는 통일 논쟁을 바탕에

두고 있으면서도, 새로운 통일담론의 출발점을 '선민주 후평화'로 새롭게 재구성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론 이 발표문에서 재구성하는 새로운 통일담론이 미시적인 통일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탈냉전과 세계화의 시대가 탈민주화와 테러의 세계화를 동반하는 상황에서 끊임없는 민주화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은 매우 타당한 사유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민주화와 평화의 관계에 대해서는 더 설명이 필요하다. 민주화와 평화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부족하다. 민주화된 국가들이 늘 평화적인 길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며, 민주화가 국민국가 내부적 차원이고 평화가 국민국가들 간의 외부적 차원이라면, 민주화가 평화로 나아갈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평화의 과제와 관련해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의 88 선언을 높게 평가하고 그 가운데 회년 개념을 다시 재구성해서 '통일된 나라가 어떤 나라여야 하는가'라는 쟁점을 제안하는 것은 새롭고 흥미롭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4·19 직후의 중립화 통일론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과거 중립화 통일론의 한계로 외부의 힘에 의존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분단체제를 탈피하는 중립국가화 또는 한반도의 중립 지역화라는 쟁점은 그것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하는 차원을 넘어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통일담론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더 사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서 국제주의에 대한 상상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물론 고전적 맑스주의의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는 파산했다고 할 수 있지만, 평화체제가 하나의 국민국가 차원에서 일국적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새로운 국제주의에 대한 고민은 불가피할 것이다.

토론

손우정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6·25전쟁 이후 철저하게 억눌려 있던 민간의 통일담론은 예외적인 시간에만 간헐적으로 등장할 수 있었고, 시민사회의 통일담론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대중적 영향력을 갖게 된 것은 이른바 ‘민주화’와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민간의 통일담론 주도성은 지난 20년 간 서서히 약화되었으며, 대신 정상회담으로 상징되는 국가담론의 주도성이 강화되고 있다. 이런 시기에 시민사회의 지난 통일담론의 흐름을 살펴보고, 오늘날의 과제를 살펴보는 연구는 긴 호흡을 필요로 하는 지난한 작업이다. 통일담론의 형성은 특정한 행위자나 집단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남과 북의 통일역량과 의지, 정권의 성격, 국가의 공식적인 통일정책, 지배이데올로기의 강화와 이완, 또는 변화, 동북아와 세계정세, 통일(운동) 주체의 의지와 실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6·25전쟁 이후 시민사회 통일담론의 흐름을 정리한

이광일의 발표문은 시민사회의 통일담론을 단순하게 정리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찰적 과제까지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의의 지평을 넓히고 있다.

이 토론문에서는 시민사회 통일담론에 대한 향후 연구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비롯해 발표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몇 가지 의견을 덧붙이고자 한다.

| 통일담론의 대항적 성격과 역사적 맥락

발표자는 통일담론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분석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대중 통제와 동원을 위한 이데올로기로서 기능해 온 통일담론은 6·25전쟁을 단순히 군사기술적인 시각으로만 제한시켜 보면서 발생론적 환원주의에 빠져 있으며, 전쟁과 분단이 파생시킨 특수한 고통들로부터 벗어나고픈 대중의 기대와 상상을 보편화된 언술로 담아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글이 다루고자 하는 대상은 ‘시민사회 통일담론’이며, 통일담론의 역사적 뿌리가 단순히 지배이데올로기의 하위담론으로만 존재한 것도 아니다. 통일담론의 대항적 성격에 대한 분석 없이 지배이데올로기로만 간주할 경우 시민사회의 통일담론 역시 지배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역할에만 머물게 되며, 발표문 전반에도 이런 시각이 강하게 배어 있다.

시민사회 통일담론은 6·25전쟁 이후 지배담론으로 출현한 것이 아니라 가깝게는 해방 후, 멀게는 일제강점기의 저항담론과 맞닿아 있다. 1945년 해방과 동시에 분단을 경험해야 했던 우리는 불완전한 해방, 불완전한 광복이라는 상황에서 새로운 국가건설에 착수해야 했다. 당시의 시대 과제는 식민 잔재의 청산과 봉건적 토지제도 개혁 등 사회개혁과 함께 통치체제로 민주주의의 구현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의 전제가 되는 것은 해방된 하나의 나라였다. 그러나 미군정이 들어오기 이전부터 자생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각종 결사체에서는 신탁통치 논란을 경유하며 민족통일국가 건설을 우선 과제로 삼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것은 단순히 상상의 공동체의 당위를 넘어 일제강점기 독립투쟁의 완결을 지향하는 것이었다. 즉, 통일담론은 애초부터 통치를 위한 지배이데올로기로 출현한 것이 아니라 시대 과제의 구현이라는 시민사회 담론으로, 미군정과 단독정부 수립론자들에 대한 대항적 담론으로 출발했다.

1945년 해방부터 단독정부 수립, 그리고 6·25전쟁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기간은 시민사회의 다양한 통일담론이 분출된 것은 물론, 실천 방법에서도 다양한 흐름이 존재했다. 이 과정에서 미군정과 이승만의 독립축성회, 김성수의 한민당, 서북청년단 등 단정세력을 한축으로, 남로당 등 좌익세력을 다른 축으로 형성된 담론적 각축은 물리적 충돌로까지 나아갔다. 2·7구국투쟁과 4·3항쟁, 여순항쟁 등으로

이어진 일련의 흐름에는 단독정부 수립을 막고자 한 통일담론이 기저에 있었고, 1950년 6·25전쟁 이전까지 이 과정에서 사망한 사람만 10만 명에 이른다. 또한, 김규식 등 중도파와 김구 중심의 임정계열 역시 남북제정당사회단체대표자 연석회의와 남북제정당사회단체 지도자회의 등을 추진하면서 통일담론을 생산하고 실천했다.

발표자의 주장처럼 북진통일론으로 상징되는 이승만의 통일담론이 ‘피지배대중의 체험된 경험’에 근거해 그들의 환상, 혹은 상상을 전유한 지배이데올로기로 기능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은 해방 후 시민사회의 통일담론을 철저하게 배제, 섬멸, 대체하면서 형성된 것이다. ‘비국민’, ‘내부의 적’으로 규정된 대항적 통일담론의 담지자들과 지배이데올로기로서의 통일담론 사이에는 그 어떤 소통이나 공론장도 존재하지 않았다. 결국 지배이데올로기로서의 통일담론은 철저하게 억누르고 배제하고 섬멸하여 만들어진, 동의를 취약한 강제의 헤게모니였다.

이런 이유로 6·25전쟁 이후에는 담론을 다룰 제대로 된 시민사회도 존재하지 못했거니와 통일담론 역시 87년 민주화 이전에는 4·19 혁명 직후와 같은 예외적 상황에서 등장하거나 개인과 정당의 입장으로만 간헐적으로 표출되었다. 그나마 이런 논의도 시민권을 얻지 못하고 대체로 국가폭력의 대상이 되었는데, 군사독재의 지배이데올로기의 거처가 사실은 통일담론에 있기보다 (반공도 아닌) 맹목적 반복이데올로기에 있었기 때문이다.

| 답론은 부문을 넘어선다

통일담론 분석에서 제기되는 분석단위 문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발표문을 비롯해 대부분의 운동 연구는 분석단위로 부문이나 계급, 조직(단체)을 상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런 경우 부문과 계급, 단체를 초월하는 일정한 경향성을 포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시민사회는 그 자체로 지배이데올로기와 대항이데올로기 등 다양한 입장이 각축하는 쟁투적 공간이라는 점에서 부문을 초월해 존재하는 답론의 심층구조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는 것이 좀 더 입체적인 인식을 가능하게 하며 장기간의 답론적 변화를 분석하기에도 유리하다.

예를 들어 급진운동 통일담론의 심층 구조는 멀게는 1920년대, 가깝게는 해방 이후의 답론구조와 유사성을 가진다. 1920년대 조선에 사회주의 사상이 수입된 이후, 조선과 일본 노동자 간의 단결과 연대를 강조하면서 민족부르주아지나 민족개량주의자를 적대 대상으로 보는 흐름이 나타났고, 다른 한편에서는 사상과 계급을 떠나 일제에 대항하는 광범위한 민족통일전선을 주장하는 흐름이 이어졌다. 이는 식민지 조선만의 독특한 현상은 아니었고, 부르주아지와 사회민주주의자 모두를 2개의 적으로 규정한 1928년 2월 코민테른 제9회 집행위원회 총회의 ‘신전술’ 채택과 사회민주당계열과 반파시즘이라는 공동목표 아래 연대할 것을 천명한 1935년 코민테른 7차 대회 의 인식 차이에도 나타난다. 이런 차이는 일제 강점기에도 박헌영의 ‘8월테

제'와 백남운의 '조선민족의 진로' 등에서도 확인되며, 해방 후 인민전선과 통일전선의 강조점 차이로도 반복됐다.

이는 크게 보아 통일담론을 구성하는 연대연합을 둘러싼 4가지 세력 범주(민족주의적 좌익, 계급적 좌익, 민족주의적 우익, 반공적 우익) 간 관계설정 문제로 요약될 수 있으며, 민족주의적 좌익과 계급적 좌익 범주 간의 담론적 쟁점은 민족주의적 우익과의 관계 문제로 나타났다.

80년대 사회운동의 활성화·급진화 과정에서 등장한 통일담론의 메커니즘 역시 이런 담론구조와 유사하게 작동했다. 통일담론을 둘러싼 갈등은 두 가지 인식차이가 포괄적인 중간층 대책과 맞물리면서 운동과정에서 중소자본의 세력배치상의 지위, 그리고 김대중으로 상징되는 당시 야당과의 관계문제로 드러났다. 80년대 후반에 활성화되었던 전략적·전술적 통일전선 문제, 두 개의 전선론, 민족자본가 문제, 합법정당 문제를 둘러싼 논쟁과 갈등은 시대적 조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담론의 구조와 기제의 유사한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급진민족주의 운동 내부에 '최소화된 적을 반대하기 위한 연대'(통일전선)와 '진보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연대'(인민, 또는 계급전선) 사이에서 발생하는 긴장과 딜레마를 보여준다.

부문과 계급, 개별 조직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담론적 심층구조를 분석하면 이것이 당시의 시대적 조건, 정치적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

용하여 당대의 통일담론으로 등장했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드러내 준다.¹ 그러나 부문을 성격과 정체성 차이인 것처럼 간주할 경우, 발표문이 통일운동의 담론을 공유하지 않는다고 분석한 일부 시민운동 사례처럼 지나치게 표면적인 활동에만 주목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또한, 정치군사적 이슈보다 남북한의 교류, 화해, 협력 사업을 중시했다는 평가도 활동 영역과 역할에 대한 차이일 뿐, 성격 변화나 담론적 단절로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 몇 가지 해석 차이

발표문의 통일담론 흐름에 대한 분석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이니만큼 크게 이견을 달기 어렵다. 다만, 통일담론과 운동의 해석과 평가에 대해서는 토론의 여지가 있다.

1 6·15공동선언의 탄생부터 2002년 대선까지 급진민족주의 운동 진영 내부에서 일어난 담론 변화 역시 이런 측면에서 분석될 수 있다. 1992년 대선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났듯이 급진민족주의운동은 김대중으로 상징되는 자유주의적 개혁세력과 의 전략적 제휴에 대한 의지가 강했지만, 당시는 세 가지 조건이 달라졌다. 첫째, 1992년 대선을 끝으로 민족주의계열 운동세력과 자유주의적 개혁세력 간의 암묵적 연대는 완전히 단절되었다. 둘째, 외환위기 이후 노골화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으로 인해 민중진영과 김대중 정부 간의 갈등과 적대가 심화되었다. 셋째, 90년대를 경유하며 완전히 단절된 급진운동진영이 진보정당의 틀 속에 연합전선을 구축하며 성장하고 있었다. 이런 이유로 2000년 이후 연대·연합을 둘러싼 갈등과 딜레마는 민중운동 진영 내에서 뿐만 아니라 급진민족주의 진영 내에서 더욱 심화되었는데, 2000년 8월 15일, 노동자대회와 민화협 행사의 참가 여부에 대한 논란, 2001년 통일대회 논란, 2002년 지방선거와 대선에서의 지지후보와 연대전략을 둘러싼 진영 내부의 논란이 반복되었다.

첫째, 앞서 언급한 것처럼 통일담론은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한 결과로서 등장한다. 이런 점에서 발표문이 박정희 정권 시기 민간 통일담론의 위축이 선경제건설, 후통일 등 선제적인 정치 전략적 행보로 급진민족주의적 통일담론의 물질 기반을 약화시켰기 때문이라는 분석은 지나치게 제한적인 시각이다. 물론 이런 측면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군부독재시기의 통일논의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에 의해 엄격히 통제되었고, 7·4공동성명이나 남북조절위원회 등 정부가 주도한 통일논의도 통일원이 아닌 중앙정보부에 의해 진행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 통일담론을 개진했던 장준하가 의문사하고 민족일보의 조용수, 민자통의 최백근 등이 처형되었다. 이외에도 각종 간첩조작사건이 난무하던 시기에서 급진적 통일담론이 확산되지 못한 이유를 중간층의 개인주의, 개혁주의, 국가권력의 물신주의로만 보거나 변화된 현실에 대한 운동진영의 몰이해로 보는 것은 헤게모니의 강제적 측면을 과도하게 무시한 결과다. 이렇게 본다면 3저 호황을 누리던 80년대 후반에 급진민족주의적 통일담론이 가장 활성화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둘째, 담론에 대한 평가와 운동의 결과에 대한 해석이 무리하게 섞여 있다. 발표문은 5~60년대 인식틀로 현실을 재단한 것이 전대협으로 대표된 통일운동이 쇠락할 수밖에 없던 이유라고 보고 있다. 담론의 평가에는 수궁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담론의 과학적 성격과 이

를 토대로 한 운동의 성장, 혹은 쇠락은 필연적 관계를 맺는 것은 아니다. 만일 그렇다면 80년대에 그 많던 운동, 그 이후 출현한 여러 분파의 운동은 왜 대부분 쇠락의 길을 걸었는가? 급진적 사회운동 전반의 쇠락은 개별 운동의 인식틀만이 아니라 체제 정당성의 변화, 세계적 상황, 운동 지형과 토대의 변화, 제도정치와의 관계 등 다양한 변수가 개입하는 문제다.

셋째, 통일운동의 실천적 행동에 대한 평가도 재고의 여지가 있다. 발표자는 문익환, 임수경의 방북의 의미도 현실을 외면하는 학생 통일운동의 주의주의적 퍼포먼스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 한동안 연례행사처럼 진행된 학생대표의 방북 투쟁에 대해서는 그렇게 평가할 여지가 있지만 남북의 민간교류가 원천 봉쇄되어 있고 민간의 통일담론이 여전히 금기이자 냉전성역으로 자리 잡고 있던 상황에서 하나의 돌파구를 만들어 낸 행동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만 평가하고 있다. 새로운 운동이 등장하고 확산되는 초기에는 대중적 시각에서는 지나치게 급진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행동이 나타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보통 운동의 성장에는 이런 급진운동의 측면효과로 지평이 확장되고, 온건하고 대중적인 운동이 자리 잡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해석의 문제들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통일담론의 지배이데올로기적 성격만을 주목한 결과로 보인다.

덧붙여, ‘시민사회’나 ‘담론’과 같은 핵심 개념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 측면이 있다. 분석대상에 정당의 통일담론도 포함되어 있고, 담론과 운동의 평가가 혼재되어 있어 시민사회나 담론을 매우 느슨한 개념으로 설정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주어진 것일 수 있고 지면과 연구기간의 한계에서 오는 불가피한 결과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관련 연구와 학문적 논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구의 개념과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담론 간의 등가사슬이 필요한 포스트 시대

발표문의 미덕은 통일담론의 분석을 단순히 과거의 정리에 남겨두지 않고 포스트민주주의 시대에 필요한 통일담론의 재구성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는 점이다. 발표자의 주장처럼 평화와 통일이 대립되는 것이 아니고, 통일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다. 또한, 이에 기초해 통일국가의 내용은 기존의 국가를 더욱 민주화하는 방향으로 채워야 한다는 주장에도 이견을 달 수 없다.

우리 시민사회는 이미 그런 방향에서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90년대부터 통일담론의 중요한 축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북핵 위기, 한반도 전쟁위기 등의 위기담론은 동북아 경제공동체, 교류·협력, 평화협정과 종전선언 등의 담론과 맞물려 평화담론으로 확장되고

있다. 통일담론보다 평화담론이 확장되고 있는 것은 정권의 성격변화와 몇 차례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통일담론의 주도권이 시민사회에서 국가(정부)로 넘어간 점, 시민사회의 다원화²로 인해 통일담론을 둘러싼 불필요한 남남갈등이 재현된 점, 진보정당 운동을 비롯해 사회운동 전반이 쇠퇴하고 주변화 된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급진운동의 점진적 약화는 거대담론의 지배적 효과를 약화시켜 그동안 부수적인 의미로만 이해하던 사회 의제들과의 수평적 연계성을 강화시킬 계기가 되고 있다. 이 계기를 잘 활용한다면 “민주주의를 더욱 심화시켜 통일국가의 내용을 채우는 과정”이 될 담론 간 등가사슬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발표문에는 크게 강조되지 않았지만, 분단체제가 우리 민주주의에 미친 부정적 영향은 절대적이다. 온전한 평화의 도래는 통일담론은 물론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심화하는 작업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평화-통일을 위한 다양한 시도와 민주주의 심화는 그래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2 토론자는 시민사회의 다원화가 새로운 가치와 지향이 출현하게 된 상황만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존에는 국가체제에 결합되어 있던 것이 시민사회로 진출하게 된 상황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2003년을 즈음해 활성화되기 시작한 보수적·극우적 시민운동의 출현이다.

03

학계의 통일담론

분단문제 해결, 통일, 평화의 관계설정을 중심으로

홍석률

성신여자대학교 사학과 교수

토론

허 은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교수

김동택 서강대학교 국제한국학과 교수

1. 머리말

사회학자 박명규는 통일담론과 통일연구의 주체를 정부, 언론, 시민 단체, 학계로 나누었는데, 실제 통일담론에서 “전문가나 학술적 담론의 힘이 여전히 부분적이고 보조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통일연구가 외양상 학문적 틀을 지니면서도 실제로는 시민 사회 담론과 정부정책을 홍보하거나 뒷받침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이것은 다시 시민사회의 바람직한 소통과 정책의 효과적 수립에도 기대만큼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다”¹고 지적했다.

통일론, 남북관계, 북한, 한반도 주변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 등 한반도 분단문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연구들은 결코 적지 않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문적 차원의 연구들이 모두 ‘통일담론’을 형성할 만큼, 소수 전문가 집단을 넘어 학계 전반적으로 의제를 형성하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력을 형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글에서 학계에서 발표된 한반도 분단문제 해결과 관련된 전문적 연구들을 모두 망라하여 분석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불가능하다. 따라서 ‘통일담론’을 학계에서 발표된 글 중에 분단문제를 보는 전반적인 새로운 시각과 관점을 정립하거나, 분단문제의 해결 또는 통일로 가는 과정의 기본 원칙과 방향, 또는 방법론을 제시한 연구에 한정하여 살펴보려 한다. 물론 분단문제에 대한 연구는 그 어떤 것이든 통일담론

1 박명규, 『남북경계선의 사회학』, 창비, 2012, 219-220쪽

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다만 여기서는 그 연결성이 매우 직접적이고, 연구의 영향이 소수 전문가 집단만이 아니라, 학계 전체, 또한 사회적으로 파장을 미칠만한 것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려 한다.

통일담론의 추이와 지형을 학계에 국한시켜 분석한 연구는 놀랍게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가장 근접한 연구로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 연구단이 기획한 『통일담론의 지성사』가 있는데, 이 책은 학계보다는 훨씬 큰 범위의 ‘지성계’를 다루었기에 김구, 조봉암 등의 정치인까지 포함되어 있다. 학계 인사로는 리영희, 강만길, 백낙청, 송두율 등의 통일담론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각 개인들 차원의 통일론을 분석하는 데 그치고, 학계의 전반적인 통일담론의 추이와 지형을 보여주지는 못하였다.² 최근에는 통일담론보다는 평화담론이 강조되는 추세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몇몇 연구소의 기획으로 통일론, 통일담론을 다룬 연구들이 나왔다.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공동 기획한 『한반도통일의 재구상』, 북한연구학회가 기획한 『통일논쟁』 등의 연구가 학계의 통일담론을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³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도 학계의 통일담론에 대한 전반적인 조망과 분석은 진행되지 못했다. 본고에서는 학

2 김성민, 박민철, 박영균, 이병수, 이순웅, 이승환, 전병준, 정진아, 조배준(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기획), 『통일담론의 지성사』, 패러다임, 2015

3 이수훈, 조대엽 편(고려대학교 민족문제연구원,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공동기획), 『한반도통일론의 재구상』, 선인, 2012; 박순성 편저(북한연구학회 기획), 『통일논쟁: 12가지 쟁점, 새로운 모색』, 한울, 2015

계의 통일담론을 분단문제의 해결, 통일, 평화의 관계 설정을 중심으로 분석하려 한다.

학계를 포함하여 한국사회의 통일담론은 전반적으로 탈냉전과 민주화가 동시 진행된 1990년대를 거쳐,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전환점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는 중이다. 과거에는, 특히 1980년대까지의 냉전시기에는 통일과 평화, 분단문제의 해결과 통일 과업은 거의 구분되지 않았다. 통일문제의 해결이 곧 평화문제의 해결이었고, 분단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 당연히 남북통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탈냉전을 거쳐, 21세기에 접어들어 일시적으로나마 남북 대화가 비약적으로 개선되면서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 통일과 평화가 구분되거나 분리되기 시작했고, 분단문제 해결이 단지 남북한의 정치적 통합(통일)만을 의미하지는 않는 별개의 영역으로 설정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남북의 정치적 통합도 1민족 1국가 형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연합도 통일의 초보적 단계로 이야기되는 등 좀 더 복합적으로 사고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 글에서는 학계의 통일담론을 분단문제 해결의 핵심을 무엇으로 설정하며, 분단문제 해결과 남북의 정치적 통합(통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아울러 통일과 평화의 관계를 어떻게 보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려 한다. 학계의 통일담론이 아무래도 다른 부문의 그것보다는 훨씬 논리적으로 정교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구분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데 상대적으로 유용함이 있을 것이다.

학계의 통일담론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근

대화, 선진화 등 국가발전을 중심으로 통일을 보는 견해이다. 둘째는 1민족, 1국가를 강조하며 민족 중심적 통일을 강조하는 견해이다. 강만길의 분단시대론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셋째는 분단문제의 해결과 통일을 구분해보는 견해이다. 분단문제의 해결을 단순히 민족통일 차원이 아니라 분단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조성된 분단체제 등 분단의 질곡을 극복하거나 해체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강조하는 유형이다. 백낙청과 창비 그룹의 분단체제론, 기타 탈분단론 등의 입장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학자들의 남북한 정치적 통합(통일)에 대한 견해는 그 내부에 다양성이 있다. 마지막 유형은 통일문제와 평화문제를 완전히 분리하여 남북의 평화공존을 주장하거나, 나아가 남북한이 서로 상대방을 공식적으로 주권국가로 승인하는 양국체제를 형성하자는 주장이다. 이를 통일에 반대하는 담론이나 평화담론으로 분류하여 통일담론과 무관한 것으로 배제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주장도 분단문제 해결에 또 다른 기본 방향과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아 넓은 의미의 통일담론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학계의 논의를 활성화하고, 통일담론의 지형을 좀 더 넓게 파악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모두 일단 남북한이 평화공존을 이루고, 통일은 그 이후의 가능성 중에 하나로 열어두자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통일의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충분히 통일담론에 포함시켜 살펴볼 여지가 있다.

2. 선진화와 통일담론

1) 보수 학자들의 국가 중심적 통일담론

한국의 보수 세력은 기본적으로 ‘민족’보다는 ‘국가발전’, ‘국가이익’을 강조한다.⁴ 따라서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근대화, 선진화에 초점을 두고, 통일은 그 이후의 문제로 유보하는 경향이 있었다. 박정희 정부 시기부터 이른바 ‘선건설 후통일’을 강조했고, 1987년 6월민주화운동 이후에는 선진화를 국가발전의 목표로 내세우며 같은 맥락에서 ‘선선진화 후통일’을 주장하기도 한다.⁵

독일의 보수 집단은 ‘독일 민족’을 강조하고, 동독이 주장한 2민족 2국가론을 반박하고, 동독을 명시적으로 별개의 국가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의 우파 세력들은 민족보다는 국가를 절대적으로 강조하다 보니 심지어 우파임에도 ‘탈민족주의’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한다. 일부 보수적 성향의 학자들은 통일이라는 목표 자체에 대해서도 매우 회의적인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다.⁶

한국의 보수는 기본적으로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 하의 통일

4 최완규, 「통일담론의 두가지 패러다임: 국가담론인가 민족담론인가?」, 박순성 편저, 『통일논쟁: 12가지 쟁점, 새로운 모색』, 2015

5 안병직, 「대한민국의 성취를 토대로 해야만 통일도 실현가능해진다」, 『한국논단』 216권, 2007

6 이영훈, 「민족사에서 문명사로의 전환을 위하여」, 임지현, 이성시 엮음, 『국사의 신화를 넘어서』, 휴머니스트, 2004, 95-96쪽

을 선호한다. 즉 단일한 국가로의 통일을 강조한다. 이들의 통일론은 기본적으로 “북한과의 공존”을 고려하지 않고, 대등한 차원의 협상과 통합을 선호하지 않는다.⁷ 보수적인 학자들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북한은 남한과 함께 협상과 타협을 통해 통일을 달성해가는 주체가 아니라 남한이 통일을 주도하고, 북한은 그 대상으로 설정된다. 따라서 통일은 비정상적인 “북한을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규정된다. 한국의 보수는 ‘빠른 통일’보다는 ‘바른 통일’을 강조한다. 여기서 ‘바른 통일’은 자신들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고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질서를 북한이 수용하여 정상국가화 되는 과정에서 달성되는 통일을 의미한다.⁸

보수 학자들의 통일담론은 기본적으로 기존 남한의 체제에 북한의 주민과 영토를 흡수하는 통일을 상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방식과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들 대부분은 통일을 이야기할 때 북한의 정상국가화, 또는 북한만의 개혁을 말하지만, 북한이 스스로 잘못된 체제를 개선할 가능성, 북한 스스로 변화할 가능성은 매우 낮게 본다.⁹ 따라서 통일의 실현 가능성 자체를 그리 높게 설정하기도 어렵고,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도 말하

7 박현선, 「한국사회의 보수화와 통일담론」, 통일연구원 봄 학술회의, 2008, 47쪽

8 김학노, 김두현, 「햇볕정책 이후 통일담론의 지형」, 『한국과 국제정치』 제29권 3호, 2013, 57-59쪽

9 위의 글, 57쪽

기 어렵다.

통일의 전망과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동서독 사례를 들어 흡수통일에 따르는 비용문제를 걱정하며, 적극적인 통일 노력에 반대하거나 유보하는 경우도 많다. 예컨대 박성조는 민족통일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남한과 북한이 과거에 한 국가를 이루었던 한 민족이었던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같은 가치와 문화를 공유하는 한 민족 공동체인가를 묻는다면 그 대답은 명백히 갈라져있다.¹⁰

그는 동서독 사람들이 통일 이후 양자가 얼마나 다른지 깨닫고 반목했음을 지적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토록 달라져 있는데 통일이 도대체 왜 필요한 것인가?”라고 반문한다. 서독에 비해 한국은 경제력이 훨씬 약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흡수통일은 “남북이 함께 망하는 길이다”라고 주장한다.¹¹

남주홍은 북한 핵개발과 한반도 정세를 분석하는 책에서 이렇게 강조한다.

¹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통일정책연구팀(박성조), 『남과 북, 뭉치면 죽는다』, 2005, 랜덤하우스중앙, 29쪽, 이 책 머리말은 박성조가 작성하였는데, 자신을 ‘필자’로 표현하고 있으며, 여러 서울대 행정대학원 조교들이 이 책을 만드는 데 참여했다고 쓰고 있다.

¹¹ 위의 책, 30-32쪽

통일을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분단 60년이 넘어 이제 사회인성적으로 서로 ‘다른 민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핵으로 무장한 북한은 결코 우리의 통일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른’ 통일이지 ‘빠른’ 통일이 아니다.¹²

남주홍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는 상태에서 “북한과 우리가 꿈꾸는 ‘바른 통일’은 없다!”는 것이 엄연한 적대적 분단현실이라고 주장한다. 그러하기에 평화체제와 통일을 논하기보다는 “현존 휴전체제를 평화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¹³

그러나 일부 보수학자들은 보수적 통일담론의 기본 내용을 공유하면서도 통일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기도 한다. 예컨대 김태우는 통일의 편익은 생각하지 않고, 통일비용만 걱정하는 태도를 비판하며, 흡수통일보다는 남북한의 “점진적 상호동화를 통한 합의 통일”을 주장한다. 그러나 그도 기본적으로 남한이 주도하는 통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 입각한 통일을 주장한다. 통일이란 “실패한 체제가 성공한 체제를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이다.¹⁴

12 남주홍, 『통일은 없다』, 랜덤하우스중앙, 2006, 7-8쪽

13 위의 책, 266-267쪽

14 김태우, 『북핵을 넘어 통일로』, 명인문화사, 2012, 306-309쪽. 김태우의 합의통일과 흡수통일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합의통일이란 북한의 체제와 생활수준이 남한과 비슷하게 되는 과정을 거듭한 끝에 남한주도의 통일에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흡수통일이란 북한 정부와 체제가 작동을 중단하거나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게 되어 남한이 북한의 체제와 국가기능을 평화적으로 흡수하는 것을 의미한다”(304쪽)

2) 선진화 통일론

보수 학자의 통일담론 중에 상대적으로 가장 구체적이고, 정교한 것으로 박세일이 ‘한반도 선진화재단’ 등의 활동을 하며 제시한 ‘선진화 통일론’을 들 수 있다. 이 통일론 역시 국가 중심적 통일론이고, 북한만의 변화를 강조하는 통일론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수적 인사들이 근대화, 선진화라는 국가발전의 목표와 통일을 완전히 분리하여, 선 근대화 후통일, 선선진화 후통일을 주장하는 데 반해, 박세일은 두 과제를 연결시킨다. 그는 한국이 명실상부한 일류 선진국가로 도약하려면 통일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즉 선진화와 통일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진행되는 과정으로 본다. 이 점은 충분히 주목될만하다.

박세일은 1860년 경부터 지난 150년 동안 우리의 시대적 과제는 ‘근대적 국민국가’ 만들기였다고 본다. 그런데 남한은 산업화를 거쳐 민주화까지 달성하여 근대적 국민국가를 성공적으로 수립하였지만, 북한은 그렇지 못했다고 진단한다.¹⁵ 이는 기본적으로 남한은 정상국가, 북한은 비정상국가로 보는 시각으로 다른 보수적 인사들의 시각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그는 일반적인 근대 국민국가에서 일류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차원의 통합은 필수적이라고 본다. 이에 통일의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통일은; 필자) 또한 단순히 남한체제의 북한으로의 지리적 확장이

¹⁵ 박세일, 『21세기 한반도의 꿈, 선진통일 전략』, 21세기북스, 2013, 10쪽

어서도 크게 부족하다. 우리가 추구하는 선진화 통일은 기존의 남한과 북한과는 크게 다른 질적으로 한 단계 높은, 새로운 '선진 국민국가', 새로운 '선진 민족국가'를 만드는 작업이어야 한다.¹⁶

인용문에서 보는 것처럼 박세일은 선진화 통일을 남북한 모두 질적으로 한 단계 높은 단계로 도약하는 과정으로 설정한다. 박세일은 통일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흡수통일에 반대하는 경향을 비판하고,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할 때 이를 대비할 계획도 갖고 있어야 하고, 여기에 대한 준비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평화공존론을 “북한 동포의 고통을 외면하고 그 해결을 지연시키는 지극히 비도덕적인 주장”이라고 논박한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등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대해 “도대체 자유의 체제와 비자유의 체제, 심하게 표현하면 노예의 체제가 어떻게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까?”라고 반문한다.¹⁷

박세일은 선진화통일의 과정을 4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를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그 타당성 여부를 접어두고 말하자면, 아무튼 보수 진보를 망라해 학계의 통일론 중에 가장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한다.

선진화 통일 1단계는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북한 개혁개방 세력이 등장하여 정책을 전환하고, 비핵화가 이루어지는

16 위의 책, 68쪽

17 위의 책, 75쪽, 276쪽, 279쪽

단계이다. 2단계는 1국가 2체제의 남북통합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박세일은 1국가, 즉 남북을 통일한 국가를 이야기하나 이 국가가 단일국가인지, 국가연합인지, 연방제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다만 2단계에서는 국가적 통합을 이루되 북한은 하나의 특구로 지정되어, 노동은 물론 자본의 이동도 일정 부분 통제하면서 북한의 경제적 자생력을 기르고, 나아가 대규모 사유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한다. 3단계는 1국가 1체제를 기본 틀로 하는 단계이다. 북한의 경제체제가 남한에 통합되고, 정치적 통합, 즉 북한의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마지막 4단계는 선진통일국가의 단계이다. 이렇게 근대화된 남한의 체제를 기반으로 하고, 사실상 남한의 주도하에 남북통합이 달성되면, 새로운 단일 헌법을 채택하고, 남북의 모든 주민이 참여하는 자유민주적 선거를 통해 의회와 정부를 새롭게 구성하고, 명실공히 새로운 일류 선진국가로 도약한다는 것이다.¹⁸

박세일의 4단계 통일론도 남북한이 모두 통일의 주체로 설정되어 있지는 않다. 이미 산업화되고 민주화된, 근대 국가를 완성한 남한이 통일을 주도하고, 북한이 남한의 체제를 수용하는 쪽으로 '정상화'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특히 2단계에서 1국가 상태인데도 북한 지역을 "특구"로 설정하여 별도 관리한다는 것은 일종의 "내부 식민지"의 설정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맨 마지막 단계이기는 하지만 남북한 주민이 동등하게 참여하여 헌법을 만들고,

18 위의 책, 110-131쪽

새로운 국가로 도약한다고 주장한 것은 여타의 보수 인사들의 통일담론과는 다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박세일의 통일론은 아무튼 통일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나름대로 보수적 정치집단 및 언론과는 차별화될 만한 내용과 구체성을 갖춘 보수 학계의 통일담론이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3. 분단시대론과 통일민족주의

1) 데탕트와 북한국가론, 원형적 분단체제론의 대두

1960년 4월 혁명 직후 민간 통일논의와 통일운동이 분출했지만, 일부 학자들이 중립화 통일론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하는 것 외에 여기에 별다른 참여를 하지 못했다.¹⁹ 또한 민간 통일운동은 1961년 발생한 5·16쿠데타로 말미암아 짧게 끝났고, 그 후에는 정권의 탄압과, 지식인의 무관심 속에서 한동안 민간 차원에서는 통일 논의가 이어지지 못했다. 한국사회의 개혁적, 진보적 지식인 또는 학자들이 본격적인 통일담론을 전개했던 것은 1970년대 초부터였다고 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 등 데탕트 국제정세 속에 전개된 남북대화와 「7·4 남북공동성명」이 물론 큰 영향을 미쳤다.

1970년대 데탕트 국면에서 제기된 통일과 관련된 발언 중에 이후

¹⁹ 홍석률, 『통일문제와 정치, 사회적 갈등: 1953-1961』,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학계의 통일담론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것은 천관우가 제기한 ‘복합국가론’과 장준하 등이 이야기한 초기적이고 원형적인 형태의 ‘분단체제론’을 들 수 있다. 두 주장은 후술할 ‘분단시대론’ 만큼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했지만, 이후 전개된 통일담론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요소가 있다. 또한 강만길의 ‘분단시대론’이 대두하는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분석이 필요하다.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직후인 1972년 7월 20일 천관우는 재야 민주화운동 단체가 개최한 통일문제에 대한 공청회에서 ‘복합국가’라는 단어를 꺼내었다. 그는 7·4 공동성명에 대한 여론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지는데, 한쪽은 이런 좋은 기회가 다시는 없을 것이니 빨리 통일해보자는 견해가 있고, 반면에 아무리 통일이 중요해도 자유민주주의를 버릴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입장 차이를 해결할 처방으로 “남은 남대로, 북은 북대로 행동을 하면서 한 덩어리의 국가형태”를 이루어보자며 ‘복합 국가’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그는 복합국가가 처음에는 국가적 통합력이 미약할 것이지만, 점차 이를 제고하여 단일국가로 가면 된다고 주장하였다.²⁰ 천관우는 독일의 경우 1민족 1국가를 달성하기보다는 전유럽의 통합에서 살 길을 찾는 움직임이 있으나, 한국은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단일민

20 천관우, 「민족통일의식의 구상」, 『다리』 9월호, 1972. 천관우는 비슷한 시기인 1972년 7월 31일 YMCA 식당에서 개최된 학술토론회의 토론자로 참여하여 같은 내용을 발언하였다(천관우, 김동길, 선우휘, 양호민, 안병무, 유세희, 백기완, 김도현, 최형성, 정해숙, 김용준, 계훈제, 법정, 장준하, 함석헌, 『민족통일의 구상』1, 『씨알의 소리』 1972년 8월호)

족의 재통합”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 여건에서 곧바로 단일 국가로 가기 어렵기에 복합국가를 제안하는 것이며, 이는 “두개의 상이한 정권이 있는 그대로 결합해서 한 국가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다. 그 사례로 미국 초기의 13개 주연합이나 19세기 독일연방과 같은 이른바 국가연합(confederation), 현재의 미국과 소련의 연방제(federation) 등을 들었다.

천관우의 주장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남북한이 복합적으로 하나의 나라로 통합될 수 있다는 상상력을 발휘한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지성계에서 복합국가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확산되지 못했다. 북한은 1973년부터 과도적 고려연방제를 주장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연합, 연방제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간다는 것은 특히 유신체제 하의 분위기 속에서 쉽지 않았다.

「7·4 남북공동성명」은 현실 비판적 지식인들에게 통일에 대한 희망을 크게 고무시켰지만, 그로부터 3개월 만에 계엄령이 선포되고 한국정치사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치체제인 유신체제가 수립되었다. 한편 북한에도 동시에 「사회주의 헌법」으로의 개헌이 있었고,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이 후계자로 등장하였다. 또한 남북대화를 계기로 남북한의 체제경쟁은 군사, 정치, 경제, 외교 모든 방면에서 더욱 치열해지고, 남북의 집권세력은 이를 활용하여 더 억압적인 정치체제를 수립하는 양상을 보였다.²¹

21 홍석률, 『분단의 히스토리-공개문서로 본 미중관계와 한반도-』, 창비, 2012; Ria

당시 현실 비판적 지식인들은 이러한 상황을 겪으면서 남북한 분단이 장기화되고, 또한 집권층이 이를 활용하여 권력을 유지하면서, 분단 상황이 하나의 구조 또는 체제를 형성해 가고 있다는 발상을 하게 되었다. 이에 구조화, 체제화된 분단이 남북한의 정치, 사회, 문화 및 일상에 크고, 지속적이며, 깊숙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관점에서, ‘분단체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장준하였다.

장준하는 이승만 정부의 북진통일론 등에도 동조한 바 있고, 4월 혁명 때 민간 통일논의와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도 여기에 비판적이었다.²² 그러나 장준하는 「7·4 남북공동성명」 직후 발표된 「민족주의자의 길」이라는 글에서 “모든 통일이 좋은가? 그렇다. 통일 이상의 지상 명령은 없다.”라는 통일지상주의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발언을 했다. 이러한 언급에는 통일과 민족주의를 절대화하는 요소가 물론 투여되어 있지만, 한편으로는 분단문제를 단순히 하나의 민족이 두 개의 나라로 나뉘어 있는 현상으로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외세와 한반도 내부의 집권세력이 상응하여 형성한 하나의 체제로 간주하는 사고의 단초를 보여주고 있다. 장준하는 여기서 다음과 같이 “내가 상응한 분단체제”를 이야기했다.

Chae, *Making the Cold War Their Own: Inter-Korean Relations, 1971-1976*,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for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5

22 조배준, 「장준하, 통일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성민 외, 앞의 책, 2015, 89-101쪽

세계사의 이와 같은 새로운 모순이(동서 냉전체제; 필자) 우리 민족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이 새로운 외세에 의한 민족의 양분이란 것을 분명히 깨닫지 못하고, 이를 권력장악의 조건으로 이용한 일부 신생권력층에 의하여 안에서, 밖에서 강요한 양분체제에 대응하였다. 통분스러운 일이지만 이렇게 민족은 양분되었고, 통일을 갈망한 민중의 염원은 현실적인 힘을 얻지 못하고 내외가 상응한 분단체제에 묶여 들어가지 않을 수 없었다.²³

여기서 “양분체제”, “분단체제”는 한반도의 안과 밖의 문제가 상응하여 조성된 어떤 체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여기서 ‘밖外’이라 함은 외세의 작용인데 “외세에 의한 민족의 양분”이라는 표현에서 보이듯이 한반도의 분단은 강대국의 작용 속에서 이루어졌지만, 또 한편으로는 ‘안內’에서 내응하는 “권력장악의 조건으로 이용한 일부 신생권력층”이 작용한 결과라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장준하는 “통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민주의 일이다”라고 규정하고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생활과 직결된 것이다”라고 했다. 그리고 구체적 개념을 제시하지는 못했지만 “복합국가”, 또는 “복합적 사회체제”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²⁴

1970년대 초 일련의 국면들을 함께 경험했던 다른 비판적 지식인

²³ 장준하, 1972, 「민족주의자의 길」, 『씨알의 소리』 9월호, 57쪽. 일찍이 박순성도 이 글에 나타나는 ‘분단체제’론을 주목하였다(박순성, 「한반도 분단과 대한민국」, 이병천, 홍윤기, 김호기 엮음, (참여사회연구소 기획), 『다시 대한민국을 묻는다』, 한울, 2007, 98-99쪽)

²⁴ 위의 글, 59-63쪽

다수도 통일 과업을 민족 통합만이 아니라 민주화 또는 사회개혁과 결부시켜 사고했다. 함석헌은 “민족통일은 혁명입니다. 이것은 민족 혁명만도 사회혁명만도 아니요 그보다도 더 크고 더 새로운 혁명입니다”라고 했다. 천관우도 “통일은 민족사에서 몇 번이나 있을까 말까 하는 큰 변혁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²⁵ 김도현은 “통일 반대 체제를 통일 지향적 체제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통일은 단순한 휴전선의 폐지가 아니라 보다 가치있는 사회로의 지향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러기에 통일의 “가능성이 현실성을 획득하는 과정은 곧 창조적 실천과정”이라 했다.²⁶ 한편 백기완은 남북의 집권자들이 “삼팔선의 철책을 자기의 정치적인 집단의 이익을 보장하는 하나의 철책으로 이용했다”고 비판하였다.²⁷ 당시 현실 비판적 지식인들 사이에는 이렇듯 분단이 완전히 구조화, 체제화되어 간다고 보고, 분단문제의 해결을 민주화 및 사회개혁과 결부시켜 보는 경향이 나타났던 것이다.²⁸

²⁵ 함석헌, 「북한동포에게 보내는 편지」, 『씨알의소리』 10월호 1971; 천관우, 김동길 등, 앞의 글, 1972, 43쪽

²⁶ 김도현, 「7·4남북공동성명과 민족재통합의 제문제」, 『씨알의소리』 8월호, 1972

²⁷ 천관우, 김동길 등, 앞의 글, 1972, 54-55쪽

²⁸ 홍석률, 「1970년대 민주화 운동세력의 분단문제 인식-분단시대론과 분단체제론-」, 『역사와 현실』 93호, 2014

2) 분단시대론과 분단극복 역사학

1970년대 말 강만길은 ‘분단시대’론을 주장하여 학계와 시민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강만길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다음과 같이 ‘분단시대’라 규정하였다.

20세기 전반기의 민족사가 식민지통치에서 벗어나는 일을 그 최고의 목적으로 삼은 시대라면, 20세기 후반기 즉 해방 후의 시대는 민족분단의 역사를 청산하고 통일민족국가의 수립을 민족사의 일차적 과제로 삼는 시대로 보지 않을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경우 이 시기는 <분단시대> <통일운동의 시대>로 이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²⁹

강만길은 1945년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시점을 “분단시대”라고 명명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민족통일을 최우선적인 역사적, 시대적 과제로 부각시켰다. 그는 또한 “결국 진정한 의미에서의 근대민족국가의 수립은 앞으로 통일이 이루어질 때 완성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³⁰ 이처럼 ‘분단시대’라는 규정, “통일이 근대의 완성”이라는 명제를 통해 통일의 중요성과 필요성, 당위성을 천명했고, 이는 당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29 강만길, 『분단시대의 역사인식』 창작과비평사, 1978, 15쪽

30 강만길, 김윤수, 이영희, 임형택, 백낙청, 「좌담회: 분단시대의 민족문화」, 『창비』 가을호, 1977, 4쪽

강만길은 ‘분단시대’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민족분열이 본격화하여 동족상잔을 겪고도 사상, 군사, 외교 모든 분야에서 지구상의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극한적인 대립을 나타내어 통일민족 국가 수립은 요원하고 반대로 분단체제가 굳어져만 가는 시기이기도 하다.³¹

여기서도 ‘분단체제’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백낙청이 지적하였듯 현시대를 분단시대로 규정하는 것이 당연하게 수용되는 것은 “분단현실이 상당히 지속성을 띤 것임을 인정”하는 것으로,³² 분단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고착화된 어떤 구조와 체제로서 인식되었음을 시사해준다. 그러나 강만길은 분단체제론을 주장한 장준하, 백낙청과는 달리 분단 상황이 우리에게 남긴 역사적 상처, 분단이 남북한의 정치, 경제, 문화, 일상에 미친 질곡에 대해서는 크게 강조하거나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는다.³³ 다만 통일과 그것을 달성할 이념인 ‘통일민족주의’를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강만길의 분단시대론은 기본적으로 1민족 1국가를 추구하는 민족통일이 곧 분단문제의 해결이라고 보는 관점에 기초해 있다. 전형적인 민족주의적 관점의 통일

31 강만길, 앞의 책, 1978, 14쪽

32 백낙청, 『분단체제 변혁의 공부길』, 창비, 1994, 163쪽

33 박민철은 강만길이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충돌이라는 지정학적 요인을 중시할 뿐 식민지배와 분단상황이 우리에게 남긴 역사적 상처를 심도 있게 거론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박민철, 「강만길, 통일민족주의와 대등통일론」, 김성민 외, 앞의 책, 2015, 200쪽).

론이라 할 수 있다.

분단시대론은 복합국가론, 원형적 분단체제론 등 동시대 비판적 지식인들의 통일논의를 한 단계 끌어올려 구체화하기보다는 통일민족주의만을 주로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물론 복합국가론 및 초기적 분단체제론을 주장했던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통일된 단일한 민족국가의 건설이 곧 분단문제와 평화문제의 해결책으로 보았다. 그러나 복합국가론은 국가 형태를 좀 더 느슨하고, 복합적인 차원에서 사고한 측면이 있었다. 장준하 등의 원형적 분단체제론 역시 단일한 민족국가를 추구했지만, 그 강조점을 역사, 문화, 혈통적 민족공동체의 복원보다는 분단체제가 발생시킨 현실적인 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두었다. 같은 시기에 통일과 분단문제 해결을 강조했지만 여기에는 미묘한 초점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박민철은 강만길의 통일담론이 민주 대 반민주, 통일 대 반통일, 자유 대 부자유, 냉전주의 대 탈냉전주의 같은 평면적 대립구조가 통사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는 “결국에는 분단 원인들의 다층적이고 중층적인 분단구조를 체계적으로 성찰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지적하였는데,³⁴ 1970년대 비판적 지식인의 통일담론의 맥락에서도 이러한 지적은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강만길은 역사학의 현재성을 강조하며, 분단시대의 역사학은 분단 극복에 기여해야 한다면서 통일민족국가의 수립에 공헌할 수 있는 사

34 위의 글, 205쪽

실史實을 연구 개발하고, 통일지향적 민족주의론을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³⁵ 그는 이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추구하는 좌우합작 운동을 통일민족국가 수립에 공헌할 수 있는 사실로 강조하였다. 그 스스로도 좌우연합체적 독립운동 조직인 조선민족혁명당을 연구한 저서를 서술하기도 했다.³⁶

강만길의 분단극복 역사학에 대해서는 소재주의적 편향이라는 비판이 있었다.³⁷ 또한 강만길이 통일민족국가의 건설을 온전한 국민국가, 근대의 완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대를 절대화하고, 근대를 필연적으로 통과해야 될 역사적 과정으로 사고하는 근대주의적 편향이 아니냐는 비판도 일찍부터 나왔다.³⁸ 그러나 김성민과 박영균이 이미 지적했듯이 강만길의 분단시대론은 “분단과 통일문제를 학적 대상으로 초점화했다는 점”에서 큰 기여를 했다.³⁹ 역사학은 물

35 강만길, 앞의 책, 1978, 22쪽

36 강만길, 『조선민족혁명당과 통일전선』, 화평사, 1991

37 노태돈, 「해방 후 민족주의사학론의 전개」, 『현대한국사학과 사관』, 일조각, 1991

38 정창렬 교수는 강만길의 저서 『분단시대의 역사인식』에 대한 서평에서 저자가 한국 근대사를 19세기 후반기의 국가주의적 내셔널리즘 단계에서, 20세기 전반기 국민주의적 내셔널리즘의 단계, 20세기 후반기의 민족주의적 내셔널리즘의 단계로 이야기하는 것을 지적하며, “이러한 파악의 입장은 한국 근대사에서 서유럽 근대사의 발전과정을 발굴하여 그것으로써 그 발전 내용으로 삼는 근대주의의 입장에 결국 직결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다(정창렬, 「역사의 진실과 그것을 보는 눈」, 『창작과 비평』 겨울호, 1978).

39 김성민, 박영균, 「인문학적 통일담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 강만길, 백낙청, 송두율의 통일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범한철학』 제59집, 2010, 512쪽

론이고, 학계 전반적으로 분단문제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일깨운 측면은 충분히 주목될 필요가 있다. 강만길의 학설을 직접적으로 수용하거나 활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한국 현대사 연구가 좌우합작을 강조하고, 분단과 한국전쟁의 발생 원인, 한미관계 등에 상대적으로 많이 집중하고, 분단문제를 중시하게 된 것은 분단시대론의 문제의식이 직간접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사학계가 남북교류 차원에서 일찍부터 남북역사학자협의회를 만들고 오랜 기간 동안 만월대 공동발굴 같은 역사 교류 작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게 된 것도 역사학의 실천성 확보라는 강만길의 화두와 무관할 수 없다.

1990년대 이후로 접어들면서 분단문제를 1민족 1국가의 건설에 초점을 두어 접근하거나, 통일민족주의를 강조하는 흐름은 수그러들고 학계에서 분단시대론의 영향력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분단을 현 시대의 역사적 과제로 설정하는 논리와 민족주의적 입장의 통일론은 현재에도 대중적 차원에서는 여전히 강력하고, 중요한 흐름으로 남아 있다.

4. 분단체제론과 탈분단론

1) 분단체제론과 복합국가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남한의 민주화 이행,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와 탈냉전 등 일련의 거대한 전환 국면을 거치면서 1990년대부터

는 통일담론에도 커다란 변화가 나타났다. 1980년대까지는 통일담론과 평화담론이 분리되지 않았고, 분단문제의 해결은 당연히 한반도에 민족통일국가를 수립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를 거쳐, 특히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라는 통과점을 거치면서 통일담론의 지형은 크게 바뀌었다.

탈냉전을 통과하면서 많은 학자들이 분단문제의 해결을 통일로 단순화 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화되고, 체제화 된 분단상황이 조성한 각종 질곡과 장애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분단문제 해결의 핵심으로 강조했다. 즉 분단 상황속에서 조성된 질곡과 장애를 해결하는 작업과 통일 과업을 구분하고, 전자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나타났던 것이다. 이러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는 남북한의 정치적 통합, 즉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분단문제 해결의 초점을 형식적 민족적, 국가적 통합보다는 분단이 조성한 문제들을 극복하는 것에 맞춘다는 공통성은 있다. 또한 평화와 통일을 분리시켜 보기보다는 그 연관관계를 강조하는 것도 특징이다.

분단체제라는 단어와 아주 원형적 형태의 개념들은 1970년대 초부터 나타나고 있었지만, 이를 하나의 이론적 틀로 정립한 사람은 백낙청이었다. 그는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 민주화 이행과 탈냉전이라는 상황을 통과해가면서 분단체제론을 주장하고, 여기에 대한 글과 저작을 오랜 기간 동안 발표했다.

백낙청은 남북 두 분단국가 체제를 아우르는, 한반도 차원에서 작동하는 분단체제라는 개념을 제기하였다. 분단체제는 세계체제의 하

위체제로서 남북한의 역사발전을 제약하는 체제로 기능하며, 그 밑에 남북의 두 분단 국가체제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분단체제는 세계체제와 현존하는 남북의 두 국가체제를 매개하는 중간 항으로 기능한다는 것이었다.⁴⁰

많은 논자들이 간과하고 있지만 백낙청의 시각이 갖는 중요한 특징은 일단 한반도의 문제를 그 자체로 고립시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구적으로 작동하는 세계체제와 연결시켜 본다는 것이었다. 그가 민족 문학을 항상 세계문화과의 연관 속에서 이야기하는 맥락과 유사하다. 세계체제가 한반도에 현존하는 두 개의 국가체제에 규정력을 발휘한다고 할 때, 한반도에는 분단 상황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분단체제라는 매개 항을 설정하지 않고는 이를 제대로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백낙청의 다음과 같은 언급은 이러한 논리를 잘 보여주고 있다.

남북한이라는 두 개의 하위체제의 경우에는 그들이 세계체제에 참여하고 세계체제의 규정력이 그 내부에 작동하는 방식이 일정하게 구조화된 분단현실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단체제라는 또 하나의 체제 개념이 끼어들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분단체제

40 분단체제론의 문제의식과 논리를 집약한 글로는 다음 글들을 들 수 있다. 백낙청, 『분단체제의 인식을 위하여』, 『분단체제 변혁의 공부길』, 창작과비평사, 1994; 백낙청, 『개혁문화와 분단체제』, 『흔들리는 분단체제』, 창작과비평사, 1998; 백낙청, 『분단체제와 참여정부』; 『다시 지혜의 시대를 위하여』; 『통일작업과 개혁작업』; 『한반도식 통일 현재진행형』, 창작과비평사, 2006

라는 중간 항을 생략하고서는 남북 어느 한 쪽 체제의 작동방식도 제대로 규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⁴¹

즉 세계체제가 한반도의 “구조화된 분단현실”을 통해 현존하는 남북 두 국가의 체제에 규정력을 미치기 때문에 구조화된 분단현실, 즉 분단체제에 대한 인식 없이는 두 국가의 관계(남북관계)뿐만이 아니라, 두 국가 내부의 동향도 이해하기 어렵고, 나아가 세계와 한반도가 맺고 있는 관계도 설명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백낙청은 분단체제를 “현존 자본주의 세계체제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작동하는 구체적인 양상”으로 규정한다.⁴² 다른 통일담론과 비교해볼 때 백낙청의 시각이 갖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세계, 한반도, 남북의 분단국가의 층위를 구분해보면서도 이를 분절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시켜 그 관계를 나름대로 포괄적으로 설명하려 한다는 것이다.

백낙청은 남북분단이 장기화되면서 베트남과 독일과는 달리 한반도에는 분단체제라고 할 만한 것이 자리잡게 되었으며, “남북분단이 일정한 체제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말은 분단이 고착되면서 분단구조가 문자 그대로 남북 주민 모두의 일상생활에 그 나름의 뿌리를 내렸고 그리하여 상당수준의 자기 재생산 능력을 갖추었다는 말이 된

41 백낙청, 위의 책, 1998, 21-22쪽

42 백낙청, 앞의 책, 2006, 46쪽

다.”⁴³고 지적한다. 이렇게 뿌리내린 분단체제는 민주화, 자주화 등 남북한의 역사발전에 장애를 조성하고, 쉽게 전쟁은 나지 않지만 남북의 적대적 대립관계를 장기적으로 지속시키며, 남북의 지배집단은 이러한 적대적 대립을 활용하여 기득권을 유지하는 교묘한 공생관계에 있다고 본다. 이에 분단체제의 대립 항은 남과 북이 아니라 “남과 북의 수구세력이 극과 극으로 대치하고 있으면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교묘한 공생관계에 있는 그러한 체제와, 공생관계에서 소외되고 그로부터 고통을 받는 남북한의 다수 민중, 이 둘이 대립을 이루고 있다.”라고 본다.⁴⁴ 따라서 분단문제의 해결(분단극복)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분단체제를 해체하는 것이고, 설사 남북이 흡수통일 등의 방식으로 통일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진정한 분단극복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분단체제론은 분단체제의 해체와 극복에 초점을 두지만, 그렇다고 남북의 정치적 통합은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은 결코 아니다. 분단체제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남북이 하나의 정치공동체로 통합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본다. 백낙청은 자신이 통일을 주장하는 이유는 1 민족 1국가를 달성하자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는 타율적으로 분단되었기에 전쟁을 거치고, 분단체제가 반민주적이고 비자주적인 상태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체제이기 때문에 “한반도에 사는 특정 단일민족의 경우 단일 국가를 갖는 것이 한반도 주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고

43 백낙청, 앞의 책, 1998, 18쪽

44 위의 책, 156-160쪽

세계체제의 억압성을 완화 또는 철폐하는 데도 필요”⁴⁵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한반도에서 국가나 국민의 이름으로 자행되어온 온갖 폭력과 만행들이 상당부분 식민지시대와 분단시대를 통틀어 한번도 온전한 국민국가를 갖지 못한데 기인”했다고 본다.⁴⁶

백낙청은 통일의 결과로 한반도에서 만들어지는 국가가 현실적으로 근대 국민국가(nation-state)의 틀을 아주 벗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그러나 통일된 국가는 단일한 국민국가라기보다는 훨씬 복합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복합국가(compound state)가 될 것이며, 다민족사회를 향해 개방된 국가여야 한다고 주장한다.⁴⁷ 여기서 ‘복합’이라는 측면은 단지 이질적인 체제를 그 안에 내포하고 있다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과정상의 복합성을 또한 의미하기도 한다.

백낙청은 현실적으로 볼 때 남북한 국가연합을 달성하는 것을 “1단계 통일”의 달성으로 본다. 그는 한반도 통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우리 한반도의 경우는 남북연합 건설만 하더라도 광범위한 시민참여에 의해 돌이킬 수 없는 과정으로서 한걸음 한걸음씩 나아간 결과이기 때문에, 남북연합 단계만 가면 그 다음 단계의 더 긴밀한 연합

⁴⁵ 백낙청, 앞의 책, 2006, 83쪽

⁴⁶ 위의 책, 179쪽

⁴⁷ 위의 책, 83쪽, 178쪽

이나 연방국 형태 또는 단일국가 형태로 진전하는 것은 불가피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과서상의 의미로는 통일이 아니지만 저는 그것을 1단계 통일이라고 불러도 무방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⁴⁸

국가연합은 교과서적으로 이야기하면 통일이라 할 수는 없지만, 한반도에서는 1단계 통일로의 의미를 지닌다고 보는 것이다. 백낙청의 이러한 주장은 그가 임동원과 마찬가지로 통일을 어느 순간에 도달할 수 있는 목표로 생각하기보다는 지속적인 과정⁴⁹으로 보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통일은 어느 한 순간에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기에 통일의 실제 모습과 내용은 과정의 진행에 따라 달라지는, 역시 복합성을 내포하게 된다. 백낙청은 남북연합이 남북한 사이의 격차와 그동안 쌓아온 적대감 등의 조건을 고려할 때 유럽연합보다도 더 느슨한 형태가 될 것이라고 본다. 또한 남북연합의 달성 과정도 어떤 확실한 단계 설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남북정상회담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총리급 고위급 회담이 잘 진행되어 남북의 교류가 다방면적으로 활성화되면 “이렇게 한동안 진전된 후에 ‘이 정도면 남북연합이 됐다고 선포하자’고 해서 ‘어느 날 문득’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⁵⁰

48 백낙청, 『어디가 중도며 어째서 변혁인가』, 창비, 2009, 207-208쪽

49 임동원, 『피스 메이커』, 중앙북스, 2008, 733-742쪽

50 백낙청, 앞의 책, 2006, 20-21쪽

그런데 이러한 주장에서 일단 제기되는 의문은 백낙청이 남북통일의 형태도 과정보다 매우 느슨하고 복합적인 것으로 보는데, 분단을 설명하는 방식은 “분단체제”라는 다분히 자본주의 체제, 공산주의 체제처럼 어떤 단단하고 자기완결적인 구조적 틀을 연상시키는 단어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분단체제론에 대해 사회과학자들은 과연 이 체제가 “자기완결성이 있는가?”라고 주로 의문을 제기해왔다.⁵¹ 여기에 대해 백낙청은 세계체제, 분단체제, 분단 국가체제가 모두 체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중 가장 자기완결적인 체제는 두 분단국가 체제이고, 가장 느슨한 것이 분단체제라 이야기한다. 이에 분단체제라 할 때 영어로도 system보다는 더 느슨하고 포괄적인 regime으로 쓰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라고 한다.⁵² 그런데 이렇게 느슨한 개념을 ‘체제’라는 자기완결적인 구조를 연상시키는 단어로 표현함으로써 여러 혼란이 일어난다.

또한 한반도의 분단 상황은 백낙청의 주장대로 “흔들리고”, “통일은 현재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는 상태로 계속 진행된 것이 아니라 최근 30년 동안 북한 핵 위기가 풀리지 않으면서 남북관계가 교착되고, 분단이 장기화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하기에 남북의 비대칭성도 더욱 심화되고, 따라서 분단체제의 규정력이 남북에 과연 유사

51 손호철, 『분단체제론의 비판적 고찰』, 『창작과 비평』 겨울호(86호), 1994

52 백낙청, 『2013년 체제 만들기』, 창비, 2012, 139쪽. 여기서 백낙청은 영어로 ‘division regime’이라 하면 분단 정권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일부러 ‘division system’으로 사용했다고 했다.

하게 미칠 수 있는지도 의문이 제기된다. 분단체제가 아주 교묘한 것이어서 규정력도 비대칭적으로 행사할 수도 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비대칭성이 너무 현저하게 벌어진다면 한반도 차원에서 규정력을 행사하는 분단체제를 설정하는 것의 의미와 타당성도 잠식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성복합통일론

연성복합통일론은 2010년대 초 박명규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을 거점으로 한 일부 학자 그룹이 주장한 통일론이다. 2010년 관련 저서가 출간되고, 2012년에 개정판이 나왔으며,⁵³ 박명규는 같은 해 출간한 개인 저서를 통해 연성복합통일론과 그 핵심적인 논리인 “비대칭적 분단국체제론”을 주장하였다.⁵⁴

한반도 분단을 틀을 지어 설명할 때 백낙청은 ‘분단체제’라 했고, 이종석은 ‘분단구조’로 표현했으며, 박명림은 ‘분단질서’⁵⁵라고 했다. 박명규는 “남북관계를 두 분단국 간에, 또 그를 둘러싸고 있는 특수한 체제로 개념화하는 것은 가능할 뿐 아니라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분단체제론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용어를 “분단국체제”로 사용한

⁵³ 박명규, 이근관, 전재성 외, 『(개정판)연성복합통일론: 21세기 통일방안구상』,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2

⁵⁴ 박명규, 앞의 책, 2012

⁵⁵ 이종석, 『한반도 평화통일론』, 한울, 2012, 23-61쪽; 박명림, 「분단질서의 구조와 변화: 적대와 의존의 대쌍관계 동학, 1945-1995」, 『국가전략』 제3권 1호, 1997

다.⁵⁶ “분단체제”와 “분단국체제”라는 용어는 유사하기는 하지만 후자가 좀 더 한반도에 존재하고 있는 두 분단국가의 실체성과 고유성, 양자 사이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연성복합통일론자들은 남북한이 1980년대 말까지는 서로 대등한 수준이었지만, 탈냉전 이후 비대칭성이 심화되었음을 지적한다.⁵⁷ 남북한은 동서독과 달리 분단 당시 영토와 인구, 사회발전 면에서 상대적으로 대등하게 갈라졌지만, 1990년대 탈냉전, 지구화의 과정에서 그 격차가 아주 심각하게 벌어졌다는 것이다. 이에 세계체제 내에서 남북한의 위상에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분단체제론과 같이 분단의 규정력이 남북에 대칭적으로 동등하게 작용하거나, 분단체제 극복에 있어 남북한이 대등하게 함께 변화하고 동등한 차원에서 참여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박명규는 남북한의 비대칭성을 이야기하면서 국제적 지위와 경제력보다는 남북한 시민사회의 차이를 강조한다. 남한은 “민간 부분이 활성화되고 자율적인 시민사회적 주체들이 적극 활동하는 공간”, 즉 자율적인 시민사회나 경제영역이 존재하지만 북한은 그렇지 못하고, 이 차이를 도외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남북관계는 정치적, 군사적 차원에서는 대칭성이 강하면서도 사회적, 경제적 차원에서는 이

56 박명규, 앞의 책, 2012, 77-85쪽

57 박명규, 이근관, 전재성 외, 앞의 책, 10쪽

질성과 상호격차가 심화되면서 한쪽 방향으로의 쏠림이 나타나는, 기우뚱한 균형관계를 그 속성으로 한다.”라고 지적한다.⁵⁸ 또한 그는 이러한 비대칭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자존심과 책임성, 그들이 져야 할 부담을 경시하지 않으면서도 여러가지 면에서 동원할 자원을 훨씬 많이 보유한 남한의 역할과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⁵⁹

연성복합통일론자들도 분단체제론자들과 마찬가지로 분단문제의 해결(분단극복, 탈분단)과 통일을 구분은 하지만 완전히 분리하지 않는다. 분단극복에 초점을 두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통일과 함께 가는 것으로 본다. 박명규는 기본적으로 남과 북을 민족사적 차원에서만 바라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국제관계론에서 다루는 일반적인 국가 관계처럼 손쉽게 두 국가론을 수용하는 것은 더더욱 곤란하다”고 본다. 그도 기본적으로 “제아무리 적대성이 강화되어도 민족적 성격을 부정할 수 없고, 제아무리 국가성이 강화되어도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성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야말로 남북한 특수관계의 본질”이라 생각하며 통일을 강조한다.⁶⁰ 다만 통일로 가는 경로 및 통일의 결과를 분단체제론자들 보다 더 유연하고(연성적) 복합적으로 보는 것이 특징이다.

58 박명규, 앞의 책, 2012, 92쪽

59 위의 책, 365쪽

60 위의 책, 95쪽, 97쪽

박명규는 연성복합통일론에서 ‘연성’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연성성이란 일차적으로 통일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여러 변화와 타협, 재구조화에 필요한 조정과 조율이 강압적이거나 일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소통과 합의에 의해 부드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속성이다.⁶¹

즉 여기서 연성이란 타협과 조정, 소통과 합의를 중시하는 것을 말한다. 미리 어떤 원칙이나 계획을 단단하게 정해놓고 시작하기보다는 다양한 선택과 합의 여지를 두고 통일에 접근해가는 것을 말한다. 또한 통일의 과정에서 국가만이 통일 과정에서 참여하고, 이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능동적인 참여도 상정하는 것이다. 이에 연성은 “통일의 과정은 물론이고 통일체제 자체에 대한 정치적 상상력이 단계적 과정과 자발적인 참여를 중시하는 연성적 성격을 수용”⁶²하는 것을 또한 의미한다고 강조한다.

연성복합통일론은 통일로 가는 경로도 복수로 설정하고, 그때그때마다 다양한 주체들의 타협과 협의 속에서 최선의 방안을 선택해나가면 된다는 입장이다. 통일의 경로로 세가지 유형을 제시한다. 첫째는 한국 정부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관철되는 경로로 남북이 국가연

61 위의 책, 360쪽

62 박명규, 이근관, 전재성 외, 앞의 책, 21쪽

합을 거쳐 단일한 국가로 통일되는 것이다. 둘째는 단일한 국가로의 통일이 아니라 다원적인 요소들의 통합체가 형성되는 것 자체를 최종적인 통일 상태로 간주하는 경로이다. 즉 남북한 국가연합 같은 것을 중단 단계로 보지 않고, 통일된 상황으로 보는 것이다. 분단체제론자들이 이야기하는 복합국가의 건설과 유사한 경로이다. 셋째는 남북연합 없는 급격한 남북통합이다. 이는 독일통일 방식 같은 것인데,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하고, 북한 주민들이 급격한 통일을 원한다면 남한은 이러한 부담을 감당해야 한다고 본다.⁶³ 강만길의 분단시대론도, 백낙청의 분단체제론도 모두 남북이 대등하게 주체가 되는 합의에 의한 통일, 점진적인 통일을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연성복합통일론자들은 남한이 주도하는, 급속한 통일도 경로의 하나로 설정한다. 따라서 연성복합통일론은 분단체제론과 많은 것을 공유하면서도, 남한의 보수적인 집단의 입장을 상대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수용하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다.

한편 통일의 결과로 수립된 남북한을 통합한 공동체도 3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첫째는 민족공동체로 남북이 국민국가로 통합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는 연성적 남북연합체로, 국가연합 같은 구도인데 경제부문 통합을 중심으로, 사회문화적 통합을 점진적으로 병행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는 복합 네트워크로, 남북 분단문제를 해결하고 통합된 공동체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주변 지역이 모

63 위의 책, 21-22쪽

두 포함되는 광역의 지역공동체로 형성되는 경우이다.⁶⁴ 과거 서독의 진보적인 집단은 동서독 사이의 독일통합을 뛰어넘는 유럽통합을 주장했는데, 이 경우가 유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연성복합통일론은 2010년대 초에 형성된 통일론으로 분단체제론과는 20년 정도의 격차가 있다. 그동안의 한반도와 그 주변의 상황변화, 통일담론의 변화를 의식해서 남북한 사이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비대칭성을 명확하게 고려하고, 통일로 가는 경로와 결과적으로 만들어지는 정치공동체의 유형을 복수화 한 것은 나름대로 의미있는 발상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연성복합통일론은 완전히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했다기보다는 분단체제론의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는 차원에 머물렀고, 이에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분단체제론 만큼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였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2012년 무렵 한번 제기된 후 지속적으로 논리적으로 보완되거나 풍부화되면서 이어지기보다는 논의 자체가 중단된 인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분단체제론과 분단극복론(탈분단론) 사이에, 한국의 보수와 진보 사이에 절충을 시도하는 통일담론이었다는 인상을 준다.

3) 탈분단론과 일상과 문화적 실천 속의 분단극복

‘탈분단론’으로 명명될 수 있는 또 다른 차원의 통일담론은 분단체제론, 연성복합통일론과 마찬가지로 분단문제 해결의 초점을 분단이 장

64 위의 책, 22-24쪽

기화되면서 조성된 질곡과 장애들을 해결하는 데 둔다. 그러나 분단 체제론, 연성복합통일론과는 달리 남북한의 정치적 통합, 즉 통일을 특별히 강조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후술하게 될 평화공존론, 양국체 제론과는 달리 통일과 평화를 완전히 분리하지는 않고, 일정한 연관성을 인정한다. 탈분단론은 사실 그 내부에 결코 단일하지 않는 다양한 입장이 있고, 근거하고 있는 이론도 서로 다르다. 그러나 이들 그룹의 공통적 특징은 ‘분단체제’ 같은 거대한 구조를 설정하고 문제 해결을 도모하기보다는 밑으로부터의 일상적, 문화적 실천을 통한 분단 극복을 강조하는 경향이다. 이는 탈구조주의 철학에 일정한 영향을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탈분단론’으로 명명할 수 있다. 이러한 통일 담론들은 주로 2000년 이후에 새로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권혁범과 조한혜정과 이우영 등이 주도하는 ‘남과 북: 문화통합’ 학술연구팀은 통일보다는 ‘탈분단’을 강조한다. 권혁범은 “통일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라고 본다. 한반도 주민들의 복지, 행복, 자유, 평화, 인권, 환경 등의 가치가 위협받기 때문에 통일이 필요한 것이지만 통일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통일 대신 평화를 강조하는 사람도 있지만 평화는 너무 광의의 개념이며, 한반도의 특수한 분단 상황에 대한 인식을 부분적으로 반영하는 개념이기에, ‘탈분단’이라는 용어가 적합하다고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탈분단의 목적은 ‘통일 코리아’의 재형성이 아니라 “분단으로 인해 제약되고 뒤떨린 우리 남북한 사회의 다양한 모습들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그것의

극복”을 도모하는 것이라 강조한다.⁶⁵

조한혜정과 이우영 등이 편찬한 『탈분단 시대를 열며』라는 책은 서두에서 연구진들은 “준비 없는 상황에서 난데없이 ‘통일을 당하게 되면’ 큰일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통일된 땅에서 더불어 사는 연습’이라는 이름으로 모임을 갖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 그룹은 획일적인 통일보다는 “공존과 통합을 위한 주체적 걸음”을 시작할 것을 강조한다.⁶⁶ 조한혜정은 기존의 통일 연구와 교육이 체제통합에 치중되고, 사회 통합적 차원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분단은 한반도의 구성원들에게 반공주의, 반제국주의 같은 “무엇을 반대함으로써 정체성을 갖는 형태의 이분법적이고 대립적인 사유의 방식 내지 주체형성”을 강요했다고 보고, 탈분단을 위해 다중적인 정체성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이에 “통일은 결국 경직화된 획일주의 문화를 유연하고 열린 다원주의 문화로 바꾸어 갈 때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며 이분법과 획일주의의 극복을 강조한다.⁶⁷

김성민, 박영균 등이 주도하는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 연구단의 문제의식도 유사한 맥락이다. 이들은 민족적 감정에 호소하는 낭만적 통일론과 정치경제적인 체제통합론을 넘어서 인문학적 통일담론의

65 권혁범, 「통일에서 탈분단으로」, 한신대학교개교60주년기획위원회 편, 『한반도 통일논의의 쟁점과 과제』, 한신대학교 출판부, 2001, 75-79쪽

66 조한혜정, 이우영 엮음, 『탈분단 시대를 열며』, 삼인, 2000, 5-8쪽

67 조한혜정, 「분단과 공존 : 제3공간을 열어가는 통일교육」, 조한혜정, 이우영 엮음, 위의 책, 336쪽, 338쪽, 346쪽, 356쪽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들은 통일이 정치경제적 통합 이전에 보다 더 근본적인 정서, 문화적 삶의 통일이 필요하며, 이것이 “정치, 경제의 통합을 받치는 바탕이자 통일을 진정한 사회적 통합으로 만드는 근본적인 힘이다”라고 강조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통일인문학의 탐구과제로 분단 트라우마와 아비투스의 극복 등을 제시한다.⁶⁸ 이들의 주장도 상부의 정치경제적 체제통합보다는 밑으로부터의 정서, 문화적 삶의 통합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탈분단론자들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한편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을 바탕으로 분단체제를 설명하려는 학자 그룹이 있다. 이들 그룹도 역시 “밑으로부터의 분단극복”, “일상의 정치”, “일상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며 분단을 아래로부터 추적하는 방식”을 강조한다.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은 1980년대에 개발된 이론으로, 애초 과학과 기술을 사회학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시도로 출발하였다. 이 이론은 과학과 기술을 다양한 행위자들이 보다 크고 강한 연결망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산물로 본다. 여기서 행위자는 인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성을 가진 기계, 자본, 생물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 이론은 1990년대에 넘어 오면서 과학기술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현상을 설명하는 일반적 사회이론으로 확장되었고, 다양

68 김성민, 박영균, 앞의 글, 2010

한 분과학문에 널리 활용되었다.⁶⁹ 김환석, 홍민, 김종욱 등은 2011년 『동향과 전망』 83호 특집에서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을 활용하여 분단문제를 분석해보자고 제안하였다. 이 특집에서 홍민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분단질서는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형성된 기억과 행동, 사물의 복잡하고 이중적인 연결망의 형성과 그 효과다. 분단질서는 ‘명사화’된 고정된 실체나 상황이 아니라 끊임없이 연결망의 전략을 수행하는 ‘동사’이며 불확정적이지만 언제나 정상적인 질서로 오인하게 만드는 ‘번역’의 중심을 형성하는 전략이다.⁷⁰

이처럼 분단을 분단체제 등 거대한 구조로 설명하기보다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구성하는 연결망으로 파악하여 보다 유연하게 접근해보자고 주장한다. 홍민은 기존의 분단체제론이 “거시적인 체제 결정론적 시야 속에서 일상의 미시적인 결로 분단이 어떻게 번역되면서 ‘변형’을 거듭해 가는가 하는 일상으로의 전환으로 나아가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분단극복을 위한 남북한 민중의 연대를 위해서 그 이전에 “일상에 스며들어 있는 분단권력의 행위자-연결망

69 김환석, 「행위자 : 연결망 이론에서 보는 과학기술과 민주주의」, 『동향과 전망』, 83호, 2011

70 홍민, 「행위자-연결망 이론과 분단연구: 분단번역의 정치와 ‘일상으로의 전환’」, 『동향과 전망』, 83호, 2011

과 번역을 드러내고 흔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⁷¹ 한편 김종욱은 평화의 댐 사건을 분석하며 “냉전적 질서 또는 연결망이 어떻게 기능했는지를 경험적 접근으로 추적함으로써 새로운 대안 연결망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려고 했다. 그는 평화의 댐 건설을 추진한 행위자-연결망의 형성을 추적하며, 이것이 단기적으로는 연결망 구성에 성공하였지만, 저항을 받아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하는 상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 해체의 과정은 분단에 의한 냉전적 질서를 탈분단의 새로운 동학으로 전환시키는 것에 일정한 힌트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⁷² 그러나 여기서 그 ‘힌트’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풍부한 설명은 미흡하고, 평화의 댐 사건에 대한 경험적 분석이 냉전적 질서의 해체, 탈분단 문제와 이렇게 아무런 매개 없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거론될 수 있는지도 회의적이다.

박순성은 분단체제론을 둘러싼 논쟁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분단을 하나의 구조물, 체제로 이야기하는 것의 한계를 지적하며,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이 “분단현실을 경험적으로 또는 일상생활 속에서 그려내고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는 이론들”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⁷³ 박순성은 이러한 제안을 바탕으로 천안함 폭침을 행위

71 위의 글, 64쪽, 66쪽

72 김종욱, 「냉전의 '이중적 연결망'으로서 '평화의 댐' 사건: 행위자-연결망 이론을 통한 경험적 추적」, 『동향과 전망』, 83호, 2011

73 박순성, 「한반도 분단현실에 대한 두 개의 접근: 분단체제론과 분단/탈분단 행위자-네트워크 이론」, 『경제와 사회』 94호, 2012

자-네트워크 이론을 활용하여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는 천안함 폭침을 북한이 어뢰를 발사하여 우리 해군함을 폭침시킨 사건으로 규정하는 ‘천안함 피격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과정과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며 ‘천안함 사건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진실공방을 벌이는 과정을 추적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그는 분단체제의 불안정성을 강조하였다. 여기서 불안정성을 보이는 이유로 분단체제 하에서 조성되는 지배세력의 교묘한 공생관계가 확인되기는 하지만, 이것이 지배세력의 의도대로 작동되지는 않는다는 것과 워낙 다양한 변수의 행위자들이 등장하기에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양상을 들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먼저, 분단체제의 불안정성을 주목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분단의 행위자-네트워크를 찾아내고 해체시켜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 탈분단은 리바이던과의 운명을 건 한판 승부가 아니다. 오히려 수많은 분단의 행위자-네트워크들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분단체제는 ‘어물어물’ 다른 체제로 바뀔 것이다.⁷⁴

박순성은 기본적으로 분단체제도 결국 하나의 행위자-네트워크라고 주장한다. 물론 이것은 단일하고 거대한 행위자-네트워크가 아니

74 박순성, 「천안함 사건의 행위자-네트워크와 분단체제의 불안정성」, 『북한연구학회보』 제17권 제1호, 2013, 349쪽

라, 분단상황을 구성하는 여러 행위자-네트워크가 다차원적으로 결합되어 형성된 것으로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상생활 속의 실천을 통하여 분단체제를 구성하는 수많은 분단의 행위자-네트워크를 해체해가는 과정에서 분단체제의 해체와 극복을 기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의 연구 방법 상의 특징은 원인과 결과, 즉 인과관계 분석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경험적으로 '서술'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들은 새로운 이론을 소개하고, 그것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는 차원이자 행위자-네트워크의 형성과정을 풍부한 정보와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경험적으로 깊이 있고, 두텁게 서술하는 차원으로는 나아가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방법론의 타당성과 한계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이 이론에 입각한 실질적인 연구의 축적이 우선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여기서 소개한 탈분단론은 현재까지는 새로운 시각과 방법론의 제안 차원에 그치고, 본격적인 통일담론으로 완성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또한 사회적 영향력도 분단시대론, 분단체제론에 비해 아직 제한적이다. 그러나 아래로부터의 일상적, 문화적 차원의 실천을 통한 분단극복론은 21세기 새로운 통일담론의 출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분단문제의 해결을 민족주의적 당위나, 거대담론에 입각한 변혁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젊은 세대들에게 설득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문화적, 일상적 실천을 강조하는 논리가 큰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5. 평화공존론과 양국체제론

1) 통일과 평화의 분리와 평화공존론

민족분단의 과정에서 전쟁을 겪고, 정전 상태에 있는 한반도에서 남북한의 통일은 평화를 정착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생각되었다. 때문에 한동안 통일과 평화의 문제는 분리되지 않았다. 남북의 평화공존을 이야기해도 이를 통일로 가는 여건을 마련하는 과도기 정도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분단 상태가 탈냉전 이후에도 지속되어 장기화되면서 평화와 통일의 간극은 점차 커져갔다.

특히 2000년 남북정상회담의 성사 이후 남북관계가 크게 진전된 것은 역설적으로 통일과 평화의 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남북관계가 개선되자 안보담론이 점차 힘을 잃고 평화담론, 공존담론이 증대하는 양상이었다.⁷⁵ 특히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 격렬하게 전개되었던 ‘범민족대회’ 등 일련의 급진적 통일운동이 대중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가면서 통일과 평화를 분리시켜, 평화공존을 강조하는 견해가 점증하였다.

통일담론보다는 평화담론을 강조하여 남북한 평화공존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로는 최장집을 들 수 있다. 최장집은 한국정치를 분석하며, ‘과도성장국가’, ‘반공주의’ 등 분단문제의 규정력을 누구보

⁷⁵ 정영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이론의 긴장과 현실의 통합」, 이수훈, 조대엽 공편, 앞의 책, 2012

다도 강조해 온 학자였다. 그는 1990년대부터 민족주의적 당위론에 입각한 통일론에 대해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견해를 보였다. 그러나 통일을 목표로 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불가피하다고 보는 편이었다.⁷⁶

2000년대 중반부터 최장집은 평화와 통일을 분리하고 남북의 평화공존을 명확하게 주장하였다. 그는 2004년 발표된 글에서 “남한의 최우선적 대북정책 목표가 통일이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남북한의 평화공존을 강조하였다. 그는 “통일담론은 공격성을 떨 수밖에 없다”고 보고, 이를 목표로 강조할 경우 오히려 평화가 손상될 수 있다고 보았다. 현실적으로 볼 때 두 정치체의 통합 과정에서는 폭력이 수반되기가 쉽고, 통합은 차이를 위계적으로 질서짓는 것을 의미하기 쉽기 때문에 통일을 강조하면 오히려 공격성을 띄어 평화가 훼손되기 십상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판단에는 분단 장기화와 아울러 남북한의 정치, 경제적 수준의 차이가 심각하게 비대칭적으로 벌어졌다는 사실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장집은 “사실상 *de facto*뿐만 아니라, 국제법적 *de jure*으로도 두개의 국가(비록 남북한 관계가 특수한 관계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하더라도)가 한반도 내에 존재하고, 이들 간에 평화적 공존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안된다”

76 「(홍범 길승흠 교수 퇴임기념호)남북해외학자 통일학술회의 회의록: 토론, 『한국정치연구』 제5권 제1호,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1996, 250쪽; 최장집, 「한국 민족주의의 특성」, 최상용 외, 『민족주의, 평화, 중용』, 2007, 31쪽. 이 글은 최장집이 실제 1996년에 작성한 글을 전재한 것이라고 서두에 밝혔다.

다”고 주장하였다.⁷⁷

남북한 평화공존론에 대한 비판은 주로 남북한 분단 상황이 항상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문제였던 만큼, 통일과 평화를 분리할 수는 없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그런데 남북의 통합을 아예 목표로 설정하지 않는 평화공존 주장은 사실상 통일을 포기해서 문제라기 보다는 평화가 질적으로 높은 차원으로 진전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기에 더 문제일 수 있다. 평화는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는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평화 개념은 국제관계, 정치, 경제, 사회 구조에 스며든 폭력(구조적 폭력)까지도 방지하고 해소하는 것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⁷⁸ 평화공존만 강조하는 것은 사실상 이렇듯 구조적 폭력까지도 방지하는 높은 수준의 평화로 가는 것과 배치될 수 있다. 평화가 이렇듯 높은 수준으로 나아가려면 상호 적대적으로 타자화 했던 집단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의 단위로 연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럽인들이 유럽공동체 결성의 가장 중요한 의미로 유럽의 평화정착을 꼽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77 최장집, (박상훈 역음), 『민주주의의 민주화』, 후마니타스, 2006, 216-218쪽, 234쪽. 최장집이 최근 발표한 글은 여전히 남북한 평화공존을 강조하나 이를 명확하게 이분법적으로 통일과 양자택일적 관계로 대비시키지는 않는다. 또한 평화공존을 위해 남한이 독자적인 외교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 보수와 진보 사이에 컨센서스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최장집, 『정치의 공간』, 후마니타스, 2017, 19-76쪽).

78 요한 갈통, (김종일, 정대화, 임성호, 김승채, 이재봉 옮김),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들녘, 2000

2) 양국체제론

최근 김상준은 평화공존론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남북한이 서로 상대방을 국가적으로 승인하고, 외교관계를 맺음으로써 분단문제를 해결하고, 양국체제를 수립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는 ‘코리아 양국체제’의 기본 개념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코리아 양국체제란 대한민국ROK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 두 나라가 주권국가로서 서로 인정하여 공식 수교하고 평화롭게 교류, 협력하는 일민족 이국가의 평화체제, 공존체제이다. 코리아 양국체제는 지난 70여 년 남북 간에 쌓이고 쌓인 적대적 불신을 완화하고 해소함으로써 평화적 통일로 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경로이다⁷⁹

즉 남북의 두 국가가 실질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도 한반도의 두 개의 분단국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별 개의 주권국가로 외교적으로 승인하여 분단 상태를 해소하자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남북한이 상대방 국가의 정당성을 인정할 때, “비로소 각자의 내부에서 상대를 부정하고 적대했던 심리와 제도가 바뀌기 시작한다. 그래야 편지 한 통 오가는 데서 시작해서, 전화가 오가고, 사람이 오가고, 그리고 마음이 오갈 수 있

79 김상준, 『코리아 양국체제: 촛불을 평화적 혁명으로 완성하는 길』, 아카넷, 2019, 33쪽

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한다.⁸⁰ 즉 상호 국가 승인이 있어야 평화도 정착되고, 본격적인 교류도 가능하며, 따라서 두 분단국가가 정통성 경쟁을 하며 적대적으로 대치하는 분단의 핵심적인 질곡도 해소된다는 주장이다.

김상준은 분단을 강렬하게 부정하는 인식, 남북이 하나여야 한다는 당위적인 인식이, 오히려 남북한 사이의 적대적 관계를 조성하고 있다고 본다. 통일의 당위에서 벗어나는 것이 분단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우선적이고, 유용한 조치라는 것이다. 그는 분단을 강하게 부정하는 당위적 사고(분단부정의 당위)가 남북의 적대감을 심화하고, 이것이 분단독재체제를 강화하며, 이로 말미암아 나타난 분단독재체제에 대한 비판의 강화가 다시 분단부정의 당위를 강화하는 순환 구조를 형성해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분단부정의 당위에서 벗어나 남북한이 별개의 국가로 상호 승인하고 평화공존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한다.⁸¹

김상준은 자신이 이러한 생각을 2016년 5월 경부터 대중강연을 통해 주장해왔고, 2016년 말과 2017년 초에 진행된 ‘촛불혁명’을 경과하며 양국체제론이 관철될 수 있는 조건이 본격적으로 형성되었다고 판단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양국체제론에 대한 글을 발표했다고 한다. 그는 1991년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고, 「남북기본

80 위의 책, 34쪽

81 위의 책, 42-45쪽

합의서」가 채택될 무렵에 양국체제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남한 반공세력의 발호, 북한 핵 위기 등의 원인 때문에 무산되었고, 촛불혁명으로 다시 그 기회가 열렸다고 주장한다.

김상준은 남북 두 분단국가의 정식 승인과 수교를 강조하지만 두 국가의 관계에 대해 2민족 2국가가 아닌, 1민족 2국가를 이야기한다. 그는 “양국체제란 일종의 한 민족 두 국가 간의 특수한 관계를 말한다”고 한다.⁸² 남북한이 상대방을 온전한 주권국가로 인정하면서도 같은 ‘민족’으로 간주된다면 이때의 ‘민족’ 개념은 아마도 정치적공동체(국민국가)보다는 혈통이나 역사, 문화의 공통성에 좀 더 치중하여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민족 개념을 이야기하며 분단문제를 두 분단국가가 상호 승인하여 양립하는 형태로 해결한다는 것이 일단 모순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김상준은 양국체제의 형성이 항구적 분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변한다. 서로 분단되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인정해야 통일도 가능하다는 논리에 입각하여 오히려 양국체제는 통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고 강조한다. 그는 양국체제의 수립 이후 남북한이 국가연합으로 가는 것, 단일한 국가로 평화적으로 통일될 가능성도 모두 열어 둘 수 있다고 한다. 그는 양국체제의 수립이 국가연합의 전망을 배척하기보다는 그 “바탕을 깔아준다”고 했다.⁸³ 즉 분단체제

82 위의 책, 38쪽

83 위의 책, 297쪽

론이 국가연합을 중간단계로 하여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진전시키듯, 양국체제를 중간단계로 하여 국가연합으로 가고, 통일로 가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통일의 경로를 설정하는데, 왜 국가연합으로 곧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다른 외국과 마찬가지로 별개의 주권 국가로 인정하는 또 하나의 중간단계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설득력 있는 설명은 없다.

특히 양국체제에 대해 북한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이며, 북한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에 대해 별다른 분석이 없고, 사실 관심도 없어 보인다. 그는 양국체제론이 남한 내에서는 북한을 국가적으로 절대 승인할 수 없다는 보수 반공주의자와 민족통일을 강조하는 사람들로 부터 모두 협공을 받을 것이라 예상하고,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설명을 좀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을 설득하는 문제에 대해 “북측 역시 대한민국의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둔 행보에 굳이 반대하고 나설 이유가 없을 것이다”라고 낙관하기만 한다.⁸⁴ 양국체제론에 따르면 북한은 당연히 분단문제 해결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주체이고, 그것도 남한과 동등한 주체이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분석과 고려 자체가 없는 것은 문제라 아니 할 수 없다.

남한의 경우 김상준이 강조하듯이 독재세력의 재등장 등 부침이 있었지만, 4월 혁명, 6월 민주항쟁, 촛불혁명 등을 거처가며 민주화가 진행되었다. 이 때문에 국가 권력 또는 그것을 쥐고 있는 주류 집

84 위의 책, 157쪽

단이 강요하는 국가정체성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형성되는 대한민국 정체성 같은 것도 형성될 수 있고, 대한민국을 통일로 반드시 가야할 ‘분단국가’, ‘결손국가’, ‘미완성 근대 국민국가’로 보기보다는 일반적인 국민국가로 볼 수 있는 시각과 인식이 점차 강해질 수도 있다. 그런데 북한에서도 역시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까?

동서독의 경우 서독 사람들, 특히 서독의 개혁적, 진보적 인사들은 동독 사람들도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독일 민족 정체성에 집착하기보다는 국가 정체성, 즉 동독 정체성을 갖고 있을 것이라 가정하고, 동서독 국가연합론, 또는 2민족 2국가로의 공존 등을 분단문제 해결책으로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나 막상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될 무렵 드러난 것은 동독의 평범한 일반 대중들은 동독 정체성 같은 것을 거의 형성하지 못하고 있었고, 오히려 독일민족 정체성을 강하게 표출했다는 것이다.⁸⁵ 그리고 동독의 평범한 주민들의 사고와 행동이 누구도 쉽게 예상해보지 못한 갑작스러운 통일을 추동하는 밑바탕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물론 동서독과 남북한의 상황은 큰 차이가 있지만, 남한과 북한을 이처럼 완전히 대칭적으로 사고하는 방식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기보다는 허구적일 가능성이 높다.

김상준의 주장은 기존 통일담론의 기본 틀을 파괴하고, 획기적인 발상전환을 보여주고, 논란을 일으켰다는 면에서는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상당히 실험적인 제안이며, 현재 그 논리적 틀을

85 이동기, 「독일 분단과 통일과정에서의 '탈민족' 담론과 정치」, 『통일과 평화』 2호, 2009

형성해가는 과정에 있는 주장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제기된 지 3년 밖에 되지 않는 시점이기 때문에 양국체제론이 얼마나 유의미한 파장을 일으키고, 많은 동조 집단을 형성할지는 아직 미지수라 할 수 있다.

6. 맺음말

학계의 통일담론을 정리하면서 “시간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는 명제를 새삼 실감한다. 한반도의 분단문제를 생각할 때 이것이 장기지속하고 있다는 현실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 한반도에서는 1민족 2국가의 분단 상태만이 장기지속하는 것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짧은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양측의 100만이 넘는 군대가 적대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딱 막힌 분단 상태, 다소 평온한 적대적 대치와 전쟁 위기를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유동적 분단 상황 등도 여전히 장기 지속하고 있다. 반공주의, 반제국주의 등 어디에 반대함으로써 형성되는 분단 정체성도 여전하다.

분단의 장기지속은 일정한 효과를 발생시켜, 새로운 문제들을 계속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 따라서 통일담론은 단순히 과거에 발생한 분단문제만이 아니라 이것이 장기화되면서 새롭게 주조된 새로운 분단문제의 해결도 도모해야 한다. 남북한 체제경쟁이 핵심 쟁점이 되었던 냉전시기에는 기존 자신의 국가체제를 확산하려는 국가중심의

통일론과 남북한의 대등한 협상과 참여를 강조하는 민족통일론의 경합이 분단문제 논의의 핵심일 수 있었다. 1970, 80년대까지 분단국가주의와 통일민주주의의 대립 구도를 강조하는 ‘분단시대’론이 나름대로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이유가 있었다. 탈냉전과 민주화가 겹쳐지는 1980년대 말 1990년대의 시기에는 통일과 민주화 및 사회개혁 문제가 분단문제 해결의 중심 화두가 되었다. 분단체제론은 여기에 부응하는 통일담론이었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에도 정상회담 등 여러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북한 핵 위기로 말미암아 분단상황의 근본적인 개선은 계속 지체되었다. 또한 탈근대, 탈민족, 탈구조주의적 경향이 점증하는 세계적 변화 속에서 분단체제론과 같이 구조와 체제의 변혁을 강조하는 논리의 설득력은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탈냉전과 민주화 이행 이후에도 분단이 장기지속되면서, 분단은 남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구조 차원만이 아니라 한반도 주민의 일상과 의식에도 더 깊숙이 스며들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0년 이후부터는 분단 체제나 구조의 극복논리보다는 일상과 문화적 실천 속에서 탈분단을 추구하는 새로운 흐름이 대두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분단체제론이 주로 제기한 세계체제의 규정력, 분단상황이 남북한의 정치, 경제 구조에 영향을 미치며 자주적, 민주적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들이 여전히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과거의 문제가 해결되고 새로운 문제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과거의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에서 분단의 장기화로 새로운 문제가 더해지는, 전형적으로 비동시성의 동시성을 보이는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개인적

이며, 일상적이고, 문화적인 실천이 수많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미해결된 분단과 연관된 국제관계, 정치, 경제적 문제의 해결과 어떻게 연결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가 향후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아마도 향후 학계의 통일담론은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것과 지구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의 관계를 설정하고 설명하는 데,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계의 통일담론을 정리하면서 드는 소감은 여태까지 학계에서 제기된 통일담론들이 너무 구체성이 부족하고, 추상적이라는 것이다. 대체로 문제제기와 방향제시 정도이지, 학문적인 구체성과 정교함을 충실히 확보하는 방향으로 좀처럼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하기에 주장과 제안에 그치는 글들이 반복적으로 생산되고 있고, 학계의 통일담론과 전문적 차원의 연구도 별다른 연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

학문적으로 좀 더 구체화되고 정교한 결과물을 축적하려면 관련 자료 및 정보의 수집, 정리가 일단 필수적이다. 각종 연구기관이 분단 문제에 대해 여러 연구 프로젝트를 많이 수행하고 있지만, 연구의 기초적인 토대를 구축하는 작업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이다. 학계가 통일담론의 형성에서 기대되는 역할을 하려면 분단문제 해결과 관련된 국내외 자료 및 정보를 널리 수집하고 정리, 보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냉전사를 포함한 국제관계에 대한 분석, 북한의 실상에 접근할 수 있는 좀 더 다양한 정보의 체계적 축적, 국가 연합 등의 구상 등을 구체화 할 수 있는 관련 사례의 수집과 연구, 각

국 분단 상황과 그 극복과정에 대한 역사적 정리 등이 필요하다. 아울러 민족, 국민국가, 냉전, 제국/식민문제를 분석하고, 분단상황을 설명하는 데 참조할 수 있는 각종 이론적인 작업도 필요하다. 이와 같이 학술적 기초 토대를 구축하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학계가 통일담론의 형성에 기대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만길, 김윤수, 이영희, 임형택, 백낙청, 「좌담회: 분단시대의 민족문화」, 『창비』 가을호, 1977
- 강만길, 『분단시대의 역사인식』 창작과비평사, 1978
- 강만길, 『조선민족혁명당과 통일전선』, 화평사, 1991
- 권혁범, 「통일에서 탈분단으로」, 한신대학교개교60주년기획위원회 편, 『한반도 통일논의의 쟁점과 과제』, 한신대학교 출판부, 2001
- 김도현, 「7·4남북공동성명과 민족재통합의 제문제」, 『씨알의소리』 8월호, 1972
- 김상준, 『코리아 양국체제: 촛불을 평화적 혁명으로 완성하는 길』, 아카넷, 2019
- 김성민, 박민철, 박영균, 이병수, 이순응, 이승환, 전병준, 정진아, 조배준,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기획), 『통일담론의 지성사』, 패러다임, 2015
- 김성민, 박영균, 「인문학적 통일담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 강만길, 백낙청, 송두율의 통일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범한철학』 제59집, 2010
- 김종욱, 「냉전의 ‘이종적 연결망’으로서 ‘평화의 댐’ 사건: 행위자-연결망

- 이론을 통한 경험적 추적, 『동향과 전망』, 83호, 2011
- 김태우, 『북해를 넘어 통일로』, 명인문화사, 2012
- 김학노, 김두현, 「햇볕정책 이후 통일담론의 지형」, 『한국과 국제정치』 제 29권 3호, 2013
- 김환석, 「행위자-연결망 이론에서 보는 과학기술과 민주주의」, 『동향과 전망』, 83호, 2011
- 남주홍, 『통일은 없다』, 랜덤하우스중앙, 2006
- 노태돈, 「해방 후 민족주의사학론의 전개」, 『현대한국사학과 사관』, 일조각, 1991
- 박명규, 이근관, 전재성 외, 『(개정판)연성복합통일론: 21세기 통일방안구상』,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2
- 박명규, 『남북경제선의 사회학』, 창비, 2012
- 박명림, 「분단질서의 구조와 변화: 적대와 의존의 대쌍관계 동학, 1945-1995」, 『국가전략』 제3권 1호, 1997
- 박민철, 「강만길, 통일민족주의와 대등통일론」, 김성민 외, 『통일담론의 지성사』, 패러다임, 2015
- 박세일, 『21세기 한반도의 꿈, 선진통일 전략』, 21세기북스, 2013
- 박순성, 「한반도 분단과 대한민국」, 이병천, 홍윤기, 김호기 역음, (참여사회연구소 기획), 『다시 대한민국을 묻는다』, 한울, 2007
- _____, 「한반도 분단현실에 대한 두 개의 접근: 분단체제론과 분단/탈분단 행위자-네트워크 이론」, 『경제와 사회』 94호, 2012
- _____, 「천안함 사건의 행위자-네트워크와 분단체제의 불안정성」, 『북한연구학회보』 제17권 제1호, 2013
- _____, 편저 (북한연구학회 기획), 『통일논쟁: 12가지 쟁점, 새로운 모색』, 한울, 2015
- 박현선, 「한국사회의 보수화와 통일담론」, 통일연구원 봄 학술회의, 2008
- 백낙청, 『분단체제 변혁의 공부길』, 창작과비평사, 1994

- _____, 『흔들리는 분단체제』, 창작과비평사, 1998
- _____, 『한반도식 통일 현재진행형』, 창작과비평사, 2006
- _____, 『어디가 중도며 어째서 변혁인가』, 창비, 2009
- _____, 『2013년 체제 만들기』, 창비, 2012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편집부, 「(홍범 길승흠 교수 퇴임기념호)남북
해외학자 통일학술회의 회의록: 토론」, 『한국정치연구』 제5권 제1호,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1996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통일정책연구팀(박성조), 『남과 북, 뭉치면 죽는
다』, 2005
- 손호철, 「분단체제론의 비판적 고찰」, 『창작과 비평』 겨울호, 1994
- 안병직, 「대한민국의 성취를 토대로 해야만 통일도 실현가능해진다」, 『한
국논단』 216권, 2007
- 요한 갈통, (김종일, 정대화, 임성호, 김승채, 이재봉 옮김),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들녘, 2000
- 이동기, 「독일 분단과 통일과정에서의 ‘탈민족’ 담론과 정치」, 『통일과 평
화』 2호, 2009
- 이수훈, 조대엽 편(고려대학교 민족문제연구원,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공
동기획), 『한반도통일론의 재구상』, 선인, 2012
- 이영훈, 「민족사에서 문명사로의 전환을 위하여」, 임지현, 이성시 엮음, 『국
사의 신화를 넘어서』, 2004
- 이종석, 『한반도 평화통일론』, 한울, 2012
- 임동원, 『피스 메이커』, 중앙북스, 2008
- 장준하, 「민족주의자의 길」, 『씨알의 소리』 9월호, 1972
- 정영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이론의 긴장과 현실의 통합」, 이수훈,
조대엽 편, 『한반도통일론의 재구상』, 선인, 2012
- 정창렬, 「역사의 진실과 그것을 보는 눈」, 『창작과 비평』 겨울호, 1978
- 조배준, 「장준하, 통일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성민 외, 『통일담론의 지

- 성사』, 패러다임, 2015
- 조한혜정, 「분단과 공존-제3공간을 열어가는 통일교육-」, 조한혜정, 이우영 엮음, 『탈분단 시대를 열며』, 삼인, 2000
- 조한혜정, 이우영 엮음, 『탈분단 시대를 열며』, 삼인, 2000
- 천관우, 「민족통일의식의 구상」, 『다리』 9월호, 1972
- 천관우, 김동길, 선우휘, 양호민, 안병무, 유세희, 백기완, 김도현, 최형성, 정해숙, 김용준, 계훈제, 법정, 장준하, 함석헌, 『민족통일의 구상』1, 『씨알의 소리』 8월호, 1972
- 최완규, 「통일담론의 두가지 패러다임: 국가담론인가 민족담론인가?」, 박순성 편저, 『통일논쟁: 12가지 쟁점, 새로운 모색』, 2015
- 최장집, (박상훈 엮음), 『민주주의의 민주화』, 후마니타스, 2006
- _____, 「한국 민족주의의 특성」, 최상용 외, 『민족주의, 평화, 중용』, 2007
- _____, 『정치의 공간』, 후마니타스, 2017
- 함석헌, 「북한동포에게 보내는 편지」, 『씨알의소리』 10월호, 1971
- 홍민, 「행위자-연결망 이론과 분단연구: 분단번역의 정치와 '일상으로의 전환」, 『동향과 전망』, 83호, 2011
- 홍석률, 『통일문제와 정치, 사회적 갈등: 1953-1961』,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 _____, 『분단의 히스테리-공개문서로 본 미중관계와 한반도-』, 창비, 2012
- _____, 「1970년대 민주화 운동세력의 분단문제 인식-분단시대론과 분단체제론-」, 『역사와현실』 93호, 2014
- Ria Chae, *Making the Cold War Their Own: Inter-Korean Relations, 1971-1976*,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for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5

토론

허은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교수

1.

‘분단시대 역사인식’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해방전후사의 인식” 1권이 발간된 1970년대 말과 비교하면, 현재 남·북 현대사연구, 남북관계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 연구는 놀라울 정도의 진전을 이루었다. 또한 여전히 제약이 있으나 일반인도 관심만 있다면 긴급조치9호 시대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자유롭게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통일교육원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자료에 접근할 수 있고, 남북관계 이슈가 생길 때 마다 정부기관, 연구소, 개별 연구자들이 홍수처럼 쏟아내는 다양한 정세분석 보고서와 논문을 접하며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발표자 홍석률 교수는 분단 및 통일 관련 연구와 논의 여건이 크게 진전되었음에도, 최근 학계의 ‘통일담론’이 기존과 달리 사회뿐만 아

나라 학계 안에서조차 관심을 끌지 못하는 현실을 주목한다. 이러한 현실은 ‘분단극복, 통일, 평화’라는 과제와 대면하고 있는 모든 연구자들에게 연구 방향과 내용 그리고 소통에 대한 근본적인 재성찰이 필요함을 제기한다.

발표자는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출발점을 기존 학계에서 제기된 통일담론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잡았다. 이 글은 시기적으로 크게 ‘분단문제의 해결과 통일과업이 분리되지 않았던 냉전시대’와 ‘분단문제의 해결을 정치적 통합으로 동일시하지 않게 되는 탈냉전 이후 시기’로 나누고, 검토대상을 새로운 시각의 제기와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논의들로 한정하여 면밀한 평가와 정리를 해주고 있다. 또한 학계의 통일담론에 대한 전반적인 조망과 분석을 시도하여 논의들 지형을 그려준 점과 ‘분단문제 해결, 통일, 평화’ 삼자의 관계설정을 기준 삼아 통일담론을 크게 4가지 유형으로 제시한 것도 이 글에서 주목할 부분이다.

‘담론’으로서 영향력과 관련하여 발표자는 기존 논의들이 학계와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며 통일담론을 형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장기적 측면에서 새롭게 구조되는 분단문제의 해결까지 도모’한데 있다고 보고 있다. ‘분단시대론’이나 ‘분단체제론’이 큰 영향력을 가졌던 이유가 1970, 80년대를 관통한 분단대립 구도의 극복을 시도하고, 1980, 90년대 탈냉전과 민주화가 겹치지며 새롭게 대두되

는 분단문제 해결을 중시화두로 끌어들었기 때문이라고 파악한다.

발표자는 분단 상황의 근본적인 개선 없이 지속되는 현실에서 탈근대, 탈민족, 탈구조주의적 경향이 점증하며 구조와 체제의 변혁을 강조하는 논리가 설득력을 상실해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또한 분단의 장기지속으로 분단이 한반도 주민의 일상과 의식에 더욱 깊게 뿌리내리며 학계의 관심이 분단 체제나 구조의 극복 논리보다는 일상과 문화적 실천 속에서 탈분단을 추구하는 새로운 흐름이 대두되는 상황을 주목한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발표자는 학계의 분단문제, 통일과 평화를 둘러싼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두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일상에서 구조까지 아우르려는 학계의 노력이다. 즉, “향후 학계의 통일담론은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것과 지구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의 관계를 설정하고 설명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다. 발표자는 구조와 일상 그 어느 한 측면에 강조점을 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누적되고 중첩된 상황에서 이들의 ‘관계’를 조명하며 논의를 진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둘째, 통일담론이 학문적인 정교함과 구체성을 충실히 확보하는 것이다. 발표자는 새로운 담론 형성을 모색한 논의들이 실상 기존 논의를 반복하는데 그치거나 관련 분야 전문연구들을 흡수하며 연계 관계를 형성하지도 못하는 상황을 비판하며, 이러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불식시키고 학계가 통일담론의 형성에서 기대되는 역할을 하려면 ‘분단문제 해결과 관련된 국내외 자료 및 정보를 널리 수집하고 정리, 보급하는 작업’ 즉, 냉전사를 포함한 국제관계에 대한 분석, 북한의 실상에 접근할 수 있는 좀 더 다양한 정보의 체계적 축적, 국가연합 등의 구상 등을 구체화 할 수 있는 관련 사례의 수집과 연구, 각국 분단 상황과 그 극복과정에 대한 역사적 정리 등이 필요하며, 아울러 민족, 국민국가, 냉전, 제국/식민 문제를 분석하고, 분단 상황을 설명하는데 참조할 수 있는 각종 이론적인 작업도 필요함을 역설한다.

2.

이 발표문은 기존 통일담론의 시대적 맥락과 논의 구도 그리고 같은 유형에 속한 논의들 간의 차이점까지 정리하여 학계가 통일 관련 논의에서 생산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실천적 의의가 크다. 더불어 분단문제 및 통일 관련 학계의 논의가 향후 학문적인 정교함과 구체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과 이를 위한 체계적인 정보 및 자료의 수집이 필요함을 제기한 점에 대해 크게 공감한다.

발표자의 시기구분 방식이나 ‘분단문제 해결, 통일, 평화’의 관계

설정을 유형화의 기준으로 삼은 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 세 키워드는 냉전·분단시대와 탈냉전·분단시대를 관통하며 통일담론의 핵심적인 의제였기 때문에 이들 관계설정을 중심으로 한 통일담론 분석은 전체적인 논의의 지형과 변화를 드러낼 수 있다. 다만, 1970년대부터 최근까지 대두된 학계의 통일담론을 ‘분단문제 해결, 통일, 평화’라는 세 키워드를 중심으로 분류할 때, 통일담론의 변화 기초와 통일담론을 이끈 학자들의 문제의식 변화를 충분히 포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첫째, 학계의 ‘통일담론’ 논의의 구도를 규정한 요인, 달리 말하면 발표자가 제시한 ‘분단문제 해결, 통일, 평화’ 삼자관계설정을 규정한 요인에 관한 것이다.¹ 이 글에서는 냉전과 데탕트 그리고 탈냉전이란 시대적 변동 상황을 중시한다. 이에 대해 이견이 없으나, 학계의 냉전·분단체제 연구와 인식도 더불어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학계의 냉전·분단 연구와 이해는 일정한 지속성과 경향성을 가지며 ‘시대적 변동’과 일치하기보다 지체 또는 괴리되었고, 이는 통일담론의 학문적

1 이 글의 주제에서 벗어난 것이지만 ‘담론’의 형성과 지속 또는 영향력을 주목할 때 ‘공론장’의 형성과 통일담론의 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기존 ‘담론’의 형성은 특정 학자의 역할도 매우 컸지만, 이들 학자들과 대중을 연계한 대표적인 잡지들(사상계, 창비)의 역할도 컸다고 볼 수 있다. 학술적 논의가 학계를 넘어서 대중적인 담론으로 전환되는 ‘공론장’ 형성의 여건 변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교함과 구체성을 규정한 주요한 요인이었기 때문이다.

둘째, ‘분단, 통일, 평화’ 키워드를 중심으로 통일담론을 정리해 나갈 때, 발표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두 가지 경향을 보일 수 있다고 본다. 하나는 정리방식에서 분단의 구조적 측면이나 남북의 정치적 통합 부분이 주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이들 키워드만큼 분단문제와 통일방안 논의에서 중요한 의제가 되어왔던 ‘안보’ 및 ‘개발’이 ‘분단, 통일, 평화’ 등과 맺었던 상호 관계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토론 1) 학계의 통일담론을 규정한 요인은?

당대 학계의 냉전·분단체제 연구와 이해를 ‘통일담론을 규정한 요인’으로 고려할 필요성을 제기한 이유는 학계에서 제출된 통일담론의 의의와 한계 그리고 지형을 정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면도 있지만, 발표자가 지적한 ‘학문적 정교함과 구체성 결핍’이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요구되기 때문이다.

현 학계 통일담론의 ‘학문적 정교함과 구체성의 결핍’은 학문 내외적으로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한국현대사학계가 의도치 않게 통일담론 관련 논의의 정체와 위축에 주요한 원인제공자 중에 하나임은 분명해 보인다. 1979년 “해방전후사의 인식” 출판으로 촉발된 현대사에 대한 관심은 1990년대 폭발적인 한국현대사 연구 제출로 이어

졌고, 이후 38도선 획정과 분단화 과정, ‘6·25전쟁’, 이승만정부와 4월혁명, 5·16군사쿠데타와 박정희정부 시기 통치사, 한미관계사, 동시기 북한체제 형성과 변화 그리고 최근에는 광주민주화운동과 87년 6월 민주화운동까지 주요한 국면과 사건을 다룬 연구 성과가 다수 제출되었다. 그리고 이는 냉전·분단시대의 이해를 심화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단체제론’을 등장시킨 박정희 정부의 시기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시기는 2010년대 이후이며,² ‘분단시대론’의 근대성 이해나 ‘분단체제론’을 구성하는 세계체제, 분단체제, 분단국가체제 등이 학술적 논쟁으로까지 부상되기에는 여전히 많은 실증적 연구가 필요한 것이 현대사학계의 현실이다. 발표자가 지적인 통일담론이 생산적인 진전이 없이 기존논의를 반복하는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다고 본다. 1980, 90년대 제기된 통일담론도 역시 학계의 냉전·분단시대 연구 진척 정도에 제약을 크게 받았으리라 본다.

발표자가 날카롭게 지적한 향후 통일담론이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것과 지구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의 관계”를 설정하고 설명하기 위해

2 한국현대사 연구를 시기적으로 박정희 정부시대로 확장하고, ‘분단체제’의 형성을 규명한 연구는 홍석률, 2012, 『분단의 히스테리』, 창비.

서는 이와 관련된 냉전·분단(체제)의 성격과 변화에 대한 논구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관계’는 탈냉전 이후에 등장한 것이 아니라 냉전·분단시대에 ‘글로벌/동아시아-한반도-한국사회-지역사회’가 연계되며 등장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규명을 위해서는 냉전·분단에서부터 동아시아 지역을 한 단위로 묶어내는 냉전·분단의 연쇄, 그리고 구제국-식민제국-‘냉전제국’(미국과 소련)의 변화 속에서 근대화가 추진되는 과정도 함께 고찰이 되어야 한다.

강만길이 분단시대론에서 말한 분단극복을 통한 ‘근대’ 완결, 백낙청이 분단체제론에서 세계체제론-분단체제-분단국가체제의 위계적 구도 설정, 김성민·박영규가 인문학적 통일론에서 ‘밑으로부터의 분단 극복’ 방안 제기, 끝으로 동아시아의 구도/담론 속에서 분단체제의 이해를 확장하려는 시도 등을 학문적 구체성에 의거해 비판,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냉전·분단시대에 대한 연구의 확대와 이해의 심화 나아가 인식의 전환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일례로 분단극복 후 통일국가 수립으로 ‘근대화’가 완결된다는 강만길의 논의를 놓고 ‘근대주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하나, 한반도의 냉전·분단체제가 전근대 국가의 대표적인 통치제도를 변용한 통치기제가 유신체제와 유일체제의 기저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보면, 탈냉전 차원에서 근대화의 함의를 논구할 때 강

만길의 논의를 다시 주목하게 된다.³ 또한 백낙청이 분단체제를 세계 체제론의 하위로 배치한 것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이 있으나, 냉전체제와 세계체제의 관계 그리고 분단국가체제를 구성하는 ‘안보-개발-민주주의’의 관계와 이 관계가 탈냉전 과정에서 어떻게 재편되어 갔는가를 논구할 때, 분단체제론에 관한 논쟁은 학문적인 구체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토론 2) 통일담론의 또 다른 주요 의제들인 안보, 개발에 대한 검토는?

분단문제 극복과 통일논의 진전을 위해 안보와 개발 논의에 대한 속고가 필요함은 백낙청이 일찍이 지적했으며,⁴ 발표자도 한국 현대사 학계에서 군사·안보문제에 관한 학문적 접근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태를 빨리 극복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⁵ 그럼에도 역사 학계에서 분단문제와 통일의 차원에서 안보를 다룬 연구 성과는 여전히

3 강만길이 자신의 논의를 계속 발전시켰기에 그의 근대인식과 민족주의론 정리에는 여러 논자들이 지적했듯이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강만길은 통일전선을 서구의 인민노선이나 계급노선을 부정한 민족노선으로 상정한 1930년대 중반 이후 민족운동사의 흐름을 중시하는데, 이점을 고려할 때도 강만길을 근대주의에 규정된 연구자로 규정하는 것은 탈근대화론에 영향을 받은 논자들의 일면적인 지적으로 보인다.

4 백낙청, 1998, 『흔들리는 분단체제』, 창비, 220쪽.

5 홍석률, 2007, 「민족주의 논쟁과 세계체제, 한반도 분단 문제에 대한 대응」, 『역사비평』 80호, 168쪽.

히 부족한 편이다. 과문하나 2000년대로 접어들 때까지 학계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국가안보관계 부처 연구자들을 제외하면 안보문제를 분단과 평화정착 차원에서 깊이 있는 연구를 한 학자는 손꼽을 정도로 드물어 보인다.⁶

여하튼 통일담론에서 분단, 통일, 평화와 직결된 안보에 대한 이해를 정리, 전망하지 않을 때 통일담론의 구체성과 영향력은 근본적인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주지하다시피 동북아 열강 특히 미·중의 안보적 완충지대라는 한반도의 위치, 핵무기 개발과 갈등 등은 분단을 지속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다. 게다가 냉전·분단체제하에서 ‘안보’가 포괄하는 내용도 탈냉전 흐름과 맞물려 변화했다. 글로벌 냉전의 해체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군사안보전략의 변화, 인구이동 및 기후환경과 맞물린 국가관계의 변화 속에서 한반도를 규정하는 안보는 냉전·분단시대 안보와는 전혀 다른 맥락 속에 놓여 있고, 군사안보 영역에 일방적으로 기울어져 있던 ‘안보’의 무게중심도 군사적 측면에서 공동체의 ‘안전’에 관한 다양한 이해가 부상하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보이는 안보 사안은 대중에게도 체감도가 가장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깊은 고려가 없는 통일담론은 과거

6 하영선, 1989,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청계연구소 ; 리영희, 1991, 『한반도의 핵위협 구조』, 『창작과 비평』 19-3. ; 서재정(이종삼역), 2009, 『한미동맹은 영구화하는가 : 군사동맹과 군사력, 이해관계 그리고 정체성』, 한울 등.

와 달리 학문적, 대중적 영향력을 갖기 힘들 것이다.

끝으로 ‘개발’은 ‘안보’와 함께 냉전시대 분단체제와 분단국가체제의 특성을 만들어간 주요한 요인이었고, 향후 분단 및 통일논의에서도 주요 의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통일담론을 정리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부연하면 ‘안보’와 ‘개발’은 서로 맞물리며 일상의 삶에서부터 남북관계 및 동북아 국제질서의 변화와 연계된다는 점에서, 또한 국가주의, 민주주의, 분단체제, 평화 등을 규정하는 주요한 요인들이라는 점에서 통일담론의 유형화와 평가의 기준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토론

김동택

서강대학교 국제한국학과 교수

홍석률 교수의 발표문을 잘 읽었습니다. 무엇보다 학계에서 통일 관련 논의를 잘 정리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그동안 학계에서 통일과 관련하여 어떤 논의가 전개되었는지, 그리고 쟁점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설득력 있는 글의 전개를 보여주었습니다.

전체적인 논의의 방향에 대해서 홍석률 교수의 발표에 많은 부분 동의를 하면서 발표문이 정리된 글의 형태로 출판될 경우를 대비하여 몇 가지 점에서 토론자의 의견을 보태고자 합니다.

먼저 글의 제목과 글의 목차와의 상관성과 체계성에 대해 토론자가 생각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글의 제목은 “학계의 통일담론”으로 그리고 부제로 “분단문제 해결, 통일, 평화의 관계설정을 중심으로”라고 되어있습니다. 제목 특히 부제로 보면 글의 구성이 각각 분단문제 해결, 통일, 평화의 관계가 어떻게 논의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해당 주제를 중심으로 어떠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고 쟁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연구할 주제는 어떤 것이라든가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그런데 목차를 보면 1. 선진화와 통일담론, 2. 분단시대론과 통일민족주의, 3. 분단체제론과 탈분단론, 4. 평화공존론과 양국체제론의 순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읽어보면 1과 2, 3, 4의 차별성은 이념을 근거로 보수적 논의와 진보적 논의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리고 2, 3, 4는 일정하게 시기적으로 70년대, 90년대 이후, 그리고 최근의 논의들이 비동시적이면서 동시적으로 논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읽어보면 장별 배치가 약간은 체계적이지 않다는 인상을 줍니다. 아울러 쟁점을 위주로 글을 다시 구성해서 각각의 이론적 틀이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핵심적인 쟁점은 무엇인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어떤 연구가 더 요구되는 것인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분명하게 통일논의에 대해 독자들을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제안을 해 봅니다.

다음으로 통일 문제에 대하여 2와 3은 민족 혹은 일상성을 중심으로 다루었고 1과 3의 일부 그리고 4는 국가를 중심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통일이라는 말이 화두가 되는 순간 국가의 문제가 불가피하게 제기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현재와 같은 국민국가의 시대에 국가는 민족이든 국민이든 그 내용성을 담보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족통일의 문제

도 구체적으로 어떻게라는 문제가 제기되면 결국에는 국가라는 문제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라는 형식을 배제하고 어떻게 통일, 평화, 분단극복의 문제가 이루어 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것의 정치적 지향성 내지 운동의 측면에서만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가중심적 사고와 그렇지 못한 사고를 구분하기 보다는 국가가 중심에 놓여져 있지만 국가라는 형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 내용을 어떠한 방식으로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분단시대와 관련하여 한반도의 정치사를 통사적으로 볼 때 삼국시대, 후삼국시대, 통일신라와 발해의 남북왕조시대를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분단시대라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 두 개 혹은 세 개의 정치체가 존재했다고 하여 그 시대를 역사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있는 시대로 규정하지는 않는 듯합니다. 다만 그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끊임없이 복수의 정치체제로 인해 전쟁, 정치적 억압,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것을 회피할 수단으로 통합을 원했다면 역사적으로 아마도 현재와 같은 남북한 분단시대와 성격이 유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통일이냐 평화냐는 분리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전쟁을 경험하고 끊임없이 갈등해온 남북한의 역사를 볼 때 평화의 문제는 곧 통일의 문제와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통일논의는 북한에 대한 논의와 반드시 연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하나의 정치적 주체이자 행위자로서 평화와 통일이 연결될 수 밖에 없는 현실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글이 어느 정도로 현실적 함의를 갖기 위해서는 북한과 관련한 남한 학계의 연구를 부수적으로라도 다루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토론자의 전공 분야는 아니지만 아마도 북한 연구자들은 북한을 그 자체로 비교정치적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통일과 관련한 연구대상으로 다루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글에서 북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수는 없겠지만 통일논의에서 북한에 대한 연구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약간이라도 언급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분단 이후 제기된
통일담론에 대한 정리와 성찰

04

여성 및 생태 분야의 통일담론 회고와 성찰

이나미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연구위원

토론

(여성 분야) **김귀옥** 한성대학교 소양핵심교양학부 교수

(생태 분야) **주요섭** 모심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1. 머리말 :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이 연구의 목적은 페미니즘, 생태학, 에코페미니즘과 관련하여 그동안 제기된 한반도 통일담론을 고찰하고 그 시사점을 찾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시민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여성, 생태 등 시민운동 내지 시민적 가치가 포함된 통일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등장한다. 백낙청, 이남주가 제기한 ‘한반도식’ 통일과정론, ‘시민참여형’ 통일운동론 등이 그것으로, 그동안 시민운동 및 평화운동이 통일문제를 외면해왔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통일운동과 시민사회운동 간의 괴리를 극복하고 결합하자는 것으로, 시민운동은 한반도적 시각을 확보해야 하고 통일운동도 시민적 가치, 즉 평화, 생태, 환경, 여성, 인권, 소수자, 경제정의 등을 반영하자는 것이었다(서유석 2019). 통일은 “한반도 전역에 인류 보편가치를 달성하는 과정”으로 정의되기도 한다(서보혁·정옥식 2016). 이는 기존 통일운동, 민주화운동, 민중운동에서 제기한 것과 다른 새로운 의제가 추가된 것으로, 한반도 통일은 근대적 기획의 민족국가 형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평등, 인권, 민주주의, 생태와 같은 보편적 가치의 실현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 건설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또한 차이, 다양성, 문화, 점진성, 평화가 강조된 통일담론의 형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두번째로, 이는 정부 등 국가 차원과, 기업 등 시장 중심의 통일 논의가 갖는 한계가 주목된 결과로 볼 수 있다(김진환 2019). 이때 상대적으로 정치 및 경제 권력에서 벗어나 있던 존재인 여성이 주체가 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인간중심의 통일 논의에서 더 나아가 생명, 자연도 포함된 논의가 필요해진다. 경험적으로도, 여성이 참여하면 공적 논의가 더 활발해지며 평화 관련 정책은 더 원활하게 추진된다(김정수 2020). 독일의 경우 1970-80년대 환경운동과 평화운동에서 참여자의 주축을 이룬 집단은 주부와 연금생활자들로, 이들이 신사회운동의 주력군이 되었다(정현백 2005b).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시민운동에서 여성의 비율이 매우 높다.

셋째로, 여성과 생태 의제가 빠진 통일담론의 위험성을 들 수 있다. 즉 이러한 관점이 결여되면 가부장적 민족주의와 생태파괴적 통일 논의가 등장할 수 있다. 통일 후 여성에게 닥칠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며 생태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미리 대비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그동안 한국사회에 등장한 여성 및 생태 분야의 통일담론을 분석하고자 하며 그 방식은 기존에 제시된 통일담론의 구분법을 원용하는 것이다. 기존 관련 연구들은 통일담론을 대체로 민족주의, 보편주의, 실용주의로 구분한다(김선·김희정·임수진 2017). 이병수(2010)는 통일 당위성 근거들을 민족주의/민족사적 정당성, 실용주의적 당위론, 평화담론으로 구분했으며, 함규진(2016)은 민족주의적, 실리주의적, 보편주의·인도주의적 당위성 논의로 정리하고 대안으로 ‘근본적 사회개혁으로서의 통일’을 제안했다. 이석희·강정인(2017) 역시 민족주의, 보편가치, 통일편익으로 구분하고 새로운 통일담론으로서 다문화적 감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다. 이들의 통일담론 구분법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민족주의(민족)	보편주의(가치)	실용주의(이익)	대안 및 보완점
이병수(2010)	민족주의 민족사적 정당성	평화 담론	실용주의	
함규진(2016)	민족주의	보편주의 인도주의	실리주의	근본적 사회개혁으로 서의 통일
이석희 강정인(2017)	민족주의	보편가치	통일편익	다문화적 감수성 반영

여성 관련 통일담론의 지향을 살펴보면 대체로 위의 분류와 유사하게, 민족(역사, 특수성, 민족 중시), 가치(평화, 보편성, 세계 중시), 이익(여성복지, 성평등, 계층·계급 중시)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민족담론과 페미니즘은 상호 충돌할 가능성이 크지만, 분단이 여성에게 주는 고통과 남북 여성들의 공통된 역사적 경험이라는 한반도의 특수성은 여성들로 하여금 민족 문제를 도외시하기 어렵게 했다. 가치와 관련해서는, 여성들의 통일운동이 일찌감치 평화 등 보편 가치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발전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익과 관련해서는, 통일논의 과정에서의 여성대표성, 통일 후 성평등, 여성복지 문제 등을 제기한 점을 들 수 있다.

생태 관련 통일담론도 마찬가지로 민족(민족과 지역적 실천, 한반도라는 장소의 강조), 가치(지구적 실천, 생태근본주의, 생명과 영성), 이익(기술신뢰, 경제성장, 환경관리주의, 인간중심)으로 나뉘볼 수 있다. 민족과 관련해서, 생태담론이 초기에 민족통일을 중요한 목표로

설정했으며 한반도가 갖는 고유한 특성에 주목한 점, 가치와 관련해서는 평화, 생명 등의 가치와 지구적 문제 강조, 이익과 관련해서는 생태파괴가 가져올 피해, 환경관리를 통한 남북교류 등을 들 수 있다. 여성 및 생태 관련 통일담론을 민족, 가치, 이익 측면에서 분류하면 아래와 같다.

	민족	가치	이익
여성 분야 통일담론	공통의 역사, 분단 극복, 민족 수준	전쟁 반대, 평화, 세계 수준	여성 대표성, 여성복지, 성평등
생태 분야 통일담론	민족적·지역적 실천, 한반도라는 '장소'의 강조	세계적·지구적 실천, 생태근본주의	인간복지, 기술신뢰, 경제성장, 환경관리주의

그러나 위의 구분에도 불구하고, 여성과 생태 분야는 그 속성상 민족과 이익의 측면에도 가치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세 영역의 구분이 세부적인 다양한 담론과 실천을 전부 포괄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되어야 한다.

페미니즘과 생태주의가 만난 에코페미니즘도 이 글에서 다루었다. 에코페미니즘은 여성과 생태가 가진 본질적이고 공통된 가치에 주목한 것이지만 마찬가지로 민족이나 이익의 요소도 있다. 그러나 국내에 관련 연구나 논의가 많지 않아 별도의 상세한 구분 없이 서술했다.

2. 여성 분야의 통일담론

여성의 통일운동은 여성이 참여하는(또는 동원되는) 통일운동, 여성이 주도하는 통일운동, 페미니즘적 통일운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초기에는 주로 여성이 참여하는 통일운동이었다가 이후 여성이 주도하는 통일운동이 되며 현대로 올수록 페미니즘적 통일운동으로 진전된다. 여성의 통일운동은 해방 직후부터 전개되어 왔으나 여성이 주체가 된 것은 1980년대 말부터이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으로 통일운동의 장이 확대되면서 여성들이 활발하게 통일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한다. 또한 여성운동 및 페미니즘 이념의 발전과 독일 통일 경험은 남성중심적 통일운동에 의문을 제기하고 여성적 관점의 통일연구와 통일운동을 시작하게 했다. 이러한 여성 분야의 통일담론을 1) 민족 및 민족주의, 2) 평화 등의 보편가치, 3) 여성의 복지와 평등의 범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민족 중심의 여성운동과 민족주의 쟁점

(1) 여성들의 민족해방운동과 민족통일운동

초기 여성운동은 여성해방운동을 민족과 세계인류를 위한 운동으로 파악했다. 일제강점기 시기의 여성단체인 근우회의 창립취지에 의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해방을 위하여 분투하는 것은 동시에 조선 사회 전체를 위하여, 나아가서는 세계인류 전체를 위하여 분투”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여, 민족주의 뿐 아니라 보편주의적인 성격도 보여준다. 근우회는 민족운동과 연결된 여성운동의 효시로, 이효재는 “일찌기 일제식민지 치하에서 근우회를 조직한 우리 선배들이 여성운동의 과제를 민족해방과 연결시켜 의식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평가한다. 그는 “식민지사회에서 여성문제가 여권의식으로만 이해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이효재 1985).

해방 후 미군이 진주하기 전에 결성된 건국부녀동맹은 좌우익이 다 참여한 조직으로 그 취지문에 의하면 “우리 조선의 전국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됨에 의하여서만 그의 일부분인 우리 여성문제가 비로소 해결될 것이며, 동시에 우리 여성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전국적 문제가 또한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 했다. 또한 “전국민 해방을 목표로 한 전면적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여성해방의 대업을 완성”할 것을 천명하여 여성문제와 민족문제가 하나임을 강조했다. 이들이 제시한 강령은 ①조선여성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해방, ②조선여성의 의식적 계몽 질적 향상, ③조선여성의 단결을 공고히 하여 완전한 독립국가 건설에 일익을 담당할 것 등이다(이효재 1985; 이나미 2017).

미군정 실시 후 여성운동은 좌우로 분열되지만 좌파인 조선부녀총동맹이나 우파인 조선여성단체총연맹 모두 ‘조국의 자주독립, 국토의 남북통일, 인류평화에 공헌하기 위한 세계여성과의 제휴’ 등을 강령으로 제시하여, 좌우익 모두 통일된 독립국가 수립 및 세계여성과의 연대를 촉구했다. 또한 조선부녀총동맹은 공사창제 폐지를 요구하고, 대한여자국민당은 간통죄 쌍벌제, 부부별산제를 건의하는 등 남녀평

등 운동도 함께 전개했다(이효재 1985).

좌우를 막론하고 이 시기 여성단체들은 민족통일운동에 참여하지만 일부 동원적 성격이 있었고, 여성주도적이거나 여성적 관점이 중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예를 들면 조선여성단체총연맹은 “국토의 남북통일과 민족의 진정한 단결”을 표방하면서 우익의 정치운동에 합류했고, 조선부녀총동맹 역시 주로 좌익의 정권획득을 위해 활동했으며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에는 빨치산 활동을 통해 통일운동에 전념했다(정현백 2005b). 1960년대에 들어와 새로운 여성단체들이 조직되기 시작하지만 주로 관주도의 단체로서 여성의 교양이나 회원 간 친목, 봉사활동 및 반공활동에 주력했다(이효재 1985).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여성기독교인들이 통일운동에 앞장선다.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이후 국민들이 통일에 관심을 집중하자 YWCA는 「7·4 남북공동성명」을 주제로 하여 전국적으로 통일강연을 진행했다(김정수 2005). 이후 본격적인 계기는 1980년 3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가 총회에서 ‘한국교회 통일선언’을 채택한 것으로, 이에 YWCA는 1984년에 ‘통일을 위한 기독교여성의 사명’을 토론하고 1985년 통일을 위한 매일 ‘정오기도회’ 운동을 전개한다(정현백 2005b).

1987년 교회여성연합회는 17차 정기총회에서 ‘평화통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평화통일운동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전의 평화운동이 피해자나 반핵 등 일반론적인 주제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들의 평화통일문제는 성인지적 관점을 처음부터 견지하려고 했다(김

정수 2005). 1987년 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 **여신협**가 3년 연속으로 통일 문제에 관한 신학정립협의회를 열고 보고서를 출간하는데 여기에서 “남성중심적이고 여성의 경험이 배제된 통일운동을 비판”하고 “오히려 여성 민중이 고난을 딛고 해방되는 주체적 통일운동”에서 대안을 찾고자 하여, 여성을 주체로 설정하는 통일담론이 등장한다. 여신협은 분단을 ‘가부장적 문화의 극단적 형태인 제국주의 지배의 결과’라고 지적하면서, 여성들은 이런 지배가 초래한 모순들과 가부장적 관행에 의해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1991년에 발표된 ‘1995 평화통일희년을 향한 기독교여성의 입장’에서는 “분단구조가 한반도 여성의 삶을 총체적으로 왜곡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성은 “국내외적으로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차별과 소외를 당하고 있으며, 그 악의 뿌리는 분단에 있다”고 인식했다. 정현백에 의하면 이는 여성에 대한 차별의 모든 근원을 분단으로 환원하는 논리로서 한계를 갖는 것이지만 또한 당시의 시대정신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정현백 2005b).

진보를 표방한 여성들이 페미니즘을 담보하는 여성단체를 조직한 것은 1980년대 중반부터이다. 1980년대 진보적 여성운동은 전체 민중운동의 맥에서 민족자주화와 민주화 실현에 중점을 두었고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 관련 문제는 여성 경험의 차원에서보다는 민족자주화나 민주화, 노동문제로 환원하여 해석되었다. 1985년 3월 8일 14개 여성단체가 분단 이후 최초로 개최한 ‘세계여성의 날 기념 한국여성대회’에서 발표된 ‘민족·민주·민중운동과 함께 하는 85 여성운동선언’에 의하면 “올바른 여성운동은 분단을 고정화시켜 이익을 꾀하는

외세를 물리치는 민족통일운동으로, 정치적 억압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사회의 민주화와 남녀평등의 민주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민주화운동을 그리고 생존권 획득을 위해 투쟁하는 대중적 조직기반을 갖춘 민중운동으로서 성격을 띠고 나가야 할 것"이었다. 이 선언문에 따르면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모순은 민족분단으로, 이로 인해 민족의 생존권과 자주성이 침해받고 민주화의 발전이 저해되며 군비증강의 위협에 처해졌다. 따라서 "여성이 당면한 억압과 차별의 문제는 분단에서" 비롯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분단구조를 극복하고 민족통일을 이루는 실천활동"이 필요한 것이었다. 또한 분단구조로 인해 우리 민족이 군사비를 과도하게 지출하고 핵무기가 배치되는 위협에 처해 있으므로 민족의 생존과 통일을 위해 한반도의 핵전력 기지화를 반대한다고 주장했다(김엘리 2005). 이효재도 1985년 저서 『분단시대의 사회학』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통일이 왜 우리를 살리는 절대적 당위인지를 진정 느끼며 인식하고 있는 것일까? 특히 우리 여성들은 민족통일이 여성해방이나 우리 모두의 인간화와 직결된 것임을 진정 의식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상 그동안의 여성운동의 흐름을 보건대, 여성들의 문제의식은 이 분단시대의 민족적 역사적 상황에 대한 의식을 결여한 채, 남녀평등을 요구하며 이룩하려는 여권의식의 차원에 집중되어 왔다. 여성을 차별하고 비인간화시킨 가부장제 유산이 현대적인 산업사회구조 속에서 확대 강화되어 그 양자가 분단사회의 유지와 어떻게 연관되고 있는가를 여성운동의 입장에서는 별로 문제시하지

않았다(이효재 1985).

그는 여성단체들이 “여성생활에 직결된 소비자운동, 가족법개정운동, 여가선용을 위한 평생교육운동 등의 안일하고 미시적인 문제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성들은 이 사회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기쁨이 바로 민주화와 통일에 관련된 것임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이효재 1985).

이처럼 그는 통일과 마찬가지로 ‘민주화’도 강조했다. 1970년대 ‘민주화와 통일의 선후관계 논쟁’의 결론이 민주화에 중점이 놓여진 것의 반영으로 여겨진다. 이효재는 통일운동에 앞장서온 교회여성을 특히 거론하면서 “교회여성도 교회와 사회의 민주화운동의 주체자가 되어야 하며 이로써 민족통일의 역사를 이룩하는 주체자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통일’ 또는 ‘민주·통일’이란 개념을 자주 사용했다. “분단을 극복하며 새로운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려는 우리의 인간적 요구는 계속된 탄압에도 불구하고 민주통일운동으로 계속 성장해오고 있다”고 했고 “비민주적 비민족적인 분단사회의 질서를 극복”하려 하며 “여성들도 이 민주·통일운동의 대열에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민주·통일운동에 참여함으로써만 이 여성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가부장적 사회를 극복하며, 민주통일의 새로운 공동체를 우리 스스로 이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당시 국가의 “근대화정책에서 여성을 외화획득의 자원”으로 삼아 “여성을 수출산업의 진흥이나 다국적기업의 유치를 위해 저임금 노동력으

로, 소비경제의 상품으로, 더욱이 관광산업을 위한 ‘관광기생’으로 이용”한 것에 기인한다(이효재 1985).

1987년 출범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1989년에 문익환 목사와 임수경의 방북으로 촉발된 통일에 대한 염원에 부응하면서 ‘조국통일운동’에 동참하여(김정수 2005) 여성통일운동을 이어간다. 그러나 한편, 민족통일을 강조하는 여성운동에 대한 회의와 더불어, 민족과 통일에 대한 다른 관점도 여성운동에서 제기된다.

(2) 남북 여성의 역사인식의 공통점과 여성관의 차이

공통의 역사인식은 민족 및 민족주의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쟁점이며 과제이다. 남북 여성의 공통된 역사문제로 ‘일본군위안부’ 즉 일본군성노예제 문제가 있다. 이는 민족, 여성, 계급문제가 결합된 문제이며 동시에 남북통합과도 관련된 포괄적 과제이다(강정숙 2016). 사실상 남북간 최초의 공식적 민간인 교류가 1991년에 일본여성들의 증개로 도쿄에서 성사된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였으며 여기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논의된다. 즉 남북 여성들이 최초로 남북교류의 물꼬를 튼 것인데 이것이 제대로 기억되거나 기념되지 않고 있다. 대부분 1998년 정주영 회장의 소떼 방북을 민간인 최초 교류의 역사적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어(김정수 2020), 역사적 기억에 있어서의 성차별이 확인된다. 이 토론회는 진보적 교회여성단체들과 여성단체연합이 중심이 되고 일본여성의 협조로 성사된 것으로, 제1차 도쿄토론회에서는 종군위안부, 피폭자, 재일동포의 권리,

통일문제 등이 논의되었다. 같은 해 열린 제2차 서울토론회에서는 통일방안이 논의되었는데 북측은 평화체제 정착을 우선시하고 남측은 사회·문화 교류를 우선시하여 서로 간 차이를 확인했다. 이 토론회는 1993년 4차까지 진행되었다.

이 토론회에서 서로 간에 확인한 중요한 차이는 우선, 여성관에 대한 것이다. 첫 토론회 ‘가부장제문화와 여성’은 남측 조형 교수의 발제로 시작되었는데 북측 여성의 입장은 “북한에 여성문제란 없으며 있을 수도 없다”였다고 한다. 남측 여성들은 질문과 답변이 거듭됨에 따라 처음의 진지한 긴장에서 벗어나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 발표자 조형은 남한의 법, 경제제도, 가족 등 거의 모든 부분에 가부장제 유제와 그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이 존재한다고 남한체제를 강력히 비판했는데 이러한 북측 여성의 반응으로 머쓱해졌다고 한다(신진화 1992; 조영주 2012).

그러나 이러한 남북 여성간 교류는 부분적 성과도 낳았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는 남북의 노력은 ‘2000년 법정’의 남북공동기소장 작업으로 이어졌다. ‘2000년 법정’에서의 남북 공동작업은, ‘남북통일’을 이룬 것으로 평가되거나 체육교류에서 남북단일팀을 꾸린 것 이상으로 여겨지기도 한다(김윤옥·윤미향 2014; 강정숙 2016). 또한 이 과정에서 이룩한 예기치 않은 성과 중 하나는 남북 여성 간에 부분적이거나 공통된 역사적 인식에 합의한 것이다. 즉 남북 여성이 함께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기소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제 하 독립운동에 대해 급하게나마 합의한 것이 있다. 합의 전

북측은 독립운동에 대해 “1930년대 초부터 15성상에 걸쳐 백두산 일대를 중심으로 하여 국내외의 넓은 지역에서 강력하게 전개된 조선민민의 조직적인 항일무장투쟁은 일제에게 심대한 정치군사적 타격을 주고 그들의 패망을 앞당겼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즉 북측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과 조선노동당 규약 등에서 강조하고 있는 항일혁명투쟁 전통을 주장한 것이다. 한편 남측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무시할 수 없다고 하여 상호 팽팽하게 대립하다가 시간의 부족으로 ‘위안부’ 문제와 직접 관련 없는 불필요한 역사논쟁을 피하자고 하여 기소장에 “특히 1930년대 초부터 시작하여 국내외의 넓은 지역에서 벌어진 조직적인 항일무장투쟁은 일제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 일제의 패망을 앞당겼다.”라고 쓰게 되었다(강정숙 2016).

이에 대해 남북이 제시하는 각각의 항일투쟁 전통을 함께 기소장에 넣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평하는 역사학자도 있지만 당시는 그런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한다. 북이 유일무이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김일성계의 무장독립전쟁에 대해 이 정도로라도 수긍하고 합의한 것은 상당히 유연한 자세를 취한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 또한 남북한 모두 일제시기를 ‘강점’으로 결론짓고 전쟁범죄로 기소한 것도 큰 성과이다. 북측은 오랫동안 일제시기를 강점과 전쟁상태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아쉽게도 국제검사단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인도에 반한 죄’로만 적용했다(강정숙 2016).

남북 여성간의 만남은 이렇듯 서로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

해가면서 그 결과 ‘어떻게 만날 것인가’라는 과제를 남겼으며 만남의 내용과 질을 새롭게 모색해야 하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후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이 연변대와 김일성종합대학의 여성 교수들과 학술회의를 할 때 주제가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2007년 회의에서는 남북한 여성의 공통의 관심이 될 수 있는 주제를 포함시켰다. 여전히 북한 여성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빛나게 해결된 여성문제”, “선군시대 부강조국건설에 참답게 이바지하고 있는 조선여성들의 역할”이라는 일관된 발표를 하였지만, ‘여성의 건강’이라는 주제의 회의에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연변과 남한 여성들의 이야기에 귀기울이며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처럼 만남이 반복될수록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만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이어지면서 내용이 변화되었다. 조영주는 남북한 여성이 여성으로서 공통의 관심을 찾음으로써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도출해낸 것으로 평가한다(조영주 2012).

김재인은 남북 여성 교류 프로그램으로, 남북한 여성이 함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요리대회, 미용대회, 여성의 건강문제, 농촌총각문제, 가정생활, 결혼풍습, 모성보호 등을 추천하며 그 외에 체육, 연극, 영화 등의 교류를 제안한다(김재인 2002). 도기숙은 북한 문화, 북한 여성의 의식구조, 일상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하고, 북한문화의 일방적 흡수가 아닌 통합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다양한 문화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일반 대중과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며, 사회·문화 통합에 대한 통일담

론이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도기숙 2005).

전복희는 남북한 여성들 간에 '성찰적 연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남북한 여성들이 대화하여 합의나 동의를 이루자는 것이 아니라, 우선 토론과 비판을 통해 서로의 다름을 인식하고 위계화된 사회구조와 문화를 가시화하자는 것이다. 또한 상호간의 차이가 존중될 수 있는 '우리'를 만들어가고 이 '우리'의 연대의 목표를 구체화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여성들 간의 '차이의 정치'와 '성찰적 연대'가 통일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여성문제들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그는 강조한다. 또한 다문화사회 시대에 한국 여성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차이들, 즉 지역, 계층, 민족, 연령, 종교 등의 차이들이 존중되는 여성의 연대를 이끌어 내어야 한국 여성운동의 발전과 양성평등한 실질적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끌 수 있다고 주장한다(전복희 2017).

(3) 동서독 여성들 간의 갈등 해결과정의 시사점

민족통일을 위한 남북간 여성통합에 대한 관심은, 동서독간 여성 통합을 주목하게 한다. 독일 통일이라는 역사적 사건은 남한 여성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부추겼다. 1990년대 초반 여성연합의 통일운동은, 독일 통일과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이후 활성화된 통일방안에 대한 논의, 남북 여성교류, 정세인식 등을 중심으로 하여, 현안에 매우 활발하게 대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김정수 2005).

정현백을 포함하여 여성학자들은 독일 통일 후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에 주목했다. 동서독 여성들은 통일 후 서로간의 심각한 차이를

발견한다. 특히 아이와 남성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컸는데, 서독 여성들은 동독 여성들이 자의식은 강하지만 낮은 페미니즘 의식을 갖고 있으며 ‘우직한 어머니들’로서 남성에 집착하고 있다고 보았다. 반면 동독 여성들은 서독 여성들이 사치꾼이며 남성과 아이들에게 적대적이고 거만하고 잘난체 한다고 보았다. 서로간의 차이는 갈등을 부추겼다. 서독 여성들은 동독 여성들보다 이태리, 프랑스 여성이 더 가깝게 느껴진다고 서슴지 않고 말했다. 서독 여성들의 주된 관심은 젠더 문제인데 반해, 동독 여성에게는 전쟁, 민족주의, 경제위기, 민주주의 부재, 사회의 붕괴, 시민사회 건설 등이 선결 과제였다. 이는 동독 체제의 붕괴로, 동독의 남성과 여성이 서로간의 협력을 절실히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동독 여성들의 관심은 서독 페미니스트와 달리 ‘어떻게 아이를 제대로 먹일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즉 자유 대신 생계의 안정이 더 필요했다. 또한 동서독 여성들은 서로 간에 사용하는 해방이나 평등 개념이 동일하게 이해되지 않았고 동독 여성들은 페미니즘이란 용어에 관심이 없었다(정현백 2005a).

동서독 여성들 간에 접촉이 빈번해지면서 동독 여성운동가들은 서독 여성들에게 적대감을 보이기도 했다. 동독 여성운동가들은 동독 공산당정부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지만 사회주의 체제나 동독의 역사가 가치가 없는 것으로 치부되는 것에 반발했다. 또한 동서독 여성들은 노동시장의 부족한 자원을 둘러싸고 경쟁을 벌여야 했는데 구서독 여성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했다. 구동독 엘리트 여성들은 대부분 실업자로 전락했는데 이들이 신청하는 프로젝트 심사가 구

서독 여성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상황이어서, 동서독 여성들 간 관계가 권력관계로 변모했다. 정부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구서독 여성들은 구동독 여성들의 삶에 대한 일방적인 저술가가 되었고 구동독 여성은 그 대상이 되었다(정현백 2005a).

그러나 동서독 여성들은 불화와 갈등 끝에 새로운 방식을 모색한다. 동독 지역에서 자생적인 여성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여성도서관, 여성쉼터, 여성교육센터 등의 다양한 여성프로젝트가 진행되었고, '동서의 경계를 넘어서는 페미니즘'을 위하여 새로운 행동규칙이 만들어졌다. 즉 상대와의 차이를 인정하기, 상대를 비판하기보다는 먼저 이해하기, 갈등이 생기면 이를 말하고 가시화하기, 사용하는 개념들의 서로 다른 의미 밝히기, 어떤 결정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인정하기, 연구와 저술은 타자의 시각에서보다 당사자의 입장에서 서술하기, 타자에 의한 서술이나 분석보다 동독 여성들의 '스스로 드러내기' 등이 그것이다. 또 다른 한편, 서독 내 페미니스트들은 그들 자체도 매우 다양하므로 '경계를 넘어가는 페미니즘'을 주장하기보다 구체적인 공동의 활동을 통해 서로 간의 신뢰를 먼저 쌓아가자는 주장도 제기했다. 또한 재정지원, 프로젝트 선정에 있어서 동독 여성들이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방안도 모색되었다(정현백 2005a).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서독 여성간의 불화의 골이 매우 깊어서 이를 해소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동독 여성운동가는 한 세대나 두 세대가 걸릴 것이라고 주장한다. 통일 직후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동서독간 갈등이 더 심화되었는

데, 이는 동독인들이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다른 한편에서는 동서독간 서로 다른 역사적 경험과 사회화 과정이 갈등의 원인이므로, 정치교육을 통해 장기적으로 바꾸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정현백 2005a).

(4) 민족주의, 국가주의 담론에 대한 여성들의 비판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민족통일 담론은 여성운동의 입장에서 분명하게 비판받는다. 우선, 통일은 항상 ‘민족통일’이라는 구호를 통해 논의되어 왔고 “‘민족통일’이라는 구호하에서 통일의 주체는 민족인데, 그 민족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가”라고 반문되었다. 즉 “민족독립 내지 항일운동은 민족이라는 이름 하에 수행되었지만, 운동의 주체는 바로 남성들이었으며, 민족의 반쪽인 여성은 한민족이라는 단일한 주체 속에 가려져 왔다”는 것이다. 여성의 입장이나 시각은 도외시되었고, 당시의 성적 불평등으로 인해 통일 논의에서 여성의 목소리는 들리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상태에서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성적 불평등이 통일한반도 사회에서도 지속되리란 점은 분명하다는 것이다(윤택립 2001).

둘째로, 민족통일 담론은 남북간 ‘동질성 회복’을 강조하는데 이것이 전통적인 가부장적 문화의 재생산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통’에 잔재한 성차별주의에 대한 성찰없이 동질성 회복의 근거로 전통이 강조된다면 통일 과정이나 이후에 불평등한 젠더질서가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조영주 2012). 김석향은, 통일로 가는 길에 성차별

이 없어야 한다고 하면서 북한의 ‘조선옷’, ‘민족옷’ 개념을 보면, “민족적 전통을”을 이어가는 주체가 북한 여성에 국한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민족적 전통” 가운데 어떤 부분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 민족구성원 전체가 논의하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석향 2007).

페미니즘적 관점은, 동질성을 근거로 한 통일담론을 비판하고 민족 및 민족주의 담론이 내포하고 있는 성차별주의를 가시화하며, ‘공정적 이질성’으로 ‘부정적 동질성’을 해체할 것을 주장한다(조순경 2000; 조영주 2012). 동질성을 근거한 민족담론에 대한 비판은 여성에 대한 시선과 남북한이 상징화되는 방식도 문제화하였다(한설아 2002; 조영주 2012). 예를 들면 ‘남남북녀’로 대표되는 남북한 남성과 여성의 상징화는 민족적 여성성이 순종적 여성성으로 의미화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남한은 북한을 여성화된 타자로 간주하면서 자신의 강함과 우월성을 표출하고, 동시에 북한은 강성대국론과 핵무장 등으로 자신을 과잉남성화하는 길을 택해왔다는 것이다(김엘리 2008; 조영주 2012).

셋째, 통일운동을 포함한 운동권 내부에서 민족주의를 강조할 필요성 때문에, 불필요하고 과도한 가부장적 운동문화가 목인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2003년 촛불시위 범대책위원회를 향한 페미니스트의 비판을 들 수 있다. 고려대 법대 여학생회, 이화여대 여성위원회, 연세대 총여학생회, 관악여성모임연대, 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연대 등 젊은 페미니스트들은 범대위가 ‘Fucking USA’라는 구호를 내

결고 미군에 의해 비참하게 살해당한 기지촌 여성의 참혹한 주검 사진을 공개한 것을 비판했다. 이들은 범대위가 여성의 신체를 배려하지 않았고 민족주의 담론의 필요를 위해 작위적으로 이를 이용했다고 비판했다(정현백 2004).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통일운동을 기피하고 평화운동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된다. 그러나 정현백은, 제3세계 국가에서 갖는 민족주의의 건강한 측면과 병적인 측면을 다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하면서 여성의 삶이 그들이 속해있는 민족국가의 운명에 따라 좌우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 민족문제를 외면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오히려 여성들이 통일운동을 통해 국민국가 형성과정에 동참하면서 국민국가의 민주적 재구성을 견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여성들이 개입하지 않으면 통일국가 구성은 가부장적이고 비민주적 국가가 될 수 있다고 그는 지적한다. 그에 의하면 여성통일운동 내에서도, ‘한국여성에게 민족문제는 주어진 현실이고 이는 여성들의 삶과 운명을 규정하기 때문에 여성이 통일 운동을 기피하는 것은 국민국가 내에서 여성이 함께 구성할 수밖에 없는 공동체를 스스로 거부하는 형국이 되기에, 국민국가 형성과정에 여성은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이를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견인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라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정현백 2005b).

또한 정현백은 페미니즘 관점의 관철을 통해 통일운동을 질적으로 한 단계 승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그에 의하면 페미니즘적 관점의

추가는 통일과 평화주의 이상을 결합하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여성은 남성보다 서로 대화하고 이해하며 협력해 가는 과정에 더 익숙하므로 통일운동에서 여성주의적 접근은 일방에 의한 흡수통합 주장이나 이분법적 이념논쟁과 같은 한국사회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정현백 2005b).

2) 평화를 통한 통일

(1) 통일운동에서 평화운동으로

‘페미니즘적 관점은 통일을 평화와 결합시킨다’는 정현백의 지적처럼, 여성들을 일찍이 통일문제를 평화와 연결지어 바라봤다. YWCA는 민족문제인 통일을 보편가치인 평화와 연결지어 ‘평화통일운동’이라는 명칭 아래 통일운동에 집중했다. YWCA는 진보적인 요구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않았지만 어느 단체보다 일찍 대중적인 평화운동을 시작했다. 1986년부터 평화통일을 위한 정오기도운동을 했으며 걸프사태에 직면하여 평화를 위한 공동기도문을 제작했고 어린이 평화교육 교재를 발간했다(정현백 2004). 1989년 교회여성연합회는 평화학교를 열어 통일과 평화교육을 실시하고 군비축소운동을 제창했다. 또한 ‘89반핵평화여성선언’을 선포했고 반핵평화법률안 제정을 촉구했다. 1991년에는 ‘평화통일 희년을 위한 교회여성 정책협의회’를 공동주최하여 평화·통일·희년운동으로 ①교회개혁운동 ②군축·반핵·통일운동 ③경제정의운동 ④민주화운동 ⑤환경운동 등

다섯 운동을 제창했다. 이 운동은 이후에도 평화운동의 중심이 되었다(김귀옥 2006).

정현백은 통일운동이나 평화운동에 있어 종교집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서독과 동독 모두 교회가 사회운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주도했다는 것이다. 서독의 경우 1970-1980년대 환경운동, 평화운동을 이끈 기초단위가 교회였으며 동독에서도 반체제운동을 교회가 주도했다. 또한 이들 운동의 주축이 된 대중은 주로 주부와 연금생활자들이었다. 즉 상대적으로 시간을 낼 수 있는 집단인 이들이 신사회운동의 주력군을 형성한 것이다(정현백 2005b). 우리의 경우도 풍부한 대중적 기반 특히 여성들을 교회 등 종교집단에서 찾을 수 있다.

1990년대 초에 이르면 통일운동을 해왔던 여성운동도 평화운동으로 방향을 전환한다. 한국사회에서 경험하는 성차별의 상당부분은 분단이 초래한 군사주의와 연루되었음을 인식했으나 기왕의 통일운동이 자동적으로 군사주의를 해소하는 것은 아니라고 자각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평화운동은 이렇듯 여성에 의해 먼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정현백 2005b; 김귀옥 2006). 1990년대 중반에 여성들의 반전·군축운동도 ‘통일운동’의 하위 범주가 아닌, ‘평화운동’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된다(김엘리 2005).

1987년 창립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1989년 반전반핵평화위원회, 1990년에 조국통일위원회를 만들고 어떻게 통일운동과 여성운동을 연결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동시에 평화·군축운동의 과제를 함께 풀어가고자 했고, 그러한 문제의식에서 1993년 조국통일위원회를

통일평화위원회로 개칭한다. 1997년에는 여성운동 내에서 통일·평화운동을 전담할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평화를만드는여성회가 결성되었고 기존의 통일운동에서 분화된 반미여성회도 생겨났다(정현백 2005b; 김귀옥 2006).

1990년대 전반까지만해도 여성들은 ‘통일이야말로 한국의 평화운동에 최우선 과제’라고 인식했다. 그러나 점차 이러한 사고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다(정현백 2005b). 그 원인으로는 첫째, 남성이 주도해 온 기존 통일운동의 한계를 들 수 있다. 기존 통일운동은 성차별 문제를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했다, 강렬한 민족주의적 경향과 함께 통일운동 내에 가부장적 관행, 권위주의, 남성중심적인 운동문화가 지배적이었다. 여성들은 이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통일방안’ 중심의 통일논의와 남북 정치권력의 형식적 결합을 중심으로 한 통일담론에 회의감을 갖기 시작했다(정현백 2004).

둘째로, 남북 여성간 만남의 결과를 들 수 있다. 남북 여성간의 만남이 성사되면서 여성들은 서로간의 차이와 이질성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민족끼리’를 넘어서는 어떤 보편적 가치와 지향성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었다. 즉 ‘우리민족끼리’라는 기치 아래 가부장제와 같은, 남북이 지닌 부정적인 동질성까지도 포함하는 통일이어서는 곤란하다는 인식을 갖게 된 것이다(정현백 2005b).

셋째로, 남남갈등을 들 수 있다.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둘러싸고 남한 사회 내 갈등이 위험수위를 넘어가자 여성들은 남한 국민의 일상 속에서 평화적, 상생적 심성과 생활태도가 구현되지 않고는 남

북 간에 평화공존체제의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런 현실에 맞는 실용적인 운동방식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었다. 즉 군부독재와 반공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무의식적으로 내면화된 군사주의적 가치와 관행을 철폐하려는 노력이 우선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실천하자는 것이다(정현백 2005b).

또한 남남갈등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는 이념갈등으로, 통일사회상에 있어 자본주의나 또는 사회주의나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크지만 남북화해·평화·협력체제 구현에 대해서는 이견이 적다. 따라서 이런 점에서도 평화운동과 통일운동을 결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 과정에서 대화주제를 신중하게 선택하여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현백은 이런 맥락에서 서독이 통일교육보다 평화교육을 강조한 것이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준다고 지적한다. 함부르크대 자쎄 교수는 독일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서독은 통일교육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즉 통일교육을 할수록 통일을 둘러싼 견해 차이와 갈등이 격화될 것이니 차라리 통일은 접어두고 대신 1970년대 이후 모든 교과과정에서 평화교육을 실시했다는 것이다. 이런 서독의 전략은 매우 성공적이어서 통일논의를 둘러싼 의견대립이나 국수주의적 민족주의의 고양을 저지할 수 있었다. 독일 통일이 이루어진 이유 중 하나는 동독 주민의 서독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와 더불어 주변 강대국들이 독일의 국수주의적 민족주의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정현백 2005b). 따라서 우리도 민족주의를 내세운 통일담론을 강조하는 것을 신중히 하고 대신 평화 등 보편가치를 강조하는 통일

답론을 더 적극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통일운동이 갖는 한계를 인식하면서 페미니즘을 표방하는 여성단체들은 통일운동을 포괄하는 좀 더 확장된 범주로서 평화운동의 중요성을 제기했다. 이들은 ‘통일을 통한 평화로’에서 ‘평화를 통한 통일로’로 운동 슬로건을 바꾸었다. 이는 또한 여성들의 통일운동이 국제 시민사회가 공유하는 ‘평화’라는, 보다 보편주의적 가치를 지향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그동안 통일운동이 통일방안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에만 집중되었는데 대내외적인 비평화적 요소들이 남북의 화해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평화운동의 확산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런 문제의식으로 통일운동이 평화운동에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되었다(정현백 2005b).

정현백은, 국제사회에서 추구하고 있는 평화주의 관점을 수용할 경우, 기존의 민족통일과 민족주의 담론만이 강조되는 관행을 넘어서서, 적극적인 평화의 실현을 위해 민주주의, 인권, 빈곤, 성차별 그리고 인종주의 극복과 같은 보편적인 가치들이 보다 전면에 등장해야 한다고 보았다. 물론 이 과정에서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통일 열망과 민족담론이 부정될 수는 없다고 덧붙인다. 한국사회에 최초로 촛불시위를 일으킨 2002년 미선·효순 사망사건은 전 국민을 분노케 했으며 이는 여전히 민족감정이 평화운동을 움직이는 중요한 동력 중 하나임을 보여준다고 정현백은 지적한다. 분단사회가 초래한 갖가지 억압적 현실과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통일을 실현하려는 노력도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분단현실 아래 민족담론을 안고 갈 수밖에

에 없지만, 이를 평화와 같은 보편적인 가치에 포괄되는 하위범주, 즉 부차적인 이념 *secondary ideology* 으로 설정할 것을 여성평화운동은 강력히 제안한다고 주장한다(정현백 2004).

(2) 세계여성들과 연대하는 통일·평화운동

국제사회에서 평화운동은 통일운동이 갖지 못하는 중요한 장점이 있다. 평화운동은 통일운동과 달리 국제연대가 용이한 운동이라고 김귀옥은 지적한다. 아무리 한반도 통일이 남북한 뿐 아니라 동북아나 세계 평화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더라도 주변국들이 반드시 지지하지는 않는다. 특히 한반도 통일이 주변국의 이해관계와 상충될 때 이들은 반통일적 자세를 취할 수도 있다. 이때 이 문제를 푸는 하나의 힘이 평화운동이라는 보편적 운동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것이다(김귀옥 2006).

1991년부터 1993년까지 한국·북한·일본 여성이 연대하여 개최한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는 한반도 통일과 평화를 위해 국가를 넘어서 여성들이 협력한 좋은 사례이다. 이 토론회가 중단된 이유는 한반도 평화통일 방안을 놓고 한국과 북한의 입장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즉 한국의 한민족공동체론과 북한의 연방제론과의 차이가 그것인데, 2000년 「6·15 공동선언」으로 남북한 입장 차이가 좁혀지게 되었다. 2008년에 여성들의 국제 연대가 다시 시도된다. 2008년 ‘동북아여성평화회의-여성6자회의 추진위원회’의 ‘발족취지문’에는 “한반도 정전협정은 남북만의 분단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분단을 의미한다. 여성들은 이 분단을 넘어서 화해와 협력의 끈을 잇

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문소정 2015).

이후 한반도 통일과 평화를 위한 세계 여성의 연대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2015년 ‘위민크로스 Women Cross DMZ’ 행사이다. 노벨평화상 수상자 등 세계평화를 위해 앞장서 온 여성들이 참여한 이 대회에서 발표한 선언문 제목은 ‘2015 한반도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여성결기 선언문’으로 “인권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평화와 안전이며, 국제사회는 더 이상 세계 유일의 냉전분단 지역인 한반도의 국민들이 겪어온 비극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천명하였다. 이에 참여한 세계 여성들은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통일, 그리고 세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선언했다(문소정 2015). 한반도는 세계 유일의 냉전분단 지역으로 세계와 연결되는 지점이므로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통일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연결된다. ‘냉전분단’은 ‘평화통일’에 대해 직접적으로 상대어, 반대어가 된다. 또한 냉전과 평화는 세계 차원의 개념이며 분단과 통일은 한반도 차원의 개념으로 이 대회를 통해 세계와 한반도가 어떻게 직접적으로 관련되는지, 왜 세계 여성들이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보여주었다. 냉전분단은 세계 전쟁이 한반도에 응축되어 그 결과 분단된 것을 의미하며, 평화통일은 평화가 보편 가치로서 한반도의 가치인 통일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다.

‘위민크로스 DMZ’의 8가지 주장은 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 ②인위적인 분단으로 인한 비극적 이산가족의 재결합 지원 ③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 ④무고한 시민에게 해를 끼치는 제재조치 철

회 ⑤여성과 소녀에 대한 전시 폭력 금지 및 제2차 세계대전의 성노예였던 ‘위안부’ 여성을 위한 정의 정립 ⑥군비경쟁 비용을 시민 복지와 환경 보호에 사용 ⑦국제법에 따라 한반도 및 전 세계 평화구축 과정에서 여성의 리더십 확대 ⑧세계평화 구축의 주춧돌로서 한반도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 전 세계인들의 지지 촉구이다(문소정 2015).

(3) 여성평화운동의 과제

정현백은 2004년 글에서 그간 전개되어온 여성평화운동에 대해 몇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여성평화운동이 1990년대 말 이후 일관성 있게 자기 발전을 해왔지만 여전히 전체 사회운동 내에서 주변화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적 상황에서 여성은 여전히 소수집단 이어서 영향력 행사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여성 스스로도 끊임없이 자신 안에 왜곡된 운동문화를 내면화한 것이 아닌지를 성찰하는 자기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여성평화운동이 스스로 내 부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대안적인 운동문화와 삶의 방식을 체득하지 못한다면, 이 운동의 설득력은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정현백 2004).

둘째로 지적된 것은 남성들의 견인 문제이다. 정현백은 ‘적극적 평화’의 관점을 도입할 경우, 평화주의와 여성주의 관점이 통합된다고 보았다. 즉 구조적 폭력은 성폭력을 조장하고, 이는 가부장제 하의 성적 불평등을 재생산하기 때문에, 구조적 폭력이 지닌 성차별주의가 여실히 드러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평화운동은 평화를 실천하는

운동이면서 동시에 양성 평등을 구현할 수 있는 유리한 입지점을 지니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평화운동에 참여하는 남성도 양성평등운동에 동참하는 것인데 한국의 여성평화운동은 남성을 견인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성이 주도하는 평화운동은 군축, 국방비 삭감, 국방비리 폭로 등 기왕의 남성적 영역을 전담하고 있을 뿐, 평화의 일상성이나 평화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지니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과 남성이 함께 가는 보다 통합적인 평화운동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한다(정현백 2004). 일상적 삶 속의 평화를 고려할 경우, 한국 여성에게 떠오르는 주요과제는 군사주의의 극복이다. 한국과 같은 분단사회, 군사문화와 반공주의가 팽배한 사회에서는 사회 속에 무의식적으로 내면화한 군사주의적 가치나 관행을 발견해내고 철폐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권인숙 2000; 정현백 2004). 또한 군사주의 극복은 남성들을 적극적으로 견인해낼 수 있는 실천영역이기도 하다.

셋째로, 평화운동을 여성에게 국한시키는 편견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는 것이다. 흔히 ‘여성은 생활환경이 타인을 배려하는 여건에 있으므로, 여성은 평화에 대한 감수성이 더 강하다’는 등의 자기 규정과 함께, 그래서 여성이 평화운동에 더 적합하다는 주장이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모성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여성들도 있다. 그러나 정현백에 의하면, 여성이 지니는 상대적으로 강한 평화 감수성을 본성의 문제로 치부하기보다는 여성의 노동환경이나 생활환경이 ‘돌봄’에 익숙한데서 기인한다고 파악하고, 이를 여성평화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유리한 출발점으로 간주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 그는 이런 맥락

에서 여성을 항시 전쟁과 폭력의 희생자로 간주하는 양분법에도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미 나치의 대학살 과정에서 많은 여성들이 기꺼이 조력자로 참여하였음이 밝혀졌고,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하여서도 일본 여권론자 역시도 제국주의 체제와 편만한 공존을 하였던 과거가 비판받고 있어서, 여성을 단지 피해자로만 설정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여성이 스스로 안에 내재하는 군사주의를 읽는 자기 성찰과정을 거쳐야 함을 의미하며, 이런 성찰과정은 한국의 여성평화운동 내에서도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여성성과 마찬가지로 전통적 남성성이 생물학적 본성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성역할의 사회화 과정에 대한 평화주의적 개입을 통해서 남성성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지적했다(정현백 2004).

3) 여성복지와 성평등이 실현되는 통일

(1) 통일논의에서의 여성 참여와 여성 의제 제안

2000년대 들어와 남성중심의 통일 논의가 여성을 배제한다는 비판이 적극적으로 제기되면서 그러한 상태에서 통일이 이루어지면 성적 불평등이 통일한반도 사회에서도 지속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되었다. 통일문제는 남성만의 영역이 아니며 남성 주도적인 것이 되어서도 안된다는 것이다. “성적 불평등이 통일한반도 사회에서 종식되기 위해서는, 통일 논의 및 과정에서부터 양성이 평등하게 양성평등한 통일한

반도 사회를 만들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윤택림 2001).

이러한 주장을 포함하여 일련의 여성학자들은 통일연구에 있어서도 여성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들에 의하면 기존의 “내재적, 외재적의 구분은 학자들에게 강요되었던 방식”이다. 그러나 그들은 “내재적/외재적 이분법적 구도를 아예 포기하고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도하기보다는, 내재적/외재적 이분법 구도 내에서 ‘내재적’의 의미를 수정하는 것”이 여성적 관점의 연구에 더 타당하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통일을 여성의 시각으로 본다는 것은 북한 사회를 북한 여성의 입장에서 보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 사회를 행위자 중심으로 볼 때 행위자의 일관되지 않은 의도, 다양성, 내부의 차별성 문제가 제기되므로 내재적 접근법도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들은 “내재적으로 연구한다는 것의 의미는, 첫째로 경험적으로 연구한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행위자 중심으로 연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했다. 이때 ‘행위자 중심’이란 의미는 “어느 집단의 눈으로 볼 것인가가 중요”하며, 또한 ‘여성주의적’ 통일 연구의 목표는 양성평등한 통일한반도 사회이므로 “통일한반도에 대한 미래 지향적 방향은 선형적일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윤택림 2001).

또한, 여성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분단, 통일 등 남북문제가 여성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인식이 더 확대된다. 이산가족의 고통, 군사주의 문화, 과도한 군사비의 극복은 여성의 삶을 향상시키게 될 것이라고 강조되었다. 또한 1990년대 이후 독일 통일과정을 보면서 여성의 주체적인 참여가 결여된 협상과정이 통일 이후에 여성의 삶을

얼마나 열악하게 만드는지를 알게 되었다. 이에 여성들은 통일문제를 여성의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했다(정현백 2005b).

구체적으로는 ‘여성 대표성’의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그 근거로 유엔 안보리의 결의가 거론되었다. 유엔 안보리는 2000년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안보리 결의안 1325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는데 이 결의안은 여성 대표성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결의안 통과 후 국제사회는 전통적인 안보 담론을 인간안보로 대체하고 평화과정의 모든 수준의 의사결정에 여성들의 참여, 그리고 분쟁의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 구호와 회복 과정의 성주류화(모든 공공정책에 양성 관련 함의를 반영하는 것)를 지지해왔다. 그 근거로는 여성이 전쟁에서 더 큰 피해를 경험한다는 것, 여성이 평화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평화의 지속성과 내용이 더 증가된다는 것이다(김정수 2020).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통일 관련 기구에서 여성의 비율은 적으며 통일정책에서도 여성의 대표성이 낮다. 그동안 통일정책 분야는 남성의 영역으로 간주되어 왔고 여성의 참여를 확대시키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도 미진했다. 여성전문인력을 발굴하려는 노력도 부족하고 실질적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의구조에서 여성은 소수였다(정현백 2005b).

이에 여성연합과 평화여성회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여성평화통일포럼을 개최하여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정상과 국민들에게 드리는 여성들의 건의문’을 작성했다. 34개 단체와 여성계 인사 25명의 연명으로 김대중 정부에 제출된 이 건의문은 향후 남북공동

협력사업이 평화주의적, 환경친화적, 여성친화적 관점에서 실행되기를 촉구한 것이었다. 그 구체적 내용은 ①남북정상회담과 그 후속과정에서 민간단체와 여성의 참여를 확대시킬 것, ②여성관련 의제를 반드시 포함하여 향후 남북교류에서 여성의 역할을 늘릴 것, ③북한에서 기아로 위협받는 모자보건의 지원을 가장 우선적으로 실행할 것, ④남북한 모두 새로운 형태의 평화교육을 제도화하고 이를 통해 다름을 포용하는 평화공존의 생활태도를 키울 것 등이었다(정현백 2005b).

2004년 8월에는 여성연합과 평화여성회가 북한 분야 여성전문가 및 여러 여성단체와 함께 논의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여성의제를 통일부와 여성부에 제안했다(정현백 2005b).

- ① 사회문화협력분과회의의 구성 시에 일정 비율의 여성 참여를 보장하고 여성분과를 설치할 것
- ② 정부예산의 1%를 남북교류기금으로 확정하고 그 중 일정 비율을 남북여성교류사업에 배정할 것. 또한 여성부도 사업예산 1%를 남북여성협력기금으로 책정할 것
- ③ 북의 여성 관련 시설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남북여성회의 개최를 지원할 것
- ④ 남북여성의 생활작업반 운영과 IT교육 교류를 계획하거나 지원할 것
- ⑤ 개성공단인 활발한 가동 시에 발생할 여성문제에 대한 사전 연구 및 공동조사를 가능하게 할 논의기구를 구성할 것

2005년 당시까지 이런 제안에 대해 정부에서 구체적인 조치를 기획하거나 실행한 바는 없으나, 앞으로 남북협력이 진전되면 이러한 제안이 중요한 준거들이 될 것이라고 정현백은 보았다. 그는 또한, 여성통일운동의 대중화를 위해 통일운동이 여성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면 첫째, 통일이 실현되면 많은 국방비를 복지비용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둘째, 독일 여성들이 독일 통일에 크게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정부 구성 과정에서 배제된 사례를 들어, 통일 이후 여성정책이 제대로 수립되기 위해서는 여성이 통일의 전 단계에 미리 참여하고 통일정책의 입안과 집행과정에 능동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 셋째, 통일운동에 여성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여성들이 정치적으로 훈련되어 정치의식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정현백 2005b).

‘평화를만드는 여성회’의 김정수 원장은 2018년에 새로운 남북관계와 성평등한 한반도를 위한 여성의 요구를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윤보영 2020).

- ① 평화변영의 한반도는 성평등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의 대북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함으로써 gender justice가 이뤄져야 한다.
- ②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이행과정에는 여성과 시민사회가 참여하여 다자적 시각이 반영되어야 한다.

- ③ 한반도 신경제구상 및 북한개발협력 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이 적용되어 취약계층 여성보호와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제안에도 불구하고,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 ‘여성’ 대표성을 지닌 특별수행원은 한 명도 없었다고 한다. 과거 2000년, 2007년 정상회담에서는 특별수행원에 ‘여성’ 대표성을 별도로 두었다. 2018년 회담에 11명의 여성이 특별수행원으로 초청받았지만 이들은 체육계, 경제계, 예술인, 종교계, 원로자문단 영역의 특별수행원으로 참석했다. 또한 대통령이 주재한 전문가자문단 모임 후 어떤 남성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여성 참여’ 얘기를 하는가”라고 불평했다고 한다. 즉 한반도 평화체제, 북미 비핵화협상, 정전체제의 종료, 휴전선 무장갈등의 예방 등 매우 중요한 정치·군사적 의제가 산적해 있는데 여성들은 한가하게 ‘참여’를 얘기하고 있다는 등의 냉소를 보였다는 것이다(김정수 2020, 88). 그러나 여성의 ‘참여’ 없이 오랜 기간 논의되어온 그러한 중요한 의제가 과연 그동안 얼마나 큰 성과가 있었는지 반문해 볼 일이다.

(2) 독일 통일의 교훈: 통일의 희생자로서의 여성

독일 통일은 흡수통일 방식이 갖는 많은 문제점에 대해 고려하게 했으며, 통일에 대한 여성적 관점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독일 통일 이후 통일에 대한 논의는 ‘선통일 후통합’보다 ‘선통합 후통일’이 현

실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여성연구자들 역시 점진적인 경제적, 사회문화적 통합을 거쳐 정치적 통합을 시도하고 난 후 통일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김경희 2001; 윤택림 2001). 이는 독일 통일의 가장 큰 희생자가 여성이라는 인식이 널리 공유되었기 때문이다.

독일에서 통일이 갑자기 급속하게 이루어지면서 여성들의 요구사항과 이해는 보다 더 긴급한 다른 사회적 문제를 이유로 소홀히 다루어지고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나게 되었다. 더욱이 서독의 성차별적인 정치·경제적 정책결정구조가 통일과정에서 여성의 참여와 여성에 대한 배려를 제한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일 후 많은 여성들, 특히 동독지역의 많은 여성들은 사회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어려움과 고통에 시달려야만 했다(전복희 2017). 통일 후 시장경제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동독의 여성 관련 법이나 정책들이 폐기되기 시작했다.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대한 국가보조금, 자녀간병휴가제도, 가사휴가제도, 독신 양육자에 대한 출산시 해고제한제도, 임신 3개월 내에서의 낙태 허용 등의 규정이 순차적으로 폐기되었다. 한편 여성정보센터, 상담소, 여성보호소, 각 지자체 내 남녀평등 부서 등이 설치되었지만 통일 후 구동독 여성의 삶은 열악해졌다. 또한 통일 후 구동독 여성 200만명이 실업자로 전락하여, 취업률이 통일 후 절반으로 감소했다. 이는 서독 여성 취업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구동독 지역에서의 동독 여성 실업자 비율이 계속 증가하여 1995년에는 실업자 중 3분의 2가 여성이

었다. 이로써 구동독 여성이 통일독일에서 내부식민지가 되었다고 평가되었다. 구동독의 젊은 여성들의 생활도 극도로 불안정해졌고 따라서 구동독에서 ‘임신파업’이라 지칭할 정도의 현상이 벌어져 현저하게 낮아진 출생률 통계가 나오고 있다(정현백 2005a).

이에 서독 여성은 동독 여성을 위한 지원계획을 입안하고 대표적 여성조직인 독일여성회의는 서독 정부에 압력을 넣어 동독 여성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바꿔보려고 했다. 1994년에는 3만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도 조직했다(정현백 2005a). 그러나 동서독 여성간의 연대는 성공적이지 못했다. 그 이유로 전복회는, 연대의 기반을 민족적 동질성에 두고, 분단 40여년 동안에 발생한 두 지역 여성들의 차이점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본다. 특히 구동독이 붕괴되고 서독으로 사실상 흡수통일 되면서 동·서독 여성운동가들 간의 연대는 서독 중심의 연대가 되었다. 그래서 ‘독일여성’이라는 동질성에 호소했던 연대는 서독의 페미니즘과 여성운동을 보편적인 것으로 하는 연대가 되었고, 동독 여성들의 차이와 특수성이 부정되면서 동독 여성들에게 서독적인 것에 대한 일방적인 동화를 요구했다. 그 결과 동독 여성들은 독일여성의 연대에서 상실감과 소외감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동·서독 여성운동가들 간의 관계는 서독 여성의 ‘우월문화’와 차별적 사회구조를 형성했고 그 영향은 현재까지 계속되어 동·서독 여성들의 내적 통합을 저해하고 통일의 완성을 더디게 하고 있다고 보았다(전복희 2017).

한편, 이와는 다른 관점의 연구결과도 등장했다. 김미경은, 여성이

독일 통일의 '손실자'로 불리지만 실제로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구동독의 남성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여성 노동자의 임금도 통일 후 상승했다는 것이다(김미경 2001). 또한 독일 통일로 많은 동독 여성들이 실업자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생활했다는 것이다. 동독 여성은 통일 전 동독에서 90% 이상이 직업을 갖고 있어서 양육과 직업활동을 함께 하는 전통을 축적했다. 또한 동독은 자녀를 가진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을 광범위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동독 여성들은 사회생활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다(김용민 2007).

(3) 북한 여성의 복지와 변화 유도

독일 통일의 경험과 사회통합과 복지에 대한 연구들은 남북한 사회통합 이후에 발생할 가장 큰 문제들로, 경제 환경 변화로 인한 인구 이동과 노동력의 이동이 가져올 고용불안정과 소득격차를 들고 있다. 그 중에서도 여성들의 고용불안정의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여겨지고 있다(김경희 2001).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 원리에 따라 완전고용정책을 취하므로 현실적으로 통계에 잡히지 않는 무보수 주부노동력의 사회적 동원과 비효율적 계획경제부문의 과잉고용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경제통합 과정에서 남한지역에서의 산업과 인력 구조조정, 북한지역에서의 대량 사유화 과정이 진행될 경우 대량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북한지역에서 탁아와 육아서비스가 민영화되면 여성의 경제활

동에 따르는 기회비용이 증가될 것이며, 통일 이후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지속되지 않으면 북한의 경우 여성의 실업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전망되었다(김경희 2001).

남한과 북한은 이질적인 사회체제에서 발전해왔지만 동일하게 성역할에 기반한 노동분업을 강조하는 가부장적 요소를 갖고 있는데, 이는 여성의 평등한 노동시장 참여와 복지정책의 수혜를 어렵게 하므로 고용과 복지정책에 양성평등을 위한 의제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김경희는 주장한다. 또한 여성의제를 명확히 하려면 여성들의 정치참여와 권력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즉 여성이 수혜자가 되는 것을 넘어 복지제도 구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김경희 2001).

김경희는 2001년 글에서 북한의 경우 여성정책을 전담하는 기구는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전국 조직인 조선민주주의여성동맹이 있는데 이 조직은 정치학습을 위한 것으로 여성의 권익을 대변하는 조직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더구나 1991년에 제정된 사회주의 가족법은 전통적 가족주의를 부각시켜 그 이전의 법령들보다 여성불평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한다(김경희 2001).

다른 한편 김귀옥에 의하면, 북한의 여성문제는 가부장제 사회주의의 결과로 볼 수만은 없고, 북한식 사회주의의 특징과 북한이 처한 환경적 조건이 관련된 결과이다. 남북이 분단되어 대치한 상황에서 발전시켜야 했던 북한식 사회주의의 처지와 조건, 6·25전쟁 후 부족해진 남성노동력, 미국, 일본 등이 취해온 사회주의 봉쇄정책, 남북의 군비경쟁, 중·소대립의 틈바구니에서 자립노선을 취하지 않을 수 없

있던 국제상황, 1990년대 북한의 자연재해와 경제위기, 유교의 잔재 등과 관련지어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김귀옥 2000).

이러한 복합적 요인으로 발생하여 축적된 북한의 성차별적 인식이 남북한 통합과정에서 사회통합의 장애요인 및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하에서 장기간 생활했던 남북한이 현실생활에서 각각의 고유한 젠더인식을 보편적인 생활양식으로 제시할 경우 통일한반도 주민들의 불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통적인 가부장적 권위사회와 사회주의의 마초이즘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북한 주민의 남성우위 인식은 남한 주민들과 심각한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남성욱·이가영·채수란·배진 2017; 박형빈 2018).

또한 도기숙은, 자본의 논리에 의해 전개되는 통일이 남북한 여성들에게는 끔찍한 악몽이 될 가능성, 특히 여성의 상품화가 극대화되어 있는 남한의 시장체제에서 북한 여성들은 단순노동, 저임금 노동자, 매춘, 윤락녀 등 퇴폐적 소비문화의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북한의 여성들이 사회의 하층계급으로 전락하고 남한 강남 부자집의 가정부로 대거 취업하는 등 남북한의 극심한 빈부대립과 '감정' 분단을 예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그는 보았다(도기숙 2005).

독일의 경우 여성정책을 부차적으로 다루었고 서독이 남녀 구별에 중점을 둔 '정상가정' 정책이 여성 지위를 더 악화시켰다. 동독도 여전히 여성의 자리는 가정이라는 성역할 규범을 해체하지 못했다. 그런데 북한의 경우 국가를 하나의 '대가정'으로 인식하고 대가정의 가

장인 아버지 수령에 대한 충성을 핵심윤리로 삼음으로써 가부장적 사회주의의 모순이 동독에 비해 훨씬 심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북한에서는 사회주의적 혁명과 가부장제적 현모양처의 공존을 보인다는 것이다(도기숙 2005).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여성들은 자신들이 극복해야 할 대상이 가부장적 남성이라기보다는 가난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사회주의 대가정론’의 영향하에서 가부장적 온정주의가 성별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가부장적 성별 위계를 비판하는 것이 곧 국가의 정치체제를 비판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윤택림 2001).

이들에게는 자본주의의 착취와 제국주의 침략이 만들어내는 여성 억압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남한의 페미니즘 운동을 자본주의적 상업주의와 퇴폐주의의 결합으로 간주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정현백은 남북 여성 간의 원활한 대화를 위해서는 남한 여성이 페미니즘 이론이나 이념을 통해 북한 여성을 평가하기보다는 이산가족문제 또는 통일 후 여성정책과 같은 보다 구체적인 이슈를 통해 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정현백 2005b).

전북회는, 독일 통일의 사례에서 남북한이 통일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남북한 여성들 간의 갈등요소들과 연대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비록 남북한의 경우는 구 동·서독의 경우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경우에 비추어 예상할 수 있는 것은 통일과정에서 여성의 이해가 대변되지 않고 기존의 성차별적인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구조가 그대로 유

지되면 통일 후에 여성들은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과정에 남북한 여성의 연대와 정치세력화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남북한 여성들의 연대를 위해서 요구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서로간의 다름을 인정하는 ‘차이의 정치’라고 보았다. 남북한 여성들은 같은 민족이지만, 남북한이 분단된 지 60여년이 넘는 세월 동안 상이한 체제 하에 서로 다른 사회화로 인해서 남한 여성과 북한 여성들은 상이한 생활태도와 양식, 가치관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남북한 여성의 연대가 민족적 동질성을 기반으로 하는 연대일 경우 독일의 경우처럼 ‘차이’가 부정되는 ‘제한적 연대’가 되고 남북한 여성들간의 갈등을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또한 남북한 여성의 연대에서 북한 여성들의 사회적, 문화적 차이가 인정되지 않고, 남한의 페미니즘과 여성운동을 보편적인 것으로 요구할 경우 북한 여성들의 협력을 얻을 수 없다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통일을 통해서 남북한 여성 모두가 각자의 여성운동이나 여성정책의 문제와 한계, 한국의 여성운동의 지향점에 대해서 성찰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전복희 2017).

사실상 북한은 체제적 차원에서 남한보다 더 일찍 성평등적 인식을 보여주었다. 1970년대에 김일성은, 사회에서 일하는 여성이 많은 데 비해 여성간부가 매우 적다고 비판한다. “사회에 나와 일하는 여성들이 전체 로력자 수의 절반을 차지한다면 마땅히 여성간부가 전체 간부 수의 절반을 차지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 결과 1990년대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서 여성 비율은 약 20.1%, 지방인

민회의에서는 30%에 달한다. 한편 남한의 경우 1996년 당시 전체 국회의원 중 여성의원은 3%, 기초의회의원 중에서는 1.56%, 광역의회의원에서는 5.7%이며 여성장관은 단 2명이었다(김귀옥 2000).

또한 북한의 '사회주의 대가정론'은 기든스의 이론을 빌리면서 다시 불 여지가 있다고 김귀옥은 지적한다. 기든스는 '친밀성 영역'을 민주적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로 파악하여 친밀성을 기반으로 한 '생활정치'야말로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북한은 당원이 현장에서 생기는 문제를 직접 느끼고 해결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으며 당은 인민대중과 일체감을 가져 당과 인민 간 분리가 없어질 수 있다고 본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대가정론은 사회주의 이상과 반대로 봉건적 부문을 되살리는 역기능적 측면이 있다고 김귀옥은 덧붙인다. 그리고 1980년대와 1990년대 북한 경제의 저성장으로 인한 실업률 증대로 국가가 공적 부조비용을 가족 내부로 이전하면서 가족주의 이데올로기를 확대한 측면이 있다고 그는 지적한다(김귀옥 2000).

그런데 남북교류가 부분적으로 북한의 여성관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남북교류의 복측 인사는 주로 남성이었는데 남한에서 교류 협력 과정에 여성을 많이 참여시키자, 북한 당국도 여성들을 현장에 내보내기 시작했다. 정부 차원의 논의 과정에도 남한 여성들이 참여함에 따라 북한 역시 여성 대표를 내보내기도 했다. 이처럼 남한 여성의 등장과 참여 확대가 북한 여성의 참여를 독려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조영주 2012).

(4) 새로운 페미니즘의 도전과 과제

오늘날 새로운 페미니스트들은 과거 ‘올드페미’에 대해 비판적이다. “평화를 논의하는 자리에 여성이 함께 앉아서 여성의 시선을 제한하는 암전한 방법으로는 여성에게 평화란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과거 여성들이 구축한 평화담론에 대해 그런 방법으로는 ‘생존’은 없다고 말한다. 박인혜에 의하면 “순진하게도 우리는 법과 제도만 만들어지면 여성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으나 “법과 제도가 개인들의 삶까지 바꾸지 못한다는 현실 인식 앞에서 운동의 한계를 절감했다”고 했다. “요즘 젊은이들은 구조적인 문제제기와 동시에 여성혐오를 실천하는 남성들을 직접적으로 겨냥”했다. “연대는 동등한 권력을 가진 사람 사이에서 가능한 일”로서 “권력불평등 관계에 있는 여성이 남성과 연대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윤보영 2020).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운동 및 통일담론에 여성적 관점을 환기시키고 정부에 여성 의제를 제기하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법과 제도를 바꾸는 일은 여전히 필요하고 중요하다. 박의경에 의하면 여성/여성주의는 통일의 필요성을 민족동질성의 회복을 중심으로 한 당위론이 아닌 구체적인 여성의 현실에서 찾는다. 분단 상황은 여성의 인권 침해와 피해를 초래했지만, 통일이 반드시 여성의 인권과 지위를 보장한다기보다 오히려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 남북한의 군비 경쟁으로 인한 여성 복지 관련 예산의 축소,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성 인권의 문제, 군사주의 문화의 확산과 가부장적 남성성의 강화 등으로 여성은 이중적 피해를 입고 있다(박

의경 2007; 조영주 2012). 그리고 독일 통일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급격한 사회 변동은 동독 여성의 삶의 질을 현격하게 저하시켰다. 이러한 다른 사례를 통해 여성들은 통일이 여성의 삶에 큰 변화를 야기할 것이라는 것을 절감해야 하며(조영주 2012), 좋은 싫든 이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3. 생태 분야의 통일담론

남한에서는 1960년대 경제성장이 우선시 되는 가운데 환경오염은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고 정부의 뒤늦은 대응으로 1977년에 와서야 환경보전법이 제정된다. 이어 1980년에 환경기준과 배출허용기준,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었으며 1990년에 환경정책기본법, 1993년에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된다. 또한 쓰레기종량제 실시와 재활용방안이 강화되는 등 환경정책의 수단이 다소 다양해졌다(강미화 2001).

시민들의 대응은 이보다 빨라 1960년대 공단 주변 피해지역 농어민을 중심으로 주민운동이 생겨난다. 좀 더 전문성과 조직적 기반을 갖춘 환경운동은 1970년대 말에 등장한다. 주로 ‘공해추방’을 쟁점으로 하여 환경오염 실태를 밝히거나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주력했다. 1987년 이후에는 국가주도형 개발주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한다. 이후 시민들의 참여가 확대되면서 환경운동의 대중화

가 이루어지고, 환경문제를 단지 기술적으로 해결하려는 환경관리주의에서 현대 산업문명 자체를 전환해야 한다고 하는 근본생태주의까지 다양한 입장이 등장한다(강미화 2001).

환경운동, 생태운동에서도 소수이지만 통일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통일문제의 생태주의적 관점이란 남북관계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한반도의 통일생태계 구축을 위한 접근이다(전영선 2017). 1989년 ‘한살림선언’은 한국적이면서 동시에 우주적인 통일철학을 제시했고 1996년 최병두는 민족과 생태를 동시에 개념화한 생태민족주의를 제안했다.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한반도의 통일이라는 미래적 차원, 총론적 차원에서 녹색비전을 제시하는 담론들이 점차 증가한다(박영균 2015).

이 장에서는 전 장과 마찬가지로 통일담론의 세가지 구분인 민족주의, 보편주의, 실용주의를 원용한다. 우선 생태 관련 통일담론을, 당위의 관점 및 이익의 관점 두가지로 나누고, 전자는 다시 민족과 지역을 강조한 구심적인 것과, 세계와 지구를 강조한 원심적인 것으로 구분한다. 구심적인 것은 한반도의 민족, 지역, 공동체가 강조된 것이고, 원심적인 것은 생명 일반 및 지구를 중시한 생태근본주의적 입장이다. 세번째인 이익의 관점은 남북한 인간복지를 중시한 환경관리주의가 포함될 것이다.

1) 한반도와 한민족의 고유함과 특수성

(1) ‘한살림선언’의 민족론과 통일론

한국의 생태운동은 초기부터 지역적이며 동시에 지구적이었다. 초기 한국 생태운동을 이끈 장일순은 1952년 원월드운동(세계연방정부운동)에 동참했고 아인슈타인과 여러 차례 서신을 교환하기도 했다. 원월드운동은, 일본에 원폭이 투하되자 아인슈타인이 반성을 하면서 세계는 하나의 연립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운동이다(장일순 2016). 장일순은, 조봉암에게 큰 영향을 받아 1950년대에는 평화통일운동을 주창했고 1960년대 초반까지 민족통일, 민주화라는 화두 속에서 살았다. 1961년 5·16군사쿠데타가 나자 평소 주장하던 중립화 평화통일론이 빌미가 되어 3년간 옥고를 치른다. 그는 감옥에 다녀온 후 변화됐다고 한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오른다’고 말하던 사람이 감옥에 갔다 오고는 변했다. 물결을 따라 흐를 줄 알게 됐다.”고 한다. 이후 그는 사회운동가의 길을 걷는다. ‘파워게임과 야합이 판치는 정치판’보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밑바탕에서 돕는 일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최성현 2004; 이나미 2019).

그러면서도 그는 통일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았다. 그는 조합원 교육시 협동운동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길로써, ①꼭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는 일, ②교육을 부단히 지속성 있게 추진하는 일, ③남과 북의 통일에 대비하여 협동운동을 북측 사람들에게 심어주면서 자본

주의 모순과 사회주의 모순에서 살 길을 찾아주는 일, ④시대에 맞는 협동문화 개발을 꾸준히 하는 일, ⑤돈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지만 수단이지 사람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일을 지적했다(무위당을 기리는 사람들 2004).

그의 활동 터전인 원주는 그와 지학순 주교의 활동으로 '1970년대 민주화운동의 성지'라 불렸다. 1977년 그는 기존의 운동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사회변혁 운동을 공생의 논리에 입각한 생명운동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핵, 공해, 자연 파괴에 대해서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모두 무관심하다는 것으로(최성현 2004), 조화와 공생을 통한 협동을 강조하게 된다. 1982년 '생명운동'이라는 개념이 기록된 최초의 문건 "생명의 세계관 확립과 협동적 생존의 확장"이라고 하는 이른바 '원주보고서'가 발표된다. 이 보고서는 생명의 위기와 산업문명의 위기, 생명의 질서로서 협동적 삶의 복원을 제시함으로써 생명운동 사상을 제시했다. 1983년 10월 29일 자연과 밥상을 되살리자는 목적으로 농산물 도농직거래 조직인 '한살림'을 창립한다(이나미 2019).

1989년 작성된 '한살림선언'에는 통일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한살림 2019). 첫째, 남북 집권 세력을 모두 비판하며 이들이 통일문제를 권력획득과 유지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 반도를 갈라놓은 것은 억압적 기계문명, 산업문명으로, 분단을 유지시키는 것은 낡은 기계문명의 명맥을 유지하면서 인류의 진화를 억제하는 소극적인 되먹임고리라고 했다.

둘째, 현재의 동요는, 적극적 되먹임고리를 통해 진화의 분기점을 돌파하는 혁명적 순간을 맞게 될 것이며 인류 진화의 창조적 초월은 바로 한반도에서 시작될 것이라는 것이다. 한반도는 산업문명의 비극적 운명이 집약적으로 연출되는 무대이며 우리 민족의 현존은 소외된 인간 실존의 응축된 상징으로 우리 민족은 방황하는 인류를 대신하여 앞장서서 과감한 창조적 진화의 모험을 감행토록 하는 추진체라는 것이다. 우리 민족이 생명의 씨앗을 전 인류, 전 세계에 퍼뜨리고 인류의 진화에 앞장서서 나선다면 우리 민족은 통일을 성취할 뿐만 아니라 인류 진화의 대약진의 여명을 알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셋째, 진정한 통일운동은 우리 민족의 통일만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 전 생태계, 전 우주생명과 통일을 지향하는 생명운동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생명의 이념과 활동인 한살림은 모든 개인, 모든 민족, 전 인류, 전 생태계가 한울님, 즉 우주생명의 태 속에서 태어난 한울의 젖을 빨고 자라는 한 형제, 한 동포라는 우주적, 생태적, 공동체적 각성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고 했다.

넷째, 민족통일은 우리에게 민족적 지상과제로서, 하나의 통합된 생명인 한민족이 물리적 힘과 기하학적인 선으로 잘릴 수는 없다고 했다. 이것은 자연의 결을 거스르는 일이며 생명의 진화를 역행하는 일이란 것이다. 또한 진정한 통일운동은 인류역사의 진화 속에서 우리 민족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인식하는 데서 그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우리 민족의 역할은 고난과 시련의 역사를 새로운 역사 창조의 원동력으로 전환해 인류 진화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은 다소 신비적이고 또한 선민의식을 보이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으나 오히려 세계에서 제일 소외된 존재로서의 한민족이 고난을 창조적으로 극복할 것을 결의하는 내용으로 읽힐 수도 있다. 또한 분단 한반도의 고유성은 문명 비판의 생태근본주의에 닿아있다. 이 선언문에 의하면 “기계의 힘과 논리가 분할하고 단절하고 폐쇄한 모든 것을 다시 통일하는 일을 시작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통일을 성취하고자 한다. 인간 마음의 감성과 이성, 분석적 지식과 직관적 지혜, 육체와 정신, 개인과 공동체, 자연과 인간을 다시 통일시키면서 이 모든 것을 한울생명에 통일시키는 생명의 대통일운동을 전개해 나아가려 한다.”는 것이다. 덧붙여 “전 우주, 전 생태계, 전 인류를 생각하면서 민족 통일을 위한 실천 활동을 수행하고 민족의 통일을 생각하면서 생태적 균형, 사회정의, 자기실현의 길을 모색하려 한다”고 선언한다.

이러한 선언의 사상적 기반은 동학으로, 최제우가 통일의 대원리를 제시했다고 본다. 즉 시천사상으로, 거룩한 우주생명이 자기 안에 있다는 각성이다. 우주의 창조적 대통일사업에 동참하여 우주생명으로 동귀일체되는 생명의 궁극적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 선언문은 마르크스의 업적은 인정하지만, 현재는 그 혁명의 깃발이 바랬다고 보았다. 그리고 인류에게 빵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빵도 필요하며, 이는 자기 안에 있는 우주, 또한 그 우주 안에 있는 자기를 깨닫는 것이라는 것이다(한살림 2019).

(2) 한반도의 '이중위험'과 통일의 방향

경제지상주의와 근대 문명이 비판받는 현대에 이르러 다시금 한반도 지역의 자연은 재조명되고 있다. 남북한은 서로 다른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생산지상주의를 공통적으로 지향했다. 분단이라는 현실은 생산지상주의를 더욱 촉진했다. 즉 분단이 가져온 체제 경쟁으로 남북이 경제개발에 치중하여, 자연은 경제적 자원으로만 취급되었고 그 과정에서 환경은 파괴되었다. 박민철에 의하면 '국가주도형 약탈적 개발주의'가 한반도 전체에 경쟁적으로 확산되었고 그 결과 생태계의 급속하고 광범위한 오염이 단기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다른 지역의 생태위기와 다른 점이다(박민철 2017).

이에, 생태민족주의를 주창한 최병두는 "통일은 단지 우리 민족의 사회공동체 구축이라는 점 뿐만 아니라 민족의 삶의 터전인 한반도의 생태공동체 건설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주장했다(최병두 2003; 박민철 2017). 그러나 사실상 생태와 통일을 결합시키려는 시도를 쉽게 찾기 어렵다. 생태주의자들은 생태위기의 원인으로 민족국가 건설과 같은 근대화 노력을 들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과제라고 하는 반면, 통일론자들은 민족국가의 완성이 목표이기 때문이다. 박민철은 '분단체제론'을 국토의 분단을 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영역에서의 분단문제를 인식한 진전된 논리로 평가하지만 인간, 사회, 자연을 포함한 한반도 생명계 전체에 닥친 폭력적 상황을 포괄할 정도로 확장되지는 못했다고 본다. 그러나 두 체제의 통일을 넘어, '한반도 생명 전체'의 통합을 목표로 한 통일론이면 생태주의와의 결

합이 가능해진다. 즉 남북의 인간-사회-자연을 유기적으로 통합함으로써 ‘한반도 생명 전체’의 공존을 가져오는 문제로 통일을 보는 것이다. 현대 생태철학에서 생태는 생물학 영역을 넘어 인간, 사회, 자연이 맺는 유기적 관계의 지향을 포괄하는 가치론적 용어로 확장되었다. 가타리는 생태학적 대상을 ‘인간-사회-자연’이라는 다층적인 구도의 접합, 즉 생명 전체의 영역으로 규정한다(박민철 2017).

또한 생태적 입장은 한반도가 갖는 특수성으로 ‘이중위험’을 든다. 올리히 벡의 『위험사회』는 현대인들이 직면한 위험을 지적했는데, 한반도는 이에 더하여 분단위험까지 떠안고 있다. 즉 ‘이중위험의 사회’인 것이다(김기운 2011; 전영선 2017). 그런데 분단위험은 생태위험이기도 하다. 군사시설의 확대와 핵개발, 북한의 금강산댐, 황강댐 방류, 군사적 경계 시야 확보를 위한 DMZ 내 산물 등이 그것이다. 군사보호시설은 그린벨트 면적의 2배가 넘고 서울시 면적의 15배에 달하며, 군사시설과 군사훈련으로 오염과 훼손이 심각한 상태이다. 분단위험이 생태위기를 확산하고 또한 생태위기가 분단위험을 증가시킨다(박민철 2017). “환경문제는 계급이나, 지역, 민족에 기반을 둔 사회적 갈등과 연루될 때 더욱 폭발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한면희 2010; 박민철 2017). 따라서 전쟁과 폭력으로 분열된 국가들 사이에 환경협력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려는 전 세계의 다양한 시도들이 있다(박희병 외; 박민철 2017).

그러므로 남북한 역시 환경협력 더 나아가 생태지향적 통일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생태이념은 인간, 사회, 자연

의 평화관계를 생성하고자 하므로 통일한반도 실현의 과정과 완성지점을 조건짓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생태이념이 통일 과정에서 결합될 필요가 있는 이유는 “생태주의는 현재 상황에 대한 평가와 보다 나은 삶에 대한 전망을 통해 특정한 규범들을 생산하는 한편, 거대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구체적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문제에 이념지향과 그것의 현실화 전략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박민철 2017).

생태는 통일 이후에도 중요한 요소이다. “한반도 통일은 근대적 기획의 민족국가 형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평등, 인권, 민주주의, 생태와 같은 보편적 가치의 실현을 통해 민족국가의 모순을 극복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 건설을 요구하기 때문”이다(박민철 2017).

(3) ‘장소’의 재발견과 한반도의 통일생태계 구축

현대의 생태철학은 그동안 무시되어온 ‘공간’에 다시 집중한다. 이로써 한반도라고 하는 고유한 공간은 생태철학에서 다시 재조명될 수 있다. 근대가 판옵티콘 등 공간의 효율화로 상징되지만 그것은 시간을 위한, 시간에 봉사하는 공간으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한 공간의 재구성이다. 즉 장소 자체가 갖는 고유한 의미는 약화되고 장소는 효율성을 위해 모두 똑같이 표준화된다. 이상헌에 의하면 현대의 공간 조작 방식은 ‘무장소성(placelessness)’이다. 이는 개인이나 집단에게 의미 있는 장소가 없어지고 특정 장소가 지닌 의미 역시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말한다. 반면 획일적이고 표준화된 공간이 생산된다(박민철 2017). 현대사회로 올수록 ‘탈장소화’는 진전된다. 사람은 어느 장소

든 속하지 않게 되었고, ‘언제’, 즉 ‘시간’이 중요해졌다. 인터넷, 화상 회의 등으로 더욱 그렇게 되었다.

그런데 생태는 이러한 공간, 장소를 다시 보는 것이다. 즉 구체적이고 특수한 장소의 재발견으로, 이로 인해 생태주의는 분권, 지자체,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된다. 한반도의 지역적, 생태적, 문화적 의미도 다시 중요해진다. 생태담론이 통일에 중요한 이유는 이렇듯 생태담론에서 공간이 핵심적이기 때문이다. 지역, 장소, 공간에 대한 논의는 생태담론의 핵심으로, ‘장소’는 생태적 가치의 실현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개념이다. 생태주의는 ‘무장소성’에 도전하면서 자연환경과 인간의 문화가 함께 진화하여 안정화되었던 공간을 의미 있는 장소로 재구성하는 일에 집중한다(이상현 2011; 박민철 2017). 따라서 근본생태론과 사회생태론 모두 장소적 맥락에서의 생태적 공동체 구성을 핵심전략으로 추진한다. 북친의 ‘자기통치의 코뮌적 지역자치체,’ 앙드레 고르스의 ‘자율규제의 사적영역,’ 가타리의 ‘자기준거적인 실존적 영토’ 등으로 공간은 재조명된다. 또한 이러한 공간은 반드시 가시적이고 구체적으로 경계화된 물리적 영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으로 형성되고 행위자에 의해 창조된 공간이며 이것을 회복하자는 것이 생태주의의 핵심가치이다(박민철 2017).

문순홍 역시 생태위기의 원인을 ‘장소 귀속 탈피’라고 하여, 기존의 논의를 빌려와 위기를 진단한다. 장소 귀속 탈피는 ‘어떤 장소가 지역적인 맥락과 맺는 정치, 경제, 문화적 상호관계를 상실하는 것’이다(문순홍 2006; 박민철 2017). 문순홍에 의하면 생태위기는 “바로

근대의 분열된 시공간관, 이로 인한 죽은 공간으로서의 장소 그리고 이 사회 체계의 장소 귀속 탈피에 그 원인"을 두고 있다(문순홍 2006; 박민철 2017). 박민철은 한반도가 분단으로 인해 '죽은 공간으로서의 장소'의 확대가 가장 극적으로 전개되었다고 주장한다. 분단에 의해 '생태계는 생성과 순환이라는 시간 개념이 사상'되었고 '반생태적 공간'이 확장되었다는 것이다(박민철 2017).

박민철은 '분단생태'를 분단체제로 인해 생태적 의식과 가치가 왜곡되어 버린 현재 상황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제시한다. 분단생태라는 새로운 개념의 주조와 사용을 통해 통일-생태철학의 핵심대상을 설정하고 세분화된 담론의 장을 확대하고 철학적 실천을 추동한다는 것이다(박민철 2017). 한편, 분단생태의 반대가 되는 '통일생태'는 '인간-사회-자연'이라는 생태계 전체의 호혜적인 상호관계성 회복에 대한 가치지향을 드러내기 위한 개념적 조어이다.(박민철 2017).

한반도 분단은 분단 그 자체로 머물지 않았다. 전영선에 의하면 분단도 생물처럼 많은 것을 만들어 낸다. 언어의 분단, 문화의 분단, 생활의 분단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은 교류협력의 성과를 통해 통일의 동력을 생성하고, 남북관계 추진의 에너지를 축적하는 과정으로서, 통일과 관련된 다양한 주체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총체적인 과정이 되어야 한다. 이로써 통일과 관련한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통일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전영선은 강조한다. 통일은 분단으로 익숙해진 분단 사유를 극복해나가는 과정이다. 즉 통일은 '과정' 속에 들어와야 하는 것으로, 이것이 통일 문제를 총

체적인 관점에서 통일 환경을 전환하는 문제로 접근해야 하는 이유이다(전영선 2017).

이에 “‘통일-생태철학’은 생태계의 호혜적 상호 관계를 새롭게 구축함으로써 한반도 통일을 점진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재구성된 공간 내지 장소, 즉 ‘통일생태(계)’의 구축을 목표로 한다.” 박민철이 제시하는 통일생태(계)의 구체적 의미는, 첫째, 생태적 가치를 회복하고 현실화시킬 수 있는 ‘거주 가능한 실존적 생태영토’를 의미한다. ‘거주가능함’은 단순히 ‘살 수 있다’는 것을 넘어 인간-자연-사회가 생태적 순환 메커니즘과 상호 호혜적인 관계 속에서 존재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박민철 2017).

둘째, 통일생태는 분열된 생활세계를 자기준거, 자율규제, 자기통치를 통해 회복시킬 수 있는 자율적 생태공간을 의미한다. 자기준거, 자율규제, 자기통치의 핵심은 특정 공간의 가치의 기준을 국가나 아버지와 같은 초자아에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율적으로 정립한 가치에 따라 규정하는 것에 있다. 즉 통일생태는 주체들이 외부적 타율규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기준과 가치에 따라 의미를 부여해서 만들어진 생태적 공간이다. 북친은 자기통치의 코뮌적 지역자치체를 사회생태론의 핵심에 두었다. 이때 이러한 코뮌은 ‘계급과 위계구조로 인해 인간과 자연생명계가 입었던 여러 상처들이 회복되는 장소,’ ‘공통된 유대감에 기초한’ 장소를 의미한다(박민철 2017).

한편, 문순홍에 의하면 생태적 사유는 대안적 유토피아를 설정하라는 요구, 즉 에코토피아에 대한 청사진을 내놓으라는 요구와 향시

적 긴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한 강요된 질문에 호응할 때 자칫 보수화된 ‘생태론자들만의 이상사회’를 제시하는데 그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문순홍 2006; 박민철 2017). 따라서 중요한 것은 존재와 당위, 현실과 이상의 긴장에 입각한 생태적 사유의 지속적 실천이다(박민철 2017).

박민철은, 한반도의 통일과정과 그 이후에도 생태주의가 주도적 이념으로 작동하게 하려면 다음과 같은 실천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통일-생태적’ 감수성의 회복이다. 인간과 자연의 상호의존성과 호혜적 관계성을 인식하는 것이 생태적 감수성으로, 이를 한반도 분단문제로 확장시킨다면 통일-생태적 감수성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한반도에 존재하는 직접적, 구조적, 문화적 폭력에 반대하고 생명권의 보존과 실현을 요구하는 감수성으로, 이러한 감수성은 행동양식의 변화를 추동시킬 수 있다. 둘째, 이를 기반으로 통일-생태적 윤리학을 구축하려고 시도해야 한다. 즉 자연에 대한 윤리적 시선의 회복이다. 셋째, 로컬운동의 세부 프로그램 실행이 필요하다. 조명래는 녹색상품 소비의 제도화, 맞춤형 녹색교육의 제도화, 녹색 공공영역의 구축, 녹색문화의 육성을 제시한다(조명래 2013; 박민철 2017). 지구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적으로 행동, 또는 지역적으로 사고하고 지구적으로 행동하는 “로컬 운동의 기반 속에서 시작되는 통일-생태정치는 한반도 분단체제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는 민주주의의 실험장, 분단 국가주의에 종속된 주체가 아니라 새로운 통일한반도를 구성할 수 있는 시민적 주체의 형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박민철 2017).

2) 생명평화운동과 녹색평화론

(1) 동북아 생명공동체와 생명평화

생태주의적 접근은 통일문제를 총체적으로 인식하게 한다. 전영선에 의하면 이는 통일운동의 새로운 대안이 모색되는 것으로, 생태주의적 접근은 통일문제를 민족문제, 경제문제에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갈 수 있는 사유적 전환의 가능성을 높여준다. 총체적 관계란 “살아 있는 것들의 환경 또는 살아 있는 것들과 그것들을 둘러싼 환경”의 상호의존성을 의미한다. 통일문제를 개별적인 문제로 규정하기보다는 통일을 둘러싼 환경의 총체적 관계를 규명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전영선 2017).

이때 필연적으로 한반도 문제는 한반도를 넘어가며, 또한 그러한 관점에서만 통일을 사고할 수 있게 한다. 전영선에 의하면 또한, 관점의 개방성을 통해, 즉 현재 민족주의적 가치에 과도하게 경도되어 있는 사회문화교류의 의미를 평등, 인권, 민주주의, 생태, 복지와 같은 보편적 가치 실현의 장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전영선 2017). 그러한 점에서 김지하와 함석헌은 보편적 가치를 지향한 생태주의자, 생명주의자로 평가할 수 있다.

김지하는 우선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통한 한반도 통일을 주장한다. 그는 동북아시아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이 지역이 세계의 관심을 받지만 서양 근대문명의 지배방식으로는 총체적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한국과 일본의 새로운 시민세력이 개혁운동,

생활운동, 새문명 건설운동을 통해 교류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여, 이것을 '동북아 생명공동체운동'으로 명명했다. 그에 의하면, 특히 여성과 주부들이 이 운동을 주도하여 새 문명운동 전면에 주역으로 등장해야 하고 기존의 국가주의적 체제에 대한 비판적 대안세력으로 부상해야 한다. 또한 시민적 공공 영역을 건설, 확대하여 “장기적으로 시장을 거룩한 삶의 터전으로 성화시키고 국민국가를 다핵적·확산적 시스템으로 점차 변화, 권력을 분산시키는 일이 동북아 새 문명 창조의 중요한 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리하여 “이러한 동북아 생명공동체의 확산은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과 북한의 개방·개혁에도 좋은 조건을 만들 것이며 중국의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통일철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김지하 2002).

백범 김구 선생은 일찍이 “통일에는 통일의 철학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통일의 철학이란 무엇일까. 민족은 개인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생명체다. 분단은 한 생명을 이중 구속한다. 이중 구속당한 한 생명은 ‘이것’ 또는 ‘저것,’ ‘아니다’ 또는 ‘그렇다’를 양자택일하도록 강요당한다. ... 생명은 본디 ‘이것’이면서 ‘저것’이요 ‘아니다’이면서 ‘그렇다’이다. 살아 있는 생명은 개체와 전체, 자유와 평등, 안정과 변화를 함께 요구하고 함께 구현한다. ... 이중 구속의 민족분단에 대한 처방은 이러한 불연속적 연속의 이중적 메시지일 수밖에 없으며 참된 민중의 삶에서 이 메시지는 드러난다. 우리가 세계사와 주변 열강의 숨막히는 변화 속에서 남북의 평화적 공존을 추구할 경우, 그 공존의 컨텍스트는 개체와 전체, 자유와 평등, 통제와 경쟁, 주체와 외세 등에 관한 ‘아니다-그렇다’의 역동적 체계일 수밖에 없

으며 그 컨텍스트 안에는 반드시 그 공존을 질서짓는 더욱 넓은 메타컨텍스트가 내재하는데, 이 둘 사이의 연관 또한 ‘아니다-그렇다’의 관계가 된다.... 그러면 남북 공존의 메타컨텍스트는 무엇일까. 그것은 공존을 질서지으면서도 공존을 끊임없이 수정하고 또한 넘어서는 완전통일, 새 문명을 건설하는 창조적 통일의 전망이다. 분단과 공존, 공존과 통일의 관계 안에서 산업문명·기계문명에 의해 분열된 인간과 우주,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을 ‘아니다-그렇다’의 불연속적 연속으로 통합할 때 정신분열·노동소외·환경오염을 함께 극복할 참다운 민족주체의 보편적 세계관, 곧 통일의 철학이 드러난다. 그것은 창조적인 질적 확산진화 사상이다. 완전통일이 아니라도 공존만 할 수 있다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창조적 통일의 전망과 그 견인력이 없다면 급변하는 세계관계 속에서 공존 그 자체가 위태롭다.

‘아니다-그렇다’는 동학의 ‘불연기연(不然其然)’을 뜻하는 것으로, 이 불법적 확신, 양자택일의 강요, 분열과 갈등을 경계하는 논리이다. 함석헌도 한반도를 넘어서는 평화철학을 제시한다. 그는 “이제 우리의 나아갈 길은 간디를 배우는 길밖에 없다”고 했다. “비폭력주의는 서로 경쟁이 아니고 문제가 있는 때에도 자기희생에 의하여 서로 저쪽의 속에 숨어 있는 좋은 힘을 끌어내도록 하자는 노력”이라고 설명한다. “비폭력이 단순히 주먹이나 무기를 아니 쓴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비폭력을 설명한다(함석헌 1983; 김대식 2016).

그것은(비폭력은) 너 나의 대립을 초월한 것입니다. 차별상(差別相)을

뛰어 넘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 역사상 이것을 처음으로 큰 규모로 실행했던 간디는 이것을 참, 곧 진리파지(眞理把持)라 불렀습니다. 여기는 인격의 차별이 없는 것은 물론, 인축(人畜)의 차별조차도 없습니다. 생에 대한 절대의 존경을 그 도덕의 토대로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에서 버릴 사람이 없습니다.

주요섭에 의하면 생명과 평화는 한국적 대안의 열쇠말로, 생명평화운동은 유럽의 생태주의운동에 비견되는 한국적 대안 담론과 실천을 축적해 왔다. 공리적 협동조합을 넘어서는 도농상생, 생산·소비 공동 참여로 새로운 형태의 협동조합 모델을 제시했고 탁발순례와 삼보일배 등을 통해 깨달음과 영성의 사회운동을 창조해왔다. 이는 수행과 생활과 정치가 통일되는 동아시아적·동양적 전통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에 의하면 한국의 사회운동은,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대항형 사회운동', 1990년대와 2000년대 중반까지는 '대변형 사회운동'이 주를 이루었고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생명평화운동, 다양한 형태의 풀뿌리 운동과 함께 '대안형 사회운동'이 성장하였다(주요섭 2015).

(2) 평화와 녹색 간의 갈등 또는 소통

통일담론 내에서 평화와 생태가 늘 조화로운 것은 아니었다. 2009년 박명규는 '남북정상회담과 녹색평화선언구상'에서 '녹색가치와 평화지향을 결합'하는 '녹색평화론'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녹색에 대한 강한 지향, 즉 생태근본주의 입장을 비판했다. 즉 『『녹색평론』 같은

흐름은 농촌공동체를 예찬하는 반근대적 지향성으로 경도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철학적, 인문학적 녹색론들도 대체로 꿈이나 상상력, 담론 차원에 머물거나 소규모 공동체운동과 연관되면서 종합적인 미래 비전으로서의 무게를 갖추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박명규 2010; 박영균 2015).

좀 다른 관점이지만 백낙청은 2003년에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환경관리주의적 이념’ 대 ‘경제적·기술적 발전 자체를 적대시하는 생태근본주의적 노선’이라는 상호 대립적 양자를 비판하고 ‘생명의 지속적 발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초한 통일에 대한 사유를 주창했다(백낙청 2003; 박영균 2015). 이에 『녹색평론』 같은 흐름의 창시자인 김종철은 백낙청의 ‘생명의 지속적 발전’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이고 모호하며 자본에 타협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일관되게 “소농과 그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생태적 순환사회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영균 2015).

조배준은 마찬가지로 녹색의 관점을 흐리는 주장을 강하게 비판한다. 그것은 ‘녹색평화론’이라는 개념화의 시도가 무색하게, ‘녹색’의 시각을 풍부하게 밝히고 그 입장을 견지하려는 의지보다는, 평화 추구의 관점만 부각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에서 진행되는 통일한반도의 녹색비전이 ‘녹색’보다는 ‘평화’를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면서, 통일에 관한 녹색담론들이 결국 ‘녹색’을 ‘교란’시키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결과 녹색에 대한 평화의 우선성, 더 나아가 평화에 대한 안보의 우선성이 강조될 수 있다는 것이다(조배준 2017).

그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 또한 남한의 핵발전소가 오늘날 한반도 ‘핵에너지’의 어떤 특성을 말하고 있는지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생태적 삶의 조건을 불안전하게 만들고 평화를 위협하는 잠재적 위험요소를 축적한다는 점에서 남한의 핵발전소와, 분단 구조를 확대재생산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생태 환경에 동시적 위협을 가한다는 점에서 북한의 핵무기는 모두 비판과 지양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조배준 2017).

그에 의하면, 탈분단의 녹색통일을 이론화하고 녹색평화의 통합적 비전을 제시하면서 ‘핵 없는 한반도’를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분단 구조 속에 사로잡혀 있는 셈이다. 따라서 녹색통일론에서 우선적으로 사유될 지점은 ‘한반도와 핵’이라는 문제 설정이고, 그 방향은 가장 실질적이고 명확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전면적 탈핵화를, 분단체제의 극복, 평화 통일의 추구, 녹색 한반도의 지향이라는 세 가지 동등한 수준의 논의선상에서 담론화시키는 것이다. 핵의 군사적 사용에 대한 위험성만을 의제화하는 ‘비핵화’ 프레임의 한계를 인식하고, 모든 핵에너지 사용에 대한 현재적 폐기와 미래적 포기를 요구하는 ‘탈핵’을, 남과 북 모두에게 적용되는 녹색 비전의 일관적인 기본전제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조배준 2017).

박영균도 마찬가지로, 민족적 동일화의 욕망 위에서 진행되는 통일운동 및 남북교류협력이 ‘민족의 이익’이라는 차원에서 녹색의 이념과 가치를 포획하는 ‘변질과 타락’, 또한 녹색통일담론 내부의 ‘교란’ 요인에 대항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녹색통일담론 내

부의 ‘교란’은 북한의 에너지난 해결에만 주목하면서 ‘재생에너지’가 아닌 반녹색적인 ‘신재생에너지협력’을 내세우는 ‘물타기’를 하거나 녹색의 생태주의 프레임을 ‘평화’, ‘복지’와 결합시켜 결국에는 무늬만 녹색인 녹색담론들을 양산하는 것이다. ‘평화의 관점’에서 보면 ‘남북의 평화’를 위협하는 핵무기와 비핵화가 초점이 되지만, ‘녹색의 관점’에서 보면 자연생태계를 파괴하고 생명파괴적인 위협을 생산하는 ‘핵무기뿐만 아니라 소위 핵의 평화적 이용’을 포함한 모든 핵에 대한 폐기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저탄소발전 방식의 모색과 더불어 핵기술에 대한 관심이 다시 불거지는’ 현상과, 오랫동안 녹색진영에서 비판해 온 ‘핵무기와 핵의 평화적 사용의 분리’를 경계한다. 구도완도 “‘핵의 평화적 이용’은 ‘핵의 군사적 이용’과 떼어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하면서 이런 구분은 “핵발전의 경제성, 불가피성, 안전성 담론을 지속적으로 변형, 재생산하면서 이 시스템을 유지”하는 이데올로기라고 비판했다(구도완 2012; 박영균 2015).

이에 대한 해법으로 박영균은, 녹색은 녹색대로, 평화는 평화대로 그 나름의 독자적인 지위와 역할을 분명히 하고 각각의 영역에서 남북의 교류와 협력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평화가 반핵폭력에 초점이 있다면 녹색은 생명에너지의 생태학적 순환에 초점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에 의하면, 우선 평화는 남북 간의 폭력 또는 남북 주민 사이의 폭력, 분단국가에 의해 자행되는 폭력을 제거함으로써 평화를 이룩하는 데 초점을 두고 ‘한반도의 평화비전’을 모색해야 한다. 한편 녹색은, 남과 북이 오늘날 자연파괴에 의한 기후변

화 및 자연재난, 에너지위기, 식량난 등의 위협에 대응하여 자연과 인간 간의 공존 및 생명에너지의 선순환적 메커니즘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두고 ‘한반도의 녹색비전’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한반도의 녹색비전’은 핵의 군사적 사용에 초점을 두는 ‘비핵화’를 벗어나, 모든 핵사용에 대한 폐기를 요구하는 ‘탈핵’의 관점에서, 남과 북을 포함하는 녹색의 이념과 원칙에 충실한 비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박영균 2015).

그는 또한 덧붙여, 북한이 경제적 문제, 특히 에너지난의 문제가 있어, ‘핵프로그램 불능화조치’에 대한 대가로 북미외교정상화, 평화협정체결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현재의 분단체제가 생산하는 위협에 대한 통일지향적 모색은 북한의 에너지난과 식량난 해결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그 해결 역시 ‘녹색비전’ 속에서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북한의 식량난과 경제난의 원인의 일부는 반~~녹~~녹색적인 근대산업화의 결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북한은 주체의 관점에서 인간중심주의적으로 자연을 보기 때문에, “자연을 정복하여 풍부한 물질적 부”를 생산한다는 북한의 환경법에서 보이듯이 ‘자연’ 자체를 인간이라는 주체에 의해서 통제·이용될 수 있는 ‘대상’으로 다루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을 낳았던 기근이 1995-1996년 연속적인 홍수 및 1997년 가뭄이라는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로부터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주체농업 그 자체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의 경제난도 현실사회주의권의 붕괴라는 국제적 요인에 의한 석유수급 차질

이 일차적 원인이지만, 석유와 석탄에 대부분을 의존하는 ‘화석연료 시스템’의 노후화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이다(박영균 2015).

그런데 마침 북한 역시 에너지 위기와 관련하여 재생에너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으며 2009년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하여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에 관심을 쏟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5년 이래로 유기농업을 국가적으로 공식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북한의 에너지 위기를 해결하는 에너지협력을 남북의 ‘재생가능에너지 협력’으로부터 시작하여 유기농업협력, 산림조성협력, DMZ 생태협력 등의 실행가능한 녹색화 사업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박영균 2015).

한편, 마찬가지로 평화와 녹색 간의 중재안을 고민하는 이동기는, 평화가 ‘지속가능’하려면 무엇보다 차이의 인정과 다양성의 존중이 중요하다고 보고, 바로 그 지점에서 국가연합과 녹색정치는 만난다고 했다. 국가연합을 단순히 정치군사적 갈등 조정의 매개나 중앙통합적 국민국가로의 과도기로 보지 않고, 원래의 연방주의(federalism) 정신에 맞춰 더 많은 다양성과 차이들이 공존하고 상호작용하는 연루와 교호의 시공간으로 사유하는 방식이 필요해 보인다는 것이다. 평화와 통일이 하나의 행위로서 현상하는 것이 아니고, 형성 내지 구성되는 ‘과정’이라면, 그것은 이미 새롭게 만들어질 정치공동체 내 다양한 구성원들의 서로 다른 요구와 이익, 가치와 지향, 기억과 경험이 발현되고 존중되고 소통되는 것을 지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확장’이 아니라 ‘다양성’을 통한 ‘부유함’을 정치공동체 갱신의 출발로 삼으려고 했던 1989-90년

당시 일부 서독 녹색당 정치가들의 ‘생태국가연합’이란 정치적 상상을 한반도에서 더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그는 보았다(이동기 2013).

3) 생태적 발전을 위한 녹색통일

(1) 북한의 환경제도와 정책

2001년 연구에서는 북한의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고 그 원인으로 ①국방건설 치중에 의한 중공업에 집중된 산업구조, ②식량자립을 위한 농약과 화학비료의 과도한 사용으로 지력이 무시된 농업정책, ③질 낮은 석탄에 의존하는 에너지 공급구조의 취약성, ④군사화정책으로 인한 자연파괴, ⑤공해방지시설을 갖추지 못한 낙후된 산업시설, ⑥연료와 식량확보를 위한 산림남벌과 자연채취 등이 거론되었다(강미화 2001).

그러나 다른 한편 북한도 1970년대 부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1986년 환경보호법을 채택했고 1992년에는 헌법에 환경보호조항을 추가했다. 또한 현대로 올수록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국제적 흐름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했다(강미화 2001). 2009년에 개정된 북한 헌법은 1998년 헌법과 동일하게 제57조에서 환경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노동조건을 마련하여 준다.”는 것이다. 즉 북한 헌법은 환경문제를 기본적으로 국가목

표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고문현 2010).

또한 북한은 2012년 이후 예성강 수력발전소 3·4·5호, 함흥 1호 수력발전소, 금야발전소, 백두산 선군청년 2호 발전소 등 8건의 시설물을 탄소배출권 시설물로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청정개발체제사업에 등록신청해서 승인을 받는 등 국제적인 탄소배출권사업에 뛰어 들고 있다. 따라서 2015년 발효된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앞으로 탄소배출량을 감축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북한과 협약을 맺고 수력, 풍력, 태양 에너지와 같은 재생에너지 사업에 뛰어든다면 '윈-윈'하는 남북녹색 협력이 본격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박영균 2017).

송태수에 의하면, 북한의 산업은 지역의 원료공급, 공업용수 및 교통 등 자연적 입지조건에 맞추어 육성되었고 중화학공업도 각기 다른 지역에 분산되어 배치되었다. 이는 생산과 분배의 지역적 자립성 및 효율적인 자원이용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라고 했다. 또한 군·단위 자치권에 의해서 유지되는 지방산업공장은 지방의 원료와 자재, 노동력을 동원하여 큰 투자 없이 빨리 생산시설을 건설할 수 있고 동시에 농촌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여성과 노인 등 중앙공업에서 활용하지 못하는 노동인구를 채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지방산업공장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은 생산지역의 소비를 위한 것으로 생산과 분배의 지역적 자립성과 완결성을 실현하는 생산체제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는 것이다(송태수 2002).

또한 북한의 유기농도 주목된다. 북한 당국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친 후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3년 새로운 농업정책을 내놓는

다. 즉 화학 비료를 많이 쓰면 땅이 산성화되고 생태환경이 파괴된다고 하면서 국제사회에서 확대되고 있는 유기농업의 추세에 대해 언급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화학비료를 적게 쓰고 미생물 비료와 유기질 비료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대로 방향전환을 하여야”한다고 발표했다. 2010년에는 신년공동사설에서 “유기농법을 비롯한 새로운 영농 방법과 영농기술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고 언급했다(정은미 2013).

또한 김정일은 감자를 가공하고 나오는 찌꺼기로 돼지를 사육하고, 돼지를 기르면서 나온 거름을 다시 감자농사에 쓰는 ‘순환적’ 생산방식도 권장했다. 또한 2001년에는 양어사업을 농장과 연계하여 가축 배설물로 물고기를 기르고 이를 탁아소, 유치원, 농장원 세대에 공급했다. 이렇듯 북한 농업은 유기적으로 결합된 순환적 생산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이는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의 확대 및 주식의 다종화 방향으로 식생활 구조를 개선하고, 화학비료의 부족 및 심각한 토지의 산성화 등과 같은 취약한 영농조건하에서 가능한 대체생산방식을 고안한 데서 형성된 것이다(정은미 2013).

2012년 5월 『사회과학원학보』에 소개된 ‘고리형 순환생산체계’는 서로 연관되는 생산공정, 부문들의 생산물, 부산물, 폐설물까지 원료, 자재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생산체계로, 이것의 장점은 첫째, 추가적인 투자없이 기존의 생산기반으로 증산할 수 있어 좀 더 큰 실리를 낼 수 있다는 점, 둘째, 세계적으로 천연자원이 고갈되고 있는 위기상황에서 자원의 재활용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할 수 있다는 점, 셋째, 자연생태환경의 파괴를 방지하고 훌륭한 생활환경과 경제의 지

속적 발전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제시됐다(정은미 2013).

또한 경제위기로 인해 트랙터 대신 사람과 축력을 이용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났고 화학비료 대신에 가축 배설물이나 인분 등을 이용한 거름, 퇴비와 같은 자급 비료의 사용도 크게 증가했는데 이러한 농경의 변화는 2000년대 이후에 유기농법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중요한 농업정책으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정은미 2013).

생태주의자들이 이상시 하는 소농적 삶도 구현되고 있다. 즉 텃밭이나 소토지와 같은 경지가 개인농 또는 가족농의 주요 기반이 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개인농은 유기농법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거름 또는 두엄 등이 주로 사용되며 틈틈이 김매기, 제초작업, 해충 제거 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산성도 높은 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쿠바와 같은 국가의 정책적 대전환은 없었지만 이미 북한은 식량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농촌과 도시 모두에서 유기농법에 의거한 가족농이 십수 년 동안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다(정은미 2013).

박영균에 의하면, 농촌 뿐 아니라 북한의 도시에서도 생태적 특징이 발견된다. 북한의 도시들은 사회주의 이념에 따라 기획되고 만들어진 도시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적 산업화에 의한 인간성의 상실 및 근대 산업도시에 의한 농촌의 착취가 행해지지 않는 구조로 이루어져있다. 사회주의는 대규모로 산업화된 도시를 반대하고 도시와 농촌이 서로 조화를 이룬 도시, 도시 내부에 전원적인 풍광을 갖추고 있는 소규모 도시를 선호했다. 레닌이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 수도인 모스크바를 기획하고 건설했을 때, ‘모스크바 플랜’에 가장 많

은 영향을 미친 것이 오늘날 ‘생태도시’ 또는 ‘녹색도시’의 원조로 간주되고 있는 ‘전원도시’였다. 북한의 도시도 ‘자족적 도시’로 설계되어, 자본주의에서 발전한 전형적인 소비도시나 산업도시처럼 단순히 소비생활만 하는 지역이나 공장 지역으로 개발된 것이 아니라 도심 속에 농업지역을 포괄함으로써 그 스스로 자족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북한의 농촌에는 작은 규모이기는 하지만 도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박영균 2017).

게다가 북한은 ‘주택소구역제도’를 통해 주거환경을 자립적 생활 공간으로 만들었는데 이 역시 사회주의적 도시계획의 산물이다. 북한은 1935년 모스크바 플랜에 등장하는 ‘마이크로 디스트릭트micro-district’라는 주거개념을 따라 하나의 슈퍼블록 안에 학교와 같은 공용 시설 및 상업시설 등을 주거시설과 함께 배치함으로써 그 블록 내에서 자생적인 공동체 생활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또한 구역 내에 경공업 시설과 작업장을 함께 배치함으로써 그 지역이 주거의 공간이자 생산의 공간이 되도록 만들었다. 그 구역의 크기도 도보가 가능한 거리로 한정함으로써 보행위주의 공간을 구성했다(박영균 2017).

박영균에 의하면, 이렇듯 북한의 도시들은 오늘날 ‘그린green 어바니즘’이 내세우는 생태도시들을 구현해갈 수 있는 매우 풍부한 자산들을 가지고 있다. 도시들은 녹지 인프라와 생태적 자원들을 도심 속으로 끌어들이어 도시와 농촌의 경계를 허물고 도시와 배후지역 간의 공생관계를 발전시켰으며 도시를 단순한 소비의 공간이 아니라 생산의 공간으로 바꾸어 놓음으로써 자족성을 강화해 왔던 것이다. 따라

서 북한의 도시들은, 쿠바의 하바나에서 진행되었던 도시농업이나 유기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도시 내의 녹지뿐만 아니라 자연과 함께 숨 쉬는 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는 생태적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 게다가 도시들은 고밀도·고집적의 대도시들이 아니라 대부분 50-60만 명 이하의 소규모 도시들로, ‘다핵화’되어 있으면서도 녹지 인프라를 통해서 도시의 팽창을 막고 산업과 농업, 주거가 균형을 이루면서 적정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규모를 갖고 있다. 따라서 도시들은 도시 전체를 운영하는데 보다 적은 규모의 에너지만을 필요로 하며 ‘다핵화’되어 있기 때문에 도심으로 진입하는 데 필요한 대규모 대중교통 시스템이나 장거리 운송체계에 필요한 대량의 에너지시스템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바로 이런 점에서 북한의 도시들은 자연의 생태적 순환에 기초하여 에너지 자립형 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박영균 2017).

북한 주민은 질병관리 등의 일상생활에서도 생태적 삶을 보여주고 있다. 공동체의 생활실천을 통해 전승되어온 질병 치료체계인 민간요법을 활용하고 있다. 일부 민간요법은 집단적 검증의 결과 치병의 효험을 인정받아 제도권 의료로 편입되었다(최경·전주람 2020).

이러한 북한 주민의 삶은 가난을 자족적 공동체로 극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종철은, 결핍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호혜적 공동성’, ‘비근대적’ 삶(‘전근대’가 아닌)이라고 주장한다(김종철 2019).

설혹 물자나 서비스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 결핍이 재앙이 되는 것

을 막아주는 호혜적 인간관계의 그물이 있다면, 그러한 결핍은 도리어 축복이 될 수 있다. 적어도 서구적 근대 자본주의 문명의 침략과 지배를 받기 이전의 거의 모든 토착사회에서의 비근대적 삶은 이러한 호혜적 공동성에 기초해 있었다. 상호부조의 그물망이 확립되어 있는 그러한 공동체적 토대 위에서 사람들은 어울려 함께 일하고, 거기서 같이 즐거움을 누리면서 자립·자치의 삶을 영위하는 게 가능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간디가 되풀이해서 옹호했던 ‘마을자치 village swaraji’의 전통이며, 한국적 농촌공동체에서 오랜 세월 동안 국가의 억압 밑에서도 면면히 지속되어왔던 ‘두레’의 전통이다.

(2) 독일과 쿠바의 경험

송태수는 독일 통일에 대한 성찰에 기초하여 에너지, 농업문제를 포함하는 녹색경제교류협력과 DMZ의 녹색평화지대화, 이를 통한 녹색통일경제체제라는 구상을 제시한다(송태수 2002).

그에 의하면 서독은 독일 통일을 계기로 기존의 팽창지향적이면서 대외의존적인 모델을 재편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지만 콜 정부는 서독자본의 요구를 중심으로 구동독을 재편, 세계경제체제에 통합하는 정책을 추구했다. 이는 대안적 체제전환모델인 ‘생태적 재구조화’ 모델의 가치체계와 대립하는 것이다. 생태적 재구조화 모델은 에너지 절약적이고 생태친화적 규준을 근본으로 하는 체제전환 전략으로, 구동독의 환경 훼손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는 한편, 구동독이 확보하고 있던 생태친화적인 제도와 시설을 유지하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지향하는 산업구조로 재편하는 것이다. 그러나 콜 정부는 자신의

‘서독모델’을 선택하여, 동독의 주철보도主鐵補道, 철도 위주의 교통 대신 차도를 재포장·확충했고 물동량과 인간의 이동거리를 확장하는 산업 구조로 재편했다(송태수 2002).

송태수는 이러한 독일 통일의 경험을 교훈으로, 한반도의 녹색통일경제체제는 해외시장에의 의존성 확대, 성장 위주의 개발주의, 중앙정부에 의한 인위적 자원배분이 아닌, 대내시장 지향적, 분배 지향적이고, 자원배분 과정에서 광범한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에서 벗어나, 지방에 확고하게 뿌리내린 중소기업 중심으로 생산과 소비의 지역적 자립성을 지향하는 대안적 지역공동체를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송태수 2002).

한상운 역시 독일의 환경통합과정을 검토함으로써 한반도의 통일에 있어 발생할 시행착오를 피하고 우리에게 적절한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독일의 환경통합 성과에 대하여, 첫째, 서독의 환경기준을 동독에 철저하게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환경개선 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보았다. 둘째, 예방적·통합적 환경정책을 실시하지 못했다. 셋째, 구조적 변화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이 결여되어 있었다. 이는 경제계의 반발과 산업의 입지조건 악화를 우려한 탓이었다. 넷째, 통일 후 환경통합 과정은 동독이 지닌 생태적 장점을 무시한 채 진행되었다. 생태적 관점에서 볼 때 동독이 원래 갖고 있던 낮은 도시화 정도, 에너지 절약적인 교통체계, 순환경제를 위하여 발달된 자원재생과 재활용 체계, 분산적이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 공급체계로의

전환 가능성과 같은 장점들은 환경통합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았다. 다섯째, 해결되지 못한 서독의 환경문제가 동독 지역의 새로운 환경문제로 대두되었다. 서독의 자원 및 에너지 다소비적인 경제구조와 소비오염 증대는 동독에서 되풀이되었다. 해당 사례로 폐기물양의 증가, 거주지와 도로건설을 위한 자연훼손, 개인교통수단 증가에 따른 교통량의 증가 등이 있다(한상운 2013).

강미화에 의하면 동독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는 막대한 비용 부담 그 자체만으로 이미 문제였지만 경제회복을 앞세운 다른 정책 분야와 끊임없는 갈등을 빚었다. 환경분야는 통일 전 동서독 교류와 협력이 가장 부진했던 영역 중 하나라는 사실은 남북한 협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그는 보았다(강미화 2001).

한편, 쿠바의 유기농업은 성공 사례로 많이 거론되었다. 정은미는 쿠바의 유기농업의 성공 요인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사적경영을 허용한 가족농 중심의 토지개혁, 둘째, 직거래 유통중심의 시장 개혁(농민시장의 개설), 셋째, 지렁이분변토, 토상농법, 각종 토착 미생물과 생약 및 천적개발 보급, 실용적인 흙살리기 운동, 넷째, 유축농법 등 현지 자원의 재활용과 윤작, 간작, 휴경작 등 순환농법의 정착, 다섯째, 전통 농업기술 및 자재의 현대과학 기술과의 성공적인 결합, 여섯째, 농민 참여 하의 현장연구와 농가적응시험의 중시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쿠바 유기농업의 시작은 '강제된 선택'이었지만 최고 지도자의 리더십, 쿠바시민의 자발적 참여, 일반 소비자의 호응,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전국의 과학자와 연구기관의 합작 등으로 인

해 성공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이로써 쿠바는 과감히 근대 화학농업을 버리고 친환경 유기농법을 선택함으로써 환경생태 보전과 생산성 향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정은미 2013).

김연철은 쿠바의 사례를 두가지 측면, 즉 집권적 농업체제의 개혁 모델이라는 점과 유기농법이라는 점에서 북한 농업개혁의 방향을 전망하는데 주목하였다. 그는 북한이 당분간 정치적 필요로 중앙집권적 농업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면서 인센티브 강화와 분권화, 그리고 농민시장의 허용 등을 요지로 하는 쿠바의 국영농장체제의 개편이 현실적으로 북한 농업정책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하였다. 동시에 장기적인 농업발전목표로서 기계화를 중심으로 한 집체농업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에너지의 부족과 농자재 관련 산업의 침체 등을 고려할 때 쿠바와 같이 유기농업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그는 남북한의 유기농업협력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미생물 비료를 포함한 바이오 농업의 기술과 재래농업의 특징을 결합한 공동연구와 통일 이후를 대비해 북한 지역을 유기농업지역으로 육성하는 농업분업체제의 형성 필요성을 제시하였다(김연철 2002; 정은미 2013)

(3) 남북한 환경통합을 위한 교류

강미화에 의하면, 남한과 북한은 한반도 생태공동체 건설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동의하고 공존이 전제가 된 환경협력을 해나가면서 체

제 내적으로는 각각의 사회를 생태적으로 건전하게 재구조화하고, 상호간에는 서로가 가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흡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갈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 모두 경제보다 환경을 우선시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면 상호간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최소목표로 설정하여, 초기에는 온건 녹색정치(경제성장과 환경의 조화)로 시작하다가 점차 실시가능한 분야부터 부분적으로 급진 녹색정치(환경이 경제성장에 우선)를 도입하고, 궁극적으로는 완전히 급진 녹색정치로 옮겨갈 수 있는 점진적이고 유연한 과정의 환경통합방안을 제시한다(강미화 2001).

또한, 연구자들은 남북한 환경통합을 위한 교류는 남북 화해의 상징이 될 수 있는 환경협력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① 전력 및 대체에너지 부문의 협력 ②전문인력 교육 및 정보교환 ③생태계 조사 및 보호 ④산성비 문제 공동대응 ⑤해양환경협력 ⑥환경기술지원 ⑦유엔개발계획의 프로그램 이용 등이 제시되었다. 손기웅은 덧붙여 대내적인 조치로, 환경기금설치 등을 통한 재원확보, 남북경제교류 협력시 환경보호에 관한 정부의 원칙 설명, 민간전문가 간 지속적인 대화 유지, 통일에 대비한 환경법과 환경정책의 정비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남상민 1999; 손기웅 1996; 정희성 1995; 강미화 2001).

이에 덧붙여 강미화는 환경문제를 기술적, 공학적으로만 해결하려 하지 말고 경제, 정치는 물론 사회문화적, 도덕적 가치관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으로 폭넓게 파악하고 통일정책 자체를 처음부터 생

태공동체 건설에 부합되게 펼쳐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남한의 경우 기존 개발 모델의 오류를 솔직히 인정하고 북한을 남한식으로 개발하려는 사고와 경제력에 기댄 일방적 시혜자로서의 자세를 버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경제협력을 명분으로 남한의 기업이 북한지역의 환경훼손을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법적, 윤리적 기반을 마련하고 생태적으로 건전한 발전방향에 어긋나지 않도록 환경보존 계획을 사전에 구상하여 경제협력의 초기 단계부터 함께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강미화 2001).

전영선은, 남북 공유하천 문제, 산림녹화, 병충해 방제, 기후환경, 동식물 개체 보존, 해양생태문제, 에너지 환경 문제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한다. 또한 일방의 주도나 일방적 관점이 아닌 평등한 참여와 쌍방의 이익이 되어야 하고, '자본과 기술력이 있는 남한과 값싼 노동력을 가진 북한'이라는 시각은 남한 우월주의의 시각이므로 교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생태주의적 관점에서 본다면 생태계는 다양한 생명체의 유기적 결합체이고, 다양한 생물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므로, 통일의 장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도 남북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일방적이거나 호혜적 차원이 아닌 주체의 상호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전영선 2017).

정은미는, 오랜 기간 추진해 온 남북농업교류협력은 통일 대비 농업공동체의 형성이나 통일된 한반도 농업의 미래상과 같은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합의없이 당면한 북한의 식량부족 문제를 돕고 식량생산

능력의 복원을 위해 남한이 일방적인 농업자원과 기술을 북한에 이전하는 방식에 지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또한 남북 당국 간에 진행된 농업교류협력사업에서 한반도의 환경생태계를 유지하는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한 친환경적 생산양식으로의 전환과 같은 통일된 한반도의 농업공동체의 상은 전혀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한다(정은미 2013).

송태수는, 남북한이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는 협력으로 전력협력을 제안한다. 일단 1차 수혜자는 북한이 되겠지만 남북한이 계절별로 전력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남한의 피크계절인 여름에 북한으로부터 수전함으로써 남한도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지역경제의 자립성 지향이란 관점에서 남북 강원도간 교류에 주목했다. 마침 남한의 강원도는 수출주도적 경제구조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되어 산업구조 측면에서 남한 내에서 예외적인 지역성을 갖추고 있고 남한 내 경제발전에 포섭되지 않은 결과 지역자립적 생산구조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또한 산간 지형의 발달로 농·산림업이 북한과 유사하고 휴양지로서 관광산업이 발달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이미 2000년에 ‘남북강원도간 협력에 대한 기본사항과 우선 추진대상 협력사업에 대한 합의’가 마련되어 북 강원도에서 연어, 치어를 공동으로 방류했고 ‘금강산 솔잎혹파리 공동방제사업’ 등은 지방간 상호교류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특히 금강산관광과 관련해서 남북 고성간 철도복원을 통한 개발이 우선되어 도로 개발을 가능한 제한하고 철도 중심의 교통망 형성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다(송태수 2002).

아울러 생태친화적 통일방안 모색의 일환으로 비무장지대 내에 유엔환경기구와 같은 국제기구를 유치하는 방안이 여러 가지 면에서 상징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이는 녹색평화지대화로서의 한반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태친화성과 평화지향성을 동시에 국제사회에 선포하는 상징이 되고, 비무장지대는 그에 필요한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손기웅 2000; 송태수 2002).

이효원도, 남북한 분단상황에서 DMZ는 군사적 대치와 긴장의 상징이지만,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의 시대에는 남북한 화해와 평화의 연결통로이자 생태환경의 보고로서 통일한반도의 가치를 대변하는 자산이 될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DMZ의 생태환경 보호와 평화적 이용을 조화시켜야 하며, 통일의 과정과 그 이후에도 DMZ의 가치를 유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DMZ는 한반도 통일 과정과 그 이후에 남북교류협력, 이산가족 면회장, 남북회담장 이용과 남북평화산업 경제공동체의 형성, 평화시_市 건설, 문화재와 생태계 보존 등 지속가능한 평화와 환경의 중요한 연결통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DMZ는 남북한의 분단상황에서도 개성공단 운영, 임진강 수해방지, 남북협동농장, 양묘장 관리와 수목사업, 경의선 및 동해선의 도로와 철도연결 등 남북교류 협력과 화해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따라서 DMZ에 대하여는 우리 헌법상의 평화통일의 원칙을 바탕으로 국제법 원칙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보았다(이효원 2012).

4. 에코페미니즘의 통일담론

여성과 자연은 각각 남성과 인간에 의해 정복되고 착취되고 주변화되었다는 점에서 유사한 위상을 가진다. 여성은 종종 자연에 비유되어 신비화되고 숭배되지만 동일한 이유에서 남성에 의해 타자화되고 소외되어 왔다. 에코페미니즘은 자연과 여성의 이러한 유사성에 주목하고 여성과 자연이 정복이나 착취가 아닌 공생을 지향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생명을 잉태하는 여성의 신체는 자연과 같이 창조적·생산적이며, 여성은 모성의 경험으로 타인을 보살피고 양육하고, 이성보다는 직관과 감정으로 교류한다. 이로써 이타적이고 관계지향적인 행동 양식을 발전시켜 남성문화에서 보여지는 지배, 통제, 경쟁, 정복의 속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강미화 2001).

김지하는 서구 근대문명을 비판하지만, 동양의 유교 역시 “죽음과 억압의 수직적 균형”이므로 “선택적으로 재해석되어야” 하고, 불교는 풍부한 유산이지만 그것의 “초월적 형이상학은 극복되어야 한다”고 보았다(김지하 2002). 한편, 그는 동학에서 생태와 여성을 존중하는 사상을 발견할 수 있다고 했고, 그런 이유에서 생명운동으로 시작한 한살림운동은 동학에 그 철학적 기반을 두고 있다. 동학은 우리식 에코페미니즘의 원형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동학은) 민초들의 생활을 우주적으로 성화하여 거룩한 생활세계를 창조했으며 여성과 어린이의 권리 회복, 특히 주부의 중심적 역할

을 강조함으로써 새로운 문명에서의 여성의 창조적 힘을 들어올렸다. 자연을 포함하는 사회관을 열어 우주사회적 공공성을 확립, 이를 다핵적·다층적 그물망인 포접包接으로 육화肉化하여 사람을 한울처럼 섬기는 ‘공경의 공동체’를 출현시켰고, 급기야 민회와 같은 생활정치운동으로 발전시켰다. 이른바 환경이라 불리는 동식물과 무기물마저 신령한 한울님이 살아 있어 이를 한울처럼 공경해야 한다는 생명사상을 창조했고, 마침내는 기계나 연장에마저도 생명이 살아 있다는 접물接物·대물對物의 윤리로까지 발전시켰다. ‘이천식천以天食天’이라는 기화氣化사상으로 생태계 먹이사슬을 경쟁과 도태, 상극, 투쟁 관계가 아닌 기생·공생·상생의 질서로 파악하여 생명 평화의 길을 열었음을 또한 유념해야 한다(김지하 2002).

여성의 역할이 강조되는 현대 시기는, 동학의 표현을 빌리면 ‘후천 개벽’이며 강증산은 이를 ‘음개벽’이라 했다. 양의 패러다임에서 음의 패러다임으로, 가부장과 물질적 질서에서 가모장과 정신의 질서로 전환하는 것이다. “물질에서 정신으로, 가부장에서 가모장으로, 이성에서 감성과 영성으로, 이코노미에서 에콜로지로, 팔고사기에서 주고받기로, 상품시장에서 호혜시장으로, 국가에서 공동체로, 경쟁에서 협력으로, 빠름에서 느림으로,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전환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이다. “문명의 전환”이라는 말로 시대를 평가하는” 장일순은 다음과 같이 페미니즘과 생명을 연결한다(주요섭 2015).

여태까지 걸려 있던 것이 얼마나 영악스럽게 단단한지 몰랐어요. 이

건 부드러운 게 아니어서는 못 풀어. 강한 것 가지고는 백번 쳐 봐야 당하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페미니즘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여성의 핵은 부드러운 거라구요. 지금 페미니즘의 개념을 정확히 잡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부드러운 게 아니고서 페미니즘이라고 한다면 생명을 상실한 거지. 모든 생명은 연하잖아. 그러니까 살아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딱딱한 대지를 뚫고 나오는 거지.

여성과 자연의 친화성은 여성의 환경운동에의 적극적 참여로도 드러난다. 1980년대 말 이후 한국사회에 일상을 지배하는 생활양식을 친환경적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생겨나면서 여성들의 환경운동에의 참여가 두드러진다. 예를 들면 한살림, 한국여성민우회 등의 생활협동조합운동을 들 수 있다(강미화 2001).

또한, 여성학자들은 통일을 여성의 시각에서 볼 때 환경문제가 남북한 여성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지적한다(윤택림 2001). 강미화에 의하면 여성의 시각에서 남북한의 생태문제를 보면 남북한 공동의 환경위기는 분단 이래 지속된 초남성적 개발주의 또는 가부장적 악개발의 결과이다. 즉 자연을 정복하는 과정을 진보라고 믿는 근대주의, 폭력을 힘이라고 정의하는 군사패권주의, 물질적 풍요에 치중하는 산업주의, 양적인 확장에 집착하는 성장주의, 가부장적 국가가 주도하는 개발지상주의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발전의 토대가 되는 세계관은 과도하게 남성중심적이어서 여성이나 여성으로 이미지화된 자연은 발전의 주체가 아니라 수단이나 도구로 전락한다. 남성중심주의와 인간중심주의는 여성과 자

연을 대상화시켜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킨다. 남한의 '조국 근대화'는 유교적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의 결합이며,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 역시 가부장제와 주체사상이 결합된 것으로, 남북한 다 같이 강화된 남성다움을 기본원리로 하는 병영적 산업주의와 군사주의를 기반으로 발전해왔으며 그러한 과정은 여성과 자연을 억압해왔다는 것이다(강미화 2001).

따라서 여성학자들은 여성이 통일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기존의 경제 중심에서 사회문화 영역으로 남북간 화해와 협력의 장을 넓힐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 조성과 생태적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남한 여성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생활세계와 밀착된 실천운동으로 환경운동에도 몸담아왔으며 이러한 경험을 살리기 위해 민간 차원의 남북한 여성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생활정치적 주제를 매개로 한 여성 주도의 환경교류는 통일 후 남북한의 사회문화적 동질성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강미화 2001; 윤택림 2001).

강미화는 남북한 환경통합을 위해 여성이 다음과 같이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첫째, 환경감시자의 역할이다. 국가와 기업에 친환경적 생산을 강제하는 정치적 압력집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여성은 소비자로서 녹색상품을 선택함으로써 생산체제 자체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둘째, 여성은 상품의 친환경적 관리와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 남한의 과대소비주의를 비판하고 북한의 소비오염의 확장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여성은 자녀의 양

육을 통해 미래세대에 환경교육을 시킬 수 있다. 넷째, 여성은 생활정치의 담당자로서 환경보호활동에 참여하여 환경전문가로 거듭나거나 또는 소규모의 지역모임을 상설적인 운동단체로 발전시킬 수 있다. 북한의 경우 이미 존재하는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과 같은 조직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다섯째, 여성은 환경전문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능력과 자질을 개발해야 하고 그것을 통해 제도정치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 여섯째, 국제사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함께 국제적 연대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환경 관련 국제기구들은 이미 지구환경개선에 여성의 시각과 경험을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지침인 여성행동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전략과 대안을 모색해왔다. 남북한 여성은 상호간의 교류를 넘어 이러한 국제적 논의와 협력에 함께 참여하여 남북한 공동의 이해를 대변하면서 동시에 세계 환경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국제연대사업을 할 수 있는 여성전문인력을 발굴, 양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며 북한 여성들도 국제적 협력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북한 여성이 체제로부터 자유로운 여성운동의 물꼬를 트는 자극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강미화 2001).

5. 맺음말 : 여성 및 생태 관련 통일담론이 주는 시사점

북미간 갈등 및 남북간 긴장의 지속, 통일에 대한 국민의 관심 저하는

한반도 통일을 장기적 과제로 여기게 하는 조건이 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반도 통일에 주변국의 협조와 국제사회의 호응도 필요하다는 사실은 통일이 그 자체로 주장되기보다 평화 등의 보편적 가치와 결합된 담론으로 등장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현재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젊은이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통일이 주는 '이익'의 측면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분단 이후 현재까지 전개된 통일담론의 변천과정 역시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여성 및 생태 분야의 통일담론 역시 초기 민족적·당위적 입장에서 점차 평화 등의 보편적 가치와 결합하거나 또는 여성의 권리와 복지, 생태적 필요 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 글은 그러한 과정을 추적하여 민족, 가치, 이익의 관점에서 각각 통일담론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 중 중요한 내용과 시사점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1. 민족 중심의 여성운동의 성과도 기억해야 한다. 여성통일운동 초기에는 분단이 여성의 삶을 왜곡시킨다는 것, 여권신장을 위해서도 통일이나 민주화의 가치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를 이룬다. 페미니즘 관점은 이에 대해 여성적 의제가 미뤄졌다는 한계를 지적하지만, 초기 여성들의 이러한 통일 의지의 결과로 남북 여성간의 만남이 이루어졌으며 이것이 첫 남북간 민간인 교류가 되었다는 점은 분단 이래 한국 시민사회의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남북 여성들은 일본 여성과 더불어 '일본군위안부'라고 하는 인권문제를 같이 논의했으며 그 과정에서 한국의 독립운동 역사에 대해 미미하나마 공

통적 서술을 할 수 있었다는 것도 작지 않은 성과이다. 이는 어찌보면 대화, 배려, 양보, 기다림에 더 익숙한 여성들이 주도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수 있다. 이는 앞으로 남북관계를 푸는 데 여성의 역할과 관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2. 독일 통일의 경험을 주목해야 한다. 여성학자들은 독일 통일 후 동서독 여성들의 변화 및 그들 간의 관계에 관심을 가졌으며 그 결과 동독이 본래 갖고 있던 여성친화적 복지제도, 서독의 실정으로 인한 동독 여성의 피해, 고난을 극복해가는 동독 여성의 적극성, 서독 여성들의 태도 문제에 주목했다. 이는 통일 후 남한 정부와 남한 여성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되었다. 생태 분야도 마찬가지로 독일 통일 사례는, 동독을 포함하여 사회주의 체제가 갖고 있는 친환경적 제도의 긍정적 유산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사회주의 체제의 자족적 도시, 도농간의 상생, 철도 중심의 교통은 현대의 생태위기 문제에 부분적 답이 될 수 있다.

또한, 통일 전 서독이 통일교육이 아니라 평화교육을 실시했다는 점, 통일교육을 하지 않아 불필요한 의견대립이나 국수주의적 담론이 등장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이는 ‘통일준비교육’까지 불필요하다는 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독일 통일 후 나타난 많은 문제들은 독일 ‘통일준비교육’의 미흡함의 결과이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 ‘통일준비교육’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3. 통일 및 평화운동에 종교집단의 기여가 컸다. 여성통일운동은

초기부터 종교집단을 중심으로 평화운동을 병행해왔다. 연구자들은 여성들이 많이 몸담고 있는 교회 등 종교집단이 통일운동 및 평화운동의 산실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는데 현재 교회가 한국사회에서 가장 보수적 집단이 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이는 큰 도전이 되는 과제라고 하겠다.

4. 통일 및 평화운동에 있어 분리와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예를 들면 남성들은 군축, 국방비삭감, 국방비리 폭로 등 기왕의 남성 영역에서만 활동하고 평화의 일상성이나 평화문화 등 여성들의 평화운동에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2000년대에 지적된 한계인데 현재는 남녀간 입장이 더 벌어져 있는 상황이다. 군대 내 인권문제, 성소수자 문제에 여성들은 동참하지 않으며 심지어 성소수자의 여대 입학도 반대에 부딪혀 좌절한 상태이다. 현대의 젊은 페미니스트들은 과거 남녀간 연대를 강조해 온 '올드 페미'를 비판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판은 오늘날 여전히 자행되는 여성들의 피해를 볼 때 정당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호주제 폐지 등 남녀시민운동의 연대로 이론성과도 적지 않고 또한 여성문제에 공감하는 남성들도 많으므로 이 문제는 앞으로 더 성찰해봐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지은희 전 여성부장관에 의하면, 과거 여성운동이 한때 똑같은 상황으로 해체 위험에 처했을 때, 기성 세대와 젊은 세대의 합의는, 서로 분리하되 각각 자신들이 잘 할 수 있는 역할에 힘쓰자는 것이었다고 한다. 이는 녹색주의와 평화주의 간 갈등의 한 해결책으로 박영균이 제시한, '녹색은 녹색대로, 평화는 평화대로' 각각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과 같은 결론이라고 하겠다. 녹색주의에 대한 ‘녹색평화론’의 도발은 녹색론자 입장에서 보면, 녹색이란 이름을 도용하면서 녹색주의를 비판하는 것이다. 한편 평화론자 입장에서 보면, 녹색주의자들은 한반도 현실이나 당면한 문제를 도외시한다. 이때 지은희와 박영균의 처방에 의하면, 남성과 여성, 영 페미와 올드 페미, 녹색론자와 평화론자들은, 서로 간 합쳐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무리를 하여 오히려 서로 상처를 주고 갈등을 빚을 것이 아니라, 적절한 거리를 두면서 각자의 강점에 따라 따로 운동을 해나가되 때로는 연대하는, ‘따로 또 같이’의 전략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여성운동의 역사가 보여준 지혜로서, 이 역시 여성들이 주체가 되어 고민했기에 가능했던 해법이다. 이는 마침 생태철학자 가타리가 제시한 ‘고슴도치의 비유’를 연상시킨다. 추운 겨울날 굴속의 고슴도치들이 온기를 위해 서로 껴안으려 하지만 이로 인해 오히려 서로의 가시에 찔려 상처를 입으므로, 가시에 찔리지 않으면서 온기를 유지할 수 있는 ‘거리조절’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5.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로 통일에 관심을 기울이기 어려운 이들에게는, 통일당위성이나 평화 등의 보편가치보다는, 복지, 삶의 질, 생태위기 등을 강조하여 관심을 촉구할 수 있다. 실제 독일 통일의 사례를 제시하여, 독일 여성들이 통일 후 생길 수 있는 자신들의 문제에 미리 대비하지 않음으로써 통일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되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6. ‘북한 바로알기’는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이다. 여성 역할에 대한

김일성의 강조와 여성 지위의 향상, 여성의 사회생활을 돕는 육아정책, 북한의 친환경적 제도와 삶은 북한에 대한 우리의 편견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돌아보게 한다. 또한 북한이 갖고 있는 좋은 제도와 문화는 우리가 미리 알고 배우고 적용함으로써 북한과 북한민민의 자부심을 고양시키고 서로 간의 차이도 좁힐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자급적·순환적·생태적 삶을 고려한 북한의 도시 및 농촌 모델은, 현재 소멸위험에 처한 남한의 지역을 살리는 데도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간디의 ‘작은 공화국’, 한살림의 ‘도농상생’의 정신이 이미 북한 도시와 농촌의 삶에 구현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북한이 ‘언제 붕괴할 것인가’가 아니라, ‘왜 견고하고 안정적인가’를 연구할 때이다. 그러나 한편, 북한의 ‘인간중심적’ 주체사상이 갖는 근본적인 계는 생태주의 입장에서 여전히 비판되고 극복되어야 할 과제이다.

7. 생태한반도를 구현할 우리의 철학으로 동학사상을 제안해본다. 초기 생태운동을 이끈 장일순, 김지하를 비롯하여 한살림 운동가 등 한국적·영성적 생태운동가들의 철학이 되어온 동학은 마침 북한에서도 존중받는 종교이다. 동학의 ‘그렇다-아니다’의 불연기연의 인식론은 경계짓기, 분리하기, 차별하기의 근대철학과는 반대로 소통적·통합적이며 유연하고 운동적이다. 통일이냐 아니냐, 화해냐 아니냐의 명확한 구분 및 고체적인 경직성을 지양하고 물이 장애물을 피하면서 흐르듯 유연하게 진행되는 것이다. 또한 ‘경계흐리기’의 방식은 DMZ의 평화지대화, 남북강원도 및 개성단지의 활용 등을 들 수 있겠다.

동학은 또한 동식물 뿐 아니라 땅, 사물까지 공경하는 경물사상과

여성,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를 존경하므로 에코페미니즘적 성격도 지니고 있다. 동학은, 앞으로 여성이 세상을 살릴 것이라 예언했다. 이같은 사상으로 남북간의 여성 및 생태론자들의 연대를 이끌어낼 수 있다.

8. 동학과 더불어 가타리의 이론도 한반도 생태공동체 실현에 참고할 만하다. 가타리 철학은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등 통일생태 연구자들과 기후위기 등 지구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청년활동가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인간-사회-자연’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그의 생태이론은 한반도 상황에 적합할 뿐 아니라, 그의 ‘영토화’ 개념은 현재 한반도 상황에서 ‘국토’ 대신 ‘영토(영역)’ 또는 ‘서식지’의 개념으로 통일 이론을 재정립해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한 그의 생동적인 ‘자율성’ 개념은 정치적이고 경직된 ‘자주’ 개념을 대체할 수 있다.

남성 중심(반여성적)과 인간 중심(반생태적)의 사고는 과도한 능동성, 근거 없는 자신감, 중심-주변의 분리, 통제가능성의 확신을 특징으로 한다. 반면, 이와 대조되는, 여성성 및 생태 중심의 사고는 신중함, 배려, 관계의 중시, 중심-주변의 분리를 경계하는 평등원리, 다양성, 복잡성, 예측불가능성의 인정 등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특징은 ‘사회사’가 아닌 ‘자연사’의 특징이다. 벤야민에 의하면 사회사는 오히려 자연사적 특징을 띠고 있다. 또한 울리히 벡의 ‘위험사회론’ 역시 현대사회 위험의 예측불가능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이제 분단과 통일을 사회사가 아닌 자연사로 보아야 할 때이다. 분단도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루어졌고 통일도 그러할 가능성이 크다. 기후변화나

전염병처럼, 여러 복잡한 변수의 변화와 종합이 예측불가능하게 어우러져 알 수 없는 방식으로 미래는 우리에게 온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통일은 촉진하거나 늦출 수 있는 것이라기 보다, 단지 이에 대비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통일 준비자'의 자세가 필요하고 이러한 담론의 창출과 통일교육이 국민들의 호응과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미화, 2001, “통일한국의 미래: 친여성적인 생태공동체를 향하여” 『여성이 만드는 통일한국의 미래』, 미래인력연구센터
- 강정숙, 2016, “일본군성노예제문제와 관련한 남북교류와 복측의 대응” 『여성과 역사』 24집
- 고문현, 2010,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비교헌법적 연구” 『환경법연구』 32권 3호
- 구도완, 2012, “생태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한국 반핵운동” 『통일과 평화』 4-2
- 김경희, 2001, “통일한국의 양성평등한 복지 구현을 위하여” 『여성이 만드는 통일한국의 미래』, 미래인력연구센터
- 김귀옥, 2000, “현대 북한 대중매체를 통해서 본 북한여성” 『여성과평화』 창간호
- 김귀옥, 2006, “한반도 평화체제와 평화문화, 시민사회” 『한국과 국제정치』 22권 1호

- 김기윤, 2011, “생태학과 환경론에서 인간의 위치” 『철학논총』 65집 3권
- 김대식, 2016, “함석헌의 평화사상” 『통일과평화』 8집 2호
- 김미경, 2001, “독일 통일이 여성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통일정책연구』
- 김석향, 2007, “북한의 조선옷·민족옷 개념에 나타나는 여성 편중 및 남성 부재 현상” 『북한연구학회보』 11권 2호
- 김선·김희정·임수진, 2017, “통일당위성 담론유형 집단별 특성과 통일교육적 함의” 『교육문화연구』 23-6호
- 김엘리, 2005, “여성들이 하는 군축·반전운동” 『한국여성평화운동사』, 한울
- 김엘리, 2008, “여성의 시각에서 본 통일” 2008 세교연구소 심포지엄 『기울어진 분단체제, 대안을 만들 때다』 자료집
- 김연철, 2002, “집권적 농업체제의 개혁” 『현대북한연구』 5권 2호
- 김용민, 2007, “통일 독일의 미래는 동독인들에게?” 『독일문학』 101집
- 김윤옥·윤미향, 2014, “남북한 연대활동”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년사』, 한울
- 김재인 외, 2002,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여성정책 제안』, 통일연구원
- 김정수, 2005, “여성평화교육과 평화문화운동” 『한국여성평화운동사』, 한울
- 김정수, 2020, “왜 여성들이 한반도 평화과정에 참여해야 하는가?” 『여성
과 평화』 6호
- 김종철, 2019, 『근대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 녹색평론사
- 김지하, 2002, 『김지하 전집 2: 사회사상』, 실천문학사
- 김진환, 2019, 『통일교육과 인문학의 접목』, 통일교육원
- 도기숙, 2005, “통일 이후 동독 여성이 겪는 사회·문화갈등” 『한국여성학』
21권 1호
- 무위당을 기리는 사람들, 2004, 『너를 보고 나는 부끄러웠네』, 녹색평론사
- 문소정, 2015, “동북아 여성평화연대의 맥락에서 본 ‘위민크로스DMZ’의
평화 정치학” 『동북아문화연구』 45집
- 문순홍, 2006, 『생태학의 담론』, 아르케

- 박명규, 2010, “한반도 녹색평화의 비전과 구상” 『녹색평화의 비전과 21세기 한반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창립 4주년 심포지엄 자료집
- 박민철, 2017, “한반도 분단극복과 생태주의의 결합” 『서강인문논총』 48집
- 박영균, 2015, “위험사회와 통일한반도의 녹색비전” 『시대와 철학』 26권 1호
- 박영균, 2017, “통일의 녹색비전과 남북의 생태도시협력” 『시대와 철학』 28권 1호
- 박의경, 2007, “한국에서의 여성, 평화, 그리고 통일” 『대한정치학회보』 14집 2호
- 박형빈, 2018, “초등 통일교육에서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UN안보리 결의 1325’의 적용 가능성 탐색” 『초등도덕교육』 59집
- 백낙청, 2003, “생명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녹색의 주류화를 위하여』, 환경운동연합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 서보혁·정옥식, 2016, 『평화학과 평화운동』, 모시는사람들
- 서유석, 2019, “남북교류와 시민사회” 『통일인문학』 78집
- 송태수, 2002, “한반도 ‘녹색’ 통일경제체제의 모색” 바람과물연구소 편, 『한국에서의 녹색정치, 녹색국가』, 당대
- 신진화, 1992, “다시 ‘읽는’ 남북여성토론회” 『여성과 사회』 3호
- 윤보영, 2020, “페미니즘 시선에서 바라본 평화” 『여성과 평화』 6호
- 윤택림, 2001, “여성의 시각으로 본 통일과 통일한국 사회” 『여성이 만드는 통일한국의 미래』, 미래인력연구센터
- 이나미, 2017, 『한국시민사회사: 국가형성기 1945~1960』, 학민사
- 이나미, 2019, “리영희·박현채·문익환·장일순: 1980년대의 급진사상” 『현대한국정치사상의 흐름』, 아카넷
- 이동기, 2013, “1980년대 서독 녹색당의 평화·통일정책” 『EU연구』 33호
- 이상현, 2011, 『생태주의』, 책세상
- 이효원, 2012, “한반도 통일과 DMZ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법제도화” 『통일전략』 12권 1호

- 이효재, 1985, 『분단시대의 사회학』, 한길사
- 장일순, 2016, 『나라 한 알 속의 우주』, 녹색평론사
- 전복희, 2017, “통일 후 동서독 여성의 갈등과 갈등극복을 위한 차이의 정치에 대한 연구” 『정치·정보연구』 20권 2호
- 전영선, 2017, “통일문제의 생태주의적 인식과 문화번역의 가능성” 『통일인문학』 70집
- 정은미, 2013, “식량주권의 관점에서 본 북한의 유기농업” 『현대북한연구』 16권 1호
- 정현백, 2000, “한국 여성통일운동의 현황과 과제” 『여성과 평화』 창간호
- 정현백, 2004, “한국의 여성평화운동, 그 성과와 과제” 『사회과학연구』 12권 2호
- 정현백, 2005a, “여성운동과 정치: 통일전후 동독 여성운동의 정치세력화를 중심으로” 『사림』 24호
- 정현백, 2005b, “여성통일운동의 역사” 『한국여성평화운동사』, 한울
- 조명래, 2013, 『녹색토건주의와 환경위기』, 한울
- 조배준, 2017, “생태민주주의의 사회와 통일한반도의 탈핵화” 『통일인문학』 69집
- 조순경, 2000, “가부장적 시장경제와 가부장적 계획경제의 만남” 한국여성학회 3차 월례발표회 『여성주의 시각에서 본 남북교류의 문제』 자료집
- 조영주, 2012, “통일담론과 여성의 실천” 『북한학연구』 8권 2호
- 주요섭, 2015, 『전환이야기』, 모시는사람들
- 최경·전주람, 2020, “북한의 대중생활상식에 나타난 질병대처 및 건강관리와 그 의미” 『인문사회21』 11권 4호
- 최병두, 1996, “북한의 환경문제와 통일을 위한 생태전략” 『사회과학연구』
- 최병두, 2003, “북한의 환경문제와 생태통일 전략” 『황해문화』 39집
- 최성현, 2004, 『줍쌀 한 알』, 도솔
- 한면희, 2010, “DMZ와 생태평화의 철학” 『환경철학』 10집

한살림, 2019, 『한살림선언』, 한살림

한상운, 2013, “독일 통일과정에서의 환경법제 통합과 시사점” 『환경법연구』 35권 2호

함석헌, 1983, 『함석헌전집 2』, 한길사

함석헌, 1984, 『함석헌전집 7』, 한길사

토론(여성 분야)

김귀옥

한성대학교 소양핵심교양학부 교수

| 들어가며

그간 이나미 선생님이 정치사상사와 시민사회사 방면에서 폭넓게 연구해온 역량을 바탕으로 “여성 및 생태 분야의 통일담론 회고와 성찰”이라는 주제의 연구를 내놓게 되었다고 사료된다. 회고와 성찰은 거리 두기가 가능해야 훑아보거나 조망할 수 있다. 만일 현재가 2018년의 속도대로 남북 사이에 새로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장이 열리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글을 내놓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현재와 같은 남북 관계 소강국면에서 나온 이나미 선생님의 연구는 통일 문제와 관련된 한국 학계나 평화·통일운동과 관련된 시민사회, 특히 여성계의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담론을 성찰함으로써 앞으로 나갈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연구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번 연구는 통일학 연구를 정치학 연구의 부분, 또는 주변부로 여기는 그간의 연구 태도를 지양하고, 여성과 생태학의 관점에서

통일 문제를 조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바가 있다. 특히 여성주의적 관점의 평화·통일문제나 생태주의적 관점의 평화·통일문제를 각각 정리하면서도 에코페미니즘적 통일담론으로 수렴하려는 시도는 대단히 참신하다.

이번 연구를 그간 분단과 통일 문제를 연구해 온 입장에서 살펴보면 몇 가지 제안과 생각거리를 공유하고자 한다.

| 담론을 둘러싼 질문

담론(discourse)을 유럽적 맥락에서 묘사하자면, 17세기 말에 눈에 띄기 시작한 근대적 공론장(public sphere)이 된 카페나 살롱에서 교양인, 부르주아들이 모여 문학과 철학 등을 소재로 정치를 논하던 이야기를 떠올리게 된다. 그러한 공론장에 주목한 것이 하버마스였다. 공론장에서 회자된 수많은 담론들 중 어떤 담론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고, 심지어 만민평등, 자유, 박애, 민주주의 등의 담론은 절대왕정을 단절시키는데 강력한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프랑스나 유럽에서는 그러한 지적 전통이 카페문화에 잔존되어 있다. 그야말로 유럽인들의 카페는 시민사회 속에서 시민문화의 하나로 자리잡아, 커피나 차를 마시고 담배피우고 이야기하는 열린 공간으로서 수 백년 동안 역할을 해온 듯하다.

유럽 담론 문화가 조선조 담론 문화와 다르지 않다는 주장이 있다.

서원, 양반이나 거상의 사랑방, 정자가 바로 그런 담론의 현장이고, 세력화를 하고 담론정치를 하는 공론의 장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와 한국의 독재기에는 공론의 장을 최대한 파괴하고 금지해 왔다. 독서토론장, 선술집, 특히 대학주점 등도 수시로 탄압당하기 일쑤였다. 학생들 사이에는 “모이면 죽고, 흩어져야 산다”는 말까지 생길만큼 1980년대 한국 사회는 공론장이 꿈이었던 시대였다. 그러한 분위기에서 국가주의를 넘어선 새로운 사상이나 지식, 정보, 소문 등의 이야기들은 지하에서 소통이 되었다. 국가 정치도 밀실 정치가 일반적이었던 듯이 대항 세력들도 지하에서 또는 재야에서 낮은 소리로 이야기를 해온 듯하다. 1970, 80년대 공론장의 부재를 가리키는 시가 김지하의 “타는 목마름으로”가 아닐까 싶다.

(……)

숨죽여 흐느끼며
네 이름을 남몰래 쓴다.
타는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20세기 한국 사회에서 몇 번의 공론장이 열린 적이 있다. 1919년

3·1운동이 있는 직후인 1920년대이다. 전국 곳곳에서 청년회들이 생겨나면서 공론장이 열리기 시작했다. 또한 구소련과 일본, 중국의 영향으로 국내에도 사회주의 계열의 정당이나 각종 모임이 비합법적인 상태에서도 생겨났다. 그 운동이 합법 공간에서 신간회운동과 근우회운동으로 결실을 맺었으나 일제의 탄압으로 명멸하고 말았다.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의 해방 이후 다시 잠깐 공론장이 열렸다. 3·1운동의 진원지였던 서울 종로의 탑골공원이나 각 지역의 청년회합의 장, 교회 회의장, 식당 등에서 새로운 사회를 바라는 열기와 함께 자주독립, 통일 등의 주장과 방법론이 주창되었다. 그러나 두 개의 분단 정부가 수립되고 한국전쟁으로 세상이 냉전 속에 파묻히면서 새로운 담론의 장도 사라지고, 새로운 담론은 위험한 것으로 되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조봉암의 평화통일론이다. 한국 사회에서 담론이 공론장에 다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초반의 민주화 분위기가 형성될 때부터가 아닐까 싶다. 그 시기에 한국 사회에도 합법성을 획득하면서 시민사회가 형성될 수 있었다.

1980년대 후반 시민사회와 진보적 학술단체들이 형성되면서 사회 문제나 사회성격을 둘러싼 논의나 논쟁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또한 1988년 한겨레신문이 창간되면서 서서히 연구자들, 사회운동가들 간의 논쟁 속에서 담론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그 시기 가장 대표적인 논쟁과 담론이 “한국사회구성체논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공론장이 어렵게 출발했고, 분단으로 인한 표현과 사상의 제약이 심각했으며, 민주화과정이 순조롭지만은 않았기에 ‘담론’이 ‘고담준론’화된 것은 아닐까 싶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연구해야 할 문제이지만, 담론은 사람들간에 소통하는 이야기, 내러티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통용되지 않았나 싶다.

1987년 한국여성학자협의회(이하 여성협)의 “남성중심적이고 여성의 경험이 배제된 통일운동 비판”에는 동의하지만, 해방공간을 제외한 1987년 이전까지 정부주도가 아닌 시민사회의 통일운동이 제대로 있었던가? 더 심각하게는 통일담론을 말할 수 있는 담론의 장, 즉 공론장으로서의 시민사회는 부재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1987년 민주화운동, 1988년 한겨레신문 등의 등장 이래로 공론장이 차츰 생기면서 통일운동의 운동성이나 담론화의 가능성, 상대적으로 여성단체에서 평화통일운동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체감하게 된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평화를만드는여성회가 블랙리스트에 오르기도 했으며, 참여연대/민족문제연구소와 달리 여성단체는 반의 반타작 정도로 회원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여성 학계나 여성 평화·통일운동에서 담론 검토나 논쟁은 거의 부재하지 않았는가 하는 반성을 하면서 논의를 시작하겠다.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여성들의 핵심적인 통일담론은 무엇인가? 저자 자신은 몇 명

의 논자들이 제시하듯 한국의 통일담론을 “민족주의, 보편주의, 실용주의”라고 답을 하고 있다. 김선 등의 연구에서 통일당위성 담론 유형화로 제시된 개념으로 보이는데, 담론이라기 보다는 그들이 통일운동 또는 통일교육 단위들의 활동을 분석하는데 사용된 개념, 즉 분석개념으로 이해된다.

아무튼 여성들의 통일담론은 무엇인가? 통일담론의 첫 개념은 ‘분단’에서 출발하지 않나 싶다. 분단담론 위에 ‘민족통일’ 또는 ‘민족해방’ 등의 개념이 당대적 인식 속에 형성되었다고 본다. 분단담론을 경유하지 않고 통일담론으로 가면, 민족이산, 가족이산 문제를 제대로 볼 여지가 없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한 담론과 운동도 잘 정리가 되지 않는다. 특히 분단담론에 주목한 사람인 1980년대 이효재도 ‘분단시대의 사회학’을 펴내면서 분단이 여성의 삶을 피폐화시킨 근본적 원인이라고 이해했고, 이산가족문제나 가족문제에 주목했던 것도 그러한 이유이다.

한편 여성계에서 민족문제 또는 민족주의를 가지고 논쟁을 한 바 있다. 대표적인 논쟁이 정진성과 김은실의 논쟁이고, 이 문제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접근법으로 나타났다. 그 과정에서 여성계는 민족 개념 자체 논의시, 통일담론을 둘러싼 깊은 논의를 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유럽적 민족 개념과 이미 남성중심적으로 구성된 민족이라는 지식 위에서 민족문제를 수용하든지, 거부하든지

했지, 여성의 관점에서 민족을 성찰한 적이 있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둘째, 여성들의 통일담론으로서 1980년대 여성들이 발견한 것은 군사주의 담론과 그 대안으로서의 군축담론이었다고 본다. 1980, 90년대 군사주의 담론은 여성의 통일문제 개입에 중요한 함의라고 보는데 아쉬웠던 점은 군사주의를 둘러싼 제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한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다시 말해 일제강점기 특히 태평양전쟁 이래로 남성 중심의 징병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되지 못했던 점이나 분단을 당연히 하는 인식이 전제되면서 이후 징병제 논쟁에서 여성에 의한 남성의 역차별 논쟁이 형성되고 젊은 여성들이 역차별 담론을 수용하면서 성평등한 징병제 담론으로 전환되는 지점을 열어 놓은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해본다.

셋째, 통일담론의 다른 하나로서 한국 여성들이 발견한 것은 통일 과정에서 극복의 대상으로서의 가부장제 또는 가부장문화라고 본다. 이 점에서 남과 북은 커다란 견해차를 보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상적으로 존재하는 문제는 있으리라고 본다. 한편 여신협이 지적한 “분단을 ‘가부장적 문화의 극단적 형태인 제국주의 지배의 결과’라는 말은 명제로서는 명쾌하지만, 구체적인 연구로서 입증되지 못했다고 본다. 특히 이 개념을 북한의 가부장적 문화에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스스로도 반성하지만, 분단과 가부장제도나 문화와의 만남이 어떻게 가능했는가를 제대로 밝혀주는 연구는 거의 없다. 즉 넘쳐나는 가부장제/가부장문화에 대한 호명 속에 역사적 형성사, 또는 변천사 관련 연구를 찾기 어렵다. 또한 분단 환원론이라는 비판은 의미가 있으나 분단이 가부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밝히는 연구의 부재는 반성할 만한 일이다. 그런 과정에 한국의 가부장제는 전통으로 치부하면 보편적인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한다. 그러나 과연 가부장제/문화는 초역사적, 초사회적인가? 일부 학자가 일제강점기 가_ㅅ제도를 법제적으로 연구하였으나 한국 가부장제의 변천사 연구가 없어, 결국 분단과 가부장제/문화의 인과관계, 영향을 짚어내고 있지 못하니, 담론에서도 가부장제, 민족통일을 동일시하면 부정적인 인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렇게 논의를 진전시켜보니, 여성통일운동 상의 담론의 문제가 아니라, 연구 결핍의 문제가 아닌가하는 반성이 들게 됨은 어쩔 수 없다.

1 | 이러저러한 질문

1) 머리말 표에서 ‘평화’를 보편적인 것으로 분류해 두고 있으나, 평화 역시 보편적 평화와 특수한 평화, 세계 수준과 생활세계 수준의 평화가 다 공존하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컨대 한반도 통일은 목표적인 차원에서는 특수한 평화라 볼 수 있지 않은가?

평화통일의 평화적 수단에 의한 통일을 의미할 때는 전쟁없는 평화라는 의미에서 보편적 성격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평화와 통일은 어떻게 연결된다고 볼 수 있을까?

2) 여성운동사와 여성통일담론의 관계

여성통일운동사를 간략하게나마 살펴보면서 여성통일담론의 변화와 관계를 살펴보면 좋을 듯하다. 담론은 시·공간과 구성 주체의 특성에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할 때 담론의 변화에 운동사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볼 필요가 있겠다.

민족해방(운동)과 민족통일(운동) 담론은 분단과정에서 남북의 격차를 만들어 오지 않았을까? 북한의 통일담론은 민족해방운동적 성격을 과거부터 명백히 했고, 그런 차원에서 통일 조건으로서 외국군(주로 남한의 미군)의 철수 등이 포함되었고, 그러한 맥락에서 북한 여성의 통일담론에도 민족해방운동 담론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남한의 통일담론에서 민족해방운동 담론은 분열되어 있고, 최근에는 진보진영에서도 민족해방 담론 구사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지어 여성통일담론에는 군사주의 반대 담론이나 군

축, 최근에는 〈여성·평화·안보〉 유엔안보리 결의 1325호 담론이 나오지만, 민족해방담론은 거의 사라졌다. 이 담론이 사라지게 되는 데에는 민족해방의 과제가 달성되었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주한미군과 평화·통일의 양립 불가적 인식에서부터 양립 가능한 인식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아무튼 여성운동사에서 이러한 어젠다가 설정되고 누락되는 등 프레임이 전환 및 변화하는 데에 대한 담론 논의, 논쟁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인식된다.

3) ‘세계여성의날’을 둘러싼 정정

1985년 3·8 세계여성의 날 행사는 ‘분단 이후 최초’가 아닌, ‘분단 이후 남한에서 최초’라고 표현해야 정확하다.

1925년 일제강점기 최초로 3·8 국제부인데이 기념식이 개최된 이후 분단되면서 그 전통은 북한에서 이어졌으나, 남한에서는 금기시되었다. 이는 5·1 메이데이가 일제 강점기 기념되기 시작하여 남한에서는 이승만 정부하에서 날짜와 이름이 변경되었으나 북한에는 메이데이 전통이 계속되었던 것과 유사하다.

4) 성차별적 기억

사회적 기억에는 수많은 계선을 중심으로 선택과 배제가 작동해왔

다. 성차별적인 사회에서 남북교류와 통일 관련한 기억만 성평등할 리가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 1991년부터 1994년까지 4회 지속된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를 남북 교류와 대화의 역사 속에 넣는 것은 여성 자신의 노력과 헌신에 결과하는 것이다. 특히 2021년은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30년을 맞는 해가 아닌가. 따라서 전체 여성들의 기억으로 공유하는 노력과 함께 전체 남북 대화와 교류사의 한 장으로 넣는 노력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기타 의견

에코페미니즘적 통일론이 통일담론으로 형성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든다. 그러나 한반도 에코페미니즘적 평화·통일의 전망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중요한 통일담론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고 본다. 평화의 한반도는 현재 구성원들이 전쟁이 없이 공생·번영하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절박한 목표이자 과제라고 본다. 평화의 하위수준에서는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공동체와 문화를 이룩하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미래세대들에게 반드시 보장해 줘야 할 과제이다. 이런 과정에 인간과 자연 생태계의 공생을 풀 수 있는 맥락에서 에코페미니스트적 방법론은 중요한 시사를 던지고 있다. 그리고 에코페미니스트적 통일과제는 기왕에도 여성주의적 통일론에서 시사되어왔던 것이어서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에코페미니즘의 생물학근본주의적 인식은 가부장적 문제나 권위주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다. ‘남성=이성=이기심=경쟁=여성과 자연의 지배·정복’, ‘여성=감정=이타심=나눔=피지배 및 피정복’ 이러한 공식은 선형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 또한 이러한 유럽적 인식에서 남성은 모든 남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결국 유럽 백인 교양인 자산가 남성을 가리키는 자유주의적 남성성이라는 점에서 위험하다. 이러한 인식은 남북의 대화 과정에서도 남한 사람들의 역오리엔탈리즘으로 나타날 수 있다(사실 북한사람에 대한 낙인과 혐오현상이 남한 사회에 이미 나타나 있다)는 점에서도 경계해야 한다. 이런 지점에서 10여년 전부터 입법상에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도 법제화를 못하는 것이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또는 평등법)의 제정과 그것에 입각한 교육의 전면적 실시이다. 이는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문화시대를 살아갈 현세대와 후세대에게 너무도 중요한 것이며, 에코페미니즘적 정신과도 함께 할 수 있다고 본다.

많은 한국 통일담론에 타자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 레비나스의 지적처럼, 타자가 있음으로써 내가 있을 수 있으니, 타자는 파괴의 대상이 아니라, 타자와 공존할 때 주체가 존재할 수 있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북한 정치 체제를 개혁 대상화하는 것처럼 북한의 가부장적 순응성, 궁핍성에 대해 전제로 하여 접근하는 남한 여

성들의 태도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1970, 80년대 여성의 통일운동이 싹틀 무렵 기독교의 역할이 중요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기독교계의 보수화와 분열이 너무 심각하여 종교계, 특히 기독교계 여성의 역할이 확대되는 데에는 제한이 있을 듯하다. 앞으로의 평화 및 통일 과정에서 종교계의 역할에 대해 1970, 80년대적인 기대를 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또한 현재 청년세대들은 상대적으로 평화담론과 평화운동에는 관심이 있으나, 통일 관련해서는 소수화되어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여성계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할 때이다.

여성계에서도 통일보다 평화에 관심을 기울이는 게 현실이다. 여러가지 문제가 그러한 관심에 연관되어져 있다. 그 중 하나는 운동의 자기 부정성을 직시하기 어렵기 때문이고, 분단 환원론은 이제는 거의 수용되고 있지 않지만, 분단 문제에 대한 깊은 성찰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통일과 평화는 보편과 특수 관계이고, 특수를 관철하지 않는 보편은 없다는 점에서 한반도, 나의 삶에 위기를 주고 있는 전쟁 위기와 사회불평등의 편만성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 분단 극복의 문제가 있고, 그 답이 평화와 통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토론(생태 분야)

주요섭

모심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1. 정치적, 이념적, 경제적 통일담론이 주류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비록 그것이 과거의 것이라 하더라도, ‘생태적’ 통일담론을 검토하는 것만으로도 반갑다. 보편적 가치로부터 기능적 접근까지 기간의 생태적 통일담론의 흐름을 읽을 수 있었다.

2. 예컨대 생태적 관점에서 ‘분단상태’와 ‘통일상태’를 구분하는 내용도 공감어 되고, 생태평화, 녹색평화, 생명평화 등 ‘같은 듯 다른’ 생태적 평화담론들의 다른 이름들을 듣게 된 것도 재미있다. 또한 ‘녹색과 평화의 갈등과 소통’을 날카롭게 포착한 점도 매우 중요해 보인다. 아울러 유기(소)농, 전원도시, 그린 어바니즘green urbanism 등 ‘녹색통일’을 위한 다양한 제안들도 유용한 것 같다. 농업을 포함해 녹색경제 교류협력과 DMZ의 녹색평화지대화, 그리고 이를 통한 녹색통일경제체제라는 큰 그림도 의미가 있어 보인다. 조금은 결이 다른 이야기들, 예컨대 북한 주민의 가난을 자족적 공동체로 재해석하고 “호

혜적 공동성, 비근대적 삶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귀담아 들을 만한 생태적 통일담론 중 하나일 것이다.

3. 개인적으로는 발표자의 한살림선언 인용이 반갑다(모심과살림 연구소는 한살림연합 부설 연구소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몇 년 사이 여러 차례 ‘남북생명공동체’를 언급한 적이 있는데, ‘생명공동체’의 한글 표현이 ‘한살림’이다. 생명공동체라는 말은 1980년대 후반 이후 한살림, 가톨릭농민회, 김지하 시인 등에 의해 제안된 생명운동의 핵심 모토 중 하나였다. 이때 생명공동체는 ‘인간생명-지구생명-우주생명’의 삼재三才를 아우르는 전일적 공동체로서 단지 생태적 측면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최근 기독교계에서 보건의로 분야의 남북협력을 주 목적으로 한 ‘남북생명공동체연대’가 발족됐다. 정부의 ‘남북생명공동체’ 개념도 이런 범주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생명운동이 제안하는 생명공동체나 발표자가 소개한 펠릭스 가타리의 세 가지 생태학이 협의의 생태계나 생명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물론 ‘남북생명공동체’가 의료-보건에 한정되어 있거나 혹은 정치적 수사라 하더라도, 담론의 구성적 힘을 생각할 때 대통령의 제안과 기독교계의 기구 설립은 의미심장한 일임에 분명하다. 더욱이 ‘인류세’와 ‘대전환’이 운위되는 시대, ‘남북생명공동체’ 담론과 실천은 문명사적 의미를 지닐 수도 있다.

4. 사실은 토론이 쉽지 않다. ‘생태분야 통일담론’에 대한 전문 연

구자가 아닌, 생명사상-생명운동의 연구-활동가 입장에서는 관건管
鍵일 수밖에 없다. 이를 전제하고 ‘미래’의 생태적 통일담론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몇 마디 덧붙인다.

5. 우선 앞에서 잠깐 언급한 가타리의 세 가지 생태학과 동아시아
고유의 삼재론三才論과의 공통성이다. 가타리의 정신생태학-환경생
태학-사회생태학은 삼재론의 천-지-인의 범주와 연계해서 검토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발표자가 소개한 동학의 삼경사상과도 연결
된다. 경천-경물-경인은 각각 천-지-인의 윤리에 해당한다. 유럽의
세계적인 생태교육기관인 가이아 네트워크gaia.org도 일찍이 생태공
동체 만들기의 세 가지 차원을 제안한 바 있다. 영성/문화적spiritual/
cultural 차원, 생태적ecological 차원, 사회/공동체social/community적 차
원이 그것이다. 요컨대 서유럽의 생태주의와 더불어, 삼재론이나 동
학과 같은 동아시아의 전통사상을 미래 ‘통일사상’의 핵심 자원으로
서 더욱 깊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6. 또 한 가지, 생태적 가치 중 하나로 ‘다양성’이 떠오른다. 이는
여성주의 통일담론에서의 동질성/이질성 주제와도 관련이 있다. 널
리 알려져 있듯이 ‘순환성’, ‘관계성’ 등과 함께 생태주의에서 강조
되는 핵심가치 중 하나는 ‘다양성’이다. 생태적 풍요로움이란 곧 생
태적, 사회적, 문화적 다양성을 의미한다. 생태적 분단의 해체와 재

구조화의 방향은 다양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생명지역주의(bio-regionalism)가 이를 뒷받침할 담론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발표자도 언급한 바 있는 생태정치학자 문순홍과 그의 동료들은 1990년대 이미 생명지역주의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생태-문화권을 그렸던 것으로 기억된다.

7. 다양한 통일담론이 존재하고 또 생산되고 있지만, 현실은 냉혹하다. 국제적 통일환경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국내적으로도 통일에 대한 기대와 감수성이 약해지고 있다. 더욱이 남북간 교류가 단절된 상태에서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생태적 통일담론도 이러한 냉혹한 현실과 복잡성에 응답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 아닐까? 그야말로 ‘담대한 상상’이 필요한 것 아닐까.

앞서 언급한 생명운동의 생명공동체 개념은 물리적 경계를 넘나든다. ‘마음’이 그것이다. 이때 ‘마음’ 개념은 주관적 감정과 다르다. 기氣와 같은 보이지 않는 생명의 흐름이다. 최근 인문사회 분야에서 널리 소개되고 있는 ‘정동affect/情動’ 개념에 가깝다. 생명운동에서는 생태학과 생명학을 구분하면서, 그 핵심적 차이를 마음으로 이야기한다(김지하, 2010, ‘변혁적 생명학을 위하여’). 그의 주장에 따르면, 객관주의 과학이론인 생태학에는 마음 개념이 없다. 그러나 동아시아적 생명공동체 개념에는 마음의 흐름이 전제된다. 물론 이때 마음은 인간만이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생명체들과도 교감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물질과 같은 비생명체와도 감응(感應)할 수 있다. 이렇듯 생명사상의 관점에서 통일은 진행형이다. 문제는 통일감(感)이다. 그리고 통일의 다양한 형식들을 발명하는 일이다.

8. 전체적으로 생태주의적 통일담론을 집대성한 것만으로 놀라운 성과가 아닐 수 없다. 거기에 여성주의 통일담론에다 에코페미니즘까지... 그러나 에코페미니즘은 오히려 약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에코페미니즘은 하나의 담론으로 엄존하고 있지만,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은 것 같다. 여성학계 일부에서 거론한 바 있는 '생명여성주의'를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생태주의와 여성주의는 실제적으로나 담론으로서나 높은 친화성을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담론의 심화를 방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생태주의적 사유와 여성주의적 사유가 만나 일어나는 폭발적 '대화의 사건'을 기대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은 여성주의 통일담론이 풍부하고 생기가 넘치는 반면 생태주의 통일담론은 상대적으로 빈약해보인다. 이는 담론의 사회적 힘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고, 생태담론의 깊이와 넓이와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다. 결정적인 것은 생태-생명담론 자체의 정체(停滯)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무쪼록 이번에 마련된 생태주의 통일담론에 대한 논의가 생태/생명담론의 자기성찰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9. 그리고, 발표의 대미를 장식하는 ‘자연사적 관점’으로서의 통일이 통쾌하다. 생태/생명담론의 관점에서 ‘통일’이라는 사건은, 인위적인 것이라기 보다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동학사상에서 이야기하는 무위이화(無爲而化)의 통찰이기도 하지만, 사회/자연의 공진화라는 체계이론의 논리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가장 필수적이고 절박한 과제는 갑작스럽게 올 수도 있는 통일 이후에 대한 대비다. 경제가치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통일과정에서 즐거움, 아름다움, 성스러움 등 생명가치, 문화가치 등을 생산하고 담론화하는 일이 그것이다. 그런 점에서 가장 직접적인 통일담론의 과제는 ‘통일을 대비하는 통일담론’이다. 그렇지 않으면, 통일과정에서 전체주의적 폭력이나 사회문화적 아수라장을 목격할지도 모른다.

분단 이후 제기된 통일담론에 대한 정리와 성찰

발행	2021년 2월
집필진	강원택, 이광일, 홍석률, 이나미
발행처	통일교육원
주소	01018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전화	02-901-7165
홈페이지	www.uniedu.go.kr
디자인·제작	(주)늘품플러스

- 이 책은 평화·통일 교육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외부전문가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통일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이 책은 비매품입니다.
- 이 책에 실린 글과 이미지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합니다.
- 이 책에 수록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하려면 반드시 통일교육원과 저자 양 쪽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분단 이후 제기된
통일담론에 대한 정리와 성찰